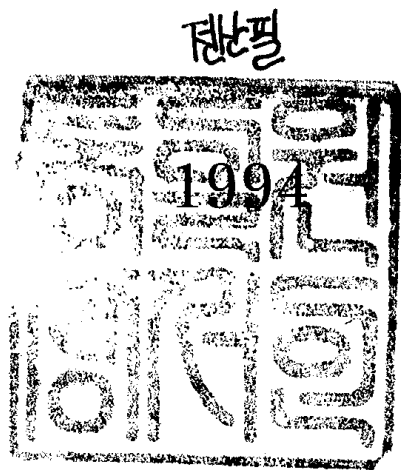


3103 (340.411)
통분
v. 5
112
통분 94-11-51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第 V 卷)



1994년 11월 51호
통분 94-11-51
통일연구원
서울

統 一 院

우리원은 통일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신진학자들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남북 교류협력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신진학자들의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89년 이후 매년 신진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6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여 그 연구결과를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5권으로 분류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등 참신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논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은 우리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4년 12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랑 표

권 별	수 록 논 문 명	집 필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관료 부패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해양법 정책 ○북한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합자투자기업 회계제도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유형 전망 ○북한의 대외무역 결합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북한 주체농법의 추진현황과 변화전망 ○북한경제개혁의 정치 경제적 제약 	<p>金令鍾(송 실 대) 李昌偉(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金炳昊(국 민 대) 崔相文(부 산 대) 梁吉炫(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李贊度(동 국 대) 林相喆(상 지 대) 金鍊鐵(평화문제연구소)</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가정문화 정책과 가정윤리 ○최근북한문학에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북한설화집의 체제, 성격 및 설화의 변이 양상 분석 ○남북문학사 기술의 통일방안연구 ○북한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과정 고찰 ○198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연구 	<p>趙鏞官(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李相瓊(한신대) 金文泰(성균관대) 金垠哲(상 지 대) 金成洙(성균관대) 李承姬(이화여대)</p>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경제교류의 내국간 거래 제도화 방안 연구 ○남북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남북한 교역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대금결제 방식의 모색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 방식에 관한 연구 ○남북한 수송체계의 적합적 결합에 관한 연구 ○북한의 화폐, 금융실태와 남북한 화폐 단일화 방안 ○통일시 남북한 토지문제의 전망과 정책과제 ○남북한 경제협력 	<p>朴晚秀(송 실 대) 金一龍(홍 익 대) 尹基官(충 남 대) 申英俊(대 전 대) 김길수(해 양 대) 韓鍾萬(배 재 대) 李兌一(국토개발연구원) 李泰桓(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p>

권별	수 록 논 문 명	집 필 자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방송협력 사업을 위한 연구 (공동연구) ○ 남북 종교교류 확대가능성과 통일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 ○ 주변국의 군사체제 제편과 한국의 통일시대 군사 정책 방향 ○ 대북군비 통제 협상방안연구 (공동연구) ○ 아·태다자간 안보포럼과 한반도 평화체제 ○ 합리적선택이론으로 분석한 북한해협상과정 ○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통일환경의 변화 	<p>朴興壽(연 세 대) 朴鍾洙(연 세 대) 柳鍾善(울 산 대) 鄭春日(국방연구원) 朴主鉉(국방연구원) 金尙範(국방연구원) 李赫燮(육사 교수부) 金廷憲(성대 사회과학연구소) 金用浩(국 방 부)</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관계와 미·북한 관계의 연구 ○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일본·북한의 관계 정상화와 남북 관계 ○ 신국제 질서하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남북관계 ○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 통일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표준모형 연구 	<p>宋銀姬(경 희 대) 李來榮(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裴廷鎬(연 세 대) 金珍基(대륙연구소) 全宰鎬(서 강 대) 金周晟(한국교원대) 崔榮杓(한국교육개발원)</p>

()은 소속기관임

<收 錄 論 文>

- ◇ 한·미관계와 미·북한 관계의 연구 1
宋 銀 姬(경희대)
- ◇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63
李 來 榮(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 일본·북한의 관계 정상화와 남북 관계 133
裴 廷 鎬(연세대)
- ◇ 신국제 질서하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남북관계 215
金 珍 基(대륙연구소)
- ◇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301
全 宰 鎬(서강대)
- ◇ 통일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373
金 周 晟(한국교원대)
- ◇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표준모형 연구 461
崔 榮 杓(한국교육개발원)

韓・美關係 와 美・北韓 關係 研究

-韓半島 統一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中心으로-

研究責任者：宋 銀 姬 (慶 熙 大)

목 차

<요 약 문>	5
I. 서론	9
II. 신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수립	10
1. 국제 정치적 배경	10
2. 국제 경제적 배경	13
III. 한·미 관계의 분석	22
1. 냉전체제의 한·미관계	23
2. 탈냉전체제의 한·미관계	26
IV. 미·북 관계의 분석	30
1. 냉전체제의 미·북 관계	31
2. 탈냉전체제의 미·북 관계	33
V. 동북아 신질서하의 새로운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	35
1.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	35
2. 경제분야	37
3. 군사 및 안보분야	45
4.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의 전망	50
VI.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	55
1.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	55
2. 종합적 결론 및 정책대안	56
※참고문헌	58

<요 약 문>

이제 더 이상 국제정치는 양극대결이라는 단순논리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극대결구도로 중심되어졌던 국제질서는 이데올로기가 퇴조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초강대국의 변모되어 가는 모습은 脫冷戰이라는 것으로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에 있었던 소연방의 해체는 美·蘇 중심의 세계질서에 일격을 가하게 되었고, 소련침체의 원인을 경제침체에서 찾으려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재편속에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경제도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되어가는 가운데 다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독보적이고 주도적인 힘의 우위의 상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자본주의 국제경제체제에서의 다극화현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여파로 인한 정치적 분야에서의 다극화현상은 마침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이 脫이데올로기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적 변화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위상의 정립이라는 인식구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한반도의 다변화된 구조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특히 1994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의 급사는 신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동북아 및 한반도의 향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이 지역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

미국의 세계재편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 동북아 혹은 한반도지역에 대한 전략은 1970년대말 이후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의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의 「신타평양 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구상은 경제와 안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클린턴 행정부의 아·태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의 구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자못 클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록 동북아시아의 지역 국가는 아닐지라도 오늘날의 지역의 의미는 지리적인 근거리감이 기준이라기 보다는 지리적인 범주에서의 것만이 아닌 분명히 이를 넘어선 규모의 것으로, 예컨대 미국과 같이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지역의 범주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 및 영향력의 행사는 바로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세계적인 냉전구조의 청산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하부체제로서의 동북아질서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냉전종식은 남북한 대결구도의 현 상황에서 볼 때 진정으로 도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질서의 다원적 구조에 의한 다극체제 혹은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의 초강대국화에 의한 질서에 의해 한반도 주변정세가 규정되어질지는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다만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 종전까지의 안보축이었던 북방3각관계(구소련, 중국, 북한)와 남방 3각관계(한국, 미국, 일본)가 소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로 대두한 러시아 및 중국과 한국의 공식수교로 새롭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미·북 수교 및 북·일 수교 또한 변화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동북아질서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한반도 통일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관계와 미·북관계를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측면에서의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경제분야에 있어서 쌍무적 관계보다 다자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지역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 세계경제질서의 불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양국은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은 북한을 개혁·개방체제로 끌어내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인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사 및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과거 미국의 부시행정부하의 쌍무적 협력에서 현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적 혹은 집단적 안보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내지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에 근거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창설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 후의 안보체제 정립에 필수적이긴 하나,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의 쌍무적인 안보협력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정부의 대미의존적 안보정책은 정책결정상 자율성을 저해하고 다자적인 안보협력을 위한 각종 협상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I. 서 론

한·미 양국의 공식수교는 지금부터 1백여년전인 1988년 「한·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양국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이후 새로이 정립되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국교정상화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양국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2-3년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올 정도로 친선우위를 다지며 전통우방으로서의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에 풍미하고 있는 脫냉전과 脫이데올로기현상의 물결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질서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신세계질서라 불리어지는 신국제 정치·경제적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위상의 정립이라는 인식구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위상은 종전까지의 안보축이었던 북방 3각관계(구소련, 중국, 북한)와 남방 3각관계(한국, 미국, 일본)가 소연방의 몰락과 더불어 새로운 체제로 대두한 러시아 및 중국과 한국의 공식수교로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추이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세계재편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 동북아 혹은 한반도지역에 대한 전략은 1970년대말 이후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의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의 「신태평양 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구상은 경제와 안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클린턴 행정부의 아·태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의 구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자못 클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록 동북아시아의 지역 국가는 아닐지라도 오늘날의 지역의 의미는 지리적인 근거리감이 기준이라기 보다는 지리적인 범주에서의 것만이 아닌 분명히 이를 넘어선 규모의 것으로, 예컨대 미국과 같이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그의 영

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지역의 범주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 및 영향력의 행사는 바로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세계적인 냉전구조의 청산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하부체제로서의 동북아질서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지역의 냉전종식은 남북한 대결구도의 현상 속에서 볼 때 진정으로 도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질서의 다원적 구조에 의한 다극체제 혹은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의 초강대국화에 의한 질서에 의해 한반도 주변정세가 규정되어질지는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이런 시점에서 동북아질서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한반도 통일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한·미관계와 미·북관계를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측면에서의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둔다.

II. 신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수립

1. 국제정치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을 축으로 하여 이룩되었던 양극체제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동서냉전체제로서 이것이 국제정치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의 핵심은 군사력에 기초한 국력의 배양과 동맹체제의 유지에 있었다. 따라서 국제 분쟁 역시 東西 兩陣營을 기축으로 하여 이데올로기화 되었으며, 이데올로기가 국가이익의 중요 개념으로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말 이후 국제정치는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중심의 美·蘇 兩極體制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연합체제(multiple coalition system)로 전환되었으며,¹⁾ 양극연합체제(bipolar coalition system)에서

1) Seyom Brown, *New Forces in World Politics* (Washington, D.C. : The

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지역의 범주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 및 영향력의 행사는 바로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세계적인 냉전구조의 청산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하부체제로서의 동북아질서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지역의 냉전종식은 남북한 대결구도의 현상 속에서 볼 때 진정으로 도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질서의 다원적 구조에 의한 다극체제 혹은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의 초강대국화에 의한 질서에 의해 한반도 주변정세가 규정되어질지는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이런 시점에서 동북아질서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한반도 통일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한·미관계와 미·북관계를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측면에서의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둔다.

II. 신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수립

1. 국제정치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을 축으로 하여 이룩되었던 양극체제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동서냉전체제로서 이것이 국제정치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의 핵심은 군사력에 기초한 국력의 배양과 동맹체제의 유지에 있었다. 따라서 국제 분쟁 역시 東西 兩陣營을 기축으로 하여 이데올로기화 되었으며, 이데올로기가 국가이익의 중요 개념으로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말 이후 국제정치는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중심의 美·蘇 兩極體制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연합체제(multiple coalition system)로 전환되었으며,¹⁾ 양극연합체제(bipolar coalition system)에서

1) Seyom Brown, *New Forces in World Politics* (Washington, D.C. : The

다극연합체제로의 전환은 강대국들이 이데올로기와는 별도로 쟁점에 따라서 협조·갈등하는 한편 군소국가들도 이에 따라 연합·분산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극연합체제는 국제정치학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논리에 입각하고 있다.²⁾

사회주의 내부의 중·소분쟁 역시 국제질서가 양극냉전체제에서 다극연합체제로 변모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³⁾ 중·소관계는 이념적 부분의 정통성논쟁,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경쟁 및 인접한 국경지대의 영토분쟁⁴⁾으로 특징지어진다. 1969년 이래 중·소분쟁의 열기는 다소 냉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1969년 10월부터 재개된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중·소협상이 부진한 상태에서 중·소국경에서의 무력충돌의 재발가능성은 계속 높아져 왔다. 이러한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양측의 군비경쟁이 계속되면서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핵확산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으며, 국내적으로 정권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으로 1971년 10월이래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으로 되는 등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중국의 對西方門戶開放과 실용주의 경제정책의 채택과 제3세계국가의 등장은 국제정치를 다극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⁵⁾ 중·소분쟁은 미국

Brookings Institution, 1974), pp.7-28.

- 2) 국제정치학의 양상이 점차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간의 이익의 갈등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고 협력만이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Klaus Knorr, *The Power of N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 : Basic Book, 1975), pp.208-210.
- 3) 교조주의적인 중국과 수정주의적인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간의 공산이념내에서 비롯된 갈등은 영토분쟁을 위시한 국가 이익의 분쟁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양극화로 이끌어 감으로써 중·소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모택동 사망이후 중국 지도층이 소련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거나 소련 역시 중국과 화해를 모색할 경우 중·소간장의 부분적 화해는 이를 수 있으나 1950년대 초와 같은 중·소 밀월관계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Doak Barnett,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China Policy: Old Problems and New Challenges* (Washington, D. C. : Brookings Institution, 1977), pp.80-87.
- 4) Donald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p.225-276.
- 5) Sung-joo Han, "The Politics of Community-Building in the Pacific Region," 『國際政治論叢』 第21集 (서울: 韓國國際政治學會, 1981), p.316.

으로 하여금 이념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對中國 화해를 유도하였는데, 1971년 이래 이룩된 미·중, 일·소관계의 개선과 화해는 양극체제의 붕괴와 동시에 다극체제로의 이행을 실증하였다.

자유진영에서 1960년내에 이룩한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서유럽국가들의 결속 또한 다극체제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50년대에 미국의 對共產主義 戰略의 일환으로 체결한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미국의 보호아래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1956년 12월에는 제2차세계대전의 산물인 유엔에까지 복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가상적국인 중국과의 화해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되고⁶⁾ 일본은 이로써 약화된 미·일안보조약의 보완을 위한 다원적 외교의 일환으로써 1972년 9월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다극연합체제에서는 미국과 구소련이 초강대국으로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중국, 일본, EU(European Union) 국가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제정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다. 미·소의 핵균형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대결이 배제되면서 전면전쟁은 억제되고 평화공존의 데탕트(détente)체제⁷⁾가 형성되었다. 데탕트체제에서는 자연히 군사적인 충돌위기가 감소되고 제3세계국가의 비중이 표

6) 미국의 對中國政策의 변화는 美·日同盟關係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일본은 자국의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였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제조정 하려는 일환으로 日·中관계의 정상화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9년 7월 괌島에서 언급되고 이후에 美의 회에서 천명된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개입의 폭을 점차 줄이고 거의 모든 지역적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軍事的 介入을 피할 것이라는 이른바 의무감소(disengagement)의 선언이었다. Richard Nixon,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 : The President's Report to the Congress and the Nation on American Foreign Policy, 1970* (New York : Bantam Books, 1970), pp.5-6.

7) 1950년대 후반 후르시초프가 平和共存政策을 천명한 이후 최초의 데탕트를 목도한 것은 1970년대초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소련의 의도가 西方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본격적인 데탕트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소련의 의도는 뒤늦게 부정되었다. 본격적인 脫冷戰은 따라서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權萬學, "冷戰後 世界秩序와 南北韓關係," 韓國社會主義體制研究 協議會 학술회의 발표논문(1992. 6. 11), p.2.

면화되었으며 지역적 단결, 약소국 연합체제화를 통하여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현상⁸⁾이 나타났다.

이와같은 국제정치의 다극화현상으로 인한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조체제의 구축과 지역협력의 논리적 귀결로서 아프리카 諸國, 중동산유국, 중남미 제국 및 아시아·태평양 제국 등의 경제권의 다극화가 추진되어 왔다. 특히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아시아에서 쇠퇴해가는 자국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그리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중국 등의 입장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중심이 된 양극체제에서의 냉전구조가 종식됨에 따라 동북아 질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냉전적 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정세의 변화는 역내국가들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확대와 심화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가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혹은 적극 도입함으로써 국내경제 재건을 모색하는 가운데 역내 자본주의 경제와의 연계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북방정책이 단적으로 보여주었듯이 냉전시대의 적국과의 군사,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까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⁹⁾ 그러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정세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역내 정세의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제 정치적 배경

제2차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축으로 하는

8) 그 예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 77개국 그룹 등이며 이들은 國際貿易, 經濟開發, 資源保存 등의 분야에서 집단적 민족주의를 공공히 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Seyom Brown, 1974, pp.93-106.

9) 길정우, “북방정책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통일연구논총」, 제1권 제2호, 민족통일연구원(1992), pp.4-5.

세계경제질서의 구축은 1930년대에 위축되었던 세계경제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1960년대 말까지의 세계경제는 높은 성장과 교역확대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1973년 3월 變動換率制의 채택으로 인한 브레튼우즈통화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와해, 원자재 가격의 급속한 상승, 1973년 이후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이의 미약한 경기회복현상등에서 기인하였다.¹⁰⁾ 세계 각 지역의 수출비중 및 그 증가추세를 보면 戰後 初期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50년대에 17.5%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12.6%가 되었다.

반면에 서유럽의 서독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본 및 ANIEs(Asian Industrializing Economies)의 수출비중이 현저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쟁의 참화로부터 복구한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ANIEs, 중국, ASEAN 국가 모두가 높은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정체되어 저조한 성장을 보여온 가운데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제국의 경제는 활발한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기 때문으로 이해된다.¹¹⁾<표 1 참조>

10) Lawrence B. Krause and Sueo Sekinguchi, (eds.), *Economic Interaction in the Pacific Basin*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80), pp.6-15. 특히 1970년대 서유럽경제의 장기정체에 대해서는 野村昭夫編 著, 「現代の世界經濟」, (東京: 實教出版株式會社, 1989), 2章을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장기침체와 EC통합 및 최근 EEA 확립과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田中素香, 「EC統合の進展と歐洲再編成の展望」, 國際經濟學會編, 「地域主義と世界經濟」(世界經濟研究協會, 1991), pp.33-42 참조.

1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를 태평양지역경제라고 부른다면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서양지역경제보다는 태평양지역경제가 더욱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Lawrence B. Krause and Sueo Sekinguchi (eds.), 1980, pp.15-22.

<표 1> 세계 각 지역의 장기 수출액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10억달러,%)

	1950		1960		1970		1980		1985		1989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북미	13.3	22.5	26.4	22.2	59.9	20.7	293.3	15.5	309.8	17.1	485.3	16.8
(미국)	10.3	17.5	20.6	17.3	43.2	14.9	225.6	11.9	218.8	12.1	364	12.6
(캐나다)	3	5.1	5.8	4.9	16.7	5.8	67.7	3.6	91	5	121.4	4.2
서유럽	20.3	34.4	51	42.9	136	46.9	802.9	42.3	757.1	41.9	1214.3	42.0
(서독)	2	3.4	11.4	9.6	34.2	11.8	192.9	10.2	183.9	10.2	341.4	11.8
(프랑스)	3.1	5.3	6.9	5.8	17.9	6.2	116	6.1	101.7	5.6	179.4	6.2
(영국)	6.3	10.7	10.6	8.9	19.4	6.7	110.1	5.8	101.3	5.6	152.3	5.3
(이탈리아)	1.2	2	37	3.1	13.2	4.6	78.1	4.1	76.7	4.2	140.7	4.9
동남아	8	13.6	14.7	12.4	36.4	12.6	294.4	15.5	385.9	21.3	679.1	23.5
(일본)	0.8	1.4	4.1	3.5	19.3	6.7	130.4	6.9	177.2	9.8	273.9	9.5
(ANIEs)	1.7	2.9	2.3	1.9	6.3	2.2	76.4	4	114	6.3	246.3	8.5
(ASEAN 4)	2.4	4.1	3.1	2.6	4.5	1.6	47.1	2.5	45.8	2.5	53.2	1.8
(중국)	0.6	1	2.6	2.2	2.3	0.8	18.1	1	27.3	1.5	51.6	1.8
기타	18.2	30.8	30.8	25.9	76.7	26.5	637.4	33.6	532.5	29.5	789.4	27.3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국통계.

「國際水平分業の進展と主要國産業のダイナミズム」

日本開發銀行, 第148號(1991.3)에서 재인용.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실질경제성장률이 EU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면서, 특히 1970년대 초반 경상수지의 흑자를 낸 이래로 석유파동기를 제외하고는 흑자기조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일본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같은 상황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권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력부상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소위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적 再起의 몸부림도 이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들도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전략하¹²⁾에서 높은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며 ASEAN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여 왔다고 보겠다.¹³⁾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호간의 생산연관이 자본수출과 상품수출을 계기로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 지역국가들이 세계 GDP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세계경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정치현상의 다극화와 더불어 EU,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등 경제블럭의 권역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지역주의의 움직임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화의 구체적인 예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¹⁴⁾

12)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전략에 대해서는 Bela Balassa,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New York: Pergamon, 1981), pp.1-14 참조.

13) ASEAN 국가들의 급속한 공산품 수출증가는 의류, 직물 및 전자부품위주의 전기 기계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이들은 단순노동집약적 제품들로서 1960년대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신장 주도품이었다. 1970년대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선진공업국,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사이의 工産品內 비교우위의 이전이 진행되어 왔는데, 즉 기능·기술집약적인 공산품의 비교우위는 선진공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단순 노동집약적인 면에서는 신흥공업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다. 따라서 선진공업국의 비교우위는 신기술제품과 자본집약적 제품내에서 강화되고, 이점은 신흥공업국과 선진국에 산업조정의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전의 합리화와 “수평적 국제분업” (Miyoei Shinohara, “Emerging Industrial adjustment in Asia-Pacific Area,” in *Asia Pacific Community*, No.11<Winter 1981>, pp.1-13)의 확립은 역내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14)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중요성과 상호의존성을 초래한 요인에는 일본 경제

<표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GDP 구성추이

(단위: 10억달러, %)

	1962		1970		1980		198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북미	613.6	45.4	1093.6	41.9	2951.7	29	5302.4	31.2
(미국)	572.4	42.4	1009.2	38.7	2688.5	26.4	4817.8	28.3
(캐나다)	41.2	3.1	84.4	3.2	263.2	2.6	484.6	2.8
서유럽	406.5	30.1	795.6	30.5	3594.9	35.3	5528.1	32.5
(서독)	90.2	6.7	184.5	7.1	813.7	8	1021.8	7.1
(프랑스)	74.2	5.5	142.8	5.5	664.6	6.5	949.9	5.6
(영국)	80.7	6	123.9	4.7	536.2	5.3	822.8	4.8
(이탈리아)	49.6	3.7	107.5	4.1	452.7	4.5	828.9	4.9
동남아	165.4	12.2	406.4	15.6	1800.6	17.7	3975.7	23.4
(일본)	61	4.5	203.7	7.8	1059.3	10.4	2843.4	16.7
(ANICs)	6.8	0.5	18.3	0.7	142.4	1.4	349.6	2.1
(ASEAN)	9.9	0.7	17.7	0.7	165.2	1.6	208.3	1.2
(중국)	37.5	2.8	78.2	3	246.1	2.4	376.5	2.2
기타	164.8	12.2	315	12.1	1825	17.9	2212.2	13
총계	1350.3	100	2610.6	100	10172.2	100	17018.4	100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OECD, *National Account*,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國際水平分業のと主要國産業のダイナミズム」, 日本開發銀行, 第148號 (1991.3)에서 재인용.

첫째, 일본경제력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일본은 196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10%의 GNP 성장율을 보이며 고도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체인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역관계가 초래되었으며,

력의 지속적인 성장,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이룩한 놀랄만한 경제 성장과 무역신장,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의 둔화현상등 이다. Peter A. Drysdale and Hugh Patrick, "Evaluation of a Proposed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i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An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 An Exploratory Concept Paper,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9), pp.4-5.

이 지역국가들의 일본경제에의 긴장의 정도와 일본의 대외적인 경제관심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왔다. 특히 부존자원의 부족에 따른 광산물과 식량에 대한 수요급증,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수요와 이러한 현상에 따른 자본과 기술의 이전이라는 일본의 경제구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¹⁵⁾ 일본의 외교활동, 특히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메카니즘을 통한 이 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무역신장에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수출지향형의 공업화를 경제개발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점이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이루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석유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그 경제적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¹⁶⁾

셋째,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석유위기 이전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서유럽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과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1973년의 석유위기 이후 서유럽의 경제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GNP 성장률은 둔화되고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권을 부상시켜 대서양중심의 세계경제가 태평양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이 이 지역의 선진공업국에 대하여 중요한 교역파트

15) 일본은 1960년 이래로 주요산업국가로 출현했으며 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중요한 국가로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L.B.Krause and S.Sekiguchi(eds.), 1980, Chapter 3 "Japan's Emergence as an Economic Force," pp.51-78 참조.

16) Richard L. Sneider, "The Evolving Pacific Community : Reality or Rhetoric" in Robert B. Hewett(ed.), *Political Change and the Economic Future of East Asia* (Honolulu : Pacific Forum, 1981), p.34.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의 중요성의 증가와 역내국가들 사이의 무역, 투자의 증가 등 경제적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켰다. David G. Timberman, "In Search of a Pacific Basin Community", in *Asian Survey*, Vol.21, No.5(May 1981), p.592.

너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유럽국가들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1984년말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정책보고서나 연설 등에서 1982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역량이 대서양지역국가들과의 교역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¹⁷⁾ 이점 역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내지는 통합기구의 추진에 있어서 미국의 참여는 중요한 전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호주 역시 서유럽에 편중된 경제관계에서 탈피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경제관계를 증대시키고 있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의 세계가 정치·경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과정¹⁸⁾을 보면, 정치적으로 기존의 대립적인 냉전구조가 청산되면서 전면적인 군축과 긴장완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대별되었던 양대 블럭경제가 와해되고 지역별 경제블럭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흐름은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EU는 어느정도 域內統合을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무리 단계에 돌입해 있으며¹⁹⁾,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의 北美自由貿易地帶가 창설되었다.²⁰⁾ 14개월간의 협상끝에 합의

17) 「東亞日報」, 1988. 4. 1일자.

18) 소련·동구의 민주화, 東西獨의 統一, EU의 통합,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NAFTA 發足 등의 움직임이 그 예로서, 戰後의 세계질서를 지배해온 冷戰構造가 붕괴되고 세계적 규모의 군축과 긴장완화의 흐름속에서 대립으로 부터 협조 및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경제적인 국제질서의 형성이다.

19) EU는 1950년 7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로 발족되어 1958년 1월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로 진화되었고 1967년 7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로 발전되었다. ECSC는 단순한 석탄과 철강의 유럽 역내 공동체로 시작하였으나 EEC로 승화됨으로써 경제협력 전반에 걸친 공동시장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이 경제협력체는 유럽의회, 유럽입법기구, 유럽사법재판소, 사법기관 등을 망라하여 EC로 발전하였다. EC는 1992년 말을 기점으로 政治 統合과 經濟·通貨同盟의 實現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여 단일 유럽국으로 출범할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여러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EU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

20) 北美自由貿易地帶의 창설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소비자 3억 6천만명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럭이 형성된 셈이다. NAFTA 3국은 앞으로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게 된다. 미국의 조지 부시(G.

에 도달한 北美自由貿易協定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 은 유럽의 경제통합에 이은 두번째 지역경제블럭으로서 표면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블럭내 시장보호와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NAFTA 추진은 1980년대 중반이후 심화되어온 세계경제의 블럭화 경향에 따른 것인데 NAFTA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분업체계가 구축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경제의 쇠퇴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미국은 NAFTA의 체결에 따른 북미경제의 활성화를 발판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자국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였던 것이다.²¹⁾

北美에서의 지역공동체 구상은 1988년 미국과 캐나다간에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이 체결되고 이어 미국과 멕시코간에도 同協定이 추진되고 있던 중 캐나다가 미국·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北美自由貿易協定이 체결되게 되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NAFTA에 대한 구상은 1980년 美大統領 選舉캠페인에서 레이건(R.Reagan)이 캐나다-미국-멕시코의 동맹(alliance)을 그의 첫번째 주요 연설에서 어렵פות한 계획으로 제시한 데서 기인하는데²²⁾ 이후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여 오늘날의 NAFTA에

Bush) 대통령은 1992년 8월 12일 이와 관련해 "This is a good day for North America" 라고 언급한 바 있다. *The Korea Times*, August 13, 1992. NAFTA와 관련한 미국측의 한 협상관계자가 1992년 6월 16일자 *Journal of Commerce*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3국 협상대표는 6월초순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회담에서 NAFTA 협정의 발효시기를 3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부합되는 1993년 7월 1일부로 잠정 합의 했다고 하였다.(대한무역진흥공사, 「미주통상정보」, <제8호, 1992. 6.25>, p.25). 그러나 NAFTA 협상이 예상외로 빠른 진전을 보인 것은 부시 대통령이 1992년 11월 선거와 관련하여 히스패닉계 유권자와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멕시코 접경주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NA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1) 산업연구원, 「북미무역협정체결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 邦文社, 1992.1), p.3.

22) J.L.Granatstein and Norman Hillmer, *For Better or For Worse :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o the 1990s* (Toronto : Copp Clark Pitman, A Longman Company, 1991), p.294.

이르게 된 것이다.²³⁾

195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발족 이래 그것이 하나의 관세동맹(custom union)이 되기까지는 18년이 걸릴 정도로 198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EU통합과정은 부진한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1986년의 SEA(Single European Act: 유럽단일법)를 계기로 EU통합과정은 가속화 되기 시작하여 1990년 EU정상회담에서는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경제·통화동맹)를 목표 설정으로 채택함으로써 EU경제통합은 급격히 진전되어 왔다. 물론 아직까지 여러 난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가속화되어온 EU통합노력은 주변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EU의 실질적인 국제경제력이 증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EU는 국제정치적인 면에서도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EU가 1950년 석탄과 철강의 경제공동체로 출발한지 40년만에 시장단일화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은행 설치에 합의하였고,²⁴⁾ 더 나아가 정치통합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²⁵⁾, 하나의 유럽합중국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NAFTA의 창설은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화 경향의 강화라는 측면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EU의 성공적인 발전과 최근에 이루어진 NAFTA의 창설은 지역주의 경향의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환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

23) NAFTA의 발전과 관련해 볼 때, *American Renaissance : Our Life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의 저자 Marvin Cetron과 Owen Davies 는 2000년대에 이르러 퀘벡이 캐나다로 부터 분리하게 되고, 미국은 5개의 새로운 洲를 보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와 캐나다의 洲가 미국의 洲로 새로이 합병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Maud Barlow, *Parcel of Rogues : how free trade is failing Canada* (Toronto : Key Porter Books, 1991), p.1.

24) 市場單一化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 장벽이 제거되고 상품, 자본, 서비스,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없는 유럽을 의미한다. 또한 EU는 1994년 1월 1일을 기해 EU중앙은행을 설립하기로 1990년 10월 28일 합의하였는데 EU 중앙은행의 설립결정은 지역공동체의 무한한 진화·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EU 중앙은행의 설치에 의한 운영은 EU 회원국들의 화폐를 하나로 단일화시키며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앙은행에 EU 중앙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정책이 일원화되게 된다.

25) EU 회원국 정상들은 1992년 말까지 유럽의 정치통합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여 회원국들은 1992년 말까지 회원국의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도록 1990년 10월 15일 합의했다.

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은 이미 ASEAN을 통해 가시화되어 왔는데,²⁶⁾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체 설립의 가능성은 ASEAN의 출범이후 지속적인 諸共同體의 구상을 통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일본의 경제력, ANIEs의 꾸준한 성장과 ANEAN,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세계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세계경제 판도의 변화에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아 왔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적인 추세의 지역통합운동에 대응하여 경제협의를 구성하는 등 역내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²⁷⁾ 인구 구성비나, 면적, 교역면에서 볼 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역내 경제협력이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 경제권으로 새로이 부각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상의 신국제질서하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냉전이후 미국과 소련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경제력이 국제관계에서 군사력과 이데올로기를 결정짓는 주요인임을 단적으로 대별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Ⅲ. 한·미관계의 분석

한·미 양국의 공식수교는 지금부터 백여년전인 1882년의 ‘한·미 수호통상조약’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의 미국과의 수교는 조선과 서양국가와의 최초의 국교수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구미문명과의 최초의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

26) ASEAN은 지역내의 경제개발, 사회문화 발전의 촉진, 역내 평화 추구, 상호협력 및 원조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의 기능과 역할을 모델로 하여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공동시장으로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人種, 文化, 宗教등의 현격한 차이 등에 의해 EU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ASEAN은 경제적 결속기구라기 보다는 정치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점차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증대해 가고 있다.

27)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련된 경제블럭으로는 NAFTA, AFTA, EAEC, APEC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군소블럭의 등장은 지역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은 이미 ASEAN을 통해 가시화되어 왔는데,²⁶⁾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체 설립의 가능성은 ASEAN의 출범이후 지속적인 諸共同體의 구상을 통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일본의 경제력, ANIEs의 꾸준한 성장과 ANEAN,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세계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세계경제 판도의 변화에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아 왔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적인 추세의 지역통합운동에 대응하여 경제협의를 구성하는 등 역내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²⁷⁾ 인구 구성비나, 면적, 교역면에서 볼 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역내 경제협력이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 경제권으로 새로이 부각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상의 신국제질서하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냉전이후 미국과 소련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경제력이 국제관계에서 군사력과 이데올로기를 결정짓는 주요인임을 단적으로 대별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Ⅲ. 한·미관계의 분석

한·미 양국의 공식수교는 지금부터 백여년전인 1882년의 ‘한·미 수호통상조약’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의 미국과의 수교는 조선과 서양국가와의 최초의 국교수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구미문명과의 최초의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

26) ASEAN은 지역내의 경제개발, 사회문화 발전의 촉진, 역내 평화 추구, 상호협력 및 원조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의 기능과 역할을 모델로 하여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공동시장으로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人種, 文化, 宗教등의 현격한 차이 등에 의해 EU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ASEAN은 경제적 결속기구라기 보다는 정치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점차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증대해 가고 있다.

27)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련된 경제블럭으로는 NAFTA, AFTA, EAEC, APEC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군소블럭의 등장은 지역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요한 사실이였으며, 또한 국제사회에서 주권동등의 원칙에 입각해 체결한 최초의 국가간 조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수교이후 오늘날까지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력으로 미루어 볼 때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외교는 對美關係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현재와 같은 양국관계의 정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이후 새로이 진전되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방이 한국을 단일한 통일국가로 만들어 주지는 못했다. 유엔결의에 의거해 1948년 8월 15일 서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해 9월 9일 평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사실상 한반도에 일민족 이체제가 존재하게 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그리고 아·태전략의 궤도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였고, 따라서 한·미관계도 그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냉전체제의 한·미관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이념이 중심이 된 동·서대결, 즉 미국과 구소련의 전세계적 대경쟁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미국의 대공산권 봉쇄 정책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는 동·서대결의 최일선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통한 냉전의 열전화지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거점이 되었고 한국은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²⁸⁾

미국과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양 블럭하에서 1949년 중국의 공산화, 1950년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은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의 동북아지역에의 확대와 더불어 한국이 국가의 생존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하였다.

28) 박경서, “한·미관계”, 정일영 편, 세종연구소 세종총서,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서울: 나남출판사, 1993), p.209.

이는 비단 군사·안보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생독립국가로서의 국가 건설과정(nation building process)에 필요한 정치적 이념과 제도 및 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적 가치와 제도가 기초가 되었고, 미국의 후원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던 것이다.²⁹⁾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한의 反共主義體制 확립으로 냉전사상이 정치이데올로기로 자리잡혀 갔으며, 미국추종 일변도 외교만 지향하였던 냉전외교로 인해 자주성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이후 역대 정권들의 외교정책은 그들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어느만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느냐와 더불어 어느정도 경제원조를 확보하느냐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어느정도 자주성을 확보하느냐가 외교의 과제로 되어왔던 것이며, 그러한 한국의외교의 과제는 역대정권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 명암이 교차했던 것이다.³⁰⁾

전후 새롭게 국교정상화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양국을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2-3년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올 정도로 친선우의를 다지며 전통우방으로서의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초기 제1공화국의 이승만이 추구한 반공동맹정책은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난과 함께 철저한 반공, 반일정책이었다. 이승만의 집권 12년간의 이러한 반공·반일사상은 자주외교사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그의 장기집권수단으로 허용되었으며,³¹⁾ 강력한 민족지도자로서 대미 자주외교 확보노력에 힘을 가하면서 초기 냉전체제하의 미국의 동북아정책을 활용하여 통일을 성취해보려던 한국의 외교는 오히려 서방측, 특히 미국에 밀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9) Ibid., p.210.

30) Ibid.

이는 비탈(David Vital) 교수가 말하는 보호국과 피보호국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의 전형으로서 강대국 사이에 처한 약소국이 어느 강대국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게 되고 그렇다고 지나친 보호를 받게 되면 주권의 자주성을 잃게 된다는 약소국 외교의 고전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David Vital, *The Survival of Small States: Studies in Small Power/Great Power Conflict*(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3-4.

31) 홍순호, 「한국국제관계사 이론: 시대상황의 역학구조」, (서울: 대왕사, 1993), p.582.

제2공화국의 대미정책은 국내적인 혼란과 함께 국가의 자주성이 해칠 정도로 미국에 심각하게 의존되어갔다.

당시 장면정권은 대내적으로는 정권탄생의 기회를 부여한 4.19혁명세력의 압력에 영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권 민주당이 신구파로 양분된 상태에서의 내각책임제였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³²⁾

제3공화국의 한·미관계는 이미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출발하게 된다. 박정희정권은 그 출범부터 정통성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경제적 원조중단을 압력 수단으로 군사정권의 민간정부로의 정권이양 압력이 계속되자 박정희는 정치적 독립의 전제조건으로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 제일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경제상황이 차츰 호전되는 데 자신감을 가진 제3공화국은 그간 지나치게 서방세계에만 국한되었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차츰 많은 국가와 경제협력 및 문화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갔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인의 무관심과 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 그리고 연약하게 복종하려는 습관을 고치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대외 관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대미일변도 외교정책의 수정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켰던 것이다.³³⁾

외교의 다변화 정책과 함께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모색을 시도하면서 박정권은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비적성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하였던 것이다. 이때 대미관계의 일방의존이 아닌 상호의존관계로의 진전을 기하려고 하였다.

1970년대 한·미관계는 미국 카터(Carter) 행정부의 인권정책 및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동북아, 특히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무시한 측면에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냉각체제하의 한·미관계에서 한국정부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

32) 박경서, 1993, p.214.

33) Park Chung He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Korean Affairs*, Vol.II (May-June 1962), p.121.

고, 이로써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시작하는 등 비교적 자주 외교노선을 견지하였다.

1979년 10. 26사태로 박정권이 붕괴되고 미국내의 강력한 신보수주의 물결과 함께 레이건(Reagan) 행정부가 등장하자 미국의 대외정책도 미국의 안보이익을 중요시하면서 실리외교적인 측면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한국은 국내적으로 10. 26, 12. 12 사태 및 광주사태 등 일련의 정치적 격동기에 처하게 되는데 1980년대 전반부 전두환정권과 레이건행정부의 관계는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2. 냉전체제의 한·미 관계

1980년대 말 이후 구소련의 해체, 동구권의 변혁과 독일통일 등 세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즉 냉전체제하의 이데올로기에 짓눌려 생명력을 잃었던 민족주의, 종교 등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들이 일거에 분출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이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북방정책을 국가주요정책의 하나로 책정해 이를 꽃피우기까지는 「6.23선언」 발표당시 보다도 훨씬 호전된 국제정세의 해빙기류였다.³⁴⁾

즉 70년대의 데탕트가 미국의 의도대로 미·소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면 80년대중반의 신데탕트는 소련에 의해 제기된 군축회담의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획기적 제안이었다. 냉전을 몰고왔던 소련군의 아프카니스탄 점령으로부터의 완전철수 등으로 80년대 후반에 들어 냉전기류는 와해되고 있었다.

34)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김상규,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북방정책”,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중소연구」, 17권 2호(1993 여름), pp.229-246참조.

즉 8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는, 신화해체제로 바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기류를 타고 한국의 북방정책은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외교목표와 외교정책을 「북방정책」에 두면서 i) 자주외교, ii) 개방외교, iii) 실리외교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제시하였다.³⁵⁾ 이곳에서의 자주외교는 서방세계국가와의 관계증진, 개방외교는 주로 사회주의권을 겨냥한 것이며, 실리외교는 주로 제3세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미·소의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도 주요 지역분쟁에서의 미국의 이익의 확보라는 차원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헤게모니국가로서의 미국이 강력한 지도력의 상실로 사실상 후퇴하고, 서유럽의 EU(European Union)와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일본과 더불어 삼극구조를 형성하는 등 신세계질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의 제고와 함께 한·미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한·미간의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 가능한 이유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³⁶⁾

첫째, 제6공화국은 1987년 6월 중산층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해서 이른바 「6·23선언」을 통해 유권자들의 직선에 의해 출범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정책 때문에 미국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한국경제는 1980년대 후반 선진국 문턱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개인당 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경제적 중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미국에게는 7번째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한·미관계는 지경학적 시대에 아

35) 최종기, “한국북방외교의 현황과 전망: 7.7선언은 돌파구로서 능동적 대응만이”, 국토통일원, 「통일연구논총」, 제8권 1호, (1988.10), p.153.

36) 박경서, 1993, p.225.

· 태 지역의 주요 동반자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발전은 비단 양국간의 통상관계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아·태 경제협력개발회의(APEC)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한국은 1991년 9월에 북한과 더불어 유엔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신세계질서하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진정한 국제협력 시대에 주요회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에 유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전함으로써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킨 것은 한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와 다자주의적 문제해결의 동반자 지위를 확보한 좋은 사례가 된다.

198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진행된 것은 무역관계이다.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미국의 쌍무무역에서 한국이 다섯번째로 큰 흑자(1978년에는 100억달러 흑자, 88년에는 8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다.³⁷⁾ 한·미 무역관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미간의 통상문제가 정치쟁점화 하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의 중요성보다는 통상문제라는 경제적 실리위주의 관계로 진전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냉전기류에 있는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의 추이와 관련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미국의 태도가 한·미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될 것이다.

37) 한승수 총판, 「태평양시대와 한국」 (서울: 산업연구원, 1989), p.282.

<표 3> 역대 한·미 정상회담(1)

회 담	중 요 사 항
1) 54. 7. 25 ~ 8.13 이승만 - 아이크(워싱턴) State Visit(국민자격방문)	미,李大통령의 휴전협정 종결재의 반대 미, 대한경제 군사원조 확대, 한국문제 유엔에 상정하는 새로운 방식추진합의
2) 60. 6. 19 ~ 20 허 정 - 아이크 (서울)	미, 4·19혁명지지 대한 보안공약 및 통한방안 지지 확인
3) 61. 11. 11 ~ 25 박정희 - 케네디(워싱턴)	미, 5·16혁명과 혁명과업 수행에 대한 공적 승인,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지원약속 한, 63년 여름까지 민정이양 확약
4) 65. 5. 16 ~ 26 박정희 - 존스(워싱턴) State visit	한, 전투부대(맹호·청룡부대)과월약속 미, 권원이관계획 재검토약속, 한일국교정상화 지지. 1억 5천만달러 개발차관공여. 한국과 학기술연구소설립 지원
5) 66. 10. 31 ~ 11. 2 빅정희 - 존스(서울)	한, 후방경비병력 증파검토 약속 미, 2차 5개년계획 지원계속 협의키로 다짐. 원자력 발전소건설차관(5천만달러). 석유화 학 공장건설차관검토
6) 68. 4. 17 ~ 20 박정희 - 존스(호놀룰루)	미, 대한방위공약 재다짐, 주한미군 강화 및 美 공군항공기 증강배치. 1억달러 추가군원 으로 전투기와 항공장비지원. M-16자동소 총 한국군에 보급
7) 69. 8. 20 ~ 23 박정희 - 닉슨 (샌프란시스코)	미, 아시아의 비미국화에 한국은 예외라고 했 으나 한국의 자체방위능력 향상촉구 한, 주월군감축내지 철수연기
8) 74. 11. 22 ~ 23 박정희 - 포드(서울)	미, 주한미군감축계획없다고 확약. 내정문제 불간섭확약 한, 구속자석방등 단계적 유화조치방침설명
9) 79. 6. 30 ~ 7. 1 박정희 - 카터(서울)	미, 주한미군철수계획 연기방침 전달. 정치적 자 유와 인권강조 한, 원자력 발전 7·8호기 전자교환 시시러 미 국서 구매약속. 남·북한·미국의 3당국 회 의 공동제안
10) 81. 1. 28 ~ 2. 6. 전두환 - 레이건(워싱턴)	미, 주한미군철수계획 백지화천명, 대북한정 책의 보조일치다짐. 연례협의회의 재가동 합의 한, 미국산 쌀 50만t 수입약속
11) 83. 11. 12 ~ 14 전두환 - 레이건(서울)	한·미안보 직결(vital) 확인. 주한미군 계속주둔 · 전력증강강조·한국군전력 증강에 필요한 무기 체계·기술제공 한국참여없이 북한과 대화불응
12) 85. 4. 29 ~ 29 전두환 - 레이건(워싱턴)	공약재확인, 연례안보협의회의외에 동북아정치문제 협의를 위한 각료급정상회담 개최합의. 지속적 안보과시, 경제의 공동발전촉구

<표 4> 역대 한·미 정상회담(2)

회 담	중 요 사 항	
13) 88. 10. 10 노태우 - 레이건 (워싱턴)	미, 안보공약 재확인, 작진권이양문제 검토 시기 상조 한국방북정책 긴밀협조합의, 6국회의제외에 대한 미국측의 소극적 반응	노대통령 UN 연설(워싱턴방문)
14) 89. 2. 27 노태우 - 부시 (서울)	한·미유대 방위공약 재확인·주한미군 유지·북방정책협조 미, 지적소유권 보호 요구	부시, 북경방문 귀로 5시간 서울 체류
15) 89. 10. 15 ~ 20 노태우 - 부시 (워싱턴)	한미안보공약 재확인, 점진적 시장 개방 확인, 방위비 점진적 증액	노대통령, 상하원 연설
16) 90. 6. 3 ~ 8 노태우 - 부시 (워싱턴)	북한 핵사찰협의를, 한·소수교 긴밀협력 약속, 한·미·소, 1+2협력체제 구체화	
17) 91. 6. 29 ~ 7.3 노태우 - 부시 (워싱턴) State visit	한반도 비핵화 구상논의, 남북한 동시 UN가입 후 새로운 한반도 문제해결 구도 모색, 한·미안보 재확인, 북한핵공동보조 확인, 미, 한국주도통일 지원 약속, 금융 특히보호 법적장치 마련	7.1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 2. 캐나다방문
18) 91. 9. 22 ~ 25 노태우 - 부시 (워싱턴)	대소련지원, 북핵개발공동대처, 북핵사찰 공동보조 재확인	25. 노대통령, UN총회 기조 연설 멕시코 방문
19) 92. 1. 5 ~ 7 노태우 - 부시 (서울)	92팀스프리트 취소(북한 핵안전협정서명, 사찰수락 등 국제의무 성실이 이행하는 경우), 북핵공동저지	

<표 3, 4> 자료 : 홍순호, 「한국국제 관계사 이론: 시대상황의 역학구조」 (서울: 대왕사, 1993), pp.596-597.

IV. 미·북 관계의 분석

해방직후 북한에 성립한 김일성정권은 구소련 당국에 의해 태동하게 된 것이다. 구소련당국이 북한을 지배하기 위해 내세운 33세의 젊은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표 4> 역대 한·미 정상회담(2)

회 담	중 요 사 항	
13) 88. 10. 10 노태우 - 레이건 (워싱턴)	미, 안보공약 재확인, 작진권이양문제 검토 시기 상조 한국방북정책 긴밀협조합의, 6국회의제외에 대한 미국측의 소극적 반응	노대통령 UN 연설(워싱턴방문)
14) 89. 2. 27 노태우 - 부시 (서울)	한·미유대 방위공약 재확인·주한미군 유지·북방정책협조 미, 지적소유권 보호 요구	부시, 북경방문 귀로 5시간 서울 체류
15) 89. 10. 15 ~ 20 노태우 - 부시 (워싱턴)	한미안보공약 재확인, 점진적 시장 개방 확인, 방위비 점진적 증액	노대통령, 상하원 연설
16) 90. 6. 3 ~ 8 노태우 - 부시 (워싱턴)	북한 핵사찰협의를, 한·소수교 긴밀협력 약속, 한·미·소, 1+2협력체제 구체화	
17) 91. 6. 29 ~ 7.3 노태우 - 부시 (워싱턴) State visit	한반도 비핵화 구상논의, 남북한 동시 UN가입 후 새로운 한반도 문제해결 구도 모색, 한·미안보 재확인, 북한핵공동보조 확인, 미, 한국주도통일 지원 약속, 금융 특히보호 법적장치 마련	7.1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 2. 캐나다방문
18) 91. 9. 22 ~ 25 노태우 - 부시 (워싱턴)	대소련지원, 북핵개발공동대처, 북핵사찰 공동보조 재확인	25. 노대통령, UN총회 기조 연설 멕시코 방문
19) 92. 1. 5 ~ 7 노태우 - 부시 (서울)	92팀스프리트 취소(북한 핵안전협정서명, 사찰수락 등 국제의무 성실이 이행하는 경우), 북핵공동저지	

<표 3, 4> 자료 : 홍순호, 「한국국제 관계사 이론: 시대상황의 역학구조」 (서울: 대왕사, 1993), pp.596-597.

IV. 미·북 관계의 분석

해방직후 북한에 성립한 김일성정권은 구소련 당국에 의해 태동하게 된 것이다. 구소련당국이 북한을 지배하기 위해 내세운 33세의 젊은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등장시키면서 북한에서는 소군정의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공산당 일당독재정권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결국 남북한에 미국과 구소련의 의도에 맞는 분단정권이 수립됨으로 해서 민족 분열과 반공, 반미라는 냉전적 사고가 배태되기 시작했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반공과 반일 및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확립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출발했음에 비해 북한은 이와는 다른길, 즉 소련의 후견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로의 길을 선택했다.

1. 냉전체제의 미·북 관계

북한의 주체성확립은 중소대립이라고 하는 대외적 요인이 얽혀 있어서 한국에 비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겪었으나 사상혁명을 통해 주체사상과 양립하지 않는 「반동사상」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진행되었다.

1961년 9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김일성은 노동당 정권창립 이래의 성과를 총괄하여, 소련과, 연안과의 숙청투쟁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소대립의 격화를 배경으로 1966년 8월 자주독립노선의 선언으로 발전하였다.³⁸⁾

북한정권이 성립한 후 체제를 공고화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안으로의 정권확립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정세는 크게 변모하였는데 특히 1972년 2월 닉슨의 방중을 계기로 가속화된 국제정세의 변동은 남북한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미중접근이 한반도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남북한의 신문논조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우려하는 것으로서 열강에 대한 경계심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i) 1972년의 미중접근, ii) 1975년 4월의 인도차이나 사태의 급변, iii) 1977년 카터정권의 등장, iv) 1980년 1월의 레이건정권의 발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변동을 거듭하여 북한의 대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인권외교와 주한미군철수를 내건 카터정권의 등장은 북한의 대미관에 커다란 변화를

38) 노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 1966년 8월 12일.

초래하였다. 북한은 카터정권의 미군철수계획을 평가하고 대미접촉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한·미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벤스 국무장관에 의하면,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³⁹⁾

- ① 주한미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
- ②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을 지지한다.
- ③ 북한의 동맹국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촉진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응할 용의가 있다(교차승인).
- ④ 한국이 참가하는 것이라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한다.
- ⑤ 현재의 휴전체제에 대신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제의한다.

1970년대 후반의 북한외교의 기본은 중소대립이 영속화되는 가운데 비동맹운동을 극히 중시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대미직접교섭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화시켜 미국과의 직접교섭에 의해서 통일문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제6차 당대회를 통해 1970년대에 제시되었던 고려연방제 방안을 발전시킨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 세가지를 남한사회에 선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⁴⁰⁾

i) 남한사회의 민주화 :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 악법폐지, 폭압적 통치기구의 철폐, 정당당 사회단체의 합법화와 이 단체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보장, 체포 투옥된 민주인사와 애국적 인민의 석방

ii)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 주한 미군의 철수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iii) 미국의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 배제 : 두 개의 조선정책 반대 등이다.

김일성은 미·북간의 대화와 평화협정체결에 대해서 종래의 주장을 거듭하면서 한국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차 미국에 제안한 것이었다.

39) 1977년 6월 29일 뉴욕의 아시아협회에서의 벤스 미국무장관의 연설.

40)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을 취하였다. 북한은 3자회담에 대해 “우리와 미국사이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조선 강점 미군의 철거, 북남불가침선언의 채택 등 조선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제적인 전제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제안”⁴²⁾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식 경제발전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문 5장 26개조로 구성된 「합작회사 운영법」(합영법)을 제정·공표하여 경제발전 정책에 수정을 가하였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표 5> 나라별 합작실적(84. 9 - 89. 9)

일본(조총련)	소련	동구	폴란드	헝가리	몽고	프랑스	기타	계
27	9	2	1	1	2	1	10	53

자료: 「내외통신」, 제657호, 1989. 9. 15일자.

이와 같이 북한이 1980년대에 들어와 대외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소한 내수시장규모, 낮은 기술수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낮은 노동생산성 및 노동력확보난, 그리고 북한정치의 불확실성 등이 외부세계로 부터의 북한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⁴³⁾

북한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을 주시하면서 개혁·개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는 중국을 성공시킨 요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냉전의 종식은 남북한 관계의 성격은 물론 미·북관계의 성격도 변화시켰다. 이는 군사적·이념적 대립의 약화와 함께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의 국제사

42)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서울: 태백, 1989), p.308.

43) 손일태,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년대 북한체제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1991), p.87.

회로의 유도를 내포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한국과 소련, 중국의 수교 등의 일련의 사태와 국내 경제 위기의 타개책으로 ASEAN 4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의 뜻을 비추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제안한 「선봉지구경제무역지대개발안」은 중국측 개발구상에 대응하여 청진, 나진, 선봉 3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다.⁴⁴⁾

청진·나진지역은 앞으로 북한 최대의 중계무역 및 수출공업기지가 될 것이므로 미·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남북간 경험의 투자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해결없이 미·북 관계 정상화에 대해 남한정부는 불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북 「先연락사무소」개설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이나 핵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추진될 것⁴⁵⁾으로 전망하고 우리 정부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⁴⁶⁾

결국 앞으로의 미·북관계의 전망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타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V. 동북아 신질서하의 한·미관계와 미·북 관계

1.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다차원적인 변화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는 말을 탄

44) 중국측의 개발대상지역이 개발 여건이 좋지 않은데 비하여 북한의 3항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개발에 따른 국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동안의 폐쇄적 자력경쟁 논의에 기초한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국지적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영삼,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제 -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 「북방지역경제」, (서울: 산업연구원, 1991. 12), p.31.

45) 「세계일보」, 1994년 9월 15일자.

46) 위의 신문.

회로의 유도를 내포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한국과 소련, 중국의 수교 등의 일련의 사태와 국내 경제 위기의 타개책으로 ASEAN 4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의 뜻을 비추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제안한 「선봉지구경제무역지대개발안」은 중국측 개발구상에 대응하여 청진, 나진, 선봉 3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다.⁴⁴⁾

청진·나진지역은 앞으로 북한 최대의 중계무역 및 수출공업기지가 될 것이므로 미·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남북간 경험의 투자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해결없이 미·북 관계 정상화에 대해 남한정부는 불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북 「先연락사무소」개설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이나 핵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추진될 것⁴⁵⁾으로 전망하고 우리 정부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⁴⁶⁾

결국 앞으로의 미·북관계의 전망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타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V. 동북아 신질서하의 한·미관계와 미·북 관계

1.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다차원적인 변화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는 말을 탄

44) 중국측의 개발대상지역이 개발 여건이 좋지 않은데 비하여 북한의 3항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개발에 따른 국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동안의 폐쇄적 자력경쟁 논의에 기초한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국지적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영삼,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제 -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 「북방지역경제」, (서울: 산업연구원, 1991. 12), p.31.

45) 「세계일보」, 1994년 9월 15일자.

46) 위의 신문.

생시키면서 진행되어 왔다.

이 신질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냉전체제의 와해이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변화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대결해 오던 냉전의 종식을 가져 왔으며, 대부분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을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시장경제화 추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또한 탈냉전이란 질서변화는 군사적 안보에 비해 비군사적 안보(특히, 경제안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둘째, 분쟁의 지역화이다. 소련의 소멸로 인해 유럽에서 시작하여 신속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세계대전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시베리아와 동북아시아 방면의 러시아 해군과 공군 - 특히,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들에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 의 세력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은 여전히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미·소라는 초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이 깨어진 틈을 타서 지역강대국들이 지역 패권주의를 추구할 시 이 또한 지역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경제 및 기술 보호주의의 확대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냉전종식을 경험하였으나, 탈냉전과 더불어 경제를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안보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EU국가들의 경제통합이나 NAFTA와 같은 블록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국가이익과 지역적 경제이익을 보호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아 선진국은 자국의 기술을 무기화하거나 기술이전을 거부함으로써 기술적 패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넷째, 국제질서의 다원적 구조(multiple structure)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이다.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는 아직 그 모양이 모호하긴 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제, 즉 「일원적 다극체제(uni-multi system)」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⁴⁸⁾

47) 윤종호, “탈냉전시대 미국의 아·태전략과 한국안보”,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36권 제2호(1993. 12), pp.63-96.

48)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1극체제”이나, 경제면에서는 “3극체제”(미국, EU, 일본) 또는 “G7체제”로, 그리고 정치면에서는 “5극체제”(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 혹은 “9극체제”(G7+러시아, 중국)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양태는 일반적으로 탈냉전 질서로 압축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냉전종식에 영향받은 동북아시아의 변화 또한 같은 맥락에에서 이해할 수 있다.⁴⁹⁾ 그러나 이 지역의 탈냉전이 초래한 지역평화 및 경제협력의 긍정적 요인 못지 않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갈등유발 요인은 역내 평화구축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냉전적 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역내국가간의 경제협력의 확대가 가속화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군사적·정치적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않는한 평화공존의 역내질서의 수립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⁵⁰⁾

탈냉전의 세계적 조류와 냉전의 지역적 특성이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야말로 협력과 갈등이 복잡하고 상호모순된 양상을 띠우고 있다 할 것이다.

2. 경제 분야

전세계적인 추세의 지역경제블럭의 형성과 함께 특히 동북아시아국가의 역내결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역내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마련되게 되었다고 본다. 1960년대에 동아시아지역의 GNP는 세계전체의 4%정도였고 미국은 약 40%이상이었는 데 그러던 것이 30년후인 1990년, 즉 한 세대동안에 동아시아지역의 GNP가 4%에서 25%로 급성장한 것은 세계경제의 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미 허만칸(Herman Kahn)에 의해 잠재적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 예견된 일본은 미국의 쇠퇴와 대비되는 기록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는 특히 GATT체제가 약화되면서 EU통합이나 NAFTA의 형성과 같은 국제 정치·경제적 변화와 관련한 이 지역의 새로운 위상의 정립이라는 인식구조와 맥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9) 한소·한중수교 및 중국과 베트남간의 정치적 화해, 아시아 사회주의권 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중국의 현대화 추진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에 따른 변화양상 등을 들 수 있다.

50) 갈등양태의 가장 심각한 지역은 한반도로서 북한의 약 111만 1천명(IISS, *Military Balance 1971-1992* <London: Brassey's, 1991>, p.169)의 정규군 중 약 3분의 2가 DMZ 부근에 전진배치되어 있고,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다.

<표 6>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시안 비교

	PAFTA-OPTAD	OPTAD	Pacific Basin Cooperation
제안자	小島滿 PAFTA(1966)-> OPTAD (1968)	Drysdale & Patrick (1979)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 (1979)
회원국	창설회원국: 5개 선진국 (미국·일본·호주· 뉴질랜드·캐나다) 가능회원국: 역내의 다른 개발도상국 *소련과 중국은 동시에 가입 가능	창설회원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의 14개국 (5개 선진국) (ASEAN 5개국) (ANIEs 3개국 및 PNG) 가능회원국: 기타 아시아 및 남미제국	특별한 언급없이 관심있는 모든 국가 참여 가능
목표 및 기 능	PAFTA : 제도적 통합 자유무역지대 설정 비회원국에 대한 회원국의 관세정책은 자유 OPTAD : 기능적 통합 무역·원조 및 경제발전협 력 원조 및 직접투자에 관 한 선진 5개국 조정계획 역내 무역증진	역내경제협력 개도국에의 투자 및 원조 증진 장기 경제개발 계획 및 산업조정 궁극적으로 공동시장을 지향 * 자유중국의 가입은 중국문제와 관련, 특별한 고려 요구	무역 및 경제분야와 마찬 가지로 사회 및 문화분야 에서의 협력증진 회원국 각각의 정치적· 문화적 가치의 희생없이 상호의존 강화 기존 기구들과 쌍무적 협력관계 유의 지역간 금융유통 촉진 - 「엔」블럭 형성
조 직	정부간 기구	정부간 협력체 무역증진, 경제협력 등 특정분야의 6기능 task force 설치예정 최소한의 사무직원으로 유지	역내 민간연구소에 의한 공동 연구 연구수행을 위한 다양한 project 15-20인의 영향력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민간 기구 설치

資料 : "The Pacific Community, Fiction or Facts?," i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 21, 1979), pp.41-45 참조하여 작성.

경제적 지역주의의 세계적 추세와 관련한 역내 경제권 구상에 대한 논의는 신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활성화된 것이지만 이 지역의 경제권구상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주창되어 왔다.⁵¹⁾

그러나 이 지역의 특성상⁵²⁾ ASEAN을 제외하고는 별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협력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 범세계주의(globalism) 혹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강조와 더불어 지역주의(regionalism)가 병행하는 전세계적 추세속에서 동북아시아도 국제관계를 보는 인식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역과 관련한 경제적 지역주의는 광역한 지역을 포함하는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APEC),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들 수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소규모의 경제권의 군소무역블럭이 중심이 되어 있다.

51) 아·태 공동체에 대한 대표적인 提案을 연대순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小島 清, 「太平洋經濟圈」(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68); Kiyoshi Kojima, *Japan and Pacific Free Trade Area*(London: MacMillan Co., 1971); Trilok N. Sindhvani, *Economic Feasibility of an Asian Common Market*(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Private Ltd., 1975); Peter A. Drysdale,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Regional Arrangements and the Resource Trade: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Paper*(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8); Peter A. Drysdale and Hugh Patrick, *An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An Exploratory Concept Paper: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Senate*(July, 1979); Lawrence B. Krause and Suet Sekiguchi (ed.), *Economic Interaction in the Pacific Basin*(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0); 環太平洋連帶研究 그룹, 「環太平洋連帶의 構想」(東京: 大藏省 印刷局, 1980).

5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역사, 언어,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의 변수로 분석한 논문으로는 Sung-chick Hong, "Cultural Variables of Asia-Pacific Community," in Sung-joo Han(ed.), *Community-Building in the Pacific Region: Issues and Opportunities*(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81), pp.131-159참조.

아·태 공동체 구상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안은 역내 선진제국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개도국의 과거 역사적 경험에 의한 강대국 불신풍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공동체 수립에 회의적인 태도를 낳게 하고 있다. Ibid., pp.148-149.

<표 7> 소지역차원의 아·태 경제협력 추진현황

	NAFTA	AFTA	EAEC
참가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르네이	중국, 한국, 홍콩, 대 만, ASEAN 6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 스, 캄보디아
추진경과	92. 8 협상안 합의 94. 1부터 추진 예상	91년초 태국 제안 93. 1부터 추진	90년말 말레이시아의 EAEC제안이 91. 10 EAEC구상으로 변경
성격	향후 15년이내 자유무역권 형성 · 교역장벽철폐 · 경쟁환경 조성 · 투자기회확대 · 지적재산권 강화	1993-2008 기간중 자유무역권 형성 · 공동특혜관세 (CEPT) 도입 · 비관세장벽 철폐	국제협상시 공동보조, 역내국의 무역 및 경 제협력 강화, 개방을 통하여 자유무역체제 확립에 기여
전망	· 자본, 기술, 노동 결합으로 국제경 쟁력 강화 · 원산지규정 강화 등 역외수출에 대 한 차별	· 제한적 대상품목 및 예외인정으로 자유화의 효과는 미지수 · 회원국간 경쟁적 이해관계 상존	· 초기에 미국의 반 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개 방체제유지 및 APEC 과의 조화를 선언함에 따라 성 립 가능성 증가 · 경제블럭이 아닌 협업체 형태를 띠 전망

자료: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본 아·태지역협력의 발전방
향」, (민족통일연구원, 1993), p.15.

동북아시아 지역경제권의 개념적 형태(conceptual framework)⁵³⁾에서 보면, 同경제권은 경제적 이익동기에 의한 이익공동체로서의 속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은 대체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유교사상, 한자문화, 대승불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등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내 諸국민은 노동윤리, 생활관습, 사회적 가치기준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단계에서 구상해 볼 수 있는 동북아 지역경제권은 통합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장벽을 최소의 것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⁵⁴⁾

동북아시아지역 경제권은 EU나 NAFTA등의 경제통합이 일시에 일정한 형태의 제도적 통합을 결성한 것에 비해 역내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53) 동북아시아지역경제권의 지리적 영역은 이 지역경제권형성의 취지와 정의에 합치될 수 있고, 동시에 공동경제권으로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同경제권의 국가 기준은 남북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공화국이 될 수 있다. 러시아공화국을 제외한 잔여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공통성의 공동체형성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러시아공화국은 문화적으로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지리적 인접성 및 경제적 보완성으로 인해 하나의 경제협력권으로 접합될 수 있는 가능국가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적 중앙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또는 서남아시아제국과의 협력관계도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지역 경제권으로의 전면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양국의 경우에는 시장체제경제권과의 접합이 가능하고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경제적 비용이 극소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제한하여야 한다. 즉 중국의 경우 황해연안의 개방특구와 東北三省地域으로 제한되며, 러시아의 경우 개방 특구가 설치되는 극동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동북아시아지역경제권의 개념적 형태에 대해서는 손병해,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2. 9)을 참조.

54) 동북아시아지역 경제권 형성에 있어서의 통합촉진요인은 ①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응한 자체시장권의 개발 ②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회주의 경제의 개방정책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공동의 기대감 ④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공통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다. 통합저해요인은 ① 경제체제의 이질성 ② 정치·군사적 갈등구조 ③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의 격차 ④ 정치·경제적 이중구조 등이다. 위의 책, pp.26-32 참조.

본다. 즉 고정된 형태의 통합모형이 아닌 국지적·부문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개발프로젝트 <표 7 참조> 중심의 임의적 단순협력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어 상호간의 개발이익이 가시화 되고 이로 인해 교역증진과 상호의존의 폭이 확대되어 지역내 국제분업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내부결속도가 높은 제도적 통합의 전면적 형태로 진행해 가는 가변적인 형태의 것이다.⁵⁵⁾(장기적으로 산업간 분업관계가 산업내의 보완적 분업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표 8 참조>).

동북아시아 지역이 하나의 지역경제권으로 되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으므로 지역주의에서 보면 同 경제권형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소규모의 개방적 지역주의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⁵⁶⁾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시아지역을 보아야 하며, 중국 및 구소련이 빠르게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서방국가들 또한 역내 북방국가투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내북방국가의 중요성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⁵⁷⁾

이상에서 보듯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주의는 거대한 통합체를 상정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소규모의 지역주의 또는 실제로 통합이 가능한 단위들간의 그룹별 통합의 형태를 띠는 것이 적실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 소그룹의 통합체들이 장기적으로는 汎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는 통일체속에서 세분화된 통일성을 지니어 이 지역의 정치·경제 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5) 이와 관련한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권의 모형에 대한 손병해의 선형자유무역지대(Linear Free Trade Zone) 구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책, pp.46-143.

56) 동북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과 이 지역의 개방적 지역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Hong Pyo Lee, *Open Regionalism and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The Sejong Institute(1993) 참조.

57) 정영록, 「동북아시아 무역구조와 역내수출경쟁력 비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1), p.105.

<표 8> 동북아 공동개발 프로젝트

사업구분	대상지역	개별대상	주요기능	비 고
資源開發 프로젝트	러시아 沿海州 極東 시베리아 중국 東北地方 중국 海南島	石油, 가스, 광물 林 産 物, 農林産物 鑛物에너지	開放特區의 개발지원 및 역내 자원공 급, 현지개발	보완적 결합관계의 기초 " " 國際協業基地로 활용
工業開發 프로젝트	先鋒경제무역구 라진 " 中國 5大特區 (深圳, 厦門, 海南島) 大連, 揮春	항만, 도시기능 工業立地 조성 工業기반확대 "	북한의 개방 도시, 국제분 업체제에의 편 입지역 국제 분업체제에의 편입지역 自由港의 배 후지	線形自由貿易地帶의 대 상(국제기구협력) 線形自由貿易地帶의 대 상 "
都市開發 프로젝트	두만강하구개 발(선봉, 훈춘, 포세이트) 중국동북지방	도시기능정비 공업기반조성 大連港, 공업 기지확충 內陸운송로 확충	域內分業 및 무역확대기반 "	국제협업기지로 활용 (국제기구협력) 線形自由貿易地帶 대상
商業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중국 沿海都市 (上海, 浦東 지구)	金融, 商業都市	"	"
産業개발 프로젝트	흑룡강성(삼강 평원)	農林資源, 飼料	현지개발, 무역촉진	보완적 결합관계의 기초
國別開發 프로젝트	東海, 포항, 군산 新潟, 北陸 台北	국제연결도시 기능 정비 "	自由港化 保稅加工區域 化 "	線形自由貿易地帶 연결 "

자료: 손병해, 「동북아 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9), p.43.

<표 9> 동북아 경제권내의 국제분업구조(전망)

經濟圈 對象地域	要素賦存狀態	特化産業		特化品目	
		現在	將來	現在	將來
러시아극동 (자유경제 지대)	鑛物, 林産資源, 에너지, 水産資 源, 土地	목재, 수산가공 채굴산업	토지집약노동 절약형, 중화 화학업, 자원 집약소재산업	수산가공식품, 목재, 광물, 조선서비스	석유, 가스, 광물, 금 속제품, 자원가공형 제품(목재, 수산가공 식품), 휴양, 서비스
중국동북 지방(경제 개발구)	철광석, 석유, 森 林資源, 노동력, 토지	중화학공업, 자동차, 목재, 석유	중화학기지화 , 농공산업 (사료공업)	자동차, 석유	산업용자동차, 화학, 사료, 노동집약경공 업제품, 토지집약 중공업제품
중국연안 지방(특구 지역)	석유·석탄, 농 산자원, 노동력	중공업(화학 기계), 경공업(전자섬 유), 1차 산업	경공업기지화 석유화학산업 농산가공산업 봉제, 의류, 노 동집약산업 기지	노동집약제품: 전자방적, 의 류, 인건, 면제 품 또는 농산물	NIEs형 공업제품: 전기, 전자, 섬유, 천연섬유산업
북한(특구 지역)	석탄, 철, 비철금 속자원, 양질노동 력	내수용 중공업 생필품산업	수출형 경공 업기지화	정유, 철강, 기계	섬유, 봉제, 전자, 기 계, 에너지, 통신기 기, 관광, 향만서비스
한 국 대 만	숙련기술인력, 자본, 경영 Know- how	숙련노동집약 산업, 전기, 전 자, 운송기기, 자본재부품 산업	기술집약산업 , 두뇌집약산 업, 첨단소재 산업	기계, 조선, 철 강, 자동차부품 , 내구 소비재 숙련노동제품 (섬유, 전자)	통신기기, 운송기기, 첨단소재부품, S/W, 농공제품
홍 콩	국제정보, 국제금 용시장 Know-how , 자유무역항(중 국의 특별행정 구역)	토지절약형 숙 련노동집약산 업, 서비스산업	금융, 무역, 서비스산업	정밀기기, 의류 , 금융서비스, 무역서비스	무역, 역내금융서비 스, 산업정보서비스, 디자인 S/W개발, 지식집약상품
일본해연안	자본, 첨단기술, 마케팅조직, 교통 통신 infra기반, 근대농업기반	(NIEs형 공업) 소재가공산업, 섬유관련산업, 관광서비스	토지절약형산 업, 첨단기술 산업, 정보통 신산업, 소재 가공산업, 서 비스산업	섬유제품, 기계 , 종이펄프, 석 유화학제품, 비 철금속, 관광 레저	철도, 항공, 해운, 운 송, 기기부품, 첨단 소재가공제품, 정보 통신, 생명공학제품, 정보통신서비스, 관 광운송서비스

자료: 손병해, 앞의 책, p.119.

3. 군사 및 안보 분야

미·러·중·일 등 이른바 4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 및 안보분야에 있어서 중요하다.

냉전시대에는 「남방 3각관계」와 「북방 3각관계」가 동북아 전략환경의 구도였으나 탈냉전이후 이러한 구도는 변화되고 있다.

냉전종식이후 동북아에도 유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⁵⁸⁾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북아 지역국가간 주로 「양자간 관계의 재정립」(a realignment of bilateral relationships)을 통한 완만하지만 지역대탕트추세의 가시화를 들 수 있다. 1989년 5월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북경방문은 30년 중·소분쟁을 종식시키고 중·소화해시대의 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다음 해 9월 30일 한·소 수교도 동북아의 대결구조의 완화에 기여한 이벤트이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대결구조의 종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북아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종식시키는 데에 결정적 계기를 형성한 것은 미·소의 신데탕트 관계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89년 12월 미·소간 중거리핵전력 협정체결을 계기로 한 미·소 신데탕트는 전세계적 냉전종식의 주원천이었음은 물론 동북아 전략환경에 있어서 데탕트의 시원점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도 현재 핵문제와 관련, 아직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소련이 한국과의 수교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에 대하여 수교교섭을 제의했다. 아울러 1990년 9월 한국정부가 제의한 남북총리회담을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수차례에 걸친 총리회담을 통하여 남북간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의 발효시킨 것도 이러한 냉전종식후 동북아지역에서 가시화된 데탕트의 배경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그러나 동북아의 이러한 데탕트추세는 다른 한편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증대로 인한 지역 불안정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강경·보

58) 김국진, “동북아 다자간 안보레짐에 대한 접근: 한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연구협의회, 「동북아다자간 협력체」(국제학술회의, 1993. 12), pp.99-100.

수세력의 불발 쿠데타 사태는 구소연방의 급격한 해체를 야기시켰다. 소연방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연합(CIS)」으로 붕괴되고, 러시아가 구소련의 외교정책을 계승하고 있지만 산적한 국내문제로 러시아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동북아에서의 미·소(러)간 경쟁요인을 소멸시켰다. 소련의 붕괴사태보다 먼저 일어난 중국의 천안문사태(1989. 6)는 중·미관계의 전반적인 소원화를 초래했다. 특히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미·소·중간 이른바 「대3각관계」(the great triangle)에서 대소견제를 겨냥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의 상실로 미의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여론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강력하게 비판하는 대중국강경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동북아지역의 세력판도가 달라지는 가운데 실제로 전세계적 추세의 데탕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 탈냉전 이후 부분적으로 군비증강추세가 가시화되었는데, 이는 지역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일의 군사대국화와 경제성장을 통한 ASEAN 국가들의 군사력 확보 등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중국은 동서간의 냉전종식 이후에도 군사력 증강에 의한 국가안보 및 국력신장의 중요성을 계속 중시하고 매년 연속적으로 국방비를 10%이상 증액하여 전력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⁵⁹⁾

일본은 명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확립을 위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석 확보에 정치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UN의 국제안전보장 기능강화에 재정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기 위해 자위대 요원들의 PKO 참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⁶⁰⁾

이 밖에 동남아 ASEAN 국가들도 국방예산을 증강시키고 있다.⁶¹⁾

59) 「국방백서 1993-1994」(대한민국 국방부, 1993. 10), p.41.

60) 위의 책, p.42.

61) Paul Dibb, "Asia-Pacific Security: Act Now to Avoid a Regional Arms Rac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6 (1992) 참조.

<표 10> 중국의 군사력 현황

구분	전력 규모
총 병력	3,030,000명
지상군	사단 : 100개 전차 : 10,000대 장갑차 : 2,800대
해군	잠수함 : 95척 구축/프리깃함 : 54척 기타수상함 : 1,201척 항공기 : 870대
공군	폭격기 : 470대 전투기 : 4,500대 기타항공기 : 1,300대
핵 전력	ICBM : 8기 IRBM : 60기

자료: 「군사력 현황 1992-1993」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2. 10).

「국방백서 1993-1994」 (대한민국국방부, 1993. 10), p.42에서 재인용.

<표 11> 일본의 군사력 현황

구분	보유 전력
총 병력	246,000명(정원: 270,000명)
육상자위대	사단 : 13개 전차 : 1,210대 장갑차 : 384대
해상자위대	잠수함 : 17척 호위함 : 64척(AEGIS함 1) 기타함 : 120척 전술기 : 340대(헬기 130)
항공자위대	전폭기 : 324대 정찰기 : 27대 기타항공기 : 474대

자료: 「군사력 현황 1992-1993」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2. 10).

「국방백서 1993-1994」 (대한민국국방부, 1993. 10), p.44에서 재인용.

북한의 핵개발 의혹도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5년 핵확산 금지협정(NPT)에 체결한 북한은 협정규약상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1992년 4월 체결하였다.

수차에 걸친 사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자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돌연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후 북한핵문제는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북한 핵문제는 크게 3가지의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미·북관계, 북한과 IAEA 관계, 남·북 관계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i) 북한 과거 핵 의혹에 대한 특별사찰 ii) 경수로 지원문제에 있어서의 경수로 형태 iii)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 등이다.

북핵대응에 있어서 미국정부와 우리정부와의 공조체제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미국이 남북대화 속도와는 관계없이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뜻을 밝혔는데⁶²⁾,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정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따라 일단 협의는 공조로 하되 실행은 미국식으로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쨌던 북핵문제 대응방식은 북핵 과거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불허하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사이에 이견이 있는 듯하다.

이상에서 보듯 동북아지역의 역내국가간의 과도한 군비경쟁과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의 안보대화 및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미 이지역 국가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⁶³⁾, 이는 과거 냉전시대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중앙일보」, 1994. 9. 7일자.

63) 이 지역 다자안보 및 협력의 한 사례로서 CSCE를 모델로 한 CSCA 구상도 제기된 바 있으며, ASEAN 국가들의 「아시아 지역포럼」 창설제안에 의한 아·태지역 다자안보기구 논의도 있다.

<표 12> 북한 핵관련 시설현황

구	분	규 모	위 치 비 고
원자로	1호기	열출력 8MWt	평북 영변 '65가동
	2호기	열출력 25MWt (전기출력 5MWe)	평북 영변 '86. 1가동
	3호기	전기출력 50MWe	평북 영변 건설중 ('95가동예정)
원자력 발전소		전기출력 200MWe 전기출력 635MWe x 3기	평북 태천 건설중 ('96가동예정) 함남 신포 계획중
재처리 시설		200톤 / 년 (추정)	평북 영변 건설중 (내부 40%, 외부 80%)
우라늄 정련공장		120톤 / 년 (추정)	황북 평산 '90가동 평북 박천 '82가동
우라늄 광산		약 2,600만톤 매장 (가채량 400만톤)	평남 순천 황북 평산
기 타	핵연료봉제조 및 저장시설	300톤 / 년 (추정)	평북 영변 핵연료가공시설
	동위원소 생 산 연구소		평북 영변
	폐기물 시설		평북 영변

자료 : 「국방백서」 1993-1994」 (대한민국 국방부, 1993. 10), p.57.

최근 동서 이념분쟁의 종식에 따라 세계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대하고 이는 국지분쟁의 통제는 물론, 지금까지의 단순한 군사위주의 안보개념에서 경제와 통상,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국가간 협력의 증대를 위해서 다자간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⁶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노력이야말로 이 지역의 공동번영과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64) 「국방백서 1993-1994」, 1993, p.108.

4.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의 전망

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탈냉전이후 경제적 지역주의 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도 군사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의 병행이었다. 즉, 레이건 행정부의 「신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경제적 입장을 강고하게 하기 위해 태평양연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 제과정을 이용하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주둔의 강화, 동맹국가들(우선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의 동원,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전략적 제휴를 창출하는 것이었다.⁶⁵⁾

미국 경제력의 후퇴로 인한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의 패권쇠퇴⁶⁶⁾는 동북아지역의 세력판도의 변화와 함께 한·미관계나 미·북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국교수립 이후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은 탈냉전시대의 변화된 동북아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미·북 수교 및 미·일수교는 시기는 불확실하나 이미 예견된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으리라 본다.

미국의 대북관계는 냉전이후의 대내외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새롭게 정의해 가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지역전략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본다.⁶⁷⁾

65) 「아시아 태평양공동체론」, 소련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민족 민주운동 연구소 국제분과역, (장백, 1989), p.26.

66) 미국 패권의 쇠퇴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상대적 쇠퇴론자인 폴 케네디(Paul Kennedy)에 대한 나이(Joseph, S. Nye)의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양입장에 대해서는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New York : Random House, 1988)와 Joseph, S. Nye,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1990)을 참조할 것.

67) 박경서, “1990년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1권 2호(민족통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의 아·태전략 내지는 동북아전략은 APEC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개막이었다.⁶⁸⁾

지역협력을 위한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선호하고 지역주의적 경향을 경계하던 미국 외교정책의 원칙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⁹⁾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은 냉전시대 또는 탈냉전시대와 관계없이 군사·안보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진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지역주의 추세와도 관련하여 볼 때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점점 격하되면서 미국은 세계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에 입각한 다각적 통상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유럽의 EU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NAFTA를 출범시켜 지역적 협상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결국 NAFTA는 북미 3국의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다주주의를 완성시키는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성립했다.

NAFTA에 이은 APEC에서의 미국의 일방적 주도에 대해서는 아시아 각국들(특히 ASEAN 국가)의 경계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ASEAN 국가들 중심의 EAEC(East Asian Economic Caucus)에는 미국과 호주 가 제외되고 있는데, 범세계주의의 틀 속에서 지역단위의 경제권 형성은 불가피한 추세이나 동북아시아에서의 소지역주의 움직임은 역내 국가의 국익, 역내이익과 결부되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군소무역블럭과 APEC이 다자간 협력체로 진전될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독주가 방지되지 않는 가정하에 가능해질 것이다.

일연구원, 1992), p.48.

68)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7월 7일 일본 와세다 대학연설에서 밝힌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구상이나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APEC 각료회의에서 비공식 지도자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미국 정부가 이 구상에 부여하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69) 유석진·한태준,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의 주요쟁점,” 「신태평양공동체 구상과 한국」(세종연구소, 1994), p.10.

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탈냉전시대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미관계는 한·미 안보체제에 입각한 동맹자적 협조관계와 때로는 국가의 실리를 위해 경쟁, 갈등하는 관계로 접어들었다.

해방 이후 초기 보호자-피보호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로부터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까지 발전해 온 한·미관계는 앞으로 대두될 주요 이슈에 따라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과제를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⁰⁾

첫째, 한·미관계에서 정치외교적 관계의 현안문제는 우선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와 이와 밀접히 연관될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미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대북 봉쇄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권문제를 중시할 진보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가 클린턴 대외정책의 성격이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인권정책을 추구했던 카터 행정부하에서 인권정책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를 국무장관에 발탁한 예만 보아도 클린턴의 대북정책이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강경정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제적 분야는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는 데 중요한 분야이면서 또한 갈등의 소지가 가장 큰 분야이다.

때문에 미국은 주요 무역상대국인 한국과도 미국의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하에 강경한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위한 쌍무협상과 더불어 우루과이 라운드(UR)로 대변되는 다자간 협상무대를 통한 쌀과 서비스 시장 개방압력이 우선 목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대외 통상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이를 통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통상외교기구를 시급히 요청된다.

70) 박경서, 1993, pp.229-231.

끝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한·미 관계는 그간 한·미 관계의 축이 되었던 분야로서 앞으로의 협력관계 또한 원만하리라고 보아진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방장관으로 기용된 아스펜(Les Aspen)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어떤 군사적 모험주의에도 과거 냉전적 구조하에서와 같은 강경대응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전이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국이익 우선정책으로 인해 한·미간의 동맹관계의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북핵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미묘한 관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향후 미·북관계의 전개와 이와 관련된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따라 한·미 관계가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대북관계는 냉전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지역전략과 관련하여 전개되어 왔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기조는 북핵문제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관련한 한반도에서의 핵위협 등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점진적인 남북화해를 이룩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미·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보면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요인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고립을 지양하려는 미국측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몇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⁷¹⁾

첫째, 냉전이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미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미국의 기존 군사력의 구조적 재조정과 배치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어 주한 미군의 규모와 배치도 감축의 방향으로 이미 재조정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둘째, 한국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4각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이 미국의 책임으로 남아있게 되어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셋째, 남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경쟁국인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어 미국만이 동북아의 새로운

71) 박경서, 1992, p.49.

질서 형성에 있어 구태의연한 현상유지정책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만큼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으며 핵문제 이외에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 등 한·미간의 미묘한 문제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미·북 관계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군사적으로는 현안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북관계의 진전이 어려울지 모르나 경제정책에서는 예외가 되고 있다.

즉 경제교류, 민간자본유치 및 기술도입, 미국의 대외지원법에 의한 정부차원의 경제지원 등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유시장체제로의 유도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7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목전에 두고 발생한 김일성의 급사로 인해 해결국면에 접어들은 듯한 남·북관계는 다시 경직되었다. 이후 연일 문제화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는 비단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국내의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와 있으며⁷²⁾, 핵과 관련해서는 대미직접협상을 들고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입장으로는 핵문제해결이후 미·북 수교 및 기타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일체제의 안정적인 세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 국내정치도 주요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통일정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72) 북한은 두만강 유역의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한 후 UNDP 주도하의 이 지역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VI. 한·미관계와 미·북관계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정책이다. 즉 주도적 역할은 한국측이 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베이커(James Baker) 국무장관이 암시했던 「2+4」 방식⁷³⁾과 같은 한반도 통일의 국제환경조성에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만큼 적극적일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로서는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 교섭, 미·북한간 관계개선 가능성 및 대만과 북한간의 교역활성화 등의 새로운 상황변화를 수용해야만 하겠다.⁷⁴⁾ 이와 같은 상황은 통일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역량을 더욱 필요로 하게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협조체제의 구축에 의한 대북한 압력이 핵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본과 미국의 노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되 가시적인 결과에 대한 합의는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 남북 당사자간 대화의 실질적인 성과에 연계시키는 전략을 미국과 일본정부에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⁷⁵⁾

또한 전방위 외교의 표방과 함께 대 러·중 관계의 균형된 관계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북방정책의 성과의 이면에 러시아와 중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지역내 자국의 위상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이익계산이 있다는 점을 상정할 때, 북방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대러·중관계를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남방

73) James Baker, "America in Asia", *Foreign Affairs*, Vol.70, No.5(Winter 1991-92)
참조.

74) 길정우, 1992, p.34.

75) Ibid., p.37.

관계와 조화시키는 가운데 균형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⁷⁶⁾

결국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된 관계가 모색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관련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즉, 통일문제와 관련한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북 관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반도 통일환경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내적·대외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꾸준히 외교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2. 종합적 결론 및 정책대안

EU와 NAFTA 등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AFTA, EAEC, ANZCER, 환동해경제권, 화남경제권, 황해경제권 등은 역내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들이다.

또한 UNDP 주관하에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이 남북경제협력이라는 문제와 연계되어 추진중에 있다.

위의 다양한 구상은 개방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정부는 개방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A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배타적인 경제지역주의는 실현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아니라 한국의 장기적 국익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APEC의 활성화를 통한 역내 경제질서의 안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아·태지역 경제체제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⁷⁷⁾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76) Ibid., p.38.

77) Ibid., p.40.

APEC의 설립과 경위 및 전망에 대해서는 山神進 編著, 「아시아太平洋地域の時代」(東京:第一法規, 1994)참조.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분야에 있어서 쌍무적 관계보다 다자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지역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 세계경제질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양국은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은 북한을 개혁·개방체제로 끌어내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둘째, 이미 언급한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 이외에 역내 안보협력체의 구성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북한 핵개발문제에 대한 투명성보장 이외에 중·일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의 군비증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군사 및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과거 미국의 부시행정부하의 쌍무적 협력에서 현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적 혹은 집단적 안보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내지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에 근거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창설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 후의 안보체제 정립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의 쌍무적인 안보협력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정부의 대미의존적 안보정책은 정책결정상 자율성을 저해하고 다자적인 안보협력을 위한 각종 협상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78)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경계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적 다자주의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일본의 지배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Barry Buzan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36, No.2, IISS (Summer 1994), pp.3-21참조.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방백서 1993-1994」, 서울:대한민국 국방부, 1993. 10.
- 권만학, “냉전후 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 협의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1.
- 길정우, “북방정책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통일연구논총」, 제1권 제2호,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국진, “동북아 다자간 안보레짐에 대한 접근: 한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동북아다자간 협력체」, 한국지역연구협의회 국제학술회의, 1993. 12.
- 박경서, “1990년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1권 2호,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2.
- , “한·미관계”, 정일영 편, 세종연구소 세종총서, 「한국의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서울:나남출판사, 1993.
-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서울:태백, 1989.
- 산업연구원, 「북미무역협정체결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방문사, 1992.1.
- 손병해, 「동북아 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 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9.
- 손일태,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1990년대 북한체제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서울: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 「아시아·태평양공동체론」, 소련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민족 민주운동 연구소 국제분과역, 서울:장백, 1989.
- 유석진·한태준,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의 주요쟁점”, 「신태평양공동체 구상과 한국」, 서울:세종연구소, 1994.
- 윤종호, “탈냉전시대 미국의 아·태전략과 한국안보”, 「국방연구」 제36권 제2호, 서울: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3. 12.
- 정영록,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수출경쟁력 비교」,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1.

- 조영삼,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제 -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 「북방지역경제」, 서울: 산업연구원, 1991. 12.
- 최종기, “한국북방외교의 현황과 전망: 7.7선언은 돌파구로서 능동적 대응만이”, 「통일 연구논총」 제8권 1호, 서울:국토통일원, 1988.10.
- 한승수 총괄, 「태평양시대와 한국」, 서울: 산업연구원, 1989.
- 홍순호, 「한국국제관계사 이론: 시대상황의 역학구조」, 서울: 대왕사, 1993.
- 「동아일보」, 1988. 4. 1.
- 「로동신문」, 1980. 10. 11.
- 「세계일보」, 1994. 9. 15.
- 「중앙일보」, 1994. 9. 7.

2. 외국문헌

- Baker, James, “America in Asia”, *Foreign Affairs*, Vol.70, NO.5, Winter 1991-92.
- Balassa, Bela,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New York : Pergamon, 1981.
- Barlow, Maud, *Parcel of Rogues : how free trade is failing Canada*, Toronto : Key Porter Books, 1991.
- Barnett, Doak,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China Policy: Old Problems and New Challenges*, Washington, D. C. : Brookings Institution, 1977.
- Brown, Seyom, *New Forces in World Politics*,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 Buzan, Barry and Segal, Gerald,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36, No.2, London : IISS, Summer 1994.
- Chung Hee, Park, “Korean Political Philosophy,” *Korean Affairs*, Vol.II ,May-June 1962.
- Dibb, Paul, “Asia-Pacific Security: Act Now to Avoid a Regional Arms Rac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6, 1992.
- Drysdale, Peter A. and Patrick, Hugh, *An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 An Exploratory Concept Paper: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Senate, July 1979.

Drysdale, Peter A. and Patrick, Hugh, "Evaluation of a Proposed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i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An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 An Exploratory Concept Paper,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9.*

Drysdale, Peter A.,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Regional Arrangements and the Resource Trade :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Paper,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8.*

Hong, Sung-chick, "Cultural Variables of Asia-Pacific Community," in Sung-joo Han(ed.), *Community-Building in the Pacific Region: Issues and Opportunities, Seoul :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81.*

J.L., Granatstein, and Hillmer, Norman, *For Better or For Worse :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o the 1990s, Toronto : Copp Clark Pitman, A Longman Company, 1991.*

Knorr, Klaus, *The Power of N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Basic Book, 1975.*

Krause, Lawrence B. and Sekinguchi, Sueo, (eds.), *Economic Interaction in the Pacific Basin,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80.*

Nixon, Richar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 : The President's Report to the Congress and the Nation on American Foreign Policy, 1970 ,New York : Bantam Books, 1970.*

Shinohara, Miyoehei, "Emerging Industrial adjustment in Asia-Pacific Area," in *Asia Pacific Community, No.11, Winter 1981.*

Sindhvani, Trilok N., *Economic Feasibility of an Asian Common Market, New Delhi : Sterling Publishers Private Ltd., 1975.*

Sneider, Richard L., "The Evolving Pacific Community : Reality or Rhetoric" in

- Robert B. Hewett(ed.), *Political Change and the Economic Future of East Asia*, Honolulu : Pacific Forum, 1981.
- Timberman, David G., "In Search of a Pacific Basin Community", in *Asian Survey*, Vol.21, No.5, May 1981.
- Vital, David, *The Survival of Small States: Studies in Small Power/Great Power Conflict*,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Zagoria, Donald,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IISS, *Military Balance 1971-1992*, London : Brassey's, 1991
- 山神進 編著, 「アジア太平洋地域の時代」, 東京:第一法規, 1994.
- 田中素香, "EC統合の進展と欧州再編成の展望," 国際 経済學會編, 「地域主義と世界經濟」世界經濟研究協會, 1991.
- 野村昭夫編 著, 「現代の世界經濟」, 東京: 實教出版株式會社, 1989.
- 「太平洋經濟圏」,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68.
- 環太平洋連帶研究 グループ, 「環太洋連帶の 構想」, 東京: 大藏省 印刷局, 1980.

北·美 關係의 正常化가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研究責任者：李 來 榮 (高麗大 亞世亞 問題研究所)

目 次

<要約文>	67
I. 序論	75
II. 北·美關係의 歷史的 眺望	76
1. 美國과 北韓의 相互認識과 政策方向	76
가. 미국의 대한반도 및 대북한 정책	76
나. 북한의 대한반도 및 대미 정책	79
2. 北·美關係 變化의 過程	81
가. 제1단계 : 북·미관계 형성기	81
나. 제2단계 : 인민외교 정책기	82
다. 제3단계 : 정부간 교섭기	84
라. 제4단계 : 인민외교-정부간 교섭 병행기	84
마. 제5단계 : 관계 개선기	86
III.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關係의 解決 展望	88
1. 北·美간의 核問題를 둘러싼 葛藤의 登場과 展開 過程	88
2.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간의 戰略	92
가. 북한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전략	92
나. 북한의 핵전략	94
3. 北韓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간의 葛藤의 解決方向	96

IV. 北·美關係의 正常化가 韓半島에 미칠 影響	100
1. 北·美關係 正常化가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의 變化	100
가. 남북 교차승인과 2+4체제의 형성	100
나. 2+4체제로의 전환과 동북아 주요 강대국의 한반도 전략	102
2. 北·美關係의 正常化가 北韓 體制에 미칠 影響	109
가. 정치·안보적 측면	109
나. 경제 및 사회 개방적 측면	110
다.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대남전략에 미치는 영향	112
3. 北·美關係의 正常化가 南北 관계에 미칠 影響	114
가. 긍정적인 영향	114
나. 부정적인 영향	115
V. 北·美關係의 正常化가 南韓의 對應戰略	117
1. 北·美관계 正常化에 대응한 南韓의 外交政策 方向	117
2. 北·美관계 正常化와 남한의 對應戰略	119
VI. 結論	122
※參考文獻	125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要 約 文>

I. 序論

그동안 냉전질서의 붕괴로 국제질서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대립과 긴장이 잔존해왔다. 그러나 핵문제를 둘러싼 오랫동안의 긴장과 대립이 북·미간의 핵문제에 대한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해결되고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진행될 경우 빠른시일내에 북·일수교도 이루어지고 4강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같은 4강에 의한 교차승인은 북한체제와 남북한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한의 외교정책과 대북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미 관계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체제, 그리고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정세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수립해야할 외교정책의 방향과 대북정책의 방향을 논의 할 것이다.

II. 北·美關係의 歷史的 眺望

냉전시대에 미국과 북한은 상호 적대적인 대립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밀어닥친 역사적인 영향은 미국과 북한의 상호관계에

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미국과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진적인 관계의 변화를 보여왔다.

냉전시대에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기초는 동북아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로써 한반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전략적인 구도하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최근 까지 냉전적인 사고와 인식에 입각한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은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을 더이상 공산주의 봉쇄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패권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상적인 균형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전략적인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두고 있다. 이같은 대한반도 전략의 맥락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가능한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장래의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나쁠 것이 없다는 현실주의적인 계산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미국은 북·미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냉전시대에 대미정책을 대남 혁명의 여건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간주 하면서 적대적인 입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정책 이후에 오는 국제적인 외교적인 고립과 국내적인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체제 생존을 모색하면서 대미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대미수교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양국은 이같은 대미, 대북 및 한반도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크게 5단계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바야흐로 관계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즉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상호 적대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적대관계 강화기를 거쳐서, 1962년에서 1973년 사이에 중·미간의 데탕트 무드에 영향을 받아 북한이 미국과의 인민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부분적인 유화시기에 접어 든다. 그후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정부간 접촉의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간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인민 외교 방식에 따라 정

부간 접촉이 병행되는 시기에 돌입한다. 그후 88년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은 소련의 개혁·개방과 동구의 개방과 자유화라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함께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공식적인 대화기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적인 대화의 추진은 곧바로 등장하는 핵문제로 인해서 경색국면으로 돌입하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핵문제의 해결 조짐이 보이면서 북·미관계는 활기를 띄고 있다.

III.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關係의 解決 展望

8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사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북한 핵문제는 북·미관계의 중심 이슈가 되어 왔다.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으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체제 생존을 노리고 있다는 주변의 우려와 함께 각종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핵발전소건설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핵사찰 압력도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 성공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대북 압력 드라이브가 착수되게 된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은 핵사찰 문제를 주한 미군의 핵무기 문제와 연계시켜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전면실현'이라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이것이 동반되지 않을시 핵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미국은 핵시설의 조기사찰 뿐만아니라 핵재처리 시설의 해체를 대북핵정책의 최종목표로 정하고 무력사용의 고려, 사찰 수용시 미·북관계 고려등 강은 양면정책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1992년 북한은 IAEA사찰 수용을 밝히는데 이어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을 수용하는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게 되고, 그후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임시 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93년초 미국의 군사위성이 영변의 핵단지내에 신고되지 않은 두군데의 시설물을 포착하면서 북한과 IAEA 간에 이시설물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벌어진다. 이같은 과정에서 북

한은 1994년 3.9일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때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지난 6월 북한의 핵활동의 전면중단이 선언되면서 미·북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급속한 해결국면에 돌입하고 현재 북·미 수교를 위한 움직임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북한과 미국간의 핵사찰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의 고도의 정치, 군사적인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킴으로써 핵확산 금지체제를 유지시키고 동북아지역에서 주요 경쟁국가로 부상하는 일본으로의 핵확산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이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핵문제를 잇슈로 등장시키므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고자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외교적인 고립과 대내적인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고 체제자체의 생존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에 처해서 핵무기를 둘러싼 협상을 통해서 대미 수교를 이룩하므로써 대외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인 침체 상황을 탈피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같은 양국의 전략이 작용하면서 핵무기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한때 경색국면에 돌입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급속한 해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향하고 있다.

IV. 北·美關係의 正常化가 韓半島에 미칠 影響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질서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통일환경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질서가 과거의 냉전적인 대립축이 해체되고 4강 모두가 남북을 동시에 인정하는 2+4체제로 전환되어,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외적조건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북한 체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소·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북한체제가 처해있는

외교적인 고립상황을 벗어나고, 새롭게 등장한 김정일체제의 보강에 기여 할 것이고, 미국으로 부터의 안보적 위협에 관한 북한의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점진적이고 더딘 속도이기는 하나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남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4강교차 승인에 의해서 형성된 국제체제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분간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남북한의 교차승인을 가져와서 한반도의 탈냉전과 평화정착의 길을 터놓을 것이며, 남북한의 군비통제의 현실에 국제적인 보장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미·일과의 대북한 수교에 의해서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증진된다면 이는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시킬 뿐만아니라 북한의 경제력을 증진시켜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위한 출발점으로 남북한간에 합의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한 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남북한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의 지속적인 남한 배제 원칙과 미국의 남한정부와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남한 정부의 불만을 자아내면서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에 방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으며, 또한 한반도에 대한 4강의 교차승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적게 할 수도 있으며, 남북한에 대한 4강의 등거리외교와 이들간의 경쟁으로 통일의 움직임을 제약 할 수도 있다.

V. 北·美關係의 正常化와 南韓의 對應戰略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인해서 초래된 국제정세와 북한체제 내부,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남한의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뿐만아니라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1) 우선 우리 정부는 급속하게 변화되는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속에서 외교정책의 기본전략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미의존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유연한 외교관계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또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먼저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에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정책이 강온파간의 논쟁과 여론에 이끌려서 혼선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핵문제 해결에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북·미회담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미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핵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하되, 협상타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조하에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5) 먼저 북미 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북한핵의 과거 규명을 위한 특별사찰과 사후 핵연료봉 처리 문제는 북한핵의 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분명히 하되, 핵 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 및 수순에 관해서는 유연하고 단계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동결하여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거

의 투명성은 추후의 경수로 건설 과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단계에서 확보한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6) 대북경수로 전환의 지원문제는 한국에 의한 경수로 건설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임을 감안할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억 불에 이르는 소요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수 밖에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형 경수로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7) 북·미 관계정상화가 진전되면 북한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남북평화협정과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미국과의 3자회담이나, 또는 남북한과 미·중이 동시 참가하는 소위 「2+2 회담」에 의한 북·미 평화협정과 한·중 평화보장협정의 동시체결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8)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중단된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실현함으로써 남북한 대화재개의 물꼬를 트고 북·미 회담의 타결이 제공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회담의 협상의제를 다루기 보다는, 핵문제 이외의 남북간의 대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9) 북·미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한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직된 핵·경협 연계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범위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으며, 단계적 남북경협 허용은 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I. 序論

냉전체제의 붕괴후 세계질서는 양극체제에서 미국과 소련(현러시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소중심의 양극적인 질서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상하면서 다극적인 질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은 여전히 냉전적인 잔재들이 온존하면서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은 최근까지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이나 남북한의 대립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지난 8.12일 북·미간에 핵문제의 타결원칙에 합의 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은 그 어느때 보다도 평화적인 질서의 정착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북·미간의 핵문제의 타결과 함께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북·미간의 외교관계의 수립은 곧바로 북·일간의 수교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북·일,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지난 91년 한·소 수교와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은 4강 교차승인에 의한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나아가고, 그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은 2+4체제로의 전환을 하게 된다.

이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 정세의 변화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내부와 남북한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같은 환경 속에서 기존의 국제적인 질서와 힘의 관계속에서의 통일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고 새로이 변화된 국제정세속에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추진중인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의 통일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글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라는 맥락속에서 미국의 대북,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집중 조망하고, 아울러 소·동구권의 붕괴 후에 북한의 대미 전략의 변화를 집중 조망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북한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전개 과정과 그 해결의 전망을 통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방향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정세와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후에 남한의 대외정책과 통일전략의 변화의 필요성과 대외정책과 대북 통일전략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II. 美·北關係의 歷史的 眺望

1. 美國과 北韓의 相互認識과 政策方向

가. 美國의 對韓半島 및 對北韓 政策

냉전시대의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기본 구도는 한반도를 동북아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정책을 봉쇄하는 전략적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 즉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입각해 남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아·태 전략의 최대 거점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소련과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봉쇄하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추진중인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의 통일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글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라는 맥락속에서 미국의 대북,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집중 조망하고, 아울러 소·동구권의 붕괴 후에 북한의 대미 전략의 변화를 집중 조망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북한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전개 과정과 그 해결의 전망을 통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방향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정세와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후에 남한의 대외정책과 통일전략의 변화의 필요성과 대외정책과 대북 통일전략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II. 美·北關係의 歷史的 眺望

1. 美國과 北韓의 相互認識과 政策方向

가. 美國의 對韓半島 및 對北韓 政策

냉전시대의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기본 구도는 한반도를 동북아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정책을 봉쇄하는 전략적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 즉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입각해 남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아·태 전략의 최대 거점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소련과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봉쇄하

는데 필요한 지역전략의 일환으로 설정되었다.¹⁾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국가 이익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균형을 유지시켜 전쟁을 방지 하므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서 동북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 시키는데 필요한 전진기지로서 이용하고 힘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이 지역의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을 유지시켜 서태평양의 미군사기지와 일본을 방어하는데 국가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미국은 1953년(1954년 발효)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같은 대한반도 전략하에서 미국의 대북한 기본정책의 기초는 한국전쟁이후 최근까지 냉전적인 사고와 인식에 입각한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²⁾ 특히 1969년 푸에블로(Pueblo) 나포사건과 1976년 비무장지대의 도끼만행 살해 사건은 6.25전쟁 이후 또 다시 군사적인 충돌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초래 했었다. 그후 새로운 긴장완화의 국제정세와는 역행하는 1983년의 랑군의 외교사절단 암살사건과 서울올림픽 저해 기도로 자행된 1987년 대항항공기 폭파 사건은 미국의 대북한 인식을 돌이킬 수 없는 강경노선으로 선회 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을 국제 사회에서 테러국가로 규정하고 정치, 외교적 내지는 경제적인 고립화 정책을 추구하여 왔고 북한의 군사모험을 억지 시키는 강력한 군사전략적인 대응조치로 일관해 왔다.³⁾ 특히 미국의 레이건, 부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화당정권의 신보수주의적 대외정책하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봉쇄정책에 가까운 것이어서 북한의 체제개방과 개혁을 스스로 하든지 자체붕괴를 감수하든지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즉 북한과의 최소한의 외교관 접촉을 통해 북한 사회가 체제개혁을 중심으로 가도록 강력한 압

1) 박경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통일문제," *계간 북한문제*, (1993.봄), 35-36쪽.

2) Selig S. Harrison, "A Chance for Detente in Korea," *World Policy Journal*, (Fall,1991), pp. 610-612.

3) 길정우, "북미관계와 한국,"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관계와 미국*, 세미나 시리즈 94-0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4), 8쪽.

박전락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약화 내지는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⁴⁾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의 기본구조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전 아·태담당 미국무부 차관보 솔로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이후 시대의 지경학적(geoeconomics)시대에 이르러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점차 경제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자체를 고려한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팽창의 위협, 특히 구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이 실질적으로 소멸된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소봉쇄를 위한 첩병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모험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균형자 내지는 안보적인 안정자의 역할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동북아 지역분쟁의 예방이라는 지역적 역할을 더 중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 혹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적인 야심을 사전에 봉쇄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믿기 때문이다.⁵⁾ 요컨대 냉전시대의 전략구도하에서와 같이 일본의 안보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인 위치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중요하고, 따라서 한반도가 미국의 아·태 전략에서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클린턴 행정부가 국가안보의 요체를 경제 안보에서 찾고 있는 포괄안보 개념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세계10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제적 위치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인 재건, 지역분쟁 위협의 제거, 그리고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미국적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말하자면 클린턴 행정부의

4) 윤용희, “북한·미국 관계의 변화와 전망,” *국제정치 논집*, 제33집, 2호, (1993), 135쪽.

5) 박경서, 앞의 논문, 36-37쪽.

외교정책이 군사안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하되 인권문제나 환경문제 같은 진보적인 정책 또한 강조하는 진보적인 국제주의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⁶⁾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관은 그 이전의 공화당 시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를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문제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선에서는 강경정책을 펴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북한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유화정책을 펼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21세기의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더 이상 공산주의 봉쇄에 있지 않고 지역패권 세력으로 등장 할지도 모르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이상적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바뀐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크게 나쁠 것이 없다는 극히 현실주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나. 北韓의 韓半島에서의 對美政策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대미정책을 추구해 왔다.⁸⁾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나타난 외교적인 고립과 국내적인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체제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대미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대미 수교를 통한 활로의 모색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50-60년대를 통해서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으며, 미국을 “조선전쟁의 침략자”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축출해야 할 주적” “민족 통일의 주된 방해자”로서 한민족의 주된 방해자로서 인식하였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그들의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해 왔다.⁹⁾

6) *ibid*, p. 37

7) *ibid*, pp. 45-46.

8)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9), 1 쪽.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동서대당트의 추세와 함께 한반도에도 긴장완화의 조짐이 나타나자 미국의 정부와 인민을 구별하는 인민외교 방식을 원용했다. 북한은 미국의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여론을 조성시키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미국의 정부는 “제국주의의 탈을 쓴 철천지 원수”이지만 미국의 인민과는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와 인민 분리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¹⁰⁾

그러나 북한의 대미 인민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관련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미국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고, 미국 정부가 대북한 관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70년대 중반부터 인민 대 인민 뿐만아니라 정부 대 정부의 외교에도 역점을 두어 대미 단독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전환을 했다.

80년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레이건의 대북한 강경책에 대응하여 다시 인민외교 방식을 강화하게 되고 88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정부차원에서 미국과의 단독 협상의 길을 터게 된다.¹¹⁾ 그러나 89년 말 이후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과 함께 북한의 외교정책은 큰변화가 일어난다. 즉 한국의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주변국가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과는 별도로 UN에 가입하게 되었고,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미·일과의 수교와 남북 경협을 기대 했지만 이런 모든 기대가 핵문제로 인해서 빛나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대미전략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방위조약 폐기, 한미관계 이간 책동 등 종래의 대남혁명 여건조성 중점전략에서 미·북한 경제 협력 추구, 국제적인 고립 탈피, 체제 결속 강화, 체제 존중 보장, 생존 위협물 제거 등 생존 유지 담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¹²⁾

최근 들어서 북한은 당면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미 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9) *ibid*, p. 3.

10) 신정현,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의 변화,”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서울: 대왕사, (1992), 491쪽.

11)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9), 3-4 쪽.

12) *ibid*, pp. 8-14.

있으며, 이를 위한 방도로 북한은 「일괄합의 동시 실천」 핵카드, 대미 유화 공세, 비공개 접촉 및 변칙적인 3자회담 등을 활용하고 있다.¹³⁾

2. 北韓. 美國 關係變化의 過程

북·미관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힘의 역학관계와 남북한 관계 나아가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의 대미 정책의 골격에 따라 몇단계에 걸쳐서 변화 발전되어 왔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시기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¹⁴⁾ 본 논문에서는 윤용희 교수의 논지를 따라 5단계로 시기구분을 하고 북미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겠다.

가. 第1段階: 北·美關係 形成期 (1950-1970)

이 시기의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 형성기, 북한의 대미 적대 관계 강화기 내지는 강경 정책기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1950년부터 1970년 닉슨독트린의 발표 전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은 북한의 6.25 남침과 미국의

13) *ibid*, pp. 15-20.

14) 북·미관계의 시기구분을 하는 대표적인 논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 박재규 교수는 ① 적대감 강화기(해방-1960년대 말), ② 인민외교 추구기(1970년대 초-1974년), ③ 정부간 교섭기(1970년대-현재)로 구분하고 있고, 김갑철교수는 ① 적대관계 강화기(1950-1968년), ② 인민외교 강화기 (1969년-1974년), ③ 대미 접촉 강화기 (1974-1979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석렬 교수는 ① 강경 정책기(1950년-1960년), ② 인민 외교 정책기(1969-1973년), ③ 단독 회담 추진기 (1974-1980년), ④ 인민외교 단독 회담 병행기(1981-)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학자인 클라프(Ralph N. Clough)교수는 ① 미·북한 관계 형성기 (1945-1960년), ② 완화되지 않은 적대기(1960년대), ③ 전술상의 변화기(1970년대), ④ 폭력 행위에 의해서 손상된 상호 관계기(1980년대) 등으로 표현하고 그시기 구분을 넓게 잡고 있다.

Ralph N. Cloug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p. 255-275; 윤용희, "북한·미국관계의 변화와 전망," *국제정치논집*, 33집, 2호, (1993), 138쪽.

개입, 1953년 휴전 이후의 냉전기를 포함하는 시기로 대내적으로 김일성체제 형성과 강화기에 해당한다.

1953년 휴전 이래로 미국은 판문점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사령부를 대표 해왔다. 이것은 미·북간의 유일한 직접적인 접촉 수단이었다. 그러나 판문점 내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단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회기와 상호 논쟁을 벌이는 장소가 되었다.¹⁵⁾

이 시기 북한은 60년대부터 등장한 대남지역혁명론에 입각해서 남조선 혁명을 위한 일환으로 지하당을 만들고 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69년 미해군 정찰기 EC-121기 격추등 북한의 대미 관계는 한국 전쟁이후 60년대 말까지 증오와 좌절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를 띠었다.¹⁶⁾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양국간의 어떤 형태의 인적 물적 교류도 없었다.¹⁷⁾

나. 第2段階: 인민외교 정책기 (1962-1973)

이 시기는 인민외교 강화기, 인민외교 정책기, 또는 인민외교 추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1969년부터 1973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 북한은 미국의 정부와 인민을 구별하는 인민외교정책을 펼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이같은 정책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우선 외적으로 1969년 7월 콰 독트린¹⁸⁾과 70년 2월 닉슨 독트린¹⁹⁾의 발표와

15) 윤용희, 앞의 논문, 138쪽.

16) 이종석, “북한의 대남정책의 전개와 변화과정,” 통일문제 연구, 4권, 3호, (1992. 가을), 75-79쪽.

17) 윤용희, 앞의 논문, 139쪽.

18) 콰 독트린은 닉슨 대통령이 1969년 7월 26일 콰도에서 발표한 대아시아외교 교서이며, 그 내용은 ①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며, ② 동맹국의 자유 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핵의 위협에서 방패를 제공하며, ③ 기타의 침략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자유 방위에 의하고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는 인적 병력 이외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에 군사 개입을 줄이고 아시아 제국의 자주 방위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 닉슨 독트린은 1970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평화의 신

함께 전개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 특히 주한미 제2사단의 철수와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압력을 한국에 가하게 됨으로 인하여 불편해진 한·미 관계, 미·소간 데탕트무드의 고조, 미·중간의 화해, 일·중간의 관계 정상화 및 남북한간의 7.4공동 성명과 대화 모색이라는 상황의 진전을 들 수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북한은 대미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북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²⁰⁾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 '인민'과의 다각적인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 및 기타 비공식적인 관계를 확대하여 결국은 공식관계를 추구하는 2중정책의 새로운 대미 접근을 해온다. 그결과 북한은 미국의 공산당 대표단을 초청하여 미국 공산당과 유대를 맺기 시작하고 민간 학자들을 초빙하기도 한다.²¹⁾

한편 미국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서간의 긴장 완화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각종의 사회단체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여 민간차원의 접촉이 빈번하게 되었다. 1972년 3.7일 로저스 미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은 한국과의 합의후에 가능하다는 최초의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73년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미국은 일시적으로 북한에 여

전략'이라는 외교 교서로서 아시아에 관한 광 독트린을 전세계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 기본 내용은 ① 우호제국과의 파트너십, ②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에게는 힘에 의한 대처, ③ 평화에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교섭의 의욕' 등이다. 미국의 대공산권 정책이 종래의 대결에서 대화 또는 협상 조절, 군사보다는 경제로, 개입보다는 자위를 중요시 하였다.

20) 이종석, 앞과 같은 논문, 83-86쪽.

21) 미·북간의 민간교류는 1968년부터 시작되는데, 그해 8월 미국정부는 북한이 초청한 미국 공산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허용하였고, 그후 북한은 미국의 청년동맹대표·전국 법률가 조합 대표단 등 언론인 학자들을 초청하였다. 또한 1971년 2월 뉴욕에 「미·조친선공보센터」, 6월에 캘리포니아에 「조선인민과의 연대성위원회」를 각각 설치했고, 1973년 9월에 뉴욕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개설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인민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김계동, "미·북한관계 변화 과정과 개선전망," 국방논집, 제13호, (1991. 봄), 108쪽

행 제한을 하였지만 재미 교포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한국이 6.23선언을 발표하자 미국도 북한과 교섭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교차 접촉의 가능성을 밝혔으나 북한의 대미 단독회담 제의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 第3段階: 정부간 교섭기(1974-1980)

제3단계 북·미간의 관계는 정부간 교섭기, 정부간 접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 시기는 1974년부터 1980년기간 까지를 설정 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정부간 교섭 방식은 대미 평화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의 함으로써 시작 되었는데, 그결과 북한은 인민외교 방식과 정부간 접촉 방식을 병행하여 대미 단독 회담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1977년 1월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자 즉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 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공산국가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제한을 철폐하는 등 변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은 대미접근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미평화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3세계국가의 지도자에게도 중재 역할을 부탁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호칭도 종래의 미제에서 미국으로 바뀐다.²²⁾

그 결과 미·북은 활발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전개하고 또한 5차례에 걸친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비밀 접촉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79년 카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무기 연기를 발표하자 다시금 북미관계는 냉각되어 미·북간의 직접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난다.

라. 第4段階: 인민외교-정부간 교섭 병행기 (1981-1988)

제4단계 북·미관계기는 인민외교-정부간 교섭 병행기, 폭력에 의한 손상된 상호 접촉기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1981년부터 1988년 올림픽 기간 전 까지

22) 백광일, "미국의 북한 관계의 변화추세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2권, 1호, (1990. 봄), 290쪽.

로 잡을 수 있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 서면서 미국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의 침공으로 대소 강경책으로 선회하여 미·소간의 신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간주하여 대북한 강경 노선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정책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하여 오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은 양면 뿐만아니라 인민외교와 정부간 교섭외교를 병행하면서 대미 단독회담을 추진하였다.²³⁾

이같은 상황에서 미 국무성은 1983년 평양에 대해 微笑外交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83년 3월 해외 미국 외교관의 대북한 외교관에 대한 접촉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북한 인민의 미국 입국 비자 취득에 관한 기준을 완화 하였다.²⁴⁾

그러나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직후 미국이 대북한 규제 완화 조치를 유보하자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노력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자 북한은 이전에 미국이 제의한바 있는 '3자회담'을 1984년 1월 돌연히 제의 하였다. 그러나 3자회담에 대한 양국의 견해의 차이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²⁵⁾

1984년 북한은 한국에 수해물자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남북한 2자회담에 동의 하면서 미국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삼가하고, 동시에 인민외교를 강화하여 미국의 민간인을 초청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23) 백광일, 앞의 논문, 290쪽.

24) 윤용희, 앞의 논문, 143쪽.

25) 미국이 제안한 3자회담은 협상시에 남북한과 미국이 처음부터 동시에 참가하는 '3당국자 회담'을 의미하는 반면, 북한측의 3자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먼저 휴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치시킨 다음에 남북한간 상호 불가침협정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을 미국정부는 거부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완전히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3당국자 회담"일 것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한 적십자 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상우외 공저, 북한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8), 486쪽.

1987년 3월 8일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들과의 공식접촉을 허용 하였다. 그결과 일시적인 유화적인 상황이 전개 되었으나 1987년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으로 북한은 테러국가로 낙인 찍히고 북-미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²⁶⁾

레이건에서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정권의 신보수주의적인 대외정책하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봉쇄정책에 가까울 만큼 강경해서 북한이 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붕괴를 감수하든지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최소한의 외교관 접촉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체제 개혁을 하도록 강력한 압박 전략을 견지 하므로써 북한 체제의 약화 내지는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마. 第5段階: 관계 개선기 (1988-현재)

5단계 북·미관계기는 관계 개선기, 공식 대화기 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88올림픽 전후부터 형성되어 현재까지 시점으로 잡을 수 있다. 그것은 구소련의 개혁과 개방, 동구의 개방과 자유화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과 한국에서의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노태우 정권에 의해 북방 정책이 전개되고 7.7선언에 의해 남북대화를 모색하자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당시에 전개되던 동구에서의 자유화 물결에 고무되어 그러한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북한사회에 불어 넣을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촉진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²⁷⁾

미국은 1988년 10월에 대북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90년 10월에는 시거 전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11월에는 북경에서 미국과 북한이 5개월만에 제5차 실무 접촉을 한 바 있으며, 북경 참사관급 회담을 대사급으로 격상 시킬 것을 제의 하였다.²⁸⁾

26) 윤용희, 앞의 논문, 144쪽.

27) 박경서, 앞의 논문, 38쪽.

28) 백광일, 앞의 논문, 297쪽.

한편 북한도 1990년 5월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미국에 대해 “조선문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관계개선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²⁹⁾ 이같은 북한의 대미전략의 변화는 과거 대미전략이 한미관계를 이간 시키고 대남혁명의 여건을 조성시키는데 있었으나 냉전종식 이후에는 정치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파탄을 극복함으로써 흡수통일의 위협성을 차단하고 기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5월 28일 5구의 미군 유해를 미국측에 인도하고 그후 93년 5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48구의 미군 유해를 더 송환하였다. 또한 분단고착화 정책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하던 유엔가입을 1991년 10월 한국과 동시에 단행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행동 할 것 임을 미국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1992년 1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협정에 서명하기에 이른다.³⁰⁾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 응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미국의 대북한 특별사찰의 요구와 여기에 대한 북한의 불응과 미국의 강경한 핵사찰 요구에 북한과 미국과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핵문제를 둘러싼 밀고 당기식의 접촉이 현재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같이 핵사찰 문제는 미·북관계 개선의 핵심적인 전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3차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핵문제 타결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북·미 관계정상화가 현실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조망해본 미국과 북한의 관계의 발전 과정의 특징은 크게 보아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전에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면서 다소 전술적인 대응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어 온 과정 이었다면, 냉전체

29) 윤용희, 앞의 논문, 145쪽.

30) 박경서, 앞의 논문, 39-40쪽.

제의 붕괴후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북한 역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불어닥친 정치, 경제, 외교적인 고립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 개선은 현재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나,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북·미간의 핵사찰 문제의 등장 배경과 그 전개 과정, 해결의 방향을 살펴 봄으로서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방향을 조망 해 볼 것이다.

III.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關係의 解結 展望

1. 北·美間의 核問題를 둘러싼 葛藤의 登場과 展開 過程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핵문제는 남한과 미국 그리고 동북아 주변지역과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으로 체제적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와 함께, 각종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보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1985년 12월에 NPT에 가입한지 18개월내에 체결토록 되어 있는 IAEA와의 안전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은 국제적인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³¹⁾

1984년 북한이 건설하고있는 30MW급 제2원자로가 거의 반쯤 건설된 시점에

31) 박제규,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전망과 대응,”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4.5), 11쪽.

제의 붕괴후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북한 역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불어닥친 정치, 경제, 외교적인 고립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 개선은 현재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나,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북·미간의 핵사찰 문제의 등장 배경과 그 전개 과정, 해결의 방향을 살펴 봄으로서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방향을 조망 해 볼 것이다.

III.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關係의 解結 展望

1. 北·美間의 核問題를 둘러싼 葛藤의 登場과 展開 過程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핵문제는 남한과 미국 그리고 동북아 주변지역과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으로 체제적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와 함께, 각종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보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1985년 12월에 NPT에 가입한지 18개월내에 체결토록 되어 있는 IAEA와의 안전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은 국제적인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³¹⁾

1984년 북한이 건설하고있는 30MW급 제2원자로가 거의 반쯤 건설된 시점에

31) 박제규,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전망과 대응,”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4.5), 11쪽.

서 미국은 이를 발견하여 소련 정부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소련의 압력에 의해 북한은 NPT에 가입하지만 그 이후에 IAEA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하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거부하면서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해 나갔다.³²⁾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 문제화 된 것은 대체로 영국의 『가디언』지가 1988년 11월 IAEA의 1987년도 연례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원자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때부터 였다고 할 수 있다.³³⁾ 1989년 6월말 미국 고위전문가들이 남한을 방문하여 남한정부 관련 실무자들에게 미국의 첩보 위성이 촬영한 북한의 핵시설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1995년까지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보다 구체성을 띄고 제기 되었다. 그리고 1990년 2월 일본 동해대학 정보 기술센터 사카다 소장이 프랑스의 상업용 지구 관측위성 스포트가 상공 830킬로미터에서 촬영한 위성 화상을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평양 북쪽 9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영변일대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³⁴⁾ 비슷한 시기에 모스크바 방송은 소련이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처음으로 북한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³⁵⁾

이에따라 북한의 핵문제는 본격적인 이슈로 등장하였고, 핵사찰 압력도 표면화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 성공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대북 압력드라이브가 착수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은 핵사찰문제를 주한미군의 핵보유 문제와 연계시켜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전면실현’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즉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완전히 철수되기 전에는 IAEA사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³⁶⁾

32) *ibid*, p. 11.

33) 박찬표, *북한의 핵문제*, 서울: 국회입법자료분석실, (1992), 17-18쪽.

34) 박재규, *앞의 논문*, 11쪽.

35) *경향신문*, (1989, 7.5).

이에 대해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남한의 미군 전술 핵 무기철수 문제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핵시설의 조기사찰 뿐만 아니라 핵 재처리 시설의 해체를 대북 핵 정책의 최종 목표로 정하고 무력 사용의 고려, 사찰 수용시 미·북관계 개선고려 등 강온의 압력을 가했다. 또한 일본도 미국의 압력에 보조를 맞추어 1990년 9월 대북 수교협상에서 핵문제 해결을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에 압력을 가했다.³⁷⁾

이처럼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어 지자 북한은 1991년 7월 16일 그때까지의 전제 조건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협정의 표준 문안에 최종합의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하고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협정에 서명 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IAEA이사회는 9월 12일 '대북한 조기협정서명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12.3일에는 23개국이 핵 강제 사찰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기협정 서명을 위한 압력을 강화하였다.³⁸⁾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1991년 9월 27일 부시대통령의 한반도로부터 전술핵 무기 철수 발표와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선언'(11.8일)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주한 핵무기 철수 발표로 핵사찰 거부 명분이 없어지자 북한은 11월 25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핵무기가 철수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주한미군 핵무기와 북한 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12월 18일 노대통령의 한반도 핵부재 선언과 12월 21일 부시대통령이 주한미군 핵무기의 철수를 사실상 확인하자 북한은 12월 23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 수용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³⁹⁾

이와 같은 상황 전개이후 91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한측은 전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채택 할 것을 제의 하였다. 남

36) 박주식, "북한 핵문제의 상호인식과 갈등," 서울: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4): 북한의 군사분야, (1993), 22-23쪽.

37) 박재규, 앞의 논문, 12쪽.

38) *ibid*, p. 12.

39) *ibid*, pp. 12-13.

한 정부가 제안한 안은 한반도의 비핵화의 내용은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은 물론 핵무기 개발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의 포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남한정부는 비핵화 제안과 함께 군산의 주한미군 기지와 영변등에 대해 1992년 1월 31일까지 시범사찰을 실시 할 것을 제의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서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⁴⁰⁾

한편 북한은 1992년 1월 7일 IAEA 사찰 수용을 밝히는데 이어 1월 23일 오스트리아 빈소재 IAEA 사무국에서 북한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수용하는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같은날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비준하고 핵사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⁴¹⁾ 이후 북한은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협정을 비준하고 4월 10일 정식 발효시켰다.

「안전협정」에 북한이 서명하고 비준을 한것은 IAEA에 가입한지 6여년이 지나서 였으며, 북한은 이후부터 1993년 2월까지 여섯차례의 임시 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93년초 미국의 군사위성이 영변의 핵단지내에 신고되지 않은 두군데의 시설물이 있음을 포착하고 이를 IAEA에 알려줌으로써 북한과 IAEA간에 이 시설물에 대한 특별 사찰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은 3월 9일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다시금 미궁속으로 빠져 들었다.

그로부터 1여년 동안의 과정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IAEA와 남한 등 관련국가 및 국제 기구간의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북한은 1여년동안 핵문제에 관해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은채 협상과 사찰, 사찰 지연내지는 NPT탈퇴 위협 그리고

40)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을 하지 않는다.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③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⑤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표된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41)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2.2), 73쪽.

다시 협상의 단절적인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강온정책을 구사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특별사찰을 받도록 이끌어 내려고 했으며, 북한의 NPT 탈퇴 위협 등 강경한 움직임에 대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까지 비치면서 강경 대응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같은 양국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던 중 북한은 지난 94년 6월에 핵 행위의 전면중단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미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서서히 그 매듭이 풀리면서 1994년 8.12일 양국간에 일괄타결 사항을 합의하면서 그 해결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2.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間の 戰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개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IAEA, 남한, UN,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세력들 간에 얽힌 복합적인 과정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심적인 갈등의 축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같은 양국간에 장기적인 끌고 당기는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북한의 핵 확산 방지라는 일반적인 입장외에 미국과 북한의 자국의 국익에 근거한 정치적인 전략이 작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이후의 핵문제의 해결 방향 뿐아니라 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등장할 북·미간의 외교적인 관계의 수립을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이다.

가. 北韓 核問題를 둘러싼 美國의 戰略

미국이 북한 핵 사찰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핵사찰을 끝까지 고수한데에는 동북아지역과 세계를 둘러싼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전략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다음 3가지 요인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

한 파장을 우려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양보 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 외교의 중요 정책 목표인 핵 확산 금지체제(NPT)의 실질적인 와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핵 물질이나 핵 기술을 제3세계로 이전하면 보다 심각한 핵 확산의 문제로 확대 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에서의 핵확산 뿐만아니라 중동 지역 등에서 외부의 기술 원조에 의한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미국이 가장 꺼리는 사태이다. 소련의 해체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파트너로서의 효용성이 줄어든 반면 통상문제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문제 등으로 미국의 가상 적이 될 수도 있는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다. 즉 핵국가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 시켜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 시키는데 이는 미국의 2차대전 이후의 외교 기본 노선과 충돌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나 일본의 핵무장은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유발하여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세계적인 핵확산은 당연히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지위를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개연성을 높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지역분쟁은 미국으로서는 보다 많은 댓가와 위험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특히 미국의 적대 관계인 국가가 그 지역내의 미국인이나 미군 또는 미군사 시설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 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이같은 군사적인 우려로 인해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 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핵문제를 매개로 하여 냉전이후 재편되고 있는

42) 박주식, "북한 핵문제의 상호 인식과 갈등," 93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4: 북한의 군사 분야, 서울: 통일원, (1993), 20-21쪽.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보장 받고자하는 전략적인 이익의 문제도 미국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미국의 입장을 좌우하는 주요한 국가적인 이익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냉전기의 개막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정치·군사 질서가 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중시하는 어젠다를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부각시키고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안보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리더십의 필요성을 동북아국가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후견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커다란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15년 이상 동안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서 경제 군사 정치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강대국 중국의 등장이 미국에게는 심각한 경계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고립화시켜서 여러가지 우려 할만한 사태를 조성하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기 보다는 북한을 자신이 주도하는 쌍무관계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차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미국기업들을 참여 시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⁴³⁾

나. 北韓의 核査察을 둘러싼 戰略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세계 핵전략과 대동북아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임해왔다면 북한은 보다 방어적인 체제 내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핵사찰을 둘러싼 갈등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전략은 1993년 3월 돌연 NPT탈퇴를 선언하는 등

43) 박재규,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전망과 대응,"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94-1, (1994.5), 16-17쪽.

지속적으로 특별 사찰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개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소산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전략은 핵카드를 통해서 대미 수교를 이룩해내고 냉전체제의 붕괴후에 봉착한 외교적인 고립과 국내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대미수교를 이룩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소련이라는 최대의 우방국을 상실했으며, 동유럽의 형제국이 붕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남한의 한·중, 한·소 수교로 인해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남한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교할때 비약적으로 성장 했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로 인한 무역질서의 붕괴가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라는 대내적인 체제 승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내의 결속 강화가 요구 되었다.

이같은 대내외적인 상황의 전개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강제 하였고, 핵개발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핵개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어렵게 되자, 북한은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북미 수교를 이룩하므로서 대외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인 침체 상황을 탈피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먼저 미국이야 말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이며, 남한의 후견국가로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대외 관계개선을 시도 한다면 그 대상은 서방 국가들인데, 서방국들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을 위

44) 민족통일연구원, “핵관계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 분석,” 통일정세분석 94-0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3), 5쪽; Byung-Joon Ah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Nuclear Issue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92), pp. 10-11.

한 제1관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1991년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탈냉전기 세계 유일의 패권국인 미국으로부터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한 셈이다. 다시 말해서 1953년 미국과 북한이 한국 전쟁의 결과 휴전협정에 조인했으나 여전히 교전국으로서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수교는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이같은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하여 대미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리한 남북한의 역학관계에서 북한의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점차 확대되는 남북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격차를 해소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한편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미 수교라는 양면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北韓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間 葛藤의 解決 方向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그동안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와 미국의 유엔제재 결의안의 상정 등 갈등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 8.12일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북·미간에 합의된 내용의 핵심은 북한의 핵 활동 동결 약속, 이를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안전조치 완전이행 약속, 사용후 연료보의 재처리를 앉겠다는 의사의 표명 등인데, 이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양보에 대해서 미국은 경수로 전환의 지원과 함께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및 무력 불사용 보장, 적국 교역법 해제 등을 제시하였다.⁴⁶⁾

45) 박재규, 앞의 논문, 14-15쪽.

46) 한겨레 신문, (1994. 8. 13).

이같이 양국이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루한 과정을 매듭짓고 3단계 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북한의 북·미 관계 정상화의 절실한 필요성이 일치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어젠다(agenda)로 하여서 냉전 이후 새로이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의 확립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후 고립된채 남아 있는 북한의 존재가 동북아의 안정에 끝없는 긴장 요인이 되어 왔고, 이같은 상황에서 북·미간의 핵문제의 해결과 관계 개선은 미국으로 하여금 안보 비용을 줄이고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범위안에 끌어 들임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는 실리를 추구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북한핵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이유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내의 경제적인 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서의 실패라는 비판이 일면서 여론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더구나 금년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비판은 클린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핵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⁴⁷⁾

이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김일성 사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김일성의 사망에 대한 조문 사절 파견,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등을 통해서 북·미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면서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과거핵을 묻지 않고 미래핵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⁴⁸⁾

북한도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요구한 사항을 대폭 수용하려는 미국의 태도만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과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등장에 따른 체제계승 위기를 해소하고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생존의 보장과 경제적인 개혁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과

47) 한겨레 신문, (1994. 8. 15).

48) 중앙일보, (1994. 5. 15).

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김일성 장례식 기간동안에도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미국과의 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천명하고 미국에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이같이 양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8월 12일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아직도 핵문제의 완전 타결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8월 12일의 합의문이 완전히 타결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난제가 남아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특별사찰과 사용후 핵연료봉 완전폐기 문제이다. 경수로 지원과 핵활동 동결이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특별사찰과 사용후 연료봉 처리문제는 북한핵의 과거의 투명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현재 이같은 문제는 북한이 합의문 작성의 내용에 특별사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데서 명백히 들어나고 있다. 또한 미국내의 클린턴의 미래 핵을 막는 정책의 채택에 대한 과거핵의 철저한 조사를 주장해온 세력들의 반발의 여지도 8.12일의 합의문의 원만한 타결과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이다.⁴⁹⁾ 또한 특별사찰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 정부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외교적 혼선이 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개발 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핵 비확산에 초점을 둔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개발의 현상태 동결이라는 인식하에서 대북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정부는 핵무기 보유가 미칠 군사.안보 및 전략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북한의 핵과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핵개발의 동결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투명성은 보장하지만,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한 채 특별사찰과 사후 핵연료봉 문제를 차후의 대미 대남한 협상의 유효한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는 경수로의 형태와 재원의 문제이다. 북한은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시 경수로 전환에 관한 지원이 확실하면 핵개발계획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49) 중앙일보, (1994. 8. 15).

하였으며, 8월 12일 양국은 경수로 전환 지원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러시아나 독일형 경수로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 건설에 관한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 1천 MW급 경수로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30억 달러 이상의 건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난제인데, 한국이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수로 건설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 한국의 적극참여를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같은 난관과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제2차 고위급 회담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이 핵문제 타결을 위해 대폭 양보를 하고 있고 북한 역시 핵문제 타결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특별사찰등 개별 안전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원칙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발전 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⁵⁰⁾

북한핵 문제의 타결은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국교정상화 시도에 대해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정치, 경제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핵문제와 맞물려서 진행된 양국간의 관계정상화의 문제는 지난 8.12일 합의문에 북한과 미국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원칙의 합의 내용에서 보듯 핵문제 해결과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23일 2차회담에서 경수로 지원 방안과 특별 사찰 실시 등 최대 쟁점이 타결되면 즉시 또는 늦어도 올해 안에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성사 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⁵¹⁾ 이같은 북·미간의 연락 사무소의 설치의 수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수교로 가는 출발점이다. 완전한 수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이 수교를 위해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 미사일 수출 중지, 한국전의 미군유해 송환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50) 중앙일보, (1994. 8. 15).

51) 중앙일보, (1994. 8. 15).

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의 개최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이 특별사찰 등의 쟁점에서 마찰이 심화될 경우 수교는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핵문제의 타결은 단순한 핵문제 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북·미 관계의 변화를 둘러싸고 북·일간의 변화와 남북한의 관계에도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절에서는 이같은 북·미수교의 변화가 가져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북한체제내의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IV. 北·美關係의 正常化가 韓半島에 미칠 影響

핵문제의 타결과 함께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만이 아니라 북한체제와 남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에서는 이같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것이다.

1. 北·美關係 正常化와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政勢의 變化

가. 南北 交叉承認과 2+4體制의 形成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4강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으로 이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2+4체제(남·북 + 미·일·중·러)를 형성하게 된다.⁵²⁾

냉전체제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남한은 미·일을 중심으로한 3각 동맹체제를 형성하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하여, 남북한을 중심으로한 4강이 양분화되어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52) 한겨레신문, (1994. 8. 14).

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의 개최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이 특별사찰 등의 쟁점에서 마찰이 심화될 경우 수교는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핵문제의 타결은 단순한 핵문제 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북·미 관계의 변화를 둘러싸고 북·일간의 변화와 남북한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절에서는 이같은 북·미수교의 변화가 가져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북한체제내의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IV. 北·美關係의 正常化가 韓半島에 미칠 影響

핵문제의 타결과 함께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만이 아니라 북한체제와 남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에서는 이같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것이다.

1. 北·美關係 正常化와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政勢의 變化

가. 南北 交叉承認과 2+4體制의 形成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4강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으로 이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2+4체제(남·북 + 미·일·중·러)를 형성하게 된다.⁵²⁾

냉전체제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남한은 미·일을 중심으로한 3각 동맹체제를 형성하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하여, 남북한을 중심으로한 4강이 양분화되어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52) 한겨레신문, (1994. 8. 14).

도래된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강대국간의 긴장관계를 완화 시켜서 한·소 수교와, 한·중수교를 이룩하기에 이르렀고, 북·미, 북·일간의 수교의 움직임도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오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북·일수교의 문제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보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북·미간의 핵문제의 타결조짐이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일본은 서둘러서 북·일수교를 위한 움직임을 개시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90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바탕으로한 한국의 성공적인 북방외교의 추진으로 대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의 제동 요인이 제거 되었다고 인식, 초경제강대국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확대를 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왔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은 핵문제가 터지면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수교는 보류한다는 원칙하에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 왔다.⁵³⁾ 그러나 북·미수교가 현실적으로 거론되면서 일본은 대북 수교를 위한 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지난 2일 가진 주일 특파원단과의 회견에서 북한과의 수교가 일본 외교적 숙제라고 시인하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고, 특히 야마시타 신타로 신임 주한일본 대사는 1994. 8. 10일 “북한이 수교협상을 원한다면 이에 응해 핵 의혹 문제를 협의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입장에는 자국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한문제가 지난 70년대 미·중간의 국교정상화나 걸프전때처럼 일본이 논의구도에서 배제된채 진행되어서는 않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면 8월 12일 북한 미국간의 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로 인해 북·일간의 수교협상이 재개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충분히 이루어진 셈이며, 북·일수교의 추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 될 것이다.⁵⁴⁾

53) 김국신,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 통일,” 국방논집, 13호, (1991. 봄), 47 쪽

54) 중앙일보, (1994. 8. 14).

이처럼 북·미 수교는 북·일수교로 나아 갈 것이며 그결과 남북은 동북아4강과 모두 관련을 맺게되고 이들로부터 교차승인을 얻게 된다. 그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북-소-중과 미-일-남한과의 양축을 중심으로한 냉전적인 대립구도에서 4강이 모두 남북한과 교류하는 2+4체제가 형성된다.

이같은 체제의 형성은 한반도에서 냉전적인 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인 조건은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에 있어서 미·러·중·일 등 한반도 주변 세력간의 역학관계로 엮어지는 외부 환경요인을 주요 필요조건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4강의 교차승인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조건인 한반도 평화구축를 가져다 줄 수 있다.⁵⁵⁾

나. 2+4 體制로의 轉換과 東北亞 主要 強大國의 對韓半島 戰略

2+4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구조가 정착됨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4강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최상의 방책을 선택 할 것이며, 이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통일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 실종되고, 한반도 문제가 4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美國의 對韓半島 戰略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1세기의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더 이상 공산주의 붕괴에 있지 않고 지역패권세력으로 등장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이상적인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의 정치, 경제 및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대북 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장래 미국의 동북

55) 김국신, 앞의 논문, 37-40쪽.

아 전략에 크게 나쁠 것이 없다는 극히 현실주의적인 계산에서 북·미 수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러시아와 다시 가까워지면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적인 위치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일본이 차츰 미국의 과도를 이탈하여 독자노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평화적 접근 방식과 다자간 안보체제 구상이 이 지역국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⁵⁶⁾

그러나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반된 가능성을 예상 할수 있다. 우선, 미국은 교차승인 이후에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양국에 영향력을 확장하여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남북분단 현상유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당사국 해결원칙을 명분으로 제시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회담을 성사 시키고 적극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길을 택 하든지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남북의 통일과정을 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日本의 對韓半島 戰略

전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기조는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증시하는 한편 한반도에 두개의 코리아가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두개의 조건은 상호 상충되는 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

56) 중앙일보, (1994.9.5).

와 안정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전제로하는 것 만은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에 두개의 코리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⁵⁷⁾

일본의 이같은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고려해서 볼때 일본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희구한다는 점에서 4강의 교차승인에 의한 남북대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 공존체제의 구축을 지지 할 것으로 보인다.⁵⁸⁾

일본은 탈냉전과 함께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독자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의 움직임을 피해 왔다. 현재 북·미간의 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조만간 국교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눈앞에 닥쳐오면서 북·일수교의 움직임을 더욱 바쁘게 보여 주고 있다.⁵⁹⁾ 그렇게 되면 남북과 공히 외교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⁶⁰⁾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공존체제가 형성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⁶¹⁾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공존체제의 구축후에 일본의 대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전개 될가? 앞서서도 살펴 보았듯이 일본의 두개의 코리아 인정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희구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한 통일을 지지하기 보다는 두개의 코리아 정책에 입각한 한반

57) 한영구,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 통일," *계간 북한연구*, (1993. 봄), 76-83쪽.

58) 민족통일연구원, "일본의 대북한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03, (1993. 8), 14-15쪽.

59) 지난 9월3일 일본과 북한은 북·일수교를 위해서 북경에서 비밀접촉을 가졌으며,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북·미관계의 속도에따라 이보다더 앞서서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4. 9. 4).

60) Byung-Joon Ahn, "Japanese Policy Toward Korea," *Japan's Foreign Policy*, New York: East Gate Book, (1993), pp. 263-264.

61) 일본은 2+4회담 등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구성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문제가 관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2-09, (1992. 12), 9쪽.

도의 평화공존 체제의 유지를 선호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일본의 안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의 경쟁 상대국으로 부상하거나, 통일후 한국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을때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한·미, 미·일 동맹관계가 지속되고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실현 될 경우 일본 정부의 정치 안보적 위협 의식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²⁾ 다만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증대 될 경우 일본은 대륙으로부터 안보위협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⁶³⁾

결국 일본의 북·미 수교 이후의 대한반도 정책은 빠른 북·일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4강과 나란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면서 남북한 평화 공존체제로 나아가는 길을 지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평화 공존체제가 정착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2+4체제로 전환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 될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 하여 신중할 자세를 보일 것이다.

(3) 中國의 對韓半島 戰略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기조는 80년대 이전에는 냉전 구조속에서의 반미정책, 대만문제 그리고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졌으며,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사회주의 진영내부의 위치를 견지하는 입장에서 친북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한편, '제국주의 진영'에 속하고,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케 하므로써 북한, 중국대륙의 사회주의 세계의 평화를 위협케하는 '남조선' 정권은 '제국주의의 주구'로서 철저한 배척의 대상이었다.⁶⁴⁾

62) *ibid.*, pp. 88-89.

63) *ibid.*, pp. 88-89.

64) 이규태, "중화인민공화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의 실태와 전망," 93 북한·통일

따라서 70년대 말부터 간접적인 경제 교류를 시작하여 80년대 직접적인 교류로 발전하기 시작하기까지 중국과 남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면에 있어서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건국초기 산적한 내부분쟁과 대소일변도 정책으로 인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 하였으나, 한국전쟁의 참전 이후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부터는 적극적인 관계를 발전 시켜서 지금까지 군사동맹국으로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 구조의 붕괴와 함께 중국대륙의 대내적인 환경의 변화로 대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등소평이 주장한 발전과 평화라는 대외정책을 기본으로 사회주의 진영외교의 틀을 벗어나 '독립자주대외정책'이라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발전시켰다.⁶⁶⁾ 그것은 실용주의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인 현실주의 외교원칙에 의한 대외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같은 원칙하에서 중국은 대미, 대일, 대소관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라는 전략적인 고려와 함께 중국대륙의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경제적인 요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⁶⁷⁾

이같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기초하에서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기본관계

연구 논문집(4): 한반도 주변정세분야, 서울:통일원, (1993), 332쪽.

65) *ibid.*, p. 333.

66) 등소평은 전후 몇몇 강대국이 국제사무를 조종하던 시대가 종결 되었지만,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는 의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는 여전히 아주 불안하다고 지적하면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진보를 촉진하는 것은 줄곧 중국외교의 근본 목표로 존재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하에서, 그는 80년대에 시작해서 90년대를 지나 21세기까지의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본기조를 두마디 말로 요약 하고 있다. 하나는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은 영원히 제3세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신봉하고, 세계평화 수호와 인류의 진보적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소중,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223-224쪽.

67) 송영우·소치형 공저,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서울: 지영사, (1992), 61-95쪽.

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동시에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두개의 한국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남북한 교차승인후에도 이같은 기조는 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8)

먼저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인 안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지원 할 것으로 보인다. 69) 그 이유는 북한정권의 붕괴로 아시아에서 겪을 이데올로기적인 고통을 중국이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을 지지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체제가 강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나아가서 중국은 교차승인 이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중심의 통일에는 반대 할 것이고, 북한체제의 유지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70)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교차승인과 평화체제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은 남북한의 동시인정이라는 2개의 한국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4) 러시아의 對韓半島 戰略

1991년 12월에 소연방이 해체될때까지 구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공산화 정책, 한반도 안정모색, 남한과의 경제관계로의 전환, 북한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의 견지등으로 변해왔다. 71)

그러나 소연방의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전환의 길을 걸으면서 러시아는 개혁

68) 이규태, 앞의 논문, 335쪽.

69) 이같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는 지난 9월1일 군사정전위에서 중국대표단을 철수시켜 정전위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점에서도 알 수 있다.

70) 중앙일보, (1994. 8. 15).

71) 서인갑, "러시아의 개혁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계간 북한연구, (1993. 봄), 58-62쪽.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내적인 요구와 동북아의 질서 재편과 한반도의 정세변화라는 대외적인 환경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의 확대라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화,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 개선 발전, 장기적으로 태평양 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을 정책기조로 삼고있으며, 이념보다는 지정학과 경제관계를 중시하면서 '전술적 유연성'과 '실용주의'에 기초한 동북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곧 러시아 연방의 동북아 정책은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 확대 및 지역군사 대탕트 모색, 경제분야에서는 역내국가들의 경협 유도과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로의 편입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⁷²⁾

이같은 맥락에서 1990년대의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 한국과의 경협의 확대 및 북한과의 경제 관계 회복, 한반도의 비핵화를 기본기조로 삼고 있다. 이같은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4강의 교차승인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계속 우호적인 국가가 된다면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어렵다고 보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한 남북한간의 평화 공존유지를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한국정부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화되는 추세를 보이면 남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다국간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관여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⁷³⁾

72)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서울: 법문사, (1993), 110-112쪽.

73) 서인갑, 앞의 논문, 51-74쪽.

2. 北·美關係 正常化가 北韓體制에 미칠 影響

가. 政治·安保的 側面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소·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속에서 체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북한체제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 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조건을 확보케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북·미 관계정상화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그동안 북한체제가 처한 국제적인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탈피하여 미국과의 대외관계 개선을 기초로하여 일본이나 서방국가로 대외관계를 넓혀 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로 북·미 관계정상화는 김일성 사후 새로이 등장한 김정일체제의 체제 안정성 보장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협상의 타결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김정일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은뒤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하므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길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⁷⁴⁾ 이렇게 될 경우 김정일체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셋째로 북·미 관계정상화는 북한체제에 대한 안보위협을 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한 미군과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에 최대 위협 요인임을 주장하면서 이들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 이처럼 북한이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이미 철수 할 것임을 미국이 선언했고, 뿐만아니라 지난 8.12일 일괄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불사용을 문서로 보장 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이같은 대외적인 평화체제의 정착은 곧 남한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미수교는 북한체제를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 요인을 제거하여 북한체제의 대외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북

74) 중앙일보, (1994. 8. 15).

한체제로 하여금 내부정비 작업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나. 經濟 및 社會開放的인 側面

북·미 관계정상화는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상으로 북한의 경제위기는 심각하다.⁷⁵⁾ 현재 북한은 심각한 외환부족을 겪고 있고 곡물 생산량, 강철 생산량, 원유 도입량 등도 줄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작용 한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대외무역 감소로 인해서 악화되었다.⁷⁶⁾

사실 북한은 80년대초 이래 그동안의 경제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더이상 이룩 할 수 없음을 알고 개혁과 개방을 모색해왔다. 인민생활의 향상, 경제 관리의 개선, 과학 기술의 발전, 대외교류의 적극화가 제시된 주요 목표 였다.⁷⁷⁾ 그러나 이같은 정책의 전환은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그결과 90년대에 새로운 경제정책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결정, 92년 2월 정무원의 수출 확대정책, 92년 4월 개정헌법에서 경제 관리조항의 변화, 92년 10월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의 제정' 93년 1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화 관리법' '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의 제정 등은 북한의 대외 개방을 향한 전향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⁷⁸⁾

75)북한경제는 90년이후 심각한 에너지공급의 부족으로 공장의 가동율이 40%수준이하로 떨어지고, 90년이후 전체 경제 성장율이 평균 -4%수준으로 나빠져서 1인당 소득수준을 9백30달러 안팎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76) 북한의 명령형계획경제체제는 생산량 및 실적 중심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취약한 체제이다. 그 결과 서구에서 과학 기술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특유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입각한 경제 관리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더이상 인력 동원만으로 경제 성장을 기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77) 고성준, "개혁개방 정책의 현향과 전개,"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서울: 대왕사, (1992), 323-326쪽.

78) 박제규, "김일성 사후 북한 정세와 한반도의 장래,"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94-3, (1994.7), 8-9쪽.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의 딜레마는 북한 내부의 법적 제도적인 정비만으로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투자조건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내 하부구조의 정비가 요구되고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미 정상화는 바로 북한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을 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 개방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등장한 김정일체제의 경제전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정일체제는 대내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과거의 중공업 우선주의에서 탈피하여 생필품 생산에 주력하고, 농업 및 경공업 발전을 통해 주민 불만해소에 주력 할 것이며, 동시에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대외개방전략은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고, 강성산, 김달현 등의 김정일 지지 세력의 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일체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개혁, 개방이 체제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제안정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만 조심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⁷⁹⁾ 예컨대 전면적인 개방 정책이 아니라 대외개방의 파급 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고, 북한의 근로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80)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은 중국식 경제특구 건설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개방을 위한 정치적 조건이 중국만큼 유리하지 않다는 점과 외국의 투자자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점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이러한 부분적인 개혁, 개방 정책이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소생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을 인식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 북한체제의 혼란과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79) 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 정권의 등장과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4쪽.

80) *ibid*, p. 14.

다.

이같은 경제적인 개방정책은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도 부분적인 개방이 예견된다. 일단 경제 개혁, 개방이 가속화 되면 그 자체의 동력으로 인해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치와 사회의 분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경제개혁의 속도와 폭에 따라 사회분야에서는 가치의 다원화, 폐쇄적인 대외인식의 탈피, 개방지역과 비개방지역간의 격차 발생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 관리체계의 변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이윤이라는 개념 등이 대두되고, 이들은 비록 정치적 통제 속에서도 북한 주민의 사적 생활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개별적인 이익집단을 형성하면서 주도적인 사회 세력으로 등장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81)

다. 北·美關係 正常化가 對南戰略에 미치는 影響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4강간의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대남전략은 기존의 연방제를 통한 통일전략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면서도, 체제 생존을 위하여 남북한의 평화적인 공존과 교류의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대남전략의 기조는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북한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성공을 남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전략적인 기조하에 북한은 50년에 남한의 선제 공격을 통해서 무력혁명을 시도 했고, 그 이후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과도적인 형태로서 연방제를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조선 지역혁명론을 등장시켜서 남조선 혁명을 통한 남북한이 사회주의로의 통일을 전략적인 기조로 삼아 왔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체제의 만성적인 경제 침체가 대두되고, 과도한 군비경쟁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통일전략이 실패 했음이

81) *ibid*, p. 12.

서서히 들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실질적으로 남조선 지역 혁명을 통한 남북한의 사회주의로의 통일이라는 전략을 부차적인 전략으로 변화시키면서 연방제로의 남조선 통일을 주장한다.⁸²⁾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소·동구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의 우방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대외적인 고립 상황에 직면하고, 체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구나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인 고립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략은 이제 북한체제를 남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체제생존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남북 비핵화선언과 남북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한의 영구분단을 고착화하고 그동안 부정해왔던 UN동시가입을 하였다. 또한 통일 전략에 있어서도 북한은 기존의 연방제 통일안에서 후퇴하여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안에서 각각의 정부에 외교와 군사권까지 부여하는 실질적으로 남한이 제기하는 국가연합 전략과 차이가 없는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정치 군사문제를 남북한의 교류보다 앞세워오던 것을 전환하여, 핵문제 해결에서 군사문제와는 별개로 남북한의 경제교류를 주장하는데서 보듯 정치 군사 문제해결 우선원칙이 변하게 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통일전략의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을 통한 평화구조의 정착, 북한의 경제위기의 심각성, 김정일 체제가 내부 권력구조를 장악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는 적극적인 대남 통일전략을 펼치기 보다는 내부의 안정화를 피함으로써 체제 생존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전환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정권의 담당자로서 기존의 북한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지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때, 북한의 대남전략은 4강교차승인에 의해서 형성된 국제체제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분간 남북한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82) 이종석, 앞의 논문, 75-94쪽.

3. 北·美 關係의 正常化가 南北 關係에 미치는 影響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냉전적인 잔재가 온존되어 있고, 남북한도 대결의 상태를 지속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같은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肯定的인 影響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한간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북·미간의 정상화는 남북한의 교차승인으로의 길을 가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이같은 남북한의 교차승인은 탈냉전의 시기에 유일하게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탈냉전과 평화 정착의 길을 터놓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6.25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의 차원을 넘는 동서냉전을 열전화 시킨 국지전쟁을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같은 동서 이념대립은 한반도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냉전적인 질서에서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미·소중심의 냉전체제의 해체, 중·미, 중·소 국교정상화로 긴장관계가 해소 되었으며, 한·중, 한·소 수교로 남방 3각체제와 북방 3각체로의 구분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차 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 한반도의 탈냉전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남북한간의 냉전적인 대치상태를 화해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외부 상황조건이 충족 되는 것이다.

둘째로, 북·미 관계정상화는 남북한간의 합의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한 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를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 92년 남북한간의 '자주' '민주' '민족 대단결'의 입장에서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 할 것 이라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서」에 서명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서명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과 남북한간의 갈등으로 남북한 양국 모두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에 핵문제가 타결되고 4강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면, 남북한간의 긴장요인이 사라지면서 남북한이 공히 평화 통일원칙에 합의 하면서 이를 위한 기초로써 남북 합의서를 이행 할 수 있는 물고를 터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교차승인이 남북한의 군비통제의 현실에 국제적 보장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가 남북한이 군비 통제를 통해 군축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의 결여 및 불신 등을 감안 할 경우, 남북한의 군비통제의 실현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남북한과 교차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변 4강이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과 보장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⁸³⁾

네째로, 미·일의 대북한 수교가 이루어지면 외국 자본의 대북한투자와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시키고 남북한 경제교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나. 否定的인 影響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제한되고 오히려 북·미 관계정상화가 남북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북·미간의 관계의 정상화는 북·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남한배제의 태도와 여기에 대한 남한의 불만으로 남북한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남북한간의 관계 정상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간주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남한과의 대화를 통한

83) 김국신, 앞의 논문, 50쪽.

문제의 해결보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핵사찰문제를 둘러싼 교섭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났으며, 최근 8월 12일의 3단계 고위급 회담의 협상과정에서 남한의 입장이 무시되고 남한정부가 소외된 채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인식되어, 남한내에 북미 관계정상화의 속도와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⁸⁴⁾

이같은 북한의 남한 따돌리기와 남한과 미국의 공조체제의 균열은 결국은 남북한간에 불신을 강화 시켜서 남북한간의 관계 정상화와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에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북·미수교와 북·일 수교가 이루어져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 및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증대될 경우,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이 남북한간의 교류를 통해서 남한 자본이 북한체제에 유입되어 북한 주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체제내부로 부터의 붕괴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한 관계의 확대 보다는 서방과의 관계의 확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남북한간에 긴장이 조성되어 모처럼 조성된 평화적인 대외적인 조건도 남북한간의 정상화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관계의 진전은 보다 지연 될 것이다.

셋째로, 한반도에 대한 주변4강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주변 4강이 남북한 양국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전략적으로 구사하게 된다면 북한의 남

84)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날 경축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서 제시된 통일전략을 우리정부의 통일전략으로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통일사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남북 통일이 결국은 남한 사회의 정치 경제 체제에 근거한 통일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같은 김영삼 대통령의 강성 발언은 최근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의 관계에서 남한이 배제된채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남한체제가 북한체제와의 경쟁에서 사실상 승리 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94. 8. 16).

북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통일의 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남북한의 분단을 장기화시켜서 통일의 길을 더욱더 멀고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상에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체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낙관론과 비관론 양 시각에서 살펴 보았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주변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분단을 장기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다른한편 북미관계 정상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다음장에서는 이같은 문제 의식하에서 남북한의 통일전략의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 볼 것이다.

V. 北·美關係의 正常化와 南韓의 對應戰略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 뿐아니라 북한사회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조성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외정책과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장에서는 남한의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대외정책과 대북 정책의 기초를 수립해보고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1. 北·美關係의 正常化에 대응한 南韓의 政策方向

북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통일의 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남북한의 분단을 장기화시켜서 통일의 길을 더욱더 멀고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상에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체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낙관론과 비관론 양 시각에서 살펴 보았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주변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분단을 장기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다른한편 북미관계 정상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다음장에서는 이같은 문제 의식하에서 남북한의 통일전략의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 볼 것이다.

V. 北·美關係의 正常化와 南韓의 對應戰略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 뿐아니라 북한사회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조성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외정책과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장에서는 남한의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대외정책과 대북 정책의 기초를 수립해보고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1. 北·美關係의 正常化에 대응한 南韓의 政策方向

북·미간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관계정상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현재, 남한의 대외정책과 통일전략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통일문제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저지하고 주변국들로부터 통일에 필요한 정치, 경제, 안보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미수교와 함께 급속하게 전개될 한반도의 교차승인이라는 현실에 대응한 남한의 외교정책의 기본 전략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대미의존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물론 한국은 핵문제가 완전히 타결 되기까지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미국과의 군사정치적 우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미·일의 외교정책에서 보듯, 탈냉전시대에 각국은 과거의 동맹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한 외교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외교노선으로부터 탈피해서, 주변 강대국들과의 독자적이고 유연한 외교관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둘째로, 앞에서 제시한 외교정책의 방향하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전략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진 될 것이며,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를 위해서 북한을 동반자 관계에서 접근하고,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대서방간의 관계 개선을 지원하겠으며, 북한의 경제를 돕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혀왔다.⁸⁵⁾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파의 비판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사이를 왕복하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취해왔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85) 중앙일보, (1994.9.5).

원칙에 대한 일관성의 결여는 대북정책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체제에 혼선을 일으키고 북미 회담에서 소외되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혼선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천명한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

2. 北·美 正常化와 南韓의 對應戰略

앞에서 지적한 남한의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한은 새로이 변화된 환경을 통일을 위한 조건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통일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북·미회담의 지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핵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회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북·미회담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미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북·미 고위급회담을 핵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미관계 개선을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이를 남북대화 개선 및 북한체제 개방의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고위급회담과 북·IAEA 회담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남북대화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제기 되지만, 북한 핵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고 북한핵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하되, 협상타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조하에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북한핵 과거의 투명성 확보

먼저 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북한핵의 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사찰과 사후연료봉 처리문제는 북한핵의 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임을 북한과 미국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핵 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 및 수순에 관해서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 정부간에 핵 과거의 투명성의 확보의 당위성만 분명히 한다면,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단계론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즉 일차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동결하여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거의 투명성은 추후의 경수로 건설 과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단계에서 확보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핵 과거를 이후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도 경수로 건설과 북·미 수교로 가는 여러 단계에서 북한핵의 과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있다. 북한핵의 현재·미래와 함께 과거를 일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는 북·미협상을 교착시키고 대북제재국면으로 돌아가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대북 경수로 전환 지원

대북경수로 전환의 지원문제는 한국에 의한 경수로 건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임을 감안할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억불에 이르는 소요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수 밖에 현실을 고려할때, 한국형 경수로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이 경수로 건설에서 한국의 적극참여를 허용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의 참여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대북경협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평화협정 체결문제

북·미 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이 진전되면 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93년 7월의 북·미 2단계 회담에서 부터 북한이 요구해 왔으나, 3단계 회담에서는 북한이 이를 보류했다. 그러나 북·미 관계 정상화가 진전되면 북한이 이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미 평화협정은 핵선제불사용 보장,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폐 및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연결하려는 기도를 봉쇄하려 했다.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남북평화협정과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미국과의 3자회담이나, 또는 남북한과 미·중이 동시 참가하는 소위 「2+2 회담」에 의한 북·미 평화협정과 한·중 평화보장협정의 동시체결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중단된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실현함으로써 남북한 대화재개의 물꼬를 트고 북·미 회담의 타결을 통해서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북·미회담의 협상의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 이외의 남북간의 대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핵개발 포기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북한의 체제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적 보장을 위해서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북·미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한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핵·경협 연계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경직된 핵·경협 연계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범위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으며, 단계적 남북경협 허용은 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의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남북의 경협이 확대된다고 가정 할때, 한국정부는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를 준비하는 장기프로젝트를 마련해야한다. 경제통합의 제일원칙은 민족이익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편의 희생과 양보를 통한 민족이익의 달성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한민족공동체가 남북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VI. 結論

이 연구는 북·미관계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최근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미관계가 정상화 될 가능성과 난관들을 살펴 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북한체제 내부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남한의 통일정책의 방향과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미관계는 한국전쟁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간헐적인 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냉전적인 인식에 근거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닥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과 북한사회주의 내부의 경제적인 침체상황에 부딪치면서 북한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지고, 미국 역

남·북 경제협력

북·미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한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핵·경협 연계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경직된 핵·경협 연계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범위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으며, 단계적 남북경협 허용은 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의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남북의 경협이 확대된다고 가정 할때, 한국정부는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를 준비하는 장기프로젝트를 마련해야한다. 경제통합의 제일원칙은 민족이익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편의 희생과 양보를 통한 민족이익의 달성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한민족공동체가 남북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VI. 結論

이 연구는 북·미관계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최근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미관계가 정상화 될 가능성과 난관들을 살펴 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북한체제 내부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남한의 통일정책의 방향과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미관계는 한국전쟁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간헐적인 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냉전적인 인식에 근거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닥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과 북한사회주의 내부의 경제적인 침체상황에 부딪치면서 북한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지고, 미국 역

시 냉전이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영향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90년대에 들어 양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관계 정상화의 호조건을 마련한다.

그러나 91년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사찰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은 미국과 북한의 강경자세가 맞부딪치면서 지난 수년간 긴장과 대립관계를 유지 해왔다. 그러나 이들 양국의 관계는 지난 8.12일 핵문제를 둘러싼 일괄타협안을 작성함으로써 핵문제의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낼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북·미 양국의 국내외 상황이 핵문제의 타결과 이를 위한 관계 정상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세계 핵전략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성과 동북아에서 냉전 이후의 질서 재편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성에서 북·미간의 핵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은 소·동구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의 외교적인 고립, 내부의 경제 위기, 김정일 체제로의 불안정한 권력승계등으로 체제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외 상황속에서 핵문제의 타결을 통해 체제생존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2+4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평화체제 정착을 제도화 시키는 국제적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남북과 각각 외교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교차승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간의 관계의 정상화는 현재 체제계승의 위기에 처해있는 김정일체제의 국제적인 승인과 북한사회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의 개혁 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이며, 뿐만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도 기존의 대남 혁명을 통한 통일 전략은 보류되고, 체제 생존을 위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정상화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한의 남한을 배재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주변4강이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면 북·미 관계정상화가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기여하기 보다, 남북한의 대립을 증가시키고 통일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한은 북·미관계정상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이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외교전략과 통일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주변4강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參考 資料

- 고성준외,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서울: 대명사, (1992).
- 김강녕, "북한의 외교 정책 기조와 변화 방향," *외교*, 21호, (1992).
- 강석승, "미·북한 관계의 변화 추이와 전망," *국제문제*, 20호, (1992).
- 김기정, "탈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와 다자간 안보 협의체의 구성 전망,"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한반도 주변정세*, 서울: 통일원, (1993).
- 김현동, "한국 핵안보와 새로운 한미관계의 설정," *한국의 공공정책*, (1993.9).
- 김규륜, *동북아 경제협력과 발전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남식, "북한의 통일전략과 통일 방안: 통일전략으로서의 민주기지 노선과 지역 혁명론, 그리고 통일 방안으로서의 총선과 연방제," *사회와 사상*, (1988.9).
- 김일성, *통일전선 사업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2).
- 김일성,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9).
- 강광식 편, "북한의 실태: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87).
- 강태훈, "일본의 대북한 정책과 일·북한 수교의 영향,"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서울: 통일원, (1992).
- 김광수, "북한 경제의 전망," *북한*, (1989.2).
- 김홍락, "북한의 대미일 정책,"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제 7회 미주지역 학술회의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1).
- 김국신,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 통일," *국방논집*, 13호, (1991.봄).
- 김남식, "북한의 권력 구조와 대외 정책," *통일문제 연구*, 4권, 2호, (1992).
- 김덕중, "미·북한 관계개선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 연구," *90년 신진학자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 VI*, 서울: 통일원, (1990).

- 김계동, "미·북한 관계의 변화 과정과 개선전망," 국방논집, 18호,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1991. 봄).
- 김덕중,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방향 연구,"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1).
- 고성준, "개혁 개방 정책의 현황과 전개,"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서울: 대왕사, (1992).
- 김국신, "동북아 질서의 변화추세," 통일문제 연구, 4권, 2호, (1992).
- 김용복, "아시아 지역 불력화 흐름과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 93년 북한 통일 연구 논문집(V): 한반도 주변정세분야, 서울: 통일원, (1993).
- 김용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 정치, 제9권, 2호, (1993. 가을).
-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동북아 경제 권과 한반도 발전 전략, 서울: 길벗, (1994).
- 던버 도피, "클린턴과 아시아 정책," 계간 사상, (1993. 봄).
- 대외경제연구원,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 연구원,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관계와 미국, 세미나시리즈 94-0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4).
- 박재규, "김일성 사후 북한의 장래와 한반도의 장래," 연구 보고서, 94-3,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4. 7).
- 배궁찬, "미북의 대북한 정책과 미북한 관계 개선 방향," 외교, 22호, (1992. 6).
- 박치영, "북한의 유엔 가입과 대외정책의 변화," 북한학보, 15집, (1991).
- 박경서,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정책," 외교, 20호, (1991. 12).
- 박경서, "미북의 대북한 정책과 통일문제," 북한연구, 4권, 1호, (1993. 봄).
- 백광일, "미국과 북한 관계와 변화추세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2권, 1호.
- 배진수,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환경·남북한 관계, 서울: 통일원, (1992).

- 백종천외, "남북 합의와 총체적 안보론," 통일문제 연구, 4권, 2호, (1992).
- 박재규,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대응," 연구보고서 94-1,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4.5).
- 박찬표, "북한의 핵문제," 서울: 국회입법자료분석실, (1992).
- 박주식, "북한 핵문제의 상호 인식과 갈등," 93 북한·통일연구논문집(4): 북한의 군사분야, 서울: 통일원, (1993).
- 백진현, "남북 경협과 미국의 대북한 통상 규제," 통일문제 연구, 4권, 2호 (1992).
- 서인갑, "러시아의 개혁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계간 북한연구, (1993, 봄).
- 신정현, "북한의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의 변화," 전환기의 북한사회 주의, 서울: 대왕사, (1992).
- 신정현,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변화: 전망과 문제점," 외교, 20호, (1991.12).
- 이규태, "중화인민공화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의 실태와 전망," 93 북한 통일 연구논문집(4): 한반도 주변 정세분야, 서울: 통일원, (1993).
- 이정민, "클린턴과 미국의 신군사 전략: 탈냉전화의 의미와 한계," 계간사상, (1993. 봄).
- 이삼성, 미국의 대한 정책과 한국 민족주의, 서울: 한길사, (1993).
- 이삼성, 현대 미국 외교와 국제정치, 서울: 한길사, (1993).
- 이춘근, "21세기 핵국제 질서와 한국의 핵정책," 한국의 공공정책, (1993.9).
-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90.1).
- 이혁섭, "한반도 핵문제와 한국화," 한국의 공공정책, (1993.9).
- 연하청, "동북아 경제환경 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통일문제 연구, 3권, 2호, (1991. 여름).
- 이한,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상. 하, 서울: 은누리, (1987).
- 양성철, "북한은 변하고있는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 어문각, (1990).

- 양성철, "민족통일과 민주화문제," *계간사상*, (1990. 가을).
- 이종석, "북한의 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 조건," *사상문예운동*, (1990. 봄).
- 이채진, "북한의 대미 정책,"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아연구소, (1991).
- 이병철, "북한 잡지를 통해서 본 북한 사회 변화 추세연구,"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1).
- 임순희,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방향 연구-북한의 대미일 정책 결정 요인 분석,"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1).
- 오수열,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방안," *통일환경·남북한 관계*, 서울: 통일원, (1992).
- 이재환,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통일환경·남북한 관계*, 서울: 통일원, (1992).
-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대화: 협력의 모색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3. 6).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 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9).
- 오관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조건," 서울: 통일원, *통일문제 연구*, 4권, 2호, (1992).
- 우철구, "새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연합' 형성에 관한 문제," *통일문제 연구*, 5권, 2호, (1993. 여름).
- 윤용희, "북한·미국관계의 변화전망," *국제 정치논집*, 33집, 2호, (1993).
- 이종석, "북한의 대남정책의 전개와 변화 과정," *통일문제 연구*, 4권, 3호 (1992. 가을).
- 연하청, "남북한 경제 협력의 정책과제," *통일문제 연구*, 4권, 2호, (1992).
-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1).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 문제 분석-미·북한 관계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7).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 문제 분석-북한의 대미 수교 전략,"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93. 9).

- 정규섭,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방향 연구",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4*, 서울: 통일원, (1991).
- 조용범 편, "통일을 위한 경제체제 모색," *도산학술논총*, 2권.
- 조용범, "통일이후의 사회경제체제," *경제학연구*, 40집, 2호.
- 최명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2).
- 최완규,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북한연구*, 1권, 1호, (1990.가을).
- 채재병, "동북아 지역 안보 및 경제협력체 형성 전망과 대책,"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한반도 주변 정세분야*, 서울: 통일원, (1993).
-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2.2).
- 민족통일연구원, "핵관계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 분석," *통일정세분석 94-0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3).
- 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 정권의 등장과 정책 전망," *통일정세분석 94-15*,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7)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국제 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개발 연구원, (1991).
- 허문명,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방향 연구," *북한 통일연구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1).
- 현인택, "국제 질서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 4권, 2호, (1992).
- 한용성, "21세기 동북아 핵 환경과 북한의 핵문제," *통일문제 연구*, 5권, 2호, (1993.여름).
- 한영구,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 통일," *계간 북한연구*, (1993.봄).
- Mack, Andrew,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 Friedberg, Aaron,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l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 (Winter.1993/94).
- Ahn, Byung-Joo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Nuclear Issue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 Korean Peninsul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92).
- Bracken, Paul, "Nuclear Weapons and State Survival in North Korea," *Survival*, Vol.35, No.3, (Aug. 1993).
- Choi, Yearn-Hong, "Arms and Affluence: Military Acquisi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ternational Security*, 18, (Winter 1993/94).
- Fretz, Levis, "Clinton's Foreign Policy," *New Zealand International Review*, 19(1), (1994).
- Huh, Moonyoung, "Prospects in 1994 for Changes in North Korea System and Policies," *East Asian Review*, Vol.4, No.1, (Spr. 1994).
- Schlesinger, James, "Quest for a Post-Cold War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1993).
- Kim, Sungwoo, "Recent Economic Policies of North Korea: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Asian Survey*, Vol.33, No.9, (Sep. 1993).
- Kim, Younsuk, "Economic Integration : Toward Korean Reunificatio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8, No.1, (Win/Spr. 1994).
- Lee, Doowon, "Assessing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Historical Trajectory,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Pacific Focus*, Vol.8, No.2, (Fall. 1993).
- Lee, Sangman, "A Study on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ast Asian Review*, Vol.5, No.3, (Aug. 1993).
- Betts, Richard,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 (Winter.1993/94).
- Rubinstein, Alvin Z,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Korea and World Affairs*, Vol.18, No.1, (Spr. 1994).
- Schlesinger, James, "Quest for a Post-Cold War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1993).
- Sion, Sheldon, (ed), *East Asian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M.E. Sharpe: New York, (1993).
- Selig, S.Harrison, "A Chance for Dente in Korea," *World Policy Journal* 1, (Fall.1991).

Zagoria, Donald S, "Clinton's Asia Policy," *Current History*, 92(578),
(1993).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불교신문.

日本・北韓의 關係正常化와 南北關係

研究責任者：裴廷鎬(延世大)

目 次

<要約文>	137
I. 問題提起	139
II. 日本의 對北韓政策	139
1. 탈 냉전시대의 일본의 정치대국화전략	139
가. 신 국제질서기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	139
나. 일본의 정치대국화전략	142
2. 일본의 對北韓政策과 그 전략적 의미	161
가. 냉전시대 일본의 對北韓政策	161
나. 탈냉전 시대 일본의 對北韓政策	171
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전략적 의미	191
III. 北韓의 對日本政策	193
1. 北韓 對外政策의 목표와 전략구도	193
2. 北韓의 對日本政策	196
가. 냉전시대 北韓의 對日本政策	196
나. 탈냉전시대 北韓의 對日本政策	204
3. 北韓의 對日本政策의 전략적 의미	208
가. 냉전시대 北韓의 對日本政策의 전략적 의미	208
나. 탈냉전시대 北韓의 對日本政策의 전략적 의미	209
IV. 일본·北韓의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210
1. 긍정적 영향	211
2. 부정적 영향	212
V. 맺음말	213

<요 약 문>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일본은 국제적 역할증대를 도모하면서 21세기의 정치대국으로 등장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대국화 추구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본·북한의 접근 또한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1) 일본의 對北韓政策 (2) 북한의 對日本政策 (3) 일본·북한의 관계개선및 국교정상화가 남북한 관계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I. 日本의 對北韓政策

냉전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한·일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했으므로, 정경분리 전략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는 대체로 적대적 자세를 취하였지만 비정치적 차원에서는 주로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 문화 교류를 묵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대북한접근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의 와해와 그에 따른 탈냉전시대의 도래는 일본·북한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북한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대륙 및 극동시베리아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일본의 對北韓政策이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의 틀내에서 전개는 것이었다.

II. 北韓의 對日本政策

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대일본정책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일관계, 북한의 내부 사정의 변화등에 영향을 받으며, 적대적 정책과 유화적 접근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전개되었지만, 그 기조는 일본의 한국편향정책을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전환시켜 한국의 해외지원세력을 약화시키고 북한

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탈냉전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북한 역시 체제유지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타파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對일본정책은 일본·북한간간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적 차원에서는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여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와해를 막는 것이었다.

III. 일본·북한의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는 북한을 개방·개혁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북한의 일본경제권으로의 편입과 더불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일본이 정치대국화전략에 따라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증대해 갈 경우 중국과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일본 對 중국의 대결체제를 형성시킬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일본 對 중국의 대결체제는 남북한관계의 진전 및 통일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으로서는 통일 및 민족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일본·북한의 접근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통일에 미치는 영향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I. 問題提起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탈냉전 시대가 전개되면서, 일본은 전후 총결산과 함께 세계적 차원(Global Level)에서의 미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정치대국으로 등장하려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칠 것이다. 즉 일본은 국제적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대북한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본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주변4강에 의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전략적 관점에서 (1) 일본의 對北韓政策 (2) 북한의 對日本政策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3) 일본·북한의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II. 日本의 對北韓政策

1. 탈 냉전시대의 일본의 정치대국화전략

가. 신 국제질서기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미·소를 양축으로 형성되었던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 냉전 종식 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 또한 그힘에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경제적 富의 가치가 점증되어 가는 가운데 군사력게임, 명예게임, 영토게임에서 부의 게임, 지식게임, 정보게임등으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군사력게임, 부의 게임, 지식및 정보게임등이 중첩되어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전개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¹⁾

I. 問題提起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탈냉전 시대가 전개되면서, 일본은 전후 총결산과 함께 세계적 차원(Global Level)에서의 미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정치대국으로 등장하려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칠 것이다. 즉 일본은 국제적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대북한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본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주변4강에 의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전략적 관점에서 (1) 일본의 對北韓政策 (2) 북한의 對日本政策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3) 일본·북한의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II. 日本의 對北韓政策

1. 탈 냉전시대의 일본의 정치대국화전략

가. 신 국제질서기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미·소를 양축으로 형성되었던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 냉전 종식 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 또한 그힘에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국제질서는 경제적 富의 가치가 점증되어 가는 가운데 군사력게임, 명예게임, 영토게임에서 부의 게임, 지식게임, 정보게임등으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군사력게임, 부의 게임, 지식및 정보게임등이 중첩되어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전개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¹⁾

첫째, 세계질서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라 다극·다원화 될 것이다. 최근의 세계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과 더불어 지정학(geopolitics)적 질서와 지경학(geo-economics)적 질서로 분화되고 있는데, 지정학적 질서에는 미국이 아직도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경학적 질서에는 일본, EC가 경제력의 행사를 증강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정치’ 세계(economic-political world)에서는 미국, 일본, EC가 중심이 될 것이고, ‘군사-정치’ 세계(military-political world)에서는 미국, 일본, EC, 중국, 러시아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는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일본, 중국, EC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지각변동의 근저에는 경제력의 침하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경제-정치’ 세계의 비중이 ‘군사-정치’ 세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갈 것이다. ‘경제-정치’ 세계에서는 ‘군사-정치’ 세계와는 달리 갈등이나 마찰, 분쟁등을 정치적 조정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갈 것이다²⁾. 즉, ‘경제-정치’ 세계의 지경학적 질서는 복잡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조정을 그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체제경쟁이 격감됨에 따라 냉전시대의 체제적 연대는 약화되고 있다. 뚜렷한 적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없는 탈냉전의 세계에서는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실용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초강대국간의 대결이 완화됨에 따라 세계 ‘군사-정치’ 환경은 일반적으로 긴장완화의 추세로 나아가겠지만, 지역분쟁 및 경제적 갈등은 안보위협的重要因素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제3세계에 있어서의 분쟁은 그 가능성이 높아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탈이데올로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3세계에서는 이데올로기보다 하위를 차지하던 영토, 종교, 민족을 둘러싼 중·저강도의 갈등이 표면화될

1)배정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방향”(한·일포럼,1993.12)

2) ‘경제-정치’ 세계의 개념에 관해서는 배정호의 “國際環境の變化と日本の對應-大平政權から中曾根政權における日本の總合安全保障戰略と國家戰略-”(東京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90.11) 참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세계경제의 발전이 부문별 보호주의의 대두와 함께 주요경제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다. 즉 유럽공동체(EC)의 단일시장화, 북미자유지대(NAFTA)의 형성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동북아경제권, 동남아경제권이나 동아시아경제권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포럼형태로 APEC을 출범시키고 나아가 APEC을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등 국제정치경제의 상황전개는 21세기에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협력체의 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일본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질서및 동북아국제질서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즉 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에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정치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5년에 세계 제1의 금융국가·채권국가로 등장했고, 게다가 1990년의 GDP는 독일-영국-프랑스를 합친 규모에 가까운 약 3조 6770억 달러에 달했다. 그것은 EC(6조 2900억 달러)나 NAFTA(6조 1200억 달러)의 약 58.4%-60%에 해당되는 규모이기도 하다. 즉 1980년대 중반에 세계GNP의 10%를 차지하던 것이 90년대에 들어 오면서 세계GNP의 15% 이상을 점유해 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경제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정치대국화에 대하여 논할경우, 그 국력과 국가전략수행능력의 주요기반인 경제력의 전략적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력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 경제력이 정치력으로 전환하면서 전개되는 대외전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을 '상인국가' 또는 '군사대국'으로 특징지워 강조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부문에만 치우쳐서 설명한 것으로 일본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데 그만큼 한계성이 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본의 정치대국화에 관하여 논할 경우, 역사적 문제, 국제환경의 변화, 일본의 국가전략 및 전략수행능력, 국내환경의 변화 등에 관한 분석과 함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나. 일본의 정치대국화전략

① 신국제질서기의 일본의 국가전략과 전략수행능력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국제질서기의 국제사회에서는 다원적인 상호의존성 속에서 미국이 지도력의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고, 따라서 유엔이 세계평화의 유지·창조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脫이데올로기화되면서 '군사-정치'형 세계에 비하여 '경제-정치'형 세계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와같은 신국제질서기의 변화는 안보개념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이외에 경제적 안보, 생태계 문제등의 환경안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신국제질서기에 있어서도 일본은 국가전략및 안보전략으로서 '경제-정치'형 국가전략과 총합안전보장전략을 계속해서 전개하면서 정치대국으로서의 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1990년의 걸프전을 계기로 그와같은 전략에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본은 이란의 쿠웨이트 침공이 일어나자, 1973-74년의 제4차 중동전쟁 時 석유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면서, 걸프전과 그 후유증이 일본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걸프전에 대해서 자원, 에너지 안전보장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의도가 강했고, 미국 주도의 걸프전 수행에도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대신에 1백30억 달러의 戰費를 내었다.

그런데, 일본은 1백30억 달러의 戰費를 내고도 인적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와같은 비난이 일본의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에 질적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³⁾ 1992년 6월 일본 국회에서의 PKO협력법안 통과가 그러한 조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PKO협력법안의 통과에 따라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굴레와 콤플렉스로 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지닌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PKO협력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에서 '군사-경제'형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군사-정치'형 국가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지만,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틀내에서도 군사력의 질적 증강과 그 잠재적 능력의 증대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정치대국으로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즉 일본은 '경제-정치'형 국가전략과 총합안전보장전략을 기본적으로 전개하되, 첨단기술에 의한 군사적 수단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면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적절한 상호보완 작용을 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전략을 구상할 경우 행위주체인 그 국가의 전략수행능력을 무엇보다도 먼저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국가전략에 관한 분석도 일본의 국가전략수행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전략 수행 의지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 신보수세력의 등장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㉑ 일본의 경제력

일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1985년 세계 제1의 금융국가, 채권국가로 등장한 후 1992년에 해외자산이 5,136억 달러에 이르렀고, 총GNP 또한 세계 GNP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3) 배정호, "일본의 전략과 한반도안보," 『新國際秩序와 周邊列強의 對韓半島戰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2.10)

일본의 이와같은 막강한 경제력은 정치대국을 지향한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의 경제력은 국가전략수행능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은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실적, 유엔통상예산의 분담률, 세계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투자 자본의 비중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제력은 주일 미군의 경비부담을 통하여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강화에 활용되고 있고, 더우기 경제력의 요체인 첨단기술력과 금융력은 일본의 대외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을 강화시키면서 대외적으로 주요한 전략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의 ODA 실적을 보면, 1976-80년 누계총액은 106.8억 달러이었던 반면 1981-85년 누계총액은 180.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더우기 1986-92년 누계총액은 대폭 증가하여 400억 달러 이상으로 계획되었는데 약4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일본은 1989년부터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제1의 ODA 대국이 되었는데, 1992년의 경우 세계 ODA 총액의 약 18.2%를 일본이 담당하고 있다. 또 일본의 유엔통상예산 분담률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이다. 즉 유엔에 대한 일본의 기부금이 세계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표 II-1] 참조)

세계 ODA 대국 일본이 ODA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아닌 일본이 세계 제2위의 유엔 기부금 국가라는 사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요컨대 세계적 규모의 일본 경제력은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기판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정치대국화를 위한 대외정책의 제 1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국가와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 경제력의 전략적 활용이 군사력의 질적 증강으로 직결되는 점이다. 즉 과학기술력은 산업생산력과 함께 무기의 혁신을 통하여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인데,

일본의 첨단기술에 의한 무기의 하이테크화는 通常戰力의 질적 증강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4)

[표 II-1] 주요국가들의 유엔통상분담률과 분담국

(단위:천달러)

국 명(1)	분담금(3)		자발적 출연금(4)		합 계	
	1989	1990(8)	1989	1990(9)	1989	1990
유엔통상 분담률(2)						
미 국 (25.0)	457,081	①716,276 (27.2)	522,833	①555,794 (14.9)	979,914	1,272,070 (20.0)
일 본 (11.38)	255,121	②309,411 (11.7)	514,195	②392,175 (10.5)	769,316	701,586 (11.0)
독 일(5) (9.36)	261,201	④225,280 (8.5)	180,700	⑥210,532 (5.7)	441,901	435,812 (6.9)
스 웨 덴 (1.21)	36,167	32,129 (1.2)	282,976	③368,479 (9.9)	319,143	400,608 (6.3)
네델란드 (1.65)	48,501	43,181 (1.6)	187,594	④260,329 (7.0)	236,905	303,510 (4.8)
소 련(6) (9.99)	317,038	③259,834 (9.9)	32,907	39,385 (1.1)	349,945	299,219 (4.7)
영 국 (4.86)	134,711	⑥115,742 (4.4)	163,691	⑩164,507 (4.4)	298,402	280,249 (4.4)
노르웨이 (0.55)	16,544	15,962 (0.6)	210,775	⑤256,908 (6.9)	227,319	272,870 (4.3)
프 랑 스 (6.25)	184,945	⑤168,219 (6.4)	87,401	102,277 (2.7)	277,346	270,496 (4.3)
이탈리아 (3.29)	107,884	⑦92,461 (3.5)	249,147	⑨173,847 (4.7)	357,031	266,308 (4.2)
합 계(7)	2,473,117	2,635,239 (100)	3,417,853	3,725,014 (100)	5,890,970	6,360,253 (100)

출전: 유엔분담금위원회 보고서 부속문서

주: (1) 국가서열은 1990년의 재정적 기여 합계순이고, ○내는 각부분의 1990년순위

(2) 1989-91년의 비율

4) 일본 첨단기술의 兩用性(dual use)에 의한 군사기술력의 강화에 관해서는 배정호의 “국가전략과 과학기술력-일본의 발전전략과 과학기술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년 2월 발표논문, 『戰略論叢』 제4집 게재예정)참조.

(3) 다음 각 기구에 대한 분담금지불합계

유엔통상예산, CERD, ILO, FAO, UNESCO, WHO, IMO, ICAO,
UNHMOG, UPU, ITU, WMO, UNIDO, WIPO, UNTAG,
UNEF/UNDOF, APARTHEID/SPORTS, UNIFIL, UNAVEM,
IAEA, ONUCA,

(4) 다음 각 기구에 대한 자발적인 출연금 지불합계

유엔신탁기금, UNIFICYP, WFP, UNIDO, UNICEF, UNDP, UNFPA,
UNDP관리하의 신탁기금, UNHCR, UNITAR, UNRWA, ILO, ICAO,
UNESCO, WHO, UPU, WMO, WIPO, IAEA, UNCHS, UNEP, IMO

(5) 통일때까지는 동서독 합계액

(6) 우크라이나(1.25%), 백러시아(0.33%)는 포함되지 않음. 한편 소련전체
의 분담률은 11.57%

(7) 비가입국 및 정부간 국제기구의 출연을 포함.

(8) 8위 캐나다(7,899만 4,000달러, 3.0%), 9위 스페인(4,661만 3,000달러,
1.8%), 10위 호주(4,465만 8,000달러, 1.7%)

(9) 7위 덴마크(2억 413만 5,000달러, 5.5%), 8위 핀란드(1억 8,839만 7,000
달러, 5.1%)

1991-95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는 경제력에 의한 통상전력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연장 로켓시스템(MLRS), C³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의 추진, 그리고 최신 이지스(Aegis) 구축함의 건조 및 공중경계관제기(AWACS)의 구입등이다.

예컨대 다연장로켓시스템은 국내 라이선스 생산을 위한 총경비 1천억円 이상의 대형프로젝트이고, 정보 지휘 통신 능력의 강화를 추진하는 C³I프로젝트는 총비용 3천8백억円 정도의 대형프로젝트이다. 또 공격해 오는 10여기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일시에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 미사일체제를 갖춘 최신에 이지스구축함은 1척에 10억달러 정도이며 공중경계관제기(AWACS)는 1대에 300억円이상을 호가하는 것이다.

또 1995년 7월경 첫 비행에 들어갈 예정인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지원전투기(FSX)는 일본 주도아래 미·일이 공동

개발하는 획기적인 전투기인데, 일본은 이 FSX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약 1조円 정도를 전액 부담할 뿐 아니라 반도체 레이저, 스텔스 기술, 一體成形複合材技術, CCV기술, 컴퓨터를 다루는 통합기술, 戰子戰機器技術 등 일본의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F16의 개조형인 FSX의 성능은 최대 탑재 중량이 10t으로 對艦미사일 4발이 탑재 가능하며, 최고속도가 2.0, 전투기의 행동반경이 8Km이다. 게다가 단거리 이착륙능력, 초저고도에서의 고속유지능력, CCV기술에 의한 운동성능의 향상, 스텔스性 등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일본이 재정력과 기술력을 통하여 일본의 통상전력을 혁신시킴으로써 군사력의 강력한 질적 증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경제력, 즉 재정력과 기술력은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시키는 잠재능력인 것이다.

㉞ 일본의 군사력⁵⁾

전후 일본은 동서가 대립하는 냉전체제 아래에서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응하여 미국의 세계안보체제에 편입되면서 재군사화의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대규모의 재군비 요구를 거부하고, 국지전 이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제한적 방위력을 단계적으로 정비·증강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4차례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위력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경 국제상황이 동서화해의 분위기를 나타내자, 일본은 1976년에 방위력 정비의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작성하고 그 틀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정비해 가고자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국제환경이 신냉전 상황으로 전환되자 1980년대 일본의 방위전략은 일본 내에 '소련위협론'에

5) 전후 일본의 방위력 정비 및 방위전략에 관해서는 배정호의 "전후 일본의 방위전략" 『戰略論叢』 第1輯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3.12) 참조.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지만, 극동 소련군의 증강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응하여 海·空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면서 '방위계획의 대강'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그와같은 일본 방위전략의 변화는 1980년대의 방위력 정비계획인 1981 中期業務見積과 1986-90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을 통하여 나타났다. 특히 방위력 정비에 있어서 海上 및 防空防衛力の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의도는 1986-90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컨대 1980년대의 일본의 방위전략은 국제정세의 신냉전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입각한 일본의 전략적 역할로서 SEA LANE 방위를 위한 3해협 방위를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상방공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해상방공의 전략구상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해상방공체제는 그와같은 전략구상에 따라 3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해상방공을 위한 전략구상의 4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초원거리에 있는 상대의 동태를 OTH로 파악한다.
- (2) 원거리에 있는 상대기대 대해서는 조기 경계기로 정확히 포착하여 요격을 지시한다.
- (3) 상대의 母機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F-15전투기로 요격한다.
- (4) 상대의 母機로 부터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에는 최신에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해상방공체제는 그와같은 단계별 전략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기능 즉 조기경계감시기능, 미사일 발사 母機 대처기능, 미사일 대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기경계감시기능은 가능한 한 조기에 상대방을 탐지하는 기능이고, 미사일 발사 母機 대처기능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母機 그 자체를 요격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미사일 대처기능은 발사전 미사일 그 자체를 요격하는 것이다.

일본이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방위력 정비를 추구한 것은 SEA LANE방위라는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섬나라라고 하는 전략지정학적 견지에서

일본 본토에 대한 침략이 바다와 하늘을 경유하여 감행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이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해상에서 격퇴한다는 전략적 목적에서 제공권·제해권을 확보하기위함이다. 일본은 그와같은 해상방공체제를 추구함에 따라 그 귀결로서 일본의 자위대는 海·空에 있어서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해외활동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은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海·空의 방위력 증강에 역점을 두는 방위전략을 脫冷戰시대의 일반적인 국제환경의 변화에는 관계없이 1990년도에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의 그러한 전략적 의도는 1990년대 前半의 방위력 정비계획인 1991-95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잘 나타나 있다.

1991-95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은 그 전개과정에서 당초 22조7천5백억円의 소요경비가 22조1천7백억円으로 감소되었지만, 국제환경의 일반적인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않고 일본 주변의 군사정세는 여전히 냉엄하다는 인식아래에서, 해상방공체제에 역점을 두면서 방위력 정비를 하는 것이었다. 즉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海·空의 방위력 증강에 역점을 둔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정보 지휘 통신 능력의 충실에 중점을 둔 후방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와같은 1991-95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나타난 방위력정비의 방향성은 1990년대에 전개될 일본 방위전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1991-95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기의 하이테크화와 더불어 첨단기술에 의한 방위력의 질적증강을 추구하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 한 바 있듯이 MLRS, C³I의 대형프로젝트, 이지스구축함의 건조, AWACS의 구입, FSX의 공동개발등이 일본의 재정력과 기술력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 과학기술의 兩用性, 경제력의 군사력으로의 轉化등의 관점으로부터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핵잠재능력과 미사일 제조능력이다.

일본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치중하면서 핵 능력을 확대시켜 왔다. 현재 일본의 핵능력을 살펴 보면, 일본은 세계 최

초로 최첨단 농축기법인 레이저 농축법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일보직전에 있고, 더욱이 플루토늄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및 재처리 시설을 개발하고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일본은 1994년 4월 부터 28만Kw급 플루토늄 고속증식로 '몬주'를 시험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플루토늄 고속증식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의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을 도카이무라에 설치 중에 있으며, 아울러 록카쇼무라에 2000년에 조업개시를 목표로 하는 대단위 플루토늄 제조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그 시설이 완성될 경우 일본은 고속증식로와 동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플루토늄 리사이클(recycle)사업을 완벽하게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된다.

요컨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일본의 핵능력은 일종의 無症候전략(asymptomatic strategy)⁶⁾을 전개시켜 온 결과와 동일한 잠재적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치중하면서 핵능력을 확대시켜 왔고, 그 귀결로서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핵 잠재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미사일 제조 능력에 관해서는 미쯔비시 중공업의 空對艦미사일 및 地對空미사일, 도시바의 단거리 地對空미사일, 가와사키 중공업의 對戰車미사일, 닛산의 패트리오트 라이선스 생산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신티에 로켓 H₂이다. 최신티에 로켓 H₂는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2천7백억円의 비용을 들여 개발되었지만, ICBM에 관련된 기술과 함께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는 로켓이다. 예컨대 H₂에 사용된 기술 가운데 관성유도장치의 중추인 자이로와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는 기술 오렉스(OREX)는 ICBM과 관련된 기술이다. 이 기술들은 미국이 고도의 군사기술이라는 이유로 기술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H₂제작에 활용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개발한 자이로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光을 사용하여 급격한 자세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신제품이다. 일본의

6) 김태우/김민석 “한반도의 핵과 일본의 핵정책” 『북한연구』 제 2권 제3호 (대륙연구소, 1991년 가을호)

미사일 제조능력은 각각의 최첨단 요소기술수준, 요소제품을 만들 수 있는 최첨단 기술수준, 최첨단 기술등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전후일본의 방위력 정비계획및 전략은 미·일 안전보장의 틀속에서 전개되었으므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 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고 아울러 그 귀결로서 일본자위대의 전력증강과 그에 따른 해외활동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은 脫냉전시대의 일반적인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해상방공체제와 미사일방공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海·空의 방위력 증강에 역점을 두는 방위전략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방위전략은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하여 美·日役割分擔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나아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戰域미사일(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국의 안보 및 미국과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TMD체제를 구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TMD계획과 관련하여 일본에게 다음과같은 네가지 참여방식을 제시했다.⁷⁾

· 제1안: 북한의 노동1호에 대처하기 위하여 탄도요격 미사일 36발을 구비한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하여 공중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에 24기가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모두 격추시킨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에 적외선망원경(IRST)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제1안에 대한 준비가 1995년부터 실시될 경우 완성시기는 2004년이 되며 소요경비는 약 45억달러로 추산된다.

7) 『세계일보』 1994. 9. 7일자.

· 제2안: 북한의 노동1호와 중국의 ‘長征’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주변에 탄도요격미사일을 실은 이지스함 6척을 배치하고 PAC3(24기), AWACS(4기)와 함께 감시레이더를 東京 남서지구에 배치한다. 이 시스템의 완성시기는 2005년으로 예상되며 그 소요경비는 약 1백 6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제3안: 일본전역에 6개의 THAAD부대를 두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에 대처하는데, 특히 노동1호에 대해서는 사정거리가 150km인 요격미사일로 격추시킨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PAC3(24기), AWACS(4기), 감시레이더(1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제3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경비가 88억달러정도 소요되며, 완성시기는 2005년으로 예상된다.

· 제4안: 일본전역에 5개의 THAAD부대를 두는 이외에 이지스함 2척, PAC3(24기), AWACS(4기), 감시레이더 1기를 배치한다. 이 시스템은 2004년중에 완성될 예정인데, 그 경비는 약 89억달러가 소요된다.

요컨대, 일본의 군사력 및 그 전략의 근본적인 성격은 일본이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을 계속해서 전개해 갈 것인가 아니면 ‘군사-경제’형 국가전략을 취하면서 궁극적으로 ‘군사-정치’형 국가전략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⁸⁾

◎ 국내정치의 변화와 신보수 세력의 등장

일본정치는 1993년에 대지각 변동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의 여파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와같은 정치적 변화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신보수세력의 등장이다.

전후일본 정치사에서 1955년이 55년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8) 배정호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방위전략”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1992).

분기점이 되는 해라면 1993년 역시 7.18총선으로 한 획을 긋는 정치적 의의가 큰 해가 될 것이다. 7.18총선의 결과는 (1) 자민당 과반수 의석 획득 실패, 사회당의 대참패, 3보수신당들의 약진 (2) 비자민 연립 정권의 수립 (3) 쇼와(昭和)세대의 등장에 그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일본정치를 보수화시키고 있다.

그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민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 실패, 사회당의 대참패, 新生·사키가케·日本新黨의 3보수신당들의 약진 등은 혁신계의 참패와 신보수계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을 나타낸다. 이는 자민-사회의 양당체제를 근간으로 출발하여 60년대에 이르러 보수, 중도, 혁신의 다당체제로 변모해 왔던 55년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둘째, 보수신당들이 약진한 상태에서 자민당 과반수 의석 획득의 실패는 자민당 일당 우위 정권의 붕괴를 가져 왔다. 38년간의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는 대신 保守右派 政治人 오자와(小澤)와 新生黨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비자민 연립 정권의 등장을 가져 온 것이다.

셋째, 7.18총선을 통하여 젊은 정치인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 오게 되었고, 게다가 쇼와세대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의미를 지닌 7.18총선을 계기로 형성된 체제는 55년 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만든 것에 비하여,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 대국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신보수계의 부상과 쇼와세대의 등장은 세계 경제대국 일본에 상응하는 21세기 일본형 정치를 전개토록 할 것이다. 쇼와세대는 그 앞의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거사에 덜 부담감을 가지는 세대이다. 대미 콤플렉스도 덜 가지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신보수세력으로서의 쇼와세대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전후 총결산을 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역할 강화를 주창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다. 즉 일본은 국제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대

국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일본의 정치대국화 지향은 일본정치를 총보수화 경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社會-自民-사키가케의 제휴에 따라 무라야마(村山富市) 사회당 총리내각이 등장했는데, 무라야마내각은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결정하였고, 사회당 또한 현실노선으로 전환하여 自衛隊 合憲, 美日安全保障體制 인정, 일장기·기미가요의 국가·국가 인정등을 黨 政策路線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실로 일본은 총보수화의 성향속에서 국제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우파 민족주의에 의한 정치대국화의 추구는 그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전개될수 있다. 일본의 정치대국화 추구라는 관점에서 호소가와내각의 나카니시(中西啓介) 방위청 장관과 하타내각의 나가노(永野茂門) 법무 대신의 사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즉 호소가와 내각에서 방위청장관직에 있던 나카니시는 '신 자위대 파병론' 발언으로 사임을 했고, 하타내각의 발족과 더불어 법무대신에 기용된 육상 자위대 막료장 출신의 나가노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南京 대학살을 날조라고 주장하여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킨 뒤 사임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나 우파 민족주의의 일부는 헌법 개정 및 자위대 개편을 단행하고 군사대국화 노선에 의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 즉 그러한 의도의 표출로서 나카니시나 나가노의 발언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나 우파 민족주의의 일부는 나카니시나 나가노 발언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반응을 통하여 전후 총결산에 대한 진전도와 군사대국화 노선의 조율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호소가와 내각이나 하타 내각은 나카니시 방위청 장관이나 나가노 법무대신을 발언 직후 파문이 일자 전격 사임시키고 사죄 표명을 하였다. 그와같은 문제의 발언이나 그에 따른 사임과 사죄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대국화에 장애가 되는 역사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후처

리및 전후 결산을 단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강하게 표명하려고 의도적으로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7.18총선 이후의 정치변동과 더불어 일본은 '경제-정치'형 국가로서 대국화를 지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치'형 국가에서 '군사-경제'형 국가로 전환하여 나아가 '군사-정치' 대국화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전환점에서 있는 것이다.

③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전략구도

일본은 정치대국화를 위하여 '경제-정치'형 전략을 기본적으로 전개시키되,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제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질적 증강된 군사력을 두 축으로 하여 전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틀내에서 추구되는 정치대국화전략은 글로벌 차원(global level), 지역적 차원(regional level),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글로벌차원에서 일본의 전략은 유엔의 깃발아래에서 전개될 것이다. 즉 미·소를 양축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있는 가운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일본은 정치대국화차원에서 유엔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1991년 9월 25일 나카야마(中山太郎)외무장관은 유엔총회에서 일반연설을 통하여 유엔헌장에 있는 舊敵國條項⁹⁾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나타내었다. 또 미야자와(宮澤喜一)수상은 1992년 1월의 국회시정연설에서 냉전 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대한 일본의 참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앞으로 유엔에 대한 협력등 국제공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힌 것이다.

9) 舊敵國條項이란 제 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舊敵國으로 규정한것으로 유엔헌장 제 53조및 제 107조를 말함. 이는 침략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해 둔 조항임.

그와같은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의지는 1994년 5월에 발표된 1993년판 外交靑書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1993년판 外交靑書에서는 일본은 이제 국제적 틀 속에서 그냥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틀의 존재방식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그러한 국제적 틀의 구축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력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1993년판 外交靑書에서는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 외교를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적극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1994년 9월 14일 각료간담회를 열고 武力行使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기로 公式 결정했다.

그리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外相은 동년 9월 27일 제49차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헌장이 서명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舊敵國조항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은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일본총리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동년 30일 衆議院 본회의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통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않는 것을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고,¹⁰⁾ 미국 또한 일본의 활동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이 유엔을 무대로 국제사회에서 전개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0)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의 유엔 통상 예산 분담률은 미국에 이이 두번째이다. 즉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면서도 미국 이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경제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울러 국제사회가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i) 인권

(1) 각국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서방측의 일원으로 각국과 협조, 대처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도 대처함.

(2) 가령 미얀마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은 미얀마와 서방제국 사이에 서서 대립을 피함과 동시에 미얀마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에 전력함. 한편 오가타 마사오(緒方貞子) 上智大學 교수(현재 유엔 난민고등판문관) 및 요코다 요오조오(横田洋三) 國際基督教大學 교수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미얀마 인권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로 임명됨.

ii) 난민

유엔 각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유엔난민고등판문관사무소(UNHCR)에의
 출연액(1992년)
 1.19억 달러(미국에 이어 2위)
 캄보디아 난민귀환계획에의 출연액(1992년)
 3,500만 달러(각국중 1위)

iii) 환경

(A)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일본은 UNCED의 성공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UNCED에서 일본이 구체적인 자금공헌책을 포함, 환경과 개발문제에 관한 책임있는 태도를 명확한 형태로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B) UNEP 국제환경기술센터의 설치

동센터는 도상국 및 경제체제의 이행기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환경면에서의 우수한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유

엔환경계획(UNEP)의 센터(UNEP의 내부기관)로서 1992년 일본에 설치되었다. 일본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보전 지원대책의 하나. 센터시설은 오오사카(大阪, 대도시 환경문제)와 시가현(滋賀縣, 淡水湖·沼水域의 환경관리)의 2곳에 설치, 일본은 동센터의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1992년 150만 달러를 출연했다.

(C) 환경관계부문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1989년도부터 91년까지의 실적	4,000억엔
1992년도부터 향후 5년간의 목표	9,000억-1조엔

iv) PKO에 대한 요원파견

유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재 사절단(UNGOMAP)	정무관	1명(1988.6-1989.11)
유엔 이란·이라크 군사감시단 (UNIMOG)	정무관	1명(1988.8-1989.11)
유엔 나미비아 독립지원그룹 (UNTAG)	선거감시요원	27명(1989.10-11)
유엔 니카라과 선거감시단 (ONUVEN)	선거감시요원	6명(1990.2-3)
유엔이라크· 쿠웨이트감시단 (UNIKOM)	정무관	1명(1991.5-11)
유엔캄보디아 선발사절단	정무관	1명(1991.11-1992.3)

(UNAMIC)

제2차 유엔 앙골라감시단	선거감시요원	3명(1992.9-10)
------------------	--------	---------------

(UNAVEM II)

유엔 캄보디아 잠정기구 (UNTAC)	정전 감시원 문민경찰요원 시설부대 선거요원	8명(1992.9-1993.9) 75명(1992.10-1993.7) 600명(1992.9-1993.9) 41명(1993.5-6)
----------------------------	----------------------------------	--

유엔모잠비크 활동(ONUMOZ)	사령부요원 수송조정부대	1명(1993.5-현재) 1명(1993.5-현재)
----------------------	-----------------	--------------------------------

요컨대 일본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유엔의 깃발아래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의 책임 분담을 전개시킴으로써 정치대국으로서의 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즉 PKO법안통과--->PKF로서의 자위대 활동전개--->유엔현장의 舊敵國條項 삭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등장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¹¹⁾

이와같은 정치대국화과정의 관점에서 볼때 1994년 5월 하타 스토무 일본 수상은 국회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 하타 수상은 일본 헌법은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보를 이념으로 하고 있고, 그 보편적 안보의 주요 요소는 집단 안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유엔군 참가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이는 매우 주목되는 발언인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역할및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에 들어 오면서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고 있고, 더욱기 동남아 지역은 일본의 새로운 생산거점이 되고 있다. 즉 일본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은 北美지역을 능가하는 최대의 수출지역으로 발전하였고, 특

11) 배정호의 “일본의 전략과 한반도안보,”

히 아세안 諸國은 円高 극복을 위한 일본의 생산기지로써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국제질서기에 일본은 그러한 맥락에서 아시아를 중요시하는 대외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對아시아 전략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ODA제공과 해외 직접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ODA를 아시아지역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ASEAN(전체 3할)에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1980년대 이후 円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세안 諸國에 새로운 해외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상당한 직접투자및 기술이전을 하고 있다.

그와같은 ODA제공이나 직접투자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은 對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ODA제공이나 해외 직접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重視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일본의 주도권 장악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장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아시아판 G7의 창설을 추진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円통화권을 구상하는 것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강국으로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확대 발전과 더불어 미·일 역할분담의 증대를 추구하여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적 역할도 하고자 할 것이다.

국내적 차원에서 일본은 전후 총결산을 단행하고 정치대국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이루고자 할 것이다. 그럴경우 제도적 정비는 자위대의 해외활동등 '군사-정치' 활동을 뒷받침 해 주는 법안 마련에 역점이 주어질 것인데, 쟁점은 헌법개정일 것이다.

하타내각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5월 국회에서 일본의 군사적 집단안보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제시하였

는데, 이는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정계개편의 과정 중에 개헌론이 대두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정계개편의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정당간 또는 정파간에 상당한 견해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파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일본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현행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논의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고, 따라서 개헌론 對 호헌론을 둘러싸고 정계개편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내적 차원에서 일본은 정치대국화를 위한 국가 전략이 전개됨에 따라 전후 총결산과 더불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갈 것이다.

2. 일본의 對北韓政策과 그 전략적 의미

가. 냉전시대 일본의 對北韓政策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전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주어진 국제환경속에서 수동적인 자세로서 親美路線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일본은 東西대립의 냉전구조아래에서 미국의 對아시아전략에 응하여 美日安保體制를 근간으로 하는 친미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일본의 대외정책은 국제환경의 제약적인 틀내에서 전개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라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한반도에 한국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 한국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냉전시대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및 對北韓政策에 관하여 논할 경우, 일본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북한접근 전략에 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일본의 對北韓認識

일본은 1950,60년대에 전후처리외교를 추진하였지만, 대한

반도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틀내에서 한국 편향의 정책을 전개하였다.¹²⁾ 그러므로 일본은 1955년 2월의 북한의 관계개선제의를 거절하고¹³⁾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65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교정상을 위한 조약체결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한국측의 희망에 대해서 한일기본조약에 UN총회결의 제195호(III)¹⁴⁾에 대한 단서를 포함시킴으로서 한국의 관할권을 남한에 국한시키려 하였다. 즉 일본은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한 셈이다.

그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 인식은 일본의 對北韓政策을 전개시키는 출발점이었고 아울러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정세에 긴장완화의 조짐이 나타나면 對북한관계 개선을 시도케 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었다.

(2) 일본의 對北韓政策과 접근전략

한반도에서 일본과 지리적 인접성과 그 地政學적 특성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일본의 아시아대륙으로의 진출경로가 되거나 아시아 대륙세력의 일본열도로의 세력확장시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¹⁵⁾

12) 한영구, “日本の 對北韓政策,” 『統一研究論叢』 제1권 2호, 1992.

13) 일본-북한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개선제의를 최초 북한으로부터 나왔다. 1955년 2월 25일 북한의 외교부장 南日은 북한이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려는 일체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무역, 문화관계 및 그밖의 조일관계의 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제의하였다. ‘대일관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성명,’ 『조선중앙연감 1956』.

14) 1948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채택된 195호(III)는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냉전시대의 한반도는 일본을 아시아대륙의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인 동시에 위협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인 것이다.

그와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게 했다.¹⁶⁾

첫째,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쟁억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즉 일본은 자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에 일본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반도가 미국, 중국, 러시아등 강대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아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세째, 일본은 한반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최대한으로 도모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나아가 전략적 의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 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¹⁷⁾ 일본의 對韓半島 영향력 증대는 대외정책 및 대미정책에 있어서의 교섭능력(bargainig power)의 강화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그와 같은 對韓半島政策의 기조에 따라 북한정권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북한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역할증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對韓半島政策은 앞서 언급한 일본의 대북한 인식 즉 사실상의 정부로 인식하는 것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 그러난 냉전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對韓半島政策은 그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韓·日關係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야

15) 民族統一研究院, 『日本の 對韓半島政策』 (1992. 12), 第Ⅱ章 참조.

16) 위의 책 참조

17) 위의 책 참조

했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정경분리전략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는 적대적인 자세를 나타내었지만, 비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 문화 교류를 복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對北韓政策을 정치적 분야와 경제적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정치분야

1953년 3월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평화공존노선이 주창되었는데,¹⁸⁾ 그에 따라 국제정세는 동서냉전체제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1954.12-1957.3)은 자주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對北韓政策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즉 하토야마 수상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며 회담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북한 또한 1955년 2월 남일 외교부장의 성명이나 1956년 11월 김일성의 요미우리 신문과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틀내에서 한국편향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전개해야 했으므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제의를 남북한 쌍방승인 불가원칙에 따라 거부하였다.

1950년대 초기 일본의 대북한접근은 정치적 수준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계기마련으로서 경제적 수준의 간접교역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했고 민간교류의 활성화에 만족하여야 했다. 그리고 1965년 韓·日國交正常화를 위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대북한접근은 정체상태에 빠지면서 정치적 수준에서는 명백한 한계성을 나타내

18) 1956년 2월 14일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는 스탈린을 비판하고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노선을 채택하였다.

었다. 특히 한·일양국이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해 감에 따라, 북한은 한·미·일 3각동맹의 한축인 일본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적대적 자세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한층 경직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초 미·중의 화해에 따른 동북아정세의 변화 및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재차 對북한 접근의 움직임 보였다. 즉 1969년초 미국 닉슨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화해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데탕트적 상황으로 전환하고 게다가 남북한이 그러한 국제정세의 데탕트적 분위기의 기류를 타고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자, 일본 역시 유화적인 대북한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은 유화적으로 접근해 오는 일본에게 對北韓 적대정책을 버리고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⁹⁾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韓·日關係때문에 정부간 수준에서의 대북한관계를 수립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대신 정당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확대를 도모했다. 즉 일본에서는 약 28개의 친북한 단체가 결성되고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한 정당외교가 활발하게 전개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일본 사회당 의원들은 1970년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친선방문을 하였고 이듬해 1971년 11월에는 자민당의 쿠노츠키(久野忠治)의원을 임시의장으로 하고 234명의 자민·사회당 의원들로 구성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설립하였다. 실로 일본정부는 국제환경의 데탕트적 상황속에서 정부간 수준의 외교채널을 대신하여 일본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채널을 대북한 접촉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환경이 데탕트적 상황에서 신냉전 상황으로 전환하게 되자, 일본의 대북한접근은 또다시 주춤하게 되고 냉각상태로 들어가야만 했다.

19) 1972년 9월 7일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일본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일본이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외교를 취한다면 한일 기본조약이 폐기되기 전이라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동아일보』 1972.9.8.

소련이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전략차원에서 극동의 핵진력 배치와 함께 극동 소련군의 두드러진 질적 증강을 피하고²⁰⁾ 게다가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군사개입을 하자, 국제환경은 냉전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냉전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일안전보장체제에 입각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²¹⁾ 그에 따라 對韓半島政策은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강화하는 한국중시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게다가 1985년의 랑군사건, 후지산마루(富士山丸)사건,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등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대북한 제재로 나타났다.

요컨대, 냉전시대 정치적 수준에서의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과 냉각을 반복하면서 전개되었지만,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韓·日關係에 의한 제약적인 틀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ii) 경제분야

1954년 9월 히라노(平野義太郎)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측에 일본·북한의 경제교류를 제의했다.

북한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1955년 2월에 발표된 남일 외교부장의 대일본성명에서 무역, 문화관계등의 발전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일본·북한간에는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1955년 10월초 북경주재 일본종합상사 3사는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의 주선으로 조선무역회사와 회담을 가진 뒤, 동년 10월 15일 거래협정을 체결하였고, 또 동년 10월 19일에는 당시 日·蘇貿易協會의 간부가 소련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조무역촉진에 관한 의사록”을 조인하였

20) 배정호,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방위전략-1980년대의 일본의 방위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1992).

21) 위의 논문

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5년 10월 24일 各部處의 次官會議에서 그와 같은 민간차원에서 전개되는 경제교류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즉 일본정부의 차관회의에서는 한일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무역이나 기타교류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정부의 공식결정에 따라 일본·북한간의 교역은 직접교역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간접교역을 하여야만 했다.

日朝貿易會가 1956년 3월에 설립되었고 일본종합상사 4사는 동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무역회사와 중국 大連경유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본과 북한간의 교역은 정부인가를 얻지 못하여 직접교역은 이루지 못했지만, 1956년 9월부터 제3교역 즉 大連경유의 중·일교역이라는 간접교역 형태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57년 9월 27일 평양에서 日朝貿易會, 일본국제무역촉진회, 일소무역회의 3단체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에 최초의 민간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개요를 살펴 보면, 거래목표액은 수출입 합계 1,200만 폴드(당시 환율로 3,600만 달러), 거래방식은 중국 대련경유, 결제은행은 중국 은행이며, 그외에 민간통상대표부의설치, 무역관계자의 상호왕래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 정부간 통상협정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민간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일본의 상사, 제조업체, 해운회사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실업단이 1958년 4월 북한을 방문하고 구체적인 거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중일무역이 중단하게 됨에 따라 일본·북한간의 교역도 중단하게 되었고, 1958년 9월 26일부터는 민간무역협정마저 失效하게 되었다.²²⁾

그 이후 일본·북한간의 경제교류는 1년여의 공백상태가 있었지만, 1959년 6월부터 홍콩경유의 새로운 교역이 다시 시작되어 1961년에 이르기까지 간접교역형태의 경제교류는

22) 김도형, “日本の 對北韓經濟政策,” 『美蘇研究』 제7집 (단국대학교 미소연구소, 1994)

계속되었다. 그리고, 1960년 7월 이케다 내각(1960.7-64.7) 23)의 등장과 더불어 정경분리전략에 따른 대공산권 교역확대정책이 시행되자, 일본·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의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961년 4월 북한을 강제바터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접거래를 용인한 것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확대·발전되어 감에 따라 在日朝鮮인들의 북송정책도 추진했다. 일본정부는 1958년 8월 “재일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는데, 그 협정에 따라 동년 12월부터 북송선이 출항하게 되었고 1961년까지 약 7만 5천명의 재일조선인이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게 되었다. 재일조선인들의 북송시에는 휴대품 명목으로 기계·설비류도 상당히 반출되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체결로 인하여 정체상태에 머물러야만 했다. 즉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북한의 대일본 비난과 한국정부의 요구때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본의 대북한 무역도 [표II-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1962년 가을부터 직접교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1965년 한일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제동이 걸리면서 특히 대북한 수출부문에서 감소하게 되었다.

[표II-2]를 보면, 일본·북한간의 교역은 1972년부터 제차 두드러지게 증대되고 있고 아울러 일본의 대북한수출과 그에 따른 무역흑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70년대초 국제환경의 대탕트적 상황에 편승하여 남북한간에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간에는 1971년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렸으며, 나아가 1972년 7월 4월에는 남북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도 그와 같은 남북한의 화해분위기의 기류를 타고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라 경제교류도 일본의 수출증가와 북한

23) 이케다 내각은 통상국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대내적으로 소득배증정책을 추진하였고, 대내적으로는 통상확대정책을 전개했다.

의 구매증대²⁴속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것이다.

[표 II-2] 일본의 대북한 무역추이

(단위: 1000달러)

년 도	수 출	수 입	총 계	수 지 균 형
1962	4,781	4,553	9,334	228
1963	5,347	9,430	14,777	-4,083
1964	11,284	20,231	31,515	-8,947
1965	16,505	14,723	31,228	1,782
1966	5,016	22,692	27,708	-17,676
1967	6,370	29,606	35,976	-23,236
1968	20,748	34,032	54,780	-13,248
1969	24,159	32,186	56,345	-8,028
1970	23,344	34,414	57,758	-11,070
1971	28,907	30,059	58,966	-1,152
1972	93,443	38,311	131,754	55,132
1973	100,160	72,318	172,478	27,842
1974	251,914	108,824	360,738	143,090
1975	180,630	64,839	245,469	115,791
1976	96,056	71,627	167,683	24,429
1977	125,097	66,618	191,715	58,479
1978	183,347	106,862	290,209	76,485
1979	283,848	152,027	435,875	131,821
1980	374,305	180,046	554,351	194,259
1981	290,995	139,476	430,471	151,519
1982	313,162	152,026	465,188	161,136
1983	327,077	126,149	453,226	200,928
1984	254,719	145,218	399,937	105,501
1985	247,069	179,293	357,220	67,776
1986	183,971	173,229	455,483	10,742
1987	213,739	241,744	563,532	-28,005
1988	238,883	324,649	495,532	-85,776
1989	197,001	298,678	495,679	-101,677
1990	175,900	300,282	476,182	-124,382

(출처) 日朝貿易會,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貿易通關統計 1990』

24) 북한이 1971년부터 제2차 6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기계·설비도입이 급증했다.

1972년 日朝友好促進議員과 日朝貿易會는 평양에서 북한측과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고, 1973년 일본정부는 타월제조 플랜트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용자적용을 인가했다. 그후 1975년까지 3건의 기계 및 설비수출이 용자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1974년 중반부터 북한의 외화부족²⁵⁾으로 後拂·延拂輸出에 대한 지불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증가일로에 있던 일본·북한간의 교역은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일본기업들의 북한무역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울러 일본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침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은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북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는 일조무역경제협의회를 설립했다. 1979년 8월 일조무역경제협의회는 일본·북한간의 상호이해와 무역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조선은행과 채무연기에 관한 기본합의를 보았다. 그 기본합의의 주요 내용은 우선 1979년 현재의 연체원리금 합계를 완불한다는 전제아래 10년간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제2차 채무연기로서 북한측이 일본측의 요구를 거의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²⁶⁾

또 일본에서는 三井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자들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과의 협력창구인 동아시아무역연구회를 설립했다.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日朝貿易會와 더불어 지금까지도 일본의 대북한 경제교류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다.

1979년 채무상환 연기합의이후 1983년 전반까지는 채무지불이 비교적 이루어졌으므로 일본·북한간의 교역은 제차

25)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다른 공산품의 가격이 폭등한데 비하여, 북한은 주종수출품인 비철금속류의 대폭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외화부족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북한은 10대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담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외화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26) 제1차 채무연기는 1976년말 약 800억엔에 달하는 채무를 둘러 싸고 평양에서 일본측 대표단과 조선무역은행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제2차 채무연기는 1977년 6월 제차 지불연기사태가 발생하자 1979년 8월에 이루어졌다.

활기를 띠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본측의 플랜트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표II-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계속확대되어 갔다. 1980년의 경우 북한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북한의 대일본 수출액을 상회하였다. 결국 1983년 제3차 채무상환연기 합의 후, 북한이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이 어렵게 되자 일본의 친북상사 및 제조업체는 일본정부차원의 延拂허가나 수출입은행등의 협력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북한 교역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1984년 9월 북한이 合營法을 제정하여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을때도 일본측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몇몇 중소기업만이 참여했었다.

북한이 외자도입을 위해 추진한 합영사업의 대부분은 조총련계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북한의 외화 사정악화로 인하여 무역대금 지불지연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본상사나 기업들의 대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참여는 줄어들었고 그 공백은 조총련계 상사나 기업들에 의하여 메워졌다.

그러나 일본·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북한의 폭탄테러만행으로 냉각되자 일본의 대북한 경제접근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냉전시대 전개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접근의 흐름을 보면,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에서 시작하여 일본·북한간의 직접교역으로 전환하면서 그 교역량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외화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지불지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日·朝貿易에서는 朝·朝貿易의 비중이 높아지는 질적변화가 나타났다.

요컨대 냉전시대 일본의 대북한 경제정책은 정경분리전략에서 추진되었지만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경제사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면서 전개되었다.

나. 탈냉전 시대 일본의 對北韓政策

일본의 대북한접근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시기는 일본·북한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이다. 냉전시대 일본이 취했던 한국편향의 對韓半島政策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아울러 對北韓政策도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북한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역할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對北韓政策이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의 틀내에서 전개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① 일본의 대북한 접근과 국교정상화교섭

국제환경은 1987년 12월의 미·소수뇌회담에서 INF전폐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냉전적 상황에서 데탕트적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동구 공산주의가 몰락함에 따라 알타체제의 붕괴의 조짐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1989년 12월의 몰타 미소수뇌회담을 계기로 냉전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전후 국제질서는 기본적인 골격이 와해되었다. 실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의 '7.7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한간의 대결,불신,적대관계를 극복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하였고,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²⁷⁾ 나아가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1990년 9월 30일의 한소수교, 1992년 8월 24일의 한중수교를 이룩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했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은 일본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도록 자극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직전 다케시다(竹下登)내각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였고, 나아가 가네마루(金丸

27) 『7.7 特別宣言』 국토통일원, 1990.

信) 前자민당 부총재는 1990년 9월 24-28일에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²⁸⁾ 한·소수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가네마루 前부총재는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따라서 북한측에 의하여 전격적으로 제기된 수교제의를 받아들였다.²⁹⁾ 그결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노동당 사이에는 동년 9월 28일 3당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3당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당은 戰前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과 戰後 배상에 관하여 합의함.

둘째, 3당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수교할 것에 합의한다.

셋째, 3당은 각분야에서의 교류와 직항항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함

네째, 3당은 재일조선인의 인권, 민족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아울러 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다섯째, 3당은 조선은 하나이며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함.

여섯째, 3당은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하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장래 핵의 위협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일곱째, 3당은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수립의 실현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간의 교섭이 1990년 11월부터 개시되도록 양국정부에 강하게 권고할 것을 합의함.

여덟째, 3당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합의함.

28)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田邊誠의 “日朝新時代の幕あけ, アシ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1990年 12月號) 참조.

29) 1990년 9월 2일부터 3일간 평양에 들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북한 김영남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소련이 한국과 곧 수교할 것임으로 밝혔다. 이에 대하여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게 한소수교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일소간의 북방영토문제에서 일본의 요구를 지지하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朝日新聞』 1991.3.1.

이와 같은 3당공동선언에 대하여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도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자민당과 언론은 전후 45년간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비판을 가했다. 미국은 북한이 동아시아 안정에 매우 중요한 핵안전 협정의 조인을 거부하고 있고, 게다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급속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³⁰⁾ 한국정부는 전후 45년간에 대한 배상합의에 대하여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하나의 조선’논리에 대해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일본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³¹⁾ 즉 한국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일본·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일본의 남북한 등거리외교의 전개와 더불어 남북대화의 진전 및 통일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우려를 의식한 가네마루 前 자민당 부총재는 1990년 10월 8일 서울을 방문했다. 가네마루 前 자민당 부총재는 3당 공동선언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한한 것이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가네마루 前 자민당 부총재에게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5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북한 수교협상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는 협상에 대해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

둘째, 일본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북한에게 경제원조를 제공하지 말 것이며,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할

30) 1990년 10월 30일 솔로몬(Richard Solomon) 미국 국무성 차관보는 “한반도 핵확산이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언급했다. 小此木政夫, 『日本の北朝鮮』(東京PHP研究所, 1991), p. 29.

31) 徐鎮英, “北韓과 日本과의 關係: 과거, 현재, 미래,” 徐鎮英 編 『社會主義改革과 北韓』(고려대학교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참조.

것.

세째, 일본은 남북대화의 진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네째, 일본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사찰협정에 조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

다섯째, 일본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할 것.

한국의 '일본·북한수교협상5원칙'은 일본의 대북한 접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기도 하다. 즉, '일본·북한수교협상5원칙'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첫째, 한국은 일본에게 남북대화의 진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북한협상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광범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 경제교류등을 남북관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려는 전략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대북한접근이 한국의 통일정책 및 對北韓政策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게 수교전까지는 경제원조를 제공하지 말며 특히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한국이 대북한 경제교류를 전략적으로 전개할 경우 그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일본의 경제원조가 북한군사력의 질적 증강으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세째, 한국은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의 대북한접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네째, 한국은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는데 일본의 대북한접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북한수교협상5원칙'을 제시하여 일본·북한의 급속한 접근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도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수교협상전개에 핵사찰과 남북대화의 진전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게 함으로서, 수교회담의 틀에 제약을 가함과 동시에 일본·북한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정치권보다는 의무성을 통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져 갔다.

일본·북한 국교정상화회담은 1990년 11월 중국의 北京에서 3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뒤³²⁾ 본 회담에 들어갔는데, 본 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제1차 회담을 평양에서 가진 뒤 제8차까지의 회담을 가졌다. 1992년 11월 5-6일 北京에서 개최된 제8차 수교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이은혜’의 조사문제와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추후일정을 정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표 II -3] 제1차회담에서 제8차회담까지 일본·북한 양측의 주장과 대립점

	日 本	北 韓
基本問題 (植民地, 管轄權)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한때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한일합방조약등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 ·북한이 남쪽의 관할권까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한반도의 휴전선 북쪽을 實效支配하는 北韓과의 정상화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사조약(1905), 정미7조약(1907)등은 일본에 의한 날조이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부당한 것이다. ·북한 人民에게 입힌 피해와 손실에 대해, 일본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사죄해야 한다. 공식사죄한 내용을 외교관계설정을 위한 公式서류에 明記해야 한다. ·‘하나의 朝鮮’논리에 입각하여 분단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피하였으나, 절충안으로서 군사경계선 以北의 북측관할을 제시하였다.
經濟問題 (補償, 賠償, 請求權)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과 북한은 교전상태가 아니다. 보상, 배상이란 개념은 인정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년 이전의 일본과의 관계는 교전상태에 있었으므로, 전쟁배상과 식민지보상을 주장하였는데, 점차 포괄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즉 교전관계에 적용되는 배상은 주장하지 않고,

32) 예비회담에서는 본 회담에서 논의된 안건으로서 4개항 즉 ① 국교정상화와 기본문제 ② 일본·북한간의 보상문제등의 경제력문제 ③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들 ④ 일본·북한 쌍방간에 관계되는 문제들등으로 할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日 本	北 韓
經濟問題 (補償, 賠償, 請求權)	<p>·전후 45년에 대한 배상은 정당간의 합의이므로 일본정부를 구속하지 못한다.</p> <p>·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재산청구권의 문제로서 처리하겠다.</p> <p>·6,25전쟁시 일본의 행동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다.</p> <p>·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다.</p> <p>·북한은 IAEA 핵안전협정을 '조기,무조건,완전한 이행'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남북한 상호사찰,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시를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대한국제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p>	<p>국제관행이나 도덕·윤리의 관점도 포함하여 가해자로서의 보상을 요구하였다.</p> <p>·일본은 침략과 점령이라는 불법하에서 생긴 재산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p> <p>·6,25전쟁시 미국의 보급·수리·공격기지역할을 담당하여 북한에게 피해를 입혔다.</p> <p>·핵사찰 문제는 일본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불사용 약속이 필요하며 아울러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과 동시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IAEA에 의한 3차례의 임시사찰을 받았으므로 핵의혹은 충분히 해명되었으리라고 본다.</p> <p>·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이므로 일본은 중개역할을 하기 바란다.</p>
國際問題 (核査察)	<p>·일본은 조총련 적대정책을 쓴 일이없다. 재일조선인의 대우개선에 노력하겠다.</p>	<p>·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인정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지문,형벌을 폐지하라.</p> <p>·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지원해라</p>
諸問題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 재북일본인배우자 고향방문)	<p>·일본은 조총련 적대정책을 쓴 일이없다. 재일조선인의 대우개선에 노력하겠다.</p>	<p>·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인정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지문,형벌을 폐지하라.</p> <p>·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지원해라</p>

제1차회담에서 제8차회담까지 일본·북한 양측은 [표II-3]

과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하였다.

요컨대 제1차회담에서 제8차회담까지의 수교회담을 통해 본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전후처리외교차원에서 가네마루 前자민당 부총재의 虛虛實實전략³³⁾에 따라 시작되어 전개되었으나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미국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즉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에 따른 북한·미국간의 갈등과 대립은 일본의 대북한 정치적 접근을 제약한 것이다. 따라서 국교정상화를 향한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미국간에 진전이 이루어져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이루어질때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김일성의 사망, 일본의 사회당 출신총리의 등장, 북한·미국간의 외교대표부 교환설치합의등으로 인하여 일본·북한간에는 수교교섭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접촉이 본격화되고 있다.³⁴⁾

1994년 8월 1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미국고위회담에서 합의성명이 발표된 후 북한은 대일본 협상을 재개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도 자신의 임기내에 배상형식의 경제원조를 시도할 것임을 시사하였는데, 무라야마 총리의 대북한 수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제131기 임시국회에서 가진 소신표명연설에서도 나타났다.³⁵⁾

‘日本·北韓議員聯盟’도 조만간에 조직될 예정이므로 탈냉전시대의 국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머지않아 국교정상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일본의 대북한경제정책

1990년 9월 가네마루 前자민당 부총재의 방북을 계기로 일본·북한간에 국교정상화교섭이 전개됨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 경제접근도 활기를 띠고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3) 김영호, “북일접근과 북한경제개방의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1회 국제학술재단제출논문(1991.10.28-29).

34) 『毎日新聞』(1994.9.2)은 일본정부가 1994년 8월 23-25일 외무성 관계자를 중국의 북경에 파견하여 비공개로 북한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35) 『조선일보』 1994.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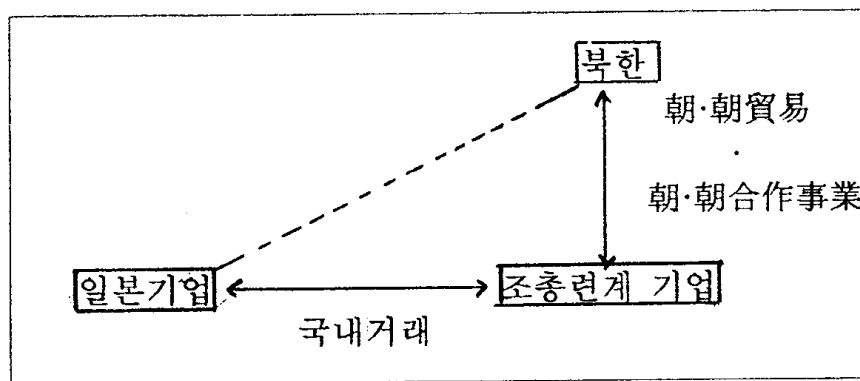
그러나 제1차에서 제8차까지의 수교회담이 북한의 핵의혹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북한간의 경제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대북한 경제접근은 대체로 朝朝貿易이나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대북한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³⁶⁾ 일본기업들의 대북한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으로는 開發輸入과 自由經濟貿易地帶등을 들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自由經濟貿易地帶 즉 경제특구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본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으며,³⁷⁾ 게다가 중국의 東北3省과 시베리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㉑ 조총련계 기업과 朝·朝合作事業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한 경제접근은 朝·朝貿易이나 朝·朝合作事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I-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朝·朝무역이나 朝·朝合作事業을 통한 경제교류는 대북한 간접접근인 것이다.

[그림 II-1]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을 통한 대북한 간접접근



朝·朝合作事業은 1984년 合營法の 제정이후 추진되었는데,

36) 북한은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왔는데, 1991년 9월경에 북한내에 설립된 합작회사는 약 100여개社이고, 그중 약 80%이상이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투자이며 금액은 약 130억円 정도이다.

37)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의 약 1/20 수준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³⁸⁾ 즉 김일성이 1986년의 ‘2.28교시’를 통하여 朝·朝合作事業을 독려함으로서 조총련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의 ‘2.28교시’는 在日商工人들에게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국심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하는 강령적인 교시였다.

김일성의 ‘2.28교시’발표 이후 朝·朝合作事業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그 전개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朝·朝合作事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그 추진을 위한 조직이 정비되었다. 일본에서는 합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合營事業研究會가 발족하였고, 또 북한의 합영사업준비위원회는 朝·朝合作事業을 통일관리하는 朝鮮國際合營總會社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87년 4월 合營事業研究會 제2차 이사회에서는 본 연구회의 명칭을 合營事業推進會로 개칭하고 동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선총련중앙회와 상공인연합회의 지도하에 합작사업추진을 위한 창구를 日本各縣의 조총련 본부와 상공회에 마련하였다. 이로서 朝·朝合作事業을 위한 조직은 확립된 것이다.

둘째, 朝·朝合作事業의 전개에 있어서 합작 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i)조총련계 모회사와 북한의 모회사간의 합작계약, (ii)북한내 대외경제위원회의 합작공업부에 신청, 일본내 대장성·통산성·농림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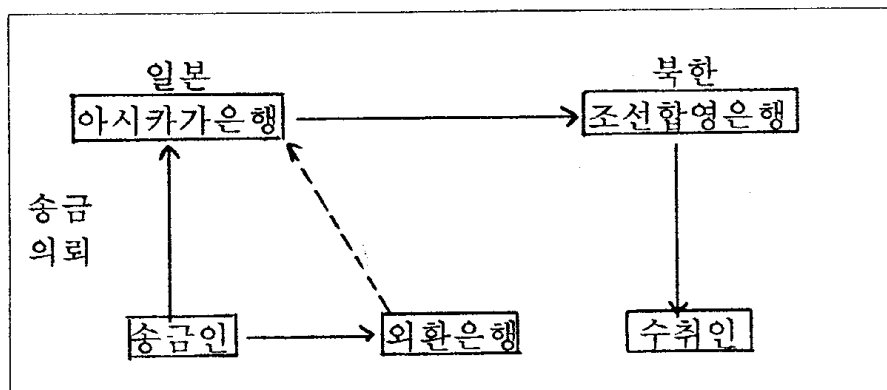
38) 1984년 合營法이 제정되기 전,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在日商工人 모금에 의해 북한에 기증하는 愛國工場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조총련은 조국경제건설에 공헌,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축하사업, 북한건국기념사업, 주총련 결성기념사업이라는 명분하에서 在日商工人들의 모금운동을 벌였고, 그 모금에 의해 설립되는 애국공장을 북한에 기증하는 것이었다. 198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조총련계기업인 全演植이 기증한 평양애국모란(牧丹)피복공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1986년부터 가동된 이 공장은 연간 남성용 고급양복 5종류를 10만벌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은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에 수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舊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39) 김도형, 앞의 논문 참조.

관련부서에 사전설명을 함과 더불어 일본은행에 신고·신청, (iii) 대외경제위원회의 승인, 일본은행·대장성의 내용심사, (iv) 대장성의 신청수리, 북한의 모기업과 조총련계 기업의 합작회사설립과 출자·임원파견.

세째, 조총련의 合營事業推進會는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함께 朝·朝合作事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5:5 출자비율(자본금 20억円, 불입자본금 6억円)로 조선합영은행을 설립했다. 그 설립의 이유는 북한에서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금관리, 현지자금조달선의 관리, 내외결제망의 확충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금융과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면에서 투자환경의 정비는 제일조선인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조선합영은행은 대외결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방은행인 아시카가(足利)은행, 홍콩의 남양상업은행, 중국은행의 런던지점등과 결제망을 맺고 1989년 9월 1일부터 해외송금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아시카가은행은 조총련의 대북친족송금, 수입대금, 합작투자금, 해외예금등 대부분의 외환업무를 대행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내의 모든 외국환 은행들도 아시카가은행을 경유하여 조선합영은행에 송금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2]



네째, 朝·朝合作事業은 주로 2차산업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2차산업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규모가 작고 자금회수가 빠르며 저급기술로 가능한 산업이 주류이다. 朝·朝合作事業이 조총련 기업의 자본, 기술적 우위와 북한측의 저임노동

력, 토지등이 결합한 상호보완적 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투자를 장려하는 철강, 전기, 중화학공업등의 기간산업에는 거의 합작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일본의 기술과 중간재, 자본재가 朝·朝合作事業의 형태를 통하여 북한의 생활필수품과 일부 대일본 수출품에 체화·투입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朝·朝무역이나 朝·朝合作事業을 통하여 북한에 간접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⑤開發輸入

일본·북한간의 경제교류로서 開發輸入추진은 북한의 개방정책과 일본·북한간 국교정상화교섭등 양국관계의 진전속에서 이루어졌다. 開發輸入은 일본기업이 북한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입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開發輸入은 일본측의 투자가 수입전에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역과 투자가 일체된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그와같은 開發輸入을 추진하게 된 것은 북한의 강력한 희망도 있었지만,⁴⁰⁾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투자매력, 북한의 각종 광물, 농수산물 자원에 대한 관심, 대일채무의 변제등으로 사업상의 호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 日朝貿易會는 1991년 4월 공동으로 평양에 開發輸入促進使節團까지 파견하였다.

북한측은 방문한 일본의 開發輸入促進使節團에게 開發輸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표II-4]와 같은 開發輸入사업의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自由經濟貿易地帶

40) 북한이 개발수입을 일본측에 강력하게 희망한 이유는 채무문제로 곤경에 처한 일본·북한 무역을 재활성화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만강지역開發計劃(Tumen River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1991년 3월에 유엔 開發計劃(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4개의 동북아지역협력사업가운데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UNDP조사단(M. Miller외 2명)은 동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두만강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UNDP 동북아 조정관회의에서는 UNDP 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표II-4] 북한측이 제시한 開發輸入사업 가능분야

Hot Coil, 電氣아연, 클린카 및 내화물, 화차, 향료, 호프의 이센설, 다시마·미역, 의류, 산채가공, 목재가공, 완구, 전기·전자관련 일용품, 硫酸設備, 건강식품가공, 硅藻土의 여과재 생산설비, 시멘트, 필름공업, 세라믹공업, 시멘트·타일공업, 포장용기, 석유개발, 漁具·어망의 생산, 活魚운반, 어선, 냉동·냉장설비, 10t까지의 트럭생산, 공작기계의 근대화, 스틸샷시, 석재가공, 보온재공장, 유리섬유의 절연재, 위생도기, 천연스레트 제조공장, 내화벽돌공장, 상데리아 유리공장, 金山開發, 항구확장, 해외건설의 공동진출, 합병·합작, 정기선의 공동운항, 조선공업, 증소형 엔진공장, 두만강 하구지대의 개발, 기타 일본측 제안사항

(출처) 김도형, “日本の 對北韓經濟政策.”

UNDP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만강 지역은 그 지리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보완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개발될 경우([표II-5] 참조), 향후 홍콩이나 싱가포르, 로테르담에 버금가는 세계적 운송거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¹⁾

두만강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살펴 보면, 두만강으로 항행할 경우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각항구까지 최단거리로

41) 통일원,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 추진현황』 (1994년 9월), pp. 24-25. 및 pp. 43-59. 참조

운송이 가능하고 게다가 중국내륙지방과 북한의 나진, 청진, 한국의 동해안 공업지대 및 부산, 일본의 니이가타, 오타루, 아키타등과 교역이 가능하다. 나아가 두만강지역의 교통망이 정비될 경우는 일본과 한반도의 동해안에서 시베리아철도를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최단거리 확보가 가능한데, 중국의 대련 경유시보다 1,400km, 블라디보스톡, 나훗카 경유시보다 1,000km 단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잠재력을 살펴보면,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의 주요시장들과 러시아, 북한 및 몽골로부터의 노동 및 천연자원과 같은 유리한 공급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울러 한국, 일본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자본,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발전과 대규모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 유럽지역과는 대륙횡단철도(TSR)를 통한 효과적인 연계수송이 가능하며, 항만을 통한 해상운송 및 중계의 중심지(hub)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5]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보완적 요소

국 가	장 점	단 점
일 본	자본축적, 선진기술, 즉시 이용가능한 양질의 풍부한 장비, 선도적인 산업제품, 관리경험	에너지와 산업자원의 심각한 부족, 축산을 위한 곡물의 부족과 몇몇 농업제품의 부족, 노동력의 부족
러시아 (극동)	풍부한 산림과 비철금속, 광석, 해양자원, 원유, 가스, 석탄 및(비료와 같은) 중화학제품들	농산물과 경공업품들의 심각한 부족, 노동과 자본의 부족, 낙후된 산업장비와 관리경험
중 국 (동북지역)	유리한 농업조건, 다양한 농업제품들(옥수수, 콩, 육류, 과일과 같은), 섬유산업 제품들, 원유, 석탄, 건축재료, 한약재 및 풍부한 노동력	자본, 선진장비, 기술 및 관리경험부족, 특정 광물자원의 부족, 제한적인 하부구조
북 한	풍부한 광물자원, 금속, 광식 및 단순가공품, 해산물, 몇몇 공산품들 및 풍부한 노동력	자금부족, 농업, 경공업품 및 기타 일용품의 부족, 장비 및 기술의 낙후

국 가	장 점	단 점
한 국	잉여자금, 선진기술 및 이용가능한 장비, 선도적인 산업제품	에너지와 산업자원의 부족, 축산을 위한 곡물부족, 노동력 부족
몽 골	풍부한 축산품 및 광물, 광석제품들(특히 형석)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직접 통신이 가능한 편리한 방법이 없음, 자금, 기술, 장비, 농산품 및 경공업제품 부족

(출처) 통일원, 『豆滿江地域開發計劃推進現況』(1994년 9월), pp. 43-44.

그와 같은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의 개발대상지역은 나진-훈춘-포시에트로 연결되는 小三角地域과 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大三角地域으로 구분된다. ([그림 II-3] 참조)

그리고 1992년 2월 27-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PMC)’ 회의에서는 개발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두만강경제구역(Tumen River Economic Zone: TREZ)이라고 불리우는 소삼각지역과 두만강경제개발지구(Tumen Economic Development Area: TEDA)라고 명명되는 大三角地域, 그리고 TEDA의 배후지를 포함하는 광역의 동북아 경제개발지구(North 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Area: NEARDA)가 제시되었다.([표 II-6] 참조)⁴²⁾

두만강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1년 8월 29-31일 중국 長春에서 개최된 제2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에서 나진·선봉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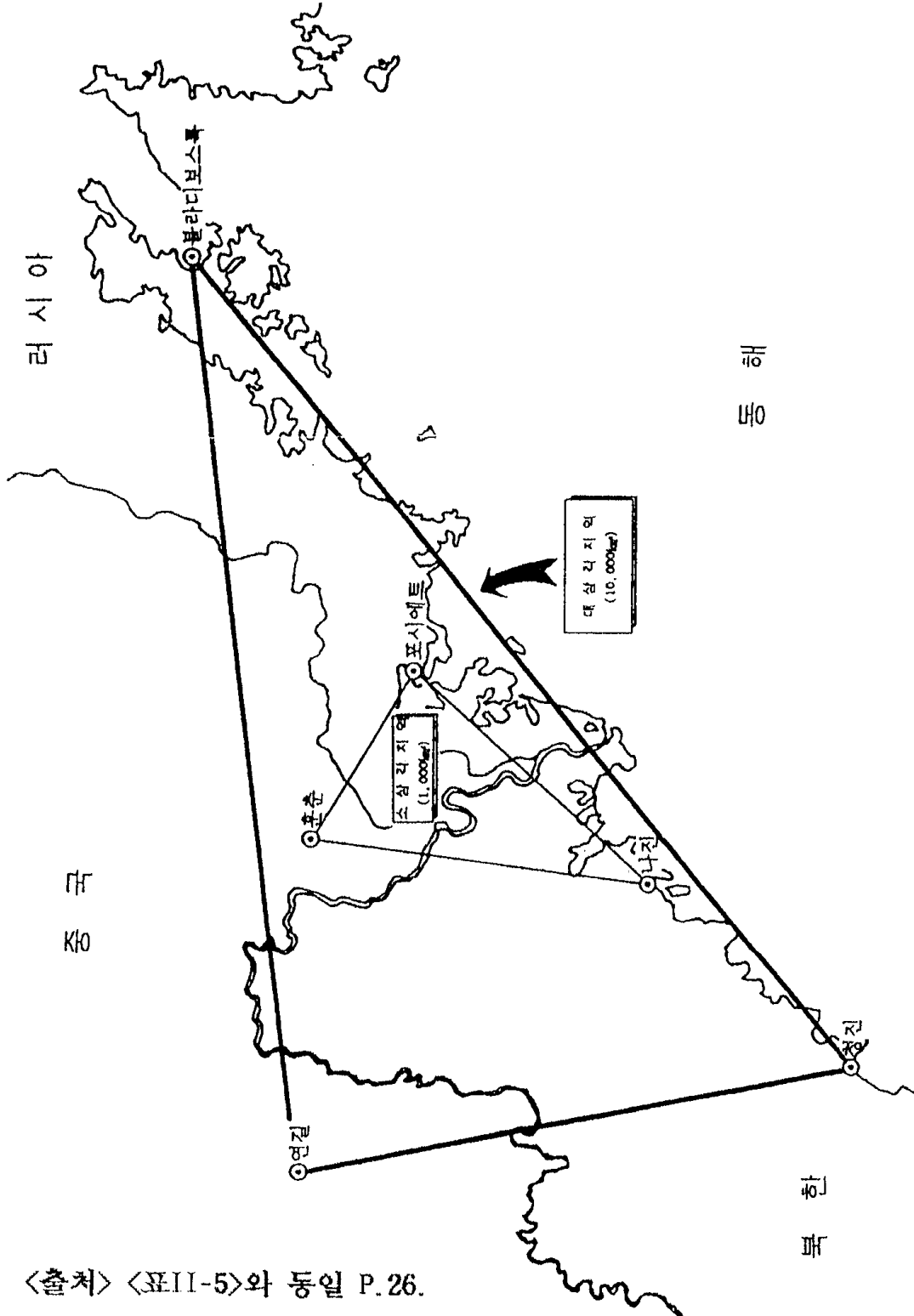
첫째, 선봉은 동북아 개발에 중요하고 유럽을 향한 통로이다.

둘째, 러시아 및 중국 동북부지역이 對서방무역확대를 우

42) 위의 책, p. 61.

하여 동해로 진출할 경우, 선봉을 경유하는 통로가 가장 경제적이고 최단거리 루트(route)이다. 훈춘-대련-니이가타의 철도와 해로는 약 2,000Km이나 선봉을 경유할 때는 불과 590Km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II-3] TRADP 개발대상지역도



[표 II-6] 두만강 지역개발의 대상지역의 구분과 범위

구분	범위
1. 두만강경제지대 (Tumen River Economic Zone: TREZ)	나진(북한), 훈춘(중국), 포시에트(러시아)로 연결되는 小三角地域
2. 두만강경제개발지구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	청진(북한), 연길(중국), 블라디보스톡(러시아)으로 연결되는 大三角地域
3. 동북아 경제개발지구 (North 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Area: NEARDA)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따라 천연자원의 공급, 산업의 유치, 하부구조의 개선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지역 전역

셋째, 기존의 철도와 항만시설의 이용으로 추가시설 투자에 따른 회임기간이 짧다.

UNDP조사단도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즉 UNDP조사단은 선봉지역은 지리적조건, 기존항구 및 철로·도로의 이용가능등으로 陸海連繫輸送의 개발 잠재력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였고, 아울러 선봉지역의 경제무역지대 개발은 화물 중계조건의 향상 및 제조업 분야의 개발 가능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진·선봉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북한의 金政宇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991년 9월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外資도입에 따른 개발·수출을 도모할 것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그후 북한은 1992년 4월 28일-5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포럼(North east Asia Economic Forum)에서 UNDP등이 제시한 바 있는 기존의 두만강 지역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나진·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실태와 전망에 대하여'라는 회의 자료를 통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표 II-7] 참조)⁴³⁾ 즉

43) 위의 책, pp. 171-172 참조.

북한은 나진을 섬유·의복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생산과 배후지(hinterland),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계무역항으로 개발하고, 선봉을 화학공업 및 전자 공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힌것이다.

[표 II-7]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과 관리체계

개발계획	주요내용
항만확충	·나진항을 연3,000만톤 능력으로, 청진항을 2,000만톤 규모로 늘려 이 지역 총하역능력을 5,000만톤으로 확충. ·장기적으로 선봉·웅상지역의 하역능력을 5,000만톤으로 확충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1억톤의 능력을 갖출 것임.
철도확장계획	·1단계로 회령-학송사이 168km 전기화, 명호-훈용사이 126.5km의 복선화등으로 수송능력을 연2,000만톤으로 함. ·2단계로 고무산-훈용사이 169km와 반죽-명호의 71km를 복선화하여 수송능력을 5,000만톤으로 확장.
고속도로 건설계획	·총연장 306km로서 도로폭 24m로 건설. ·기존의 도로망과 같은 코스로 연결하게 됨.
관리체계	주요내용
2원적 관리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에 각각 심의기구를 둠. ·중앙에서는 투자규모가 큰 사업만 심의하고, 그밖의 것은 지방심의기구에 위임함.

그리고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1993년 3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이 개발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켜, 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계무역센터 및 가공무역의 수출기지로 조성해 갈 것임을 명백히 했다.⁴⁴⁾ 즉 북한은 나진·선봉이 地經學的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및 세계 경제발전 추세에 상응하는 발달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여 나진·선봉지구에 국제중계무역기지조성, 가공수출을 우선으로 하는 제조업기지의 육성, 국제적인 관광센터의 조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표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1993년 3월).

II-8]참조).

[표 II-8]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그 기능

(1) 동북아시아를 비롯 외국의 화물을 대량중계하는 국제중계무역기지로 조성
·공항, 항만, 철도, 도로등 교통망을 정비·확장하고 교통수단이 발달된 일괄수송시스템을 확립 ·중국과 러시아연방을 비롯 외국과의 합리적인 국제교통망을 형성해 국제화물을 적시에 안전하게 중계함 ·자유무역항의 기능을 높여 동지대를 통과하는 화물에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등 화물중계수송에 있어 최대의 편의를 보장함
(2) 가공수출을 우선으로 하는 제조업기지로 전환
·경공업을 기본으로 하고 중공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을 도모 ·외국의 원료, 자재, 부품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가공수출산업기지로 육성 ·첨단기술산업을 비롯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기지로 육성
(3) 국제적인 관광센터 조성
·동지대내에 인접한 백두산, 칠보산지역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관광센터로 육성

북한은 [표II-8]과 같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두만강지역 인접 각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그 개발전략은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전망과 투자능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구하려 하였다.

i) 제 1단계 (1993-1995)

제1단계는 기존의 철도, 도로, 항만등 사회 간접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고 국제화물 중계 수송기지로서의 역할을 높여가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제 1단계에서는 인접 각국과 도로, 철도의 기본 간선을 연결하여 단일의 중계 수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울러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등을 개조하고 확장하여 자유무역항인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의 화물 취급 능력을 2천만톤 이상 중

대한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는 나진 지구에 투자를 집중하여 자유무역지대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ii) 제2단계 (1996-2000)

제2단계는 자유경제무역 지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동북아시아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사회간접 시설을 기반으로 국제중계 화물량을 대량취급하고, 항만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5천만톤 규모의 화물 취급 능력을 조성한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정비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가공수출산업기지의 건설 공사를 대대적으로 행한다. 아울러 산업기지를 지구별로 전문화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수출에 중점을 두는 경제 지구를 형성하면서 국제적인 관광센터로 개발한다.

iii) 제3단계 (2001-2010)

제3단계는 21세기에 상응하는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국제교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제3단계에서는 항만처리 능력을 계속 확대하여 1억톤 이상의 국제화물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서비스, 관광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요컨대 제3단계에서는 21세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시설, 서비스등을 고도로 현대화, 기능화시켜 국제교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 및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하여 일본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은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읍서버로 참석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입장에 있지만,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으며, 中國의 東北3省과 시베리아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은 환동해경제권 구상에서 북한의 위상이 교류·협력의 가능성면에서 가장 낮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i) 일본의 니이가타와 북한의 청진을 연결하는 루트를 통하여 중국대륙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북한을 중국 대륙 및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아울러 (ii) ASEAN 등에서의 임금비용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저급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전략적 의미

일본은 1950, 60년대에 전후처리 외교를 하였지만, 對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틀내에서 한국 편향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합법적인 정부가 아닌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대북한접근에 있어서 국가간의 외교채널이 아닌 정당이나 민간단체등을 활용하여야 했다. 말하자면, 일본은 냉전구조의 제약적인 틀내에서 일본 사회당이나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등을 대북한 접촉 창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對北韓政策은 대체로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韓美日협조체제의 틀내에서 政經分離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국제환경의 변화, 한·일관계, 북한의 경제사정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국제환경의 데탕트시기에 주로 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전개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북한 접근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시기는 일본·북한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의 전환에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

본으로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북한 접근을 할 것이다. 즉 일본은 냉전시대의 정경분리전략에서 탈냉전시대의 政經連繫戰略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경연계전략은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틀내에서 전개될 것이다.

일본·북한의 접근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대국화 추구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첫째, 일본에 있어서 북한은 유일한 비수교 국가이다. 따라서 수교교섭을 위한 북한·일본의 접근은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전후 총결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0세기 역사적 유산의 처리는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일 것이다. 최근 일본정계에서 신보수세력의 부상은 그러한 역사적 유산의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은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지역적 차원의 전략에 따라 대북한 접근을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꾀할 수 있고, 아울러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역할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일본은 대북한접근을 통하여 북한을 대륙진출 및 일본주도의 동북아 경제권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이 對북한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 강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곧 미국과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글로벌 차원에서 도모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일본이 북한 핵문제 대응에 있어서 韓美日공조체제를 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따를 것을 수차 천명했는데, 이는 일본이 정치대국화를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본은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에 따라 유엔활동의 틀 내에서 아울러 미국과의 책임 및 역할 분담차원에서 對북한접근을 하는 것이다.

III. 北韓의 對日本政策

1. 北韓 對外政策의 목표와 전략구도

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는 東西대결속에서 북한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남조선을 해방시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것이다.⁴⁵⁾ 북한은 그와 같은 대외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설정하였고, 대외활동의 원칙 및 기본 이념으로서 3대원칙을 설정하였다. ([표 III-1] 참조).

[표 III-1] 대외정책의 기본노선과 기본이념

대외정책의 기본노선	'3대혁명역량'의 강화	1.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역량 강화 2.남한내의 혁명역량 강화 3.국제적 혁명지원역량 강화
대외활동의 원칙 및 기본이념	3대원칙	1.자주 2.친선 3.평화

1964년 2월 북한 노동당 제4기 8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3대 혁명역량'의 강화는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역량, 남한내의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3대 혁명역량'의 강화는 냉전시대의 북한 대외정책의 기초를 이루었다.⁴⁶⁾ 예컨대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는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치적 역량강화는 조선 노동당을 강화하여 모든 인민대중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경제적 역량강화는 각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사적 역량강

45) 북한의 정치발전과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Yang-Ho Hong, "The Impact of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 on Foreign Policy in North Korea,"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Georgia for the Degree of Master, 1986 참조할 것.

46)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68), 박재규, 『북한정치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1984), pp. 103-104.

화는 4대 군사노선 즉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남한내의 혁명역량 강화는 남한내에 親共產勢力을 확대시켜 '남조선 혁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숙된 여건을 조성해 가는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혁명지원 역량의 강화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는데 해외지원 세력을 확대시키는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러한 국제적 혁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련, 중국등을 비롯한 우호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비적대적 국가들과는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해외지역에 親北反韓단체를 조직하여 反帝 反美투쟁과 對韓지원세력의 약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주, 친선, 평화의 3대원칙이 대외정책의 목표 및 기본 정책노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외활동의 원칙으로서 제시되었다.⁴⁷⁾ 자주원칙은 1960년대 초 중국과 소련의 분쟁속에서 확립되었는데,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중·소 분쟁속에서의 자신의 입장과 저항적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원칙을 발전시켰는데, 이 자주원칙을 근거로 남한을 자주성 없는 미국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과시하여 외세인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논거로도 사용하였다.

친선의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제 3세계국가,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들까지도 포함한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맺는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국제적 혁명지원 역량의 강화 및 남한지원 세력의 약화를 위하여 친선을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평화의 원칙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외국군대 및 군사기지의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그 전략적 목적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전술 핵무기의 철수를 실현시키는데 있다. 더욱이 북한의 평화원칙은 폭력적 수단이라도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것

47) 자주, 친선, 평화의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이은호, "북한의 대외정책," 이은호·김영재 공편, 『북한의 정치와 사회』 (서울프레드, 1994) 참조.

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을 갖고 있다.⁴⁸⁾ 북한은 평화의 원칙이라는 명분하에서 국제적 혁명지원 역량의 강화 및 한국내의 혁명역량의 강화를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 친선, 평화의 3대원칙 아래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체제안정 및 남한의 약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한 후,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국내 지하당 조직의 지도하에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⁴⁹⁾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몰타 미·소 수뇌회담을 계기로 냉전이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소련마저 해체되는 대지각변동이 일어나자 북한의 대외정책도 변하게 되었다.

전후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탈 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및 대남 정책은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은 (1)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침하 (2)대외적으로는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한·소수교(1990. 9) 및 한·중 수교(1992. 8)등에 의한 국제적 고립의 심화 때문에 3대혁명역량이 약화되었으므로, 종래의 세계적화 정책 및 적극적인 '남조선 혁명' 정책 추구에서 소극적인 체제 방어노선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체제와해를 피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공존구도하에서 (1)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제한적인 경제교류 및 인적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2)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철저히 관철하며, (3) 민족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전선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은 그 대외정책을 국제

48)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p. 406.

49) 허문녕, "1994년 북한 대남정책의 현황과 변화전망," 『統一問題研究』 제6권 1호 (平和問題研究所, 1994 여름).

적 고립과 경제적 침하로 인하여 체제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하게 되었고, 아울러 대남 정책은 '남조선 혁명'의 강경노선에서 '남북한 공존'의 온건노선으로 전환되면서, 통일전선전략의 지속적인 추구하고 더불어 체제유지를 위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시키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의 對日本政策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관계의 제약속에서 비난·적대적정책과 유화·접근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전개되었다. 그와같은 북한의 對일본정책에 대하여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의 북한의 對日本政策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냉전시대 북한의 對日本政策

전후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으로 양분·대립되었다.

북한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간의 대립을 반동세력과 민주세력간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일본을 미국제국주의에 종속된 반동세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적대정책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후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북한의 대일본 적대정책은 유화·접근 정책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즉 냉전시대에 있어서도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한미일 관계에 의한 제약적인 틀로 인하여 한계는 있었지만,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난·적대적 정책과 유화·접근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적대정책기, 제 1차 관계개선시도기, 냉각기, 제 2차 관계개선 시도기, 정체기, 냉각기등으로 구분되고 있다.⁵⁰⁾

① 세계 적화 전략과 대일본 적대 정책기 (1948-53)

50) 허문녕, "북한의 대일본정책," 『美蘇研究』 제7집.

미·소를 두축으로 하는 동서대립속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어 가자, 북한은 세계공산화를 위한 反帝反美투쟁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따라서 북한은 공산진영의 세계적화전략에 따르면서 그 전략의 틀내에서 對日本政策을 추구하게 되었다.

북한은 일본을 미국의 사주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제국주의의 주구로 인식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에 대한 경계를 對日本政策의 기조로 천명하였다. 즉 1948년 9월 김일성에 의해 발표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의 政綱』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에 대한 경계와 함께 對일본 적대정책이 우선적으로 전개될 것임이 천명된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세계적화전략에 따른 적대정책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일본 적대정책의 전개속에서도 국제혁명지원 역량의 강화를 위한 인민외교는 전개된 것이다. 북한은 일본 정부를 제국주의 또는 반동정권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항하는 일본인민을 동지로 인식하여 양국민민의 우호와 연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② 남일의 성명과 제 1차 관계 개선 시도기 (1954-60)

1953년 3월 소련이 스탈린이 사망한뒤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평화공존 노선이 주창되었다. 그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 냉전적 상황으로 부터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또,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하였는데, 대외정책은 대미 의존 정책으로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요컨대,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와 일본에서의 대공산권 유화적 정권의 등장은 북한의 대일본 접근에 유리한 환경조성이었다.

북한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1955년 2월의 남일외교부장 성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남일 외교부장은 성명발표를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면서도 일본정부와 무역, 문화관계 및 관계정상화를 향한 북한, 일본관계의

발전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의사표시한 것이다.

북한의 대일본관계 개선 의사는 김일성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표명되었다.⁵¹⁾ 그와같은 북한의 대일본접근은 (i) 1956년 3월 日朝貿易會의 결성과 더불어 중국 대련경유의 무역활동이 개시되도록 하였고, 국제적 혁명 지원 역량강화의 차원에서는 (ii) 재일교포 포섭을 통한 일본국내의 거점 확보 (iii) 일본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한 인민외교의 적극적인 전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③ 韓日國交正常화와 냉각기 (1961-70)

일본 국회에서 美日新安保條約이 비준되고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를 향한 진전의 기미를 나타내자, 북한은 일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일본에 비판을 강하게 전개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련과 북한의 적화전략에 대항하는 美日安全保障체제가 1960년 美日新安保條約의 비준으로 계속해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1960년 4.19의거로 反日-->排日노선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됨에 따라 韓·日關係는 국교정상화를 향한 관계개선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일본 외상 코사카 젤타로(小坂善太郎)가 1960년 9월 일본관료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고, 나아가 동년 10월부터 한·일 회담이 전개된 것이다.

1960년 10월부터 재개된 한·일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1962년 10월과 11월의 회담에서 일본의 오히라 외상과 한국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1965년 6월에 이르러 시이나 외상과 이동원 외무장관사이에 韓日

51) 김일성은 1956년 11월 21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1957년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도 일본과의 정상적 관계수립에 노력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朝鮮中央年鑑, 1957年版, p. 72 및 『朝鮮中央年鑑, 1958年版, p. 36. 참조.

基本條約이 조인되게 되었다.

美日安全保障의 지속과 한일국교정상화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3대 혁명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상당한 충격속에서 대일본 비난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북한관계는 정체기에 빠지게 되었고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비판·적대정책으로 전개되었다.

④ 국제환경의 데탕트적 상황과 제2차 관계개선 시도기 (1971-74)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환경은 냉전적 상황에서 데탕트적 상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소의 데탕트 정책 추구하고 미국·중국간의 관계개선, 일본·중국간의 국교정상화로 인하여 국제환경은 데탕트적 상황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따라서 동부아지역정세도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은 그와 같은 국제환경의 데탕트적 분위기속에서 대일본접근을 다시 재개하였다. 즉 북한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한·일 국교수립에 대한 입장을 다소 완화시키면서 대일관계 개선을 시도하였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경제교류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였다.

북한의 대일본접근의 전략적 목적을 살펴보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일본의 대북한 적대정책을 남북한 등거리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1971년 9월 朝日新聞의 고토(後藤基夫)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 북한·일본간의 우호적 관계와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일본정부는 대북한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동년 11월 일본에서 일조우호촉진연맹이 결성되어 일본·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정당수준이 정치적 교류가 시작된것을 기회로 삼아서 일본의 한국 편향정책을 남북한 등거리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김일성의 그와 같은 전략적 의도는 1973년 9월 毎日新聞기자와의 회견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다. 그 회견에서 김일성은 일본 정부가 북한과 선린관계를 가지려면 한국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남한과 북한에

어떠한 침략적 성격도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일본·북한 관계개선의 조짐들이 보임에 따라 김일성은 한·일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한층 한국중심으로 전개되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본에게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대일본접근은 북한 경제의 대일본 종속심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북한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하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⁵²⁾

북한은 1971년부터 제2차 6개년 계획을 시작하였으므로 일본으로부터의 기계·설비도입등 경제교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표 II-2]에 나타난 일본·북한간의 경제교류 상황을 보면, 1972년부터 북한이 대일본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북한간의 무역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1971년의 대일수입액은 2890만 7천달러, 북한·일본 전체의 무역규모는 5896만 7천달러에 불과하였지만, 1974년의 대일본수입액은 2억 5191만 4천달러, 북한·일본전체의 무역규모는 3억 6073만 8천달러로 급증한 것이다.

요컨대, 1970년대 국제환경의 데탕트적 분위기속에서 북한의 대일본정치적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일본의 경제교류도 비약적인 양적 증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⑤ 북한의 대일무역 적자누증과 정체기 (1975-78)

북한의 대일무역적자 누증에 따른 무역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게다가 북한의 테러리즘으로 인하여 북한과 미국관계가 긴장됨에 따라 북한의 대일본접근은 정체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먼저 북한의 대일무역적자 누증과 무역대금 결제의 지연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북한·일본의 경제교류는 그 증대와 더불어 1972년부터 북한의 대일무역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와같이 계속해서 누증되는 대일무역적자로 인하여 대일무역 대금결제의 지연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52) 1972년 10월에 朝鮮國際貿易促進會는 북한무역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것이다.

북한측의 대일무역 대금결제는 1974년부터 지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결과 신장일로 있는 북한·일본간의 경제교류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정체현상을 나타내었고([표II-2]참조), 일본이 채무변제 독촉속에 일본·북한간에는 대일무역 대금결제의 연장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일 무역대금 결제의 지연에 따른 후유증으로 북한·일본간의 경제교류는 朝·朝貿易형태로 전개되는 질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어서 북한의 테러행위에 의한 대일본 정치적 접근의 정체상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1976년 8월 판문점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나서 북한과 미국관계를 긴장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켰는데, 그러한 북한과 한·미관계의 긴장 상태로 인하여 북한의 대일본 정치적 접근은 정체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요컨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대일본무역 대금결제의 지연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등의 테러리즘때문에 대일본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⑥ 국제환경의 신냉전적 상황으로의 전환과 냉각기 (1979-1988)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소련의 군비증강 및 핵전력 배치등으로 인하여 국제정세는 냉전적 상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소련은 세계전략차원에서 1978년부터 극동지역에도 중거리탄도 미사일 IRBM SS-20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델타급의 SSBN을 배치하였고, 1979년부터는 백파이어 전략폭격기를 배치하였다.

소련은 그와 같은 두드러진 군비증강을 피하는 가운데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동서관계는 일시에 신냉전적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국제정세의 신냉전적 상황으로의 전환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적 수준(global level)에서 해상전략을 세우게 하였고, 그 해상전략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책임분담(burden

sharing)차원에서 1000해리 SEA LANE방위를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강화시켰다.

그 반면 북한의 대일본접근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국제정세의 냉전적 상황과 그에 따른 한·미·일 3각동맹 체제의 강화로 인하여 북한의 대일본접근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게다가 북한의 대일본 접근은 1983년의 버마 랑군폭파사건과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남북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아울러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가 거듭 취해짐에 따라 거의 할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북한은 1983년의 랑군 폭파사건이후 약 1년동안 일본 정부의 대북한제재조치 때문에 정치적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해제됨에 따라 다시 대일본접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대북한제재조치를 재차 발동하게 됨에 따라 대일본정치적 접근을 중지하여야만 했다.

북한의 대일본경제적 접근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즉 북한은 대일무역대금 결제의 지연과 채무상환 문제때문에 신뢰도를 상당히 상실하게 되었고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추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민간채널을 통하여 대일본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일본업계의 북한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예컨대 북한은 1984년 9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合營法을 제정하였고, 또 일본 재계인사들을 초청하여 어업분야, 식량및 의류분야, 합성고무분야, 금속 및 비철금속 채광분야, 제련소 재건등의 철광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일본 업계에서는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않았고 다만 在日·在美親北韓系 기업인들만이 응하였다. 북한의 일본 재계 인사초청을 통한 기술제휴·합작사업 제안은 가와가츠텐(川勝傳) 南海電鐵회장에게 비망록을 통한 제의가 대표적인 예였다. 북한은 가와가츠 南海電鐵 회장에게 [표 III-2]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다.⁵³⁾

53) Tomai Moto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표 III-2] 日本 川勝傳 南海電鐵회장과 조선아시아무역
촉진회 회장간의 기술제휴·합작사업에 관한 비망록

협력형태	협 력 내 용
기술협력	① 간척지의 건설, 해상매립지의 활주로·공장 건설, 해양자원 개발기술제공 ② 정어리, 명태의 대량가공기술, 근해양식기술 제공 ③ 남성복등 기성복 생산과 메리야스 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제공 ④ 잠관목과 벗집을 이용한 종이생산기술설비 ⑤ 분사구, 연료펌프 생산공장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문헌과 일부전문설비 ⑥ 제철소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문헌과 일부 공정설비 납입과 동부문의 기술 ⑦ 평양-남포간 철도근대화를 위해 현지 조사후 필요기술 일부 납입
합 작	① 일본측이 어선, 어구, 연료, 기술자를 보장, 조선 측이 어장, 노동력, 기타자재 공급으로 조선의 동 서해에서 어획한 도미, 게, 복어, 광어등의 대일수출 합작회사 조직운영 ② 일본측은 기술·설비를 보장, 조선측은 양식 장, 노동력, 원료를 공급하여 다시마 양식장을 건 설하고, 이를 종합가공처리하는 합작회사 조직· 운영 ③ 연산 1만톤 능력의 토마토쥬스공장 합작 ④ 1만톤 능력의 엽연초공장 합작 ⑤ 기존의 기계공장을 근대화, 研磨盤과 공구셋트 생산공장의 합작 ⑥ 연산 1만톤 능력의 아연 加壓 주조공장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작 ⑦ 원산, 금강산에 각각 1,00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호텔건설, 관광부문의 합작
대일발주	① 납·아연 동시제련설비 ② 클로로플렌 합성고무공장설비 ③ 용광로 설비근대화 ④ 규소강판·스테인레스 강판 생산설비 ⑤ 컬러TV 수상관 생산공장설비

<출처> 김도형, “日本の 대북한경제정책.”

요컨대, 1980년대에 있어서 북한의 대일본접근은 신냉전적 상황으로의 전환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는 북한의 테러행위와 그에 대한 일본의 대북한제재조치 북한의 외환사정의 악화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 탈냉전시대 북한의 대 일본정책

국제환경은 1987년 12월의 INF조약체결등으로 신냉전적 상황에서 대탕트적 상황으로 바뀌고, 게다가 1989년의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사태속에서 몰타 마·소 수뇌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탈냉전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일본·북한관계는 냉각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1989년 3월 30일 일본의 다케시다수상이 衆議員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표명하자 북한도 당시 방북중에 있었던 다나베(田邊誠) 사회당서기장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을 제차 시도할 것임을 나타내었다.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침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일본접근을 모색하였는데, 마침내 1990년 9월 일본의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방북을 계기로 국교정상화를 향한 대일본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김일성은 가네마루가 인솔한 자민-사회당의 방북단에게 국교정상화를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계기로 북한의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에 의한 3당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나아가 예비회담을 비롯하여 제1차부터 제8차까지의 8차례에 걸친 수교회담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조기수교를 희망하여 수교회담과정에서 '선수교 후타결'을 주장하였고 또 일본측이 제시한 요구사항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일본이 제3차 회담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대화의 촉진, IAEA에 의한 핵사찰 허용가운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충족시켰고, IAEA에 의한 임시 핵사찰을 수용하였으며 남북한 대화에도 유연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 북한은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절충안으로 군사경계선 이북의 북측관할을 제시하였고, 보상 및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로서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포괄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북한이 일본측의 요구에 그와 같은 양보와 수용의 자세를 보인것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실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전략적 목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등 정치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아울러 일본카드를 대한국 교섭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경제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획득할 수 있고 또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진출을 비롯하여 경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침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하여 '선수교 후타결'의 전략에 따라 대일본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북한간의 수교회담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만 개진된채,([표II-3] 참조)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노선에 따라 1992년 5월의 제7차 회담에서 북한의 IAEA사찰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사찰까지 요구하였고 1992년 11월 제8차 회담에서도 남북한 상호사찰을 재차 강조하였다.

일본·북한 수교회담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8차 회담도중에 결렬되어 중단되어진 채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의 대일본접근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일본접근을 재개할

경우 논의될 현안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 핵문제

일본은 일본·북한 수교교섭에서 북한에게 IAEA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였고, 나아가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 및 이에 필요한 경제지원문제도 수교교섭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자신의 핵문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핵사찰 수용요구를 거부하였다. 즉 북한은 1994년 9월 23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단계 제2차 미국·북한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와 대미관계개선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일본의 록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공장과 고속증식로 몬주의 시험가동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 및 도입노력을 비판하였다.⁵⁴⁾

북한의 핵문제는 일본·북한의 수교교섭에서 계속해서 거론될 현안문제이므로, 북한은 국교정상화를 향한 대일본접근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핵문제의 투명성보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② 일본의 대북한인식과 군사위협론

일본의 대북한인식은 안보위협국이다. 즉 1994년도 『방위백서』에서는 러시아보다 북한을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다마자와 도쿠이치로 방위청장관은

54) 일본은 플루토늄을 다량생산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및 재처리 시설을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특히 도카이무라의 시설이 완성될 경우 일본은 고속증식로와 새처리시설을 포함한 플루토늄 리사이클(recycle) 사업을 완벽하게 갖춘 세계유일의 국가가 된다. 그와 같은 일본의 핵능력은 곧 핵무장 잠재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 1994년 9월 10일자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아지에서는 일본은 앞으로 10년후면 7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4년 8월 30일 한국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함으로서 일본등 주변국들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이 존재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⁵⁵⁾ 특히 일본이 위협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노동 1호 미사일이다.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은 사정거리 1,000km의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으로서 일본의 서부지방을 비롯한 일본지역 반이상을 사정권내에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구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 1호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⁶⁾ 최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노동 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대응책으로서 戰域미사일 방위를 계획하고 있다.

③ 보상 및 배상문제

일본은 일본·북한관계가 국제법상의 교전관계가 아니므로 보상 및 배상이란 개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한일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내에서 진행시킨다는 기본입장에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재산청구권의 문제로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식민지시대 일본·북한관계가 교전상태에 있었으므로 식민지보상과 전쟁배상을 해줄 것을 주장하다가 제6차 회담부터 양보하여 가해자로서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과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일본과의 견해차를 좁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5) 『세계일보』 1994. 8. 31.

56) 배정호, “국가전략과 과학기술력-일본의 발전전략과 과학기술력-,”

④ 과거사문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는 불행한 과거로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한일합방조약등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과 사죄표명을 일본의 대북한 관계 개선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⑤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일본인 처문제

일본·북한간에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문제와 일본인 처문제도 관계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수교회담에서 일본에게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인정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휴대, 지문등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으로서는 朝·朝무역과 朝·朝合作事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제2차 회담에서 일본인 처문제와 관련하여 수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일본인 처의 일본왕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일본인 처문제와 수교교섭진전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3. 북한의 對日本政策의 전략적 의미

가. 냉전시대 북한의 對日本政策의 전략적 의미

냉전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북한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혁명역량 즉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역량강화, 남한내의 혁명역량강화, 국제적 혁명지원역량의 강화를 기본정책노선으로 추구하였다. 북한의 對日本政策도 기본적으로는 3대혁명역량의 정책

노선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국제환경,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韓·日關係, 북한의 내부사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비난·적대적 정책과 유화·접근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전개되었지만, 그 기초는 일본의 한국중시정책을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전환시켜 한국의 해외지원세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요컨대 북한은 대일본접근을 통하여 (i)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혁명역량을 경제적 차원에서 증강시키고 (ii) 대외적으로는 한미일간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의 이완에 따른 한국의 지원세력을 약화시킴으로서 북한의 국제혁명지원역량의 상대적 강화를 전략적으로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나. 탈냉전시대 북한의 對日本政策의 전략적 의미

북한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탈냉전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어려울 정도로 대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게 되었고 국교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다.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향한 대일본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① 정치적 요인

북한은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국이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수립을 하였고 소련,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와 같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대일본접근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대일본접근을 통하여 대미관계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중국, 소련의 대북한 지원을 유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체제붕괴의 저지책의 일환으로 대외관계 개

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경제적 요인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과 제3차 7개년 계획을 거의 실패하였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군사비의 부담과 경제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게다가 소련으로부터의 사실상의 경제원조의 중단, 중국의 원조능력의 한계등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기반인 경제력의 침하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소련을 몰락케한 주요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북한경제의 침하 역시 북한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그와 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수호를 위해 대일본경제접근에 적극적이다. 북한의 대외무역과 대외자본거래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일본의 북한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제공과 경제협력은 북한의 경제회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난 및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일본접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일본·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i) 정치적 차원에서는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ii) 경제적 차원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와해를 막는 것이었다.

IV. 일본·북한의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본·북한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북한간의 관계도 개선되어 한반도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는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 또

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경제적 요인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과 제3차 7개년 계획을 거의 실패하였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군사비의 부담과 경제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게다가 소련으로부터의 사실상의 경제원조의 중단, 중국의 원조능력의 한계등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기반인 경제력의 침하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소련을 몰락케한 주요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북한경제의 침하 역시 북한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그와 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수호를 위해 대일본경제접근에 적극적이다. 북한의 대외무역과 대외자본거래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일본의 북한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제공과 경제협력은 북한의 경제회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난 및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일본접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對日本政策은 일본·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i) 정치적 차원에서는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ii) 경제적 차원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와해를 막는 것이었다.

IV. 일본·북한의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본·북한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북한간의 관계도 개선되어 한반도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는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 또

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1. 긍정적 영향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은 양국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국교정상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일본·북한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일본·북한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경제협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북한이 그 보상금과 경제협력자금을 사용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경우, 일본·북한사이의 경제교류는 증대되고 그에 따라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북한간의 경제교류와 더불어 문화교류, 인적교류, 정보교환등이 전개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고 따라서 북한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공산사회의 자본주의사회로의 변화또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 및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실리추구노선에 따른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한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남북한은 통일을 위한 공존공생의 협력체제를 수립할 수 있고 아울러 통일비용을 절감하면서 통일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일본·북한간의 국교정상화가 미국·북한간의 관계정상화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일본·북한간의 수교는 미국·북한간의 수교를 촉진하면 미·일·중·러의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은 현재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를 한층 더 안정시킬 것이다. 새로운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는 적대적 대립보다는 경쟁을 그 특성으로 할 것이며, 더욱이 북한의 그와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에의 참여는 경제적 수준에서 동북아경제권의 발달을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 군사-안보적 수준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활발하게 전개시킬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동북아의 평화발

진을 희구하는 분위기속에서 통일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정적 영향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가 남북한 관계및 통일문제에 미칠 수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체제보존차원에서 경제난 극복에 노력을 기울일 경우, 일본의 자본과 기술, 시장등에 상당히 의존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 경제의 일본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과 더불어 북한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관계에도 일본의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일본의 남북한 동거리외교가 전개될 수 있음을 예상케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체제붕괴를 모면할 수 있는 경제력 회복을 하게 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틀내에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체제대결의 차원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또 북한은 일시적이거나 회복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3대혁명역량의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남조선혁명’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통일을 향한 남북한 교류는 한계성을 지닌 채 전개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확대와 북한경제의 일본 자본주의에로의 편입은 (i) 일본이 북한지역에 아시아 대륙 및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나타내며, (ii) 한반도 전체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의 증대로 인하여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이 정치대국화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일본의 영향력을 증대해 갈 경우 중국과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데 57),그렇게 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일본 vs 중국

57) 일본에서는 이미 ‘중국위협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고(남시욱, “한일포럼참가기,” 『동아일보』 1994. 9. 3.), 중국 또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동아

의 대결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일본 vs 중국의 대결체제는 통일을 향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제약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북한 및 미국·북한간의 수교는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가져올 것인데, 남북한 교차승인은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분단을 제도화시키고 남북한과 4강 사이의 등거리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토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 교차승인은 주변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증대를 초래할 것인데 특히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V. 맺음말

일본·북한간의 관계는 냉전시대에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韓·日關係로부터 제약을 받는 틀내에서 개선·정체·냉각을 되풀이하면서 전개되었는데,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국교정상화를 향한 적극적인 접촉을 하였었다. 그와 같은 일본·북한간의 수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려 있지만 조만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북한간의 수교회담이 재개되어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는 그것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일본·북한간의 관계정상화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분단비용을 능가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성취할 수 있고 아울러 통일을 민족발전의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며, 그 국가발전전략의 틀내에서 일본·북한간의 접근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 및 민족발전전략은 크게 (i)국제적 차원(ii)국내적 차원(iii)남북한 차원(iv)자조노력차원이라는 네개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의 대결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일본 vs 중국의 대결체제는 통일을 향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제약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북한 및 미국·북한간의 수교는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가져올 것인데, 남북한 교차승인은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분단을 제도화시키고 남북한과 4강 사이의 등거리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토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 교차승인은 주변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증대를 초래할 것인데 특히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V. 맺음말

일본·북한간의 관계는 냉전시대에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韓·日關係로부터 제약을 받는 틀내에서 개선·정체·냉각을 되풀이하면서 전개되었는데,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국교정상화를 향한 적극적인 접촉을 하였었다. 그와 같은 일본·북한간의 수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려 있지만 조만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북한간의 수교회담이 재개되어 일본·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는 그것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일본·북한간의 관계정상화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분단비용을 능가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성취할 수 있고 아울러 통일을 민족발전의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며, 그 국가발전전략의 틀내에서 일본·북한간의 접근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 및 민족발전전략은 크게 (i)국제적 차원(ii)국내적 차원(iii)남북한 차원(iv)자조노력차원이라는 네개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新國際秩序下 日本의 東北亞 戰略과
南北關係

研究責任者：金 珍 基 (大陸研究所)

목 차

<요 약 문>	219
I. 서론	225
1. 문제제기	225
2. 연구방법	227
3. 논문의 구성	228
II. 일본의 대외정책을 규정짓는 조건들	229
1. 미일 관계	230
2. 전후 일본지배층의 성격	235
III. 냉전시대 일본과 동북아 제국가	239
1.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	239
2. 일본의 역내국가들과의 관계	241
3.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246
IV. 신국제질서와 일본정치구도의 변화	252
1. 신국제질서와 미·일의 국제적 위상	252
2. 신국제질서와 일본국내정치구도의 변화	256
V. 신국제질서하 일본대외정책의 특징	259
1.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260
2.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정책	265
3.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280
4. 대외정책의 변화	281

VI. 신국제질서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한반도	283
1. 신국제질서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283
2. 신국제질서하의 한·일관계	284
3. 신국제질서하의 북·일관계	286
VII. 남북관계에의 영향과 대응전략	287
1. 신국제질서하의 동북아정세	287
2. 우리의 대응전략	289
※참고문헌	297

<요 약 문>

1. 본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냉전시대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동북아제국가와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를 미일관계와 일본지배층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정책방향의 토대위에서 살펴본다. ②신국제질서의 특징은 무엇이며 신국제질서하에서 나타나는 일본정치구도의 변화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③신국제질서하에서 나타나는 일본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경제면, 방위면, 국제질서에서의 적극적 역할추구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④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차세계대전후 일본의 동북아전략을 규정짓는 가장 기본적 요인은 미일관계와 일본지배층이 공유하고 있었던 정책방향이다. 우선 냉전시기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개되어 왔으며, 戰後 일본의 대외정책 또한 미일안보협력체제를 토대로 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미일안보협력체제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전개되어왔다. 다음으로 내부적 조건의 문제로는 전후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사고가 기본적으로 戰前의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전략 또는 국가통제에 의한 사회정책의 실시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일본사회의 기본구도 또는 체제가 전후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3. 냉전시대 일본의 동북아제국가와의 관계는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는 미일안보협력체제라는 틀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면에서 동북아 제국가와의 관계는 냉전구도하 미국의 세계전략을 그대로 추수하는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한편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간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첫째, 한국측 입장에는 안보에 관한 한 일본이 무임승차해왔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일본이 취하는 입장은 '한국의 안전'이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측면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인식차이이다. 즉 한국측으로서는 일본이 안보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당연시하는 데 반하여, 일본측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이 자국의 경제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고려했던 것이다. 냉전시대의 북일관계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

의 공산주의봉쇄정책에 따라 전개되었기 때문에 경제관계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경제관계는 주로 '在日한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 냉전질서의 와해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군사적인 면의 변화로서 소련제국의 붕괴로 군사력의 미국패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저하로 세계경제질서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의 국제질서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미, 일, EC가 중심이 되는 삼극체제 또는 이 삼극을 구성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의 7개주요국가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소위 G7주도체제)로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밋트회의가 경제서밋트에서 정치서밋트의 경향을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가 국제정치체제를 움직이는 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G7주도체제는 안전보장의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완결적인 체제로 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주요국이 완전히 동등한 발언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 가운데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미국일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 군사, 경제, 기술, 과학, 정보 등의 모든 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국력의 면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국가는 당분간 출현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신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국내의 총보수화 경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3년 7월의 선거후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출범함으로써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자민당의 선전, 사회당의 대패, 그리고 보수신당의 대약진으로 특징지어지는 93년 7월의 총선거는 변화를 추구하는 일본국민의 정치의식이 투영된 것이며,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정치개혁'이라는 세계적 조류가 일본열도에도 밀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와 혁신'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보수와 신보수'라는 새로운 정치구도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일본정치의 구도가 과거 '보수 대 진보'라는 공식에서 '보수 대 신보수'라는 구도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신국제질서하 일본대외정책의 특징은 경제정책, 방위정책, 과거청산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파악가능할 것이다. 먼저 대외경제정책면에서 일본의 아시아중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는 일본의 투자패턴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일본의 투자는 급속히 아시아지

역으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동향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산업계가 아시아지역을 통해 경제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즉 일본은 아시아각국경제의 일본경제권으로의 포섭과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이 지역을 상품시장으로 만든다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경제적 주도권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는 일본의 원조가 다른 국가들의 원조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의도적으로 일본의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방위정책의 측면에서는 헌법의 확대해석과 해외파병의 실현에 의한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내용은 냉전 이후의 현시점이 일본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좋은 기회로 인식하여 전후 방위정책의 틀을 재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방위력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주적 방위노력', '質中心의 방위력증강'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막강한 경제력, 적극적 방위정책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대외정책으로 나타난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해외 파병을 위한 헌법개정논의 등이 그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6. 신국제질서하에서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선이 '한반도의 안정' 추구라는 점에 변화는 없다. 그러나 북한체제붕괴의 가능성과 북한핵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수정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비무장, 무력불사용'을 기본으로 한 종래의 방위정책을 수정하여 한반도긴급사태시 미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개입' 쪽으로 방향선회를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는 최근 북한핵과 관련한 '有事時立法'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한일관계 또한 이를 반영하여 양국간 군사협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양국 국방장관이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 함정교환방문 등의 군사교류를 공식화하였으며 이어서 방위청 발표로 韓美日의 첫 합동훈련이 나타났고 한국군함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등 진전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韓日간에는 韓美상호안보조약과 日美안전보장조약이라는 형태로 간접적인 연계는 갖고 있었으나 이것이 韓日양국간의 직접적인 연계로 나타날 가

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한편 과거사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에 신정부가 출현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속박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발언에서 보다시피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

北日관계는 8차례에 걸친 국교정상화교섭이 있었으나 북한의 핵문제로 일단 중지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북일간의 입장차이는 북한의 핵문제, 외교관계설정의 문제, 과거침략문제에 대한 배상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北美간에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7. 전세계적인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적인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전략은 정치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분쟁의 방지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장기적 방안의 하나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목표가 '평화통일'에 의한 '한민족 공동의 번영'이라고 할 때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핵문제에 더 이상 얽매어서는 안된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남북이 상호이득이 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가전략의 수립문제이다. 사실 한일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과거청산, 전후보상문제 등이지만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양국간 국력차가 더욱 심화되고 일본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은연 중에 현실논리를 강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다. 즉 과거청산문제와 무역역조문제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쪽은 유감스럽게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국력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의 장기전략은 무엇인지, 대응태세는 어떻게 갖추어야 될 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대중국관계나 대러시아관계, 그리고 특히 대북한 관계에서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와 민간부문을 망라한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먼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수립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논의는 국제질서가 과거와는 달리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겨냥하고 있으나 일본의 미약한 군사력과 과거의 역사적 유산이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²⁾ 우선 첫번째로 미약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이미 방위비지출의 증가를 요구하는 일본국내의 주장과 방위비분담을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³⁾ 이러한 주장과 함께 최근 일본의 움직임도 『NO라고 말할수 있는 일본』⁴⁾ 등과 같은 우익적 관점의 저서가 일본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등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방위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위력을 증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요소인 과거의 역사적 유산, 즉 침략적 과거에서 나타나는 주변국민들의 거부감은 한반도와 중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Publisher, 1993)를 참조하라.

2)이에 대해서는, Takashi Inoguc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1989.1.

3)이에 대해서는, Tetsuya Kataoka & Ramon H. Myers, *Defending an Economic Superpower: Reassessing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9), Reinhard Drifte, *Arms Production in Japan: The Military Applications of Civilian Technology*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6), Richard Holbrilke, "Japan and the US: The Unequal Partnership,"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을 참조하라.

4)石原愼太郎, 盛田昭夫 共著, 『'NO'と言える日本』(光文社, 1989). 이 책은 미국에서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반미적이라고 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이후 石原愼太郎, 渡部昇一, 小川和久 共著, 『それでも 'NO'と言える日本』(光文社, 1990), 石原愼太郎, 江藤淳 共著, 『斷固'NO'と言える日本』, 황원근 옮김,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世界日報社, 1992)가 출판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측의 반론으로서는, Leon Anderson, *Japanese Rage-Japanese Business & Its Assault on the West*(1992)., 鈴木主税 譯, 『拜復*石原愼太郎 殿』(東京: 飛鳥新社, 1993)이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이를 희석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의 극명한 예로서는 최근에 나타난 일본문화수입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시 호소카와의 언급에서 나타난 한국유학생의 적극유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의 경제정책, 적극적 방위정책, 과거청산노력이 바로 일본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동북아전략, 좁게는 대한반도 정책의 중심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본논문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어떠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일본의 한반도정책이 남북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냉전시대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동북아제국가와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를 미일관계와 일본지배층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정책정향의 토대위에서 살펴본다.

② 신국제질서의 특징은 무엇이며 신국제질서하에서 나타나는 일본정치구도의 변화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③ 신국제질서하에서 나타나는 일본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경제면, 방위정책면, 국제질서에서의 적극적 역할추구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연구방법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 또는 서베이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 주된 이유로서는 첫째, 일개국가의 전략수립에는 한명 또는 소수의 정책입안자나 정책결

정자만이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전략수립에 관련된 모든 인물을 파악하여 만나기 힘들다는 측면과 당사자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리라는 점이다. 두번째로 일본의 과거청산노력은 추상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과 경제적 진출에 대한 실상 또한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역량으로 이를 모두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아닐지라도 일본에서 발간되는 1차자료나 일본의 대외진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조사에 의한 작업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논문의 구성

제I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언급이다.

제II장은 전후일본 대외정책의 틀을 형성하고 있었던 미일관계, 그리고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던 일본의 지배층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정책정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동북아시아국가들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먼저 日中關係, 日蘇關係, 日蒙關係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냉전 이후의 신국제질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의 국내정치구도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상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신국제질서하에서 나타나는 일본대외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미일역전, 미국의 최대채무국으로의 전락과 일본의 최대채권국으로의 부상이라는

소위 '미일역전' 현상과 구소련의 붕괴가 가져온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의 동북아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대외경제정책, 방위정책, 과거청산문제란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특히 이 장에서는 기술적, 경제적인 성격을 고려한 일본의 방위력이 어떠한 양태를 띠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VI장에서는 V장에서 나타난 경제력, 방위력, 과거청산노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 최근의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곧 최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이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제VII장은 이러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이는 먼저 작금의 동북아상황에 대한 고찰을 한 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치-안보면, 경제면, 국가전략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일본의 대외정책을 규정짓는 조건들

2차세계대전후 일본의 동북아전략, 좁게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규정짓는 몇가지 조건들은 분명히 존재해왔으며 이는 냉전적 세계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정책을 규정짓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은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외부적 조건으로서 미일관계와 분리시켜 일본의 동북아정책을 살펴볼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냉전시기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며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 또한 미일안보협력체제를 토대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미일역전' 현상과 구소련의 붕괴가 가져온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의 동북아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대외경제정책, 방위정책, 과거청산문제란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특히 이 장에서는 기술적, 경제적인 성격을 고려한 일본의 방위력이 어떠한 양태를 띠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VI장에서는 V장에서 나타난 경제력, 방위력, 과거청산노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 최근의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곧 최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이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제VII장은 이러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이는 먼저 작금의 동북아상황에 대한 고찰을 한 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치-안보면, 경제면, 국가전략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일본의 대외정책을 규정짓는 조건들

2차세계대전후 일본의 동북아전략, 좁게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규정짓는 몇가지 조건들은 분명히 존재해왔으며 이는 냉전적 세계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정책을 규정짓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은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외부적 조건으로서 미일관계와 분리시켜 일본의 동북아정책을 살펴볼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냉전시기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며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 또한 미일안보협력체제를 토대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부적 조건의 문제에서는 전후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정책정향 또는 멘털리티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미일관계란 기본적인 틀속에서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가 있는지, 있다면 이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고는 일본의 대외정책, 좁게는 동북아정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 일본의 정치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전후 점령정책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사회의 기본구도 또는 체제가 전후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또한 미국의 점령정책에서 살아남은 戰前과 戰時中の 관료들이 戰後의 일본지도층을 구성함으로써 이들의 정책정향 역시 기본적으로는 戰前과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미일관계

전후의 미일관계는 대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미국의 일본점령기, 두번째는 미국의 절대적 안보지원하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전념할 수 있었던 시기이며, 마지막 단계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와 일본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 시기이다.

우선 45년의 종전을 맞아 전후문제로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배상문제와 일본의 비군사화정책이었다. 이 중 비군사화정책은 일본경제의 철저한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⁵⁾

5)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플레베상안, 스트라이크 조사보고, 존스톤안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앞서서 포츠담선언에는 2가지 측면이 있었다. 첫번째는 일본의 비군사화, 즉 일본경제의 비군사화를 철저히 추구한다는 것이었으며 두번째는 일본에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일본이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한에서 산업의 유지를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포츠담선언의 6항(군국주의세력의 영구제거), 7항(점령목적으로서 전쟁수행능력의 파괴), 8항(주권의 제한), 9항(군대의 무장해

전쟁 직후인 45년 9월에 미국의 대일방침인 「항복후에 있어서 초기의 대일관리 정책」이 9월 22일 발표되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을 철저히 파괴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중 1항목만이 “장래의 평화적 수요를 한도로 일본중공업의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것”⁶⁾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무력화를 위하여 미국은 가혹한 배상안을 들고 나왔다. 배상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플리(E. W. Pauley)배상안(46년 12월), 스트라이크(C. S. Strike) 중간보고(47년 2월)가 있었으나 이들 모두 초기의 미국점령정책, 즉 일본의 군사력과 이의 기초가 되는 중공업부분의 규모, 성격을 제한한다는데 있어서 조금도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일본국내상황은 전도가 혼미한 상태였다. 이러한 혼돈상태는 우선 플리 배상안이 제시되었을 때, 그리고 두번째는 47년 4월에 사회당이 대량으로 의석을 획득하여 片山내각이 성립하였을 때였다. 그러나 片山내각이 단명으로 끝나고 48년 3월에 芦田내각이 성립하고 뒤이어 같은 해 10월에 제2차 吉田내각이 들어서게 되어 보수정치의 전망이 나타남으로써 요시다를 위시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48년 1월에 로얄(K. C. Royal)미육군장관에 의해 ‘일본을 반공의 방벽으로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중요발언이 행해지는 것이다.⁷⁾

이 성명은 2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첫번째로 일본이 다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언급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후에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책임을 가지는 것은 극동위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인 것이다.⁸⁾ 즉 미국은, 일본이 다시금 세계의

제), 11항(비군사적 산업의 유지)을 참조할 것. 『降伏後における米國の初期の對日方針』, 『資料戰後二十年史』(東京: 日本評論社, 1966), p. 3.

6) 『降伏後における米國の初期の對日方針』, 『資料戰後二十年史1(政治)』(東京: 日本評論社, 1966), pp. 16-18, エコノミスト編輯部編, 『戰後産業史への 證言(三)』, p. 206.

7)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戰後資料 日米關係』, p. 7을 참조할 것.

8) 연합국 사이의 대일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미일開戰’의 경위에서 보아 미국이 주도권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은 일본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며 국제연합의 제목적을 지지하는 민주적이고도 평화적인 정부를 가능한 한 빨리 수립하는데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얄육군장관의 성명은 아시아의 잠재공업기지로서의 일본의 증화학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적인 국가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전개한 것이었다. 즉 이 성명은 미국이 대일비군사화정책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결국 로얄성명이 나온 48년 전후 미국의 대소전략은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중국내전에 대한 평가도 미국의 전략전환 속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때 沖繩에 있었던 막대한 군수물자도 거의 중국으로 보내어졌던 것이다. 즉 소련의 움직임, 중국의 혁명적 상황,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한국전이라는 국제적 상황변화가 이러한 미국의 대일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트루만 독트린에서 1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나타난 로얄성명은 미국의 對日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轉機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수정되게 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강력한 반공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정책으로 수립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미국의 대일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즉 중국의 공산화로 인하여

장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일본군을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잡고서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큰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이 이 지역의 전후처리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작전면에서나 외교면에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소련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대일강화문제에서도 미국의 방침을 기다린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두번째로 미국이 전후 곧 세계의 군사기지망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입안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구체화시킨데에서 나타난다. 즉 미국은 국제연합을 창설하는데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쟁재발방지에 열의를 보임과 동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군사기지방이었던 것이다. 기지방 구상이 미국통합참모본부에서 확고해진 것은 1945년 10월 하순이었다. 이 속에서 沖繩이 '최중요기지지역'으로 간주되어 괌, 필리핀의 군사기지와 함께 서태평양의 군사적 거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이후의 일본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군사전략에 편입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佐佐木隆彌,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東京:岩波書店, 1988), 특히 pp.17-25를 참조하라.

애초 구상되었던 민주화정책이 대폭 후퇴하고 좌익분자를 모든 사회부문에서 배제시키는 적색분자 추방작업이 대대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즉 51년 5월 3일 점령군총사령부는 점령하에 행해진 당시까지의 재개혁을 재검토할 권한을 일본정부에 부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 성명후 요시다내각은 전후개혁의 재검토를 위해 政令諮問委員會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 대규모의 지배체제재편성이 50년대 전반기에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재편성과정의 특징은 첫번째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대미종속적인 미일관계의 형성과 이에 근거한 재군비진행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전쟁 기간에 경찰예비대창설(1950년), 보안대 창설(1952년), 자위대 창설(1954년)이라고 하는 군사력 정비과정을 견게 되었다. 물론 이와 함께 진행된 국내지배체제의 재편성은 미국의 극동전략수행을 위하여 일본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두번째의 특징으로서는 이러한 미일관계의 형성은 포츠담 선언에 명기된 일본의 비군사화, 민주화를 放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의 결과 나타난 국내지배체제의 재편성이 민주주의적 제요소를 계속 배제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배체제의 재편성은 1955년 민주당과 자유당의 통합에 의한 자유민주당의 출현으로 소위 1.5정당제도가 창출됨으로써 1955년 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후 일본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틀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후점령정책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강력한 보수정권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의 지배층이 전후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하여 패전국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에서의 지배체제재편성은 한국에서의 반공정권수립과 함께 애초부터 미국의 대동북아정책과 맞물려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일간의 관계정상

화는 계기만 주어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 미국의 베트남전개입이었으며 결국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로 한-미-일간에 동맹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안보전략의 기초는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냉전격화 이후 미국이 줄곧 추진하고 있었던 소련, 중국, 북한이라는 공산세력의 확장을 봉쇄한다는 정책이 일단 결실을 맺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미일관계의 두번째 단계는 미국의 점령정책 이후 일본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덕분에 경제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며 이후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반면 미국은 베트남전 수행으로 인한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가 현저히 나타났으며 이에 미국측에서는 일본의 방위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압력'이라는 형태로 뚜렷이 나타나게 된 것은 70년대 들어서이다. 즉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상한선 'GNP1%'를 철폐하고서라도 군사비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 또한 어느 정도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여 군사비를 증가시켜왔던 것이다.⁹⁾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면서 경제력에만 일본이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일간의 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변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없다면,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적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면 미일간의 관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대국화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관계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불균형적 관계가 냉전시대의 와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가 마지막 3단계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세계질서에서의 미국의 상대적 지위약화로 특징지어진다. 즉 경제, 기술면에서 일본이 급부상하게 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나타남으

9) Richard Holbrooke, "Japan and the US: The Unequal Partnership,"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p. 51-52.

로써 냉전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미일간의 기본선인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공동보조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며 오히려 자국의 경제에 비중을 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일본의 '안보무임승차'에 대한 비판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기술체계의 이동 및 경쟁환경의 변화에 의해 한차례의 총체적인 조정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관계의 커다란 틀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미일간의 움직임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戰後 일본지배층의 성격.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변화, 즉 일본의 철저한 비무장화-자립경제체제로의 전환--일본에 대한 군사, 경제적 지원과 소련, 중국에 대한 적극적 봉쇄정책이란 일련의 궤적은 戰前의 관료, 정치인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점령군 당국이 일본의 정치지도층 개혁에 착수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결정은 실질적으로 관료계 전체를 고스란히 그대로 남기려고 했던 것이다.¹⁰⁾ 당시 점령군 당국은 패배한 군조직과 몇몇 정당정치를 공식추방에 의하여 배제하고 초국가주의적인 단체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일본의 통치체계의 주력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며 실제로 당시 미국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다.¹¹⁾ 왜냐하면 전

10) 이에 대해서는 연합군 총사령부가 기존의 국가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수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설명되고 있다. Hans H. Baerwald, *The Purge of Japanese Leaders under the Occup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조사에 의하면 조사받은 42,251명중 추방된 인원은 1.9%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秦郁彦, 『官僚の研究』(講談社, 1983). p. 27. 각부문별 공식추방에 대해서는, Haruhiro Fukui, "Postwar Politics, 1945-1973," in Peter Duss(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6. (Cambridge, 1988), 특히 pp177-184를 참조하라.

11) Karel van Wolferen,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People and Politics in a Stateless Nation* (London: Macmillan, 1989) pp. 379-382., Baerwald, *op. cit.* pp2-3.

후 격화되기 시작한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은 초기의 대일정책을 완화시켜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미국의 개혁담당자들은 군부와 초국가주의적인 단체 이외의 영역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 하였다.¹³⁾ 이리하여 공직추방은 초기의 강력한 입장에서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추방된 공직자들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최초에 추방된 총인원은 군인 167,035명(79.6%), 관료 1,809명(0.9%), 정치가 34,892명(16.5%), 초국가주의자 3,438명(1.6%), 제계 1,898명(0.9%), 언론인 1,216명(0.5%)으로 모두 210,288명이었다.¹⁴⁾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추방은 47년 3월부터 시작된 제1차청원위원회에서 148명이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52년 4월의 강화조약에 따라 제3차청원위원회가 종결되기까지 총201,577명이 공직추방에서 해제되어 결국 대부분이 추방을 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비해 최종적으로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미국점령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초기에는 포츠담선언에서 명기한 '군국주의자의 권력 및 세력을 영원히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직, 교직, 노동의 3부분을 중심으로 점령군의 지시, 각서에 근거하여 추방이 실시되었다. 이에 45년 10월 우선 교육과 경찰분야에서 시작되어 46년 2월 공직추방령, 5월 교직원 추방령, 12월에 노동추방령이 나타났으며 전쟁범죄인, 직업군인, 국가주의 단체간부, 전쟁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 등이 그 지위에서 쫓겨나 다시 그 지위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47년 1월의 공직추방령 개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市町村長, 통제단체, 유력은행, 회사, 출판단체, 언론기과의 간부 등의 지위까지 공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추방은 지방정계, 언론계, 경제계에도 확대되어 추방자는 직업군인, 헌병, 첩보부원 등 183,000명을 포함하여 200,000을 넘었다. 이러한 조치는 48년 5월에 일단락 되었으나 이후 추방정책은 공산주의자를 대상으로(red purge) 되면서 추방조치도 완화되어 51년 릿지웨이 성명으로 점령법령재검토를 하는 등 대폭적인

12) 로イヤル米陸軍長官演說, 「日本を全體主義の防壁へ」(1948.1.6), 齊藤 眞, 永井陽之助, 山本 滿 編, 『戰後資料 日米關係』(日本評論社, 1970), p. 7.

13) Baerwald, *op. cit.*, p. 69.

14) Jon Halliday, *A Political History of Japanese Capitalism* (New York: Pantheon House, 1975), p. 173.

추방해제가 시행되어 강화발효와 동시에 추방법령은 폐지되었던 것이다.¹⁵⁾

추방이 해제된 관료가 공직에 복귀하는 것과 기묘하게 때를 맞추어서 실시된 'Red Purge'¹⁶⁾때문에 50년에는 점령군의 공직추방효과가 거의 백지화되어 있었다.¹⁷⁾ 이리하여 공직에 복귀한 관료들은 30년대 초기부터 45년까지 전시산업 구축의 일환으로서 실험해왔던 통제기관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관료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체험했으며 또한 이전에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을 연합군 총사령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었다.

戰後의 산업정책과 사회통제에 관여한 탁월한 인물의 대부분은 전쟁전이나 전쟁중 일본에서 '혁신관료' 또는 '통제관료'로서 알려져 있었던 그룹으로서 그들은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와 사회통제문제에 독일의 방식을 적용시켰던 것이다.

특히 이중 공직에 복귀한 관료들은 이전에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을 연합군 총사령부로부터 물려받아 전시산업구축의 일환으로서 실험해왔던 통제기관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체제를 정비시켜 나갈 기회를 얻었다. 즉 공직에 복귀한 혁신관료와 그 제자들은 전후의 경제관계, 성, 청, 일본은행, 그리고 주요경제단체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내무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상관료들은 전후 정부각성청이나 정치인으로서 재등장하였던 것이다.

이를 월프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80년대말의 일본시스템은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형성된 관료적, 정치적 세력의 공고화로 나타난 산물

15) 『日本近現代史 小辭典』, p. 325.

16) 공산당원 또는 '공산주의적' 사상의 소유자로 간주된 관료 1,000명 이상과 회사원 11,0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잃었다.

17) 전후 최대의 거물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점령당국은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획을 실시했는데도 통치받는 국민에 대한 無知, 그보다도 더욱 그런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수룩함이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Yoshida Shigeru, *The Yoshida Memoirs*, Houghton Mifflin, 1962., Karel van Wolferen,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People and Politics in a Stateless Nation* (London: Macmillan, 1989) p. 349에서 재인용.

이며 이러한 공고화는 전쟁으로 촉진되었다.”¹⁸⁾

전후 일본의 지배층으로 재등장한 戰前과 戰時中 관료들의 정책은 사실상 국가주도의 경제발전모델로서 이 또한 크게 戰前의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中村隆英같은 학자는 『日本の經濟統制』라는 책에서 戰後의 중화학공업화라든지, 관리통화제도,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등은 40년대 국가총동원의 중추기관이었던 내각기획원이 ‘경제신체제’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원, 조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실시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 결국 戰後의 경제관료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산업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함으로써 전례가 없을 정도로 산업계를 조종,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여 강력한 보호주의에 의해서 국내메이커의 성장을 도왔다. 이것이 戰後일본의 주요정책이 되었던 것이다.²⁰⁾

결국 ‘경제정책의 국가주도’라는 소위 신중상주의적 정책의 추구는 일본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미국 또한 단기적인 자국의 경제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경제발전과는 달리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력 쇠퇴는 1970년 닉슨의 ‘신경제정책’ 이후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서서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결국 1985년에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같은해 일본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였다. 더군다나 이 해에는 첨단기술의 결정체로 불리어지고 있던 반도체생산에서마저 일본이 최대생산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위기감은 심

18) Karel van Wolferen, op.cit., p.347.

19) 中村隆英, 『日本の經濟統制』(日本經濟新聞社, 1974), pp56-58.

20) 73년 가을 중동분쟁으로 인한 당시 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공급제한으로 일본이 심각한 석유부족에 직면하여 물자부족, 물가등기 등을 우려한 정부가 「석유수급정화법」과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등 소위 석유2법을 성립시킨 것도 전시통제의 유산이라고 中村隆英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中村隆英 著, 『日本の經濟統制』(日本經濟新聞社, 1974), pp.169-173을 참조하라. 한편 당시 석유2법의 심의에 참여했던 자민당의 椎名부총재는 전시중 상공관료로서 실제로 통제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각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압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²¹⁾

이상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전후일본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은 사실상 전시통제의 변모된 형태로 나타나 이 토대 위에 전개된 것이었으며 대외정책 또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신증상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것이다.

III. 냉전시대 일본과 동북아 제국가

1. 동북아지역 제국가의 경제적 위상

우선 동북아지역국가들의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동북아지역의 주요경제지표

	국토면적 (1,000평방km)	인구 (백만명)	GNP (십억달러)	1인당 GNP (달러)
일본	375	124	3,669	29,528
중국동북3성	9,326	100	29	328
한국	98	44	295	6,747
북한	120	22	23	980
러시아극동지역	6,619	8	33	1,800
몽골	1,567	2	2.6	970

자료: 運輸省第1, 第3港灣建設局資料, NIRA政策研究(1994), Vol. 7 No. 1, p. 17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注1): 러시아극동지역은 캄차카주, 마가탄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연해주와 야쿠트사하치공화국을, 중국의 동북3성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가르킴.

(注2): 러시아는 1989년, 중국과 몽골, 북한은 1990년, 한국과 일본은 1992년 통계이며 어느 것이나 반올림한 수치임.

21) 이러한 미국의 대일압력과정은 역사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관,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美關係』, 『일본평론』(사회과학연구소, 1993) 제7집 pp.107-108을 참고할 것.

각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압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²¹⁾

이상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전후일본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은 사실상 전시통제의 변모된 형태로 나타나 이 토대 위에 전개된 것이었으며 대외정책 또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신증상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것이다.

III. 냉전시대 일본과 동북아 제국가

1. 동북아지역 제국가의 경제적 위상

우선 동북아지역국가들의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동북아지역의 주요경제지표

	국토면적 (1,000평방km)	인구 (백만명)	GNP (십억달러)	1인당 GNP (달러)
일본	375	124	3,669	29,528
중국동북3성	9,326	100	29	328
한국	98	44	295	6,747
북한	120	22	23	980
러시아극동지역	6,619	8	33	1,800
몽골	1,567	2	2.6	970

자료: 運輸省第1, 第3港灣建設局資料, NIRA政策研究(1994), Vol. 7 No. 1, p. 17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注1): 러시아극동지역은 캄차카주, 마가탄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연해주와 야쿠트사하치공화국을, 중국의 동북3성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가르킴.

(注2): 러시아는 1989년, 중국과 몽골, 북한은 1990년, 한국과 일본은 1992년 통계이며 어느 것이나 반올림한 수치임.

21) 이러한 미국의 대일압력과정은 역사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관,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美關係』, 『일본평론』(사회과학연구소, 1993) 제7집 pp.107-108을 참고할 것.

이들 국가중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입수가 가능한 한국, 중국, 일본의 70년대, 80년대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년평균 8%이상의 증가율을, 일본이 4%내외의 증가율을, 그리고 중국은 70년대에는 평균 5.8%였으나 80년대에는 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같은 시기의 세계평균 3.5%(70년대), 2.7%(80년대)와 비교해보면 이는 크게 상회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92년 현재 동북아시아 제국가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들 3개국가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우선 국내총생산면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며,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P에 있어서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내국가들간의 상대적 경제력을 1992년 지표를 통해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면에서 일본은 중국의 8.2배, 한국의 12.4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1.5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북한의 13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그 다음은 중국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결과가 나타내는 바는 한국이 중국보다 산업화가 더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국토면에서 보아 중국은 한국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경제적 파트너로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와 북한을 제외한 3국은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²³⁾ 동남아시아 제국가와 함께 장차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10년께는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역내총생산은 미국의 두배에 달하고 유럽연합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 또한 과거의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9년만 해도 일본의 지역별 대외투자는 미국이 320억달러를 상회하고 유럽이 약150억달러, 아시아는 약 90억달러로 대미투자액이 대아시아투자의

22) 金圭倫, 『東北亞의 新經濟秩序』(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8-10.

23) 이에 대해서는, 金圭倫, 위의 책, pp. 33-36을 참조할 것.

약 4배에 달했다. 그러나 1994년도는 대아시아투자액이 약 130억달러, 대미 투자액은 약 40억달러, 대유럽투자액은 약 60억달러로 대미투자가 대아시아 투자의 1/3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아시아투자강화는 수출확대로 이어져 1991년 이후 일본의 기업들은 세계 어느 대륙보다도 아시아국들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작년 일본의 대아시아국들과의 무역흑자는 대미무역흑자를 능가한 것으로 집계됐다.²⁴⁾ 이런 일본의 동향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눈에 띄게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산업계가 아시아지역을 통해 경제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2. 일본의 역내국가들과의 관계

가. 日中관계

戰後의 日中관계는 美日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즉 전후일본의 대외 정책이 거의 그러하듯이 日中관계 또한 72년 日中國교수립까지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을 추수하는 입장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소규모의 경제거래는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對中금수조치, 대만으로부터의 견제와 항의 등의 여러가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72년의 국교수립 이후 日中間에는 정부수준의 여러가지 협정(무역협정, 항공협정, 해운협정, 어업, 문화, 과학기술, 조세, 원자력 평화이용 협정 등)을 비롯하여 경제관계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어 현재 미국, 한국에 이어 세번째 상품 수출국이 되어 있다. 특히 78년이래 추진되어온 중국의 경제개방 이후 日中間의 무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78년에 수출입총액 51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3년에는 378억달러에 이르렀다.²⁵⁾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일본은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24) 『毎日經濟新聞』, 1994. 9. 14.

25) 大久保 勳, 今井 理之, 『中國經濟 Q & A 100』(亞紀書房, 1994), p. 201.

의지를 나타내어 82년 이후에는 일본 ODA의 10% 이상이 중국에 배당되었다.

26) 더군다나 86년까지 중국이 二國간 또는 다국간 베이스에서 받은 총원조액의 50%이상이 일본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日中間의 관계는 경제협력문제에 중점이 두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관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대중직접투자는 소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정부간 차관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이와 같이 일본이 對中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한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日中관계를 규정짓는 것이 이같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日中관계를 규정짓는 여러 요인으로서 대만문제, 일본과 중국의 국내정치상황 등이 있다. 29)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데 따른 영향력 확보를 둘러싸고서 양국이 상호 군사력증강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 이외의 부문에서는 의외로 긴장관계가 높아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의 입장은 역시 과거 일본의 침략적 역사에 대한 경계심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무역구조를 보면 중국의 對日수출은 식료품, 원료품, 섬유제품, 광물성원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對日수입은 일반기계류, 전기기기, 수송용 기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30)

26) 梶村秀樹, 金相泰 編, 『日中經濟交流の 現状と 展望』(白桃書房, 1989), pp. 32-35.

27) 海外經濟協力基金 編, 『海外經濟協力便覽』(1987), p. 25.

28) 정영록, 『선진국의 대중경제교류 분석』(산업연구원, 1992), pp. 41-53 참조.

29) 이에 대해서는 김장권, 「일본의 대소, 대중관계」, 현대일본연구회, 『일본연구논총』(1993), pp. 301-306을 참조할 것.

30) 日中經濟協會, 『日中經濟協ジャーナル』(1993年 11月號), pp. 52-53.

나. 日蘇(러시아)관계

한편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56년에 양국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국교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미 「日蘇공동선언」을 맺었다. 이에 기초하여 57년 통상조약 및 무역지불협정이 조인되어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미소냉전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이 발전되어 왔으나 이는 정치면에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북방영토문제를 제외하고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항상 불씨를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60년 '新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로 소련이 '선언'에 명기되었던 북방 2개섬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급속히 냉각된 적이 있었으며 이는 72년 닉슨대통령의 訪中, 訪蘇와 이에 뒤이은 73년 다나카 일본수상의 소련방문으로 시베리아개발문제가 본격화됨과 함께 화해의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소련과의 정치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다시 76년의 미그기사건, 78년의 日中평화우호조약에 대한 소련의 항의, 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다시 냉각되어, 80년대초 일본의 북방영토반환문제 제기로 83년 이후는 양국간 경제관계가 매우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드러난다. 이러한 일본의 경직화된 소련에 대한 태도는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유연한 대외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³¹⁾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방영토문제는 현재 日露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개혁 이후 러시아 지원문제가 본격화되고 여기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으로써 북방영토문제도 국제화되었다. 91년 7월의 런던 서밋트에서 '정치선언'과 '의장성명'을 통해 북방영토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인되고 러시아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촉구되었으며 92년의 뮌헨서밋트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촉구되었던 것이다. 즉 런던서밋트의 '정치선언'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의 신사고외교는 동

31) 같은 책, p. 293.

서간의 긴장완화와 다수국가들간의 평화, 안전보장 시스템의 강화에 대해서 다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 국제협력의 새로운 정신이 아시아에 있어서도 유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반영되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同 ‘의장성명’에서는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일-러시아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아시아의 탈냉전에 기여하리라고 지적되었다. 한편 92년 뮌헨서밋트의 ‘정치선언’에서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환영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이 영토문제의 해결을 통한 완전한 일소관계 정상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³²⁾고 하여 영토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대러시아수출입 비중은 전체무역액의 1-2% 수준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러시아는 사실상 일본에게 그다지 중요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물론 日露관계를 규정짓는 요인으로서 무역의 상호보완성, 양국간의 내부경제여건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방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의 자본주의화 개혁과 관련, 서방측이 對露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이 계속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여 영토문제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고 하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³³⁾

한편 러시아의 對日수출은 식료품, 원료, 광물성 연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對日수입은 중화학공업품 중 기계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³⁴⁾ 앞서 살펴보았던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 양국 모두 對日수출은 석유, 석탄 등의 공업용 원료와 농산물, 섬유, 수산물 등의 1차상품 내지는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철강, 기계, 화학공업제품, 플랜트 등 공산품과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32) 김장권, 위의 글, p. 300의 註32

33) 일소관계의 요인분석에 대해서는 김장권, 위의 글, pp. 294-301을 참조할 것.

34) 小川和男, 菱木勤治, 『還日本海經濟圏とロシア極東開發』(日本貿易振興會, 1994), p. 153.

다. 日蒙관계

동북아 지역 국가중 몽골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원조와 차관을 제공한 국가는 구소련과 일본이다. 일본이 몽골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72년이었으나 77년 3월 2차대전의 피해보상을 함과 함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일본과의 교역이 증대하였다. 이후 87년 5월 몽골총리가 서방국가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 배경에는 몽골의 개혁, 개방에 서방 특히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또한 89년 5월 서방국가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수상이 몽골을 방문하여 바트문크 대인민회의 간부회의의장과 면담한 이후 몽골은 對日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몽골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90년 2월에 당시 소도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천황을 만나고 가이후 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때 日蒙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뒤이어 11월에 오치르바트 대통령부처가 일본을 방문하여 日皇즉위식에 참가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양국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이는 일본이 현재 몽골의 최대원조국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2년 8월까지 일본의 대몽골원조는 유무상 합하여 180억 7800만엔에 이르고 있으며 93년 5월까지 일본의 대몽골투자 또한 6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몽골 지원국회의를 주도하고 각종 국제기구의 몽골원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³⁵⁾ 92년 이후 일본의 대몽골경제원조는 유무상 합하여 연간 3000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몽골에 있어 최대원조국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³⁶⁾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몽골편람』(1993), pp. 129-130.

36) 필자가 몽골 현지에서 만났던 김재학씨(IBRD 근무)의 자료와 견해에 따르면 일본의 몽골경제원조는 무상으로 1500만달러, 1300만달러(94년), 천만달러, 천만달러(95년, 96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는 반면, 유상으로는 92년의 1100만달러에서 93년 이후 해마다 각 2천만달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 구소련, 몽골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관계도 일정부분은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미일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중 중국, 몽골과의 관계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되어 왔는데 반해 구소련과의 관계는 북방영토문제로 냉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가. 한일관계의 궤적

냉전시대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소련봉쇄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면 한일국교정상화라는 것 또한 양국간의 감정대립에도 불구하고 계기만 주어지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일관계에서의 이러한 계기는 다름아닌 베트남전에서 나타났다. 즉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전쟁의 '국제화'에 한국이 병력을 제공하고 일본이 작전기지를 제공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한층 강화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시작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51년부터 몇차례 열렸으나 그때마다 결렬되었다. 이 원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측이 전전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 이의 청산을 요구한데 대하여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킨데서 기인한 것이다. 일본측은 회담석상에서 "일본이 36년간 조선을 점령했던 것은 조선인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제1차 회담시 일본측 수석대표 松本俊一), "사과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일본)는 좋은 일을 했다. -----창씨개명도 좋은 것이었다." (제7차 회담 대표 高杉晋一) 등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회담은 더이상 진

척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난항을 거듭하던 한일간교섭은 한국과 일본의 국내정치상황이 변함으로써, 그리고 베트남전에 기인한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진척되게 되었다.

먼저 한국측으로서는 주지하다시피 박정희가 61년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경제발전에 두고 경제발전을 제1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한 경제적 자원마련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전 개입을 강화하면서부터 야기된 지속적인 달러의 유출로 58년 이후 한국에 대한 원조를 급속히 삭감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역할을 일본이 대신해주기를 강력히 종용하게 되었다. 일본 또한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로 좌익정당과 대립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池田내각이 물러나고 보수세력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佐藤내각이 64년 들어섬으로써 안보적인 이유 및 경제적인 진출을 위하여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서두르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65년 1월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의 한일관계정상화요구는 점점 증대되었다.

이리하여 한일양국의 국내사정 및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었던 정상화는 62년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청구권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65년 2월 椎名외상이 방한하여 일거에 한일기본조약의 가조인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6월 22일에는 한일기본조약과 부속제협정이 조인되고 12월 18일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국교수립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협력과 함께 최대의 문제점이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씨이나 외상의 방한시 '양국간에 불행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유감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나. 對한반도정책의 기본입장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에 대하여 이즈메 하지메는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기본인식 하에서 긴장완화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가능한 한 공헌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³⁷⁾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 입장을 거의 정확하게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 대치상황이 계속되면서 평화통일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는 그대로 직접 ‘현상유지’로 결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큰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남북한의 입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본정부의 ‘진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현상유지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정책배려는 ‘안전’보다는 ‘안정’이라는 관점이다. 물론 이 두 단어가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안전’이라는 의미는 ‘한국의 안전’이라는 개념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즉 일본의 자세는 ‘한국의 안전’을 최중요시하는 적극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최상으로 본 소극적인 개념인 것이며 이것이 현재 일본이 취하고있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정책의 본질이다.³⁸⁾

다. 한일양국간의 시각차

한일국교정상화가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을 기본축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국내정치, 경제적 조건이 결합됨으로써,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은 한일관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으로

37) 伊豆見元, 「日本の 對韓半島政策」, 李甲允 外, 『現代日本の 政治』(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6), pp. 227-228.

38) 같은 글, pp. 228-229.

써 이후의 사태전개 또한 필연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둘러싸고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측 입장에는 일본이 안보에 관한 한 무임승차해왔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즉 한국이 공산세력의 위협에 대처하여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일본의 안전을 위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은 ‘한국의 안전’이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일본의 외교청서에 나타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곧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인식도 서로간에 차이점을 보인다. 즉 한국측으로서는 경제발전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일본의 경제원조가 필수적이고 일본이 안보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당연시하는데 반하여, 일본측으로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경제협력이 자국의 경제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고려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의 기본입장차이, 즉 ‘한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안정’, ‘안보무임승차에 대한 경제적 요구’와 ‘자국경제이익의 추구’라는 인식차이를 전제로 하여 전개된 한일관계는 앞서 살펴본 한일관계의 기본축, 즉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이 변함으로써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70년대 들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들에게’라는 닉슨독트린의 천명과 함께 미국이 대동북아정책의 변화에 착수하게 되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게 되자, 일본측으로서도 동북아국제질서의 균형을 위해 중일관계의 정상화에 착수하게 되고, 결국 72년 사토내각의 뒤를 이은 田中내각은 중일국교 교섭에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즉 미중관계 및 중일관계의 개선으로 조성된 화

해분위기는 당시의 한일관계를 불안하게 하였으며 사또내각 시기에 마련되었던 기본적인 한일협력구조를 와해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한일간의 긴장관계는 73년 8월의 김대중납치사건, 74년 8월의 육영수여사 저격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조성된 한일간의 긴장관계는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일본의 다나카수상이 록히드사건혐의로 물러나고 미끼내각이 들어섬으로써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70년대의 한일간의 관계변화라는 것도 다나카와 미끼라는 두 지도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기보다 본질적으로는 월남에서의 미국의 패배, 이에 맞추어 거행된 김일성의 북경방문으로 고조된 위기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즉 당시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끼 수상은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인식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렀던 것이며, 따라서 당시의 한일관계 또한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일본이 바란다는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이는 국교정상화 당시부터 일본정부가 견지하고 있었던, 남한의 평화와 안정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이라는 측면의 연장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이라는 기본축에서 전개되었던 한일관계는 80년대들어 조금씩 변화의 징조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제지위가 향상된 일본이 이제 정치대국,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보임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즉 과거처럼 미국에 의존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떠나 적어도 아시아지역에 관한 한 정치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일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카소네내각출범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일본국내에서도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제정치적 지위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이제 일본의 국제화를 위한 동반자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83년 11월 나카소네의 한국방문, 84년 9월 전두환대통령의 방

일이 갖는 의미 또한 국제무대, 좁게는 동북아질서에서 일본이 신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구도는 이제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북일관계

국교정상화 이래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 강화할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도 비정치적 차원에 있어서의 교류를 추진해왔다.

1989년도 북한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33개국과 무역거래를 하여 수출이 15억 6천만달러, 수입이 25억 2천만달러로서 총 40억 8천만달러를 나타내고 있다.³⁹⁾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수출입의 59.4%를 소련과 거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거래는 14%, 그리고 일본과의 거래는 전체의 12.3%로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3국과의 거래가 북한전체무역의 무려 8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구조에 있어서는 대일본 수출이 전체의 18.2%로서 일본이 제2의 수출상대국이 되고 있다.⁴⁰⁾

한편 북한의 자본협력은 89년말 현재 100건에 달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규모는 작은 편이다. 합작투자건수의 국별구성을 보면 전체의 70%가 조총련계의 '在日한국인'이며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제국이 20%, 그리고 나머지가 서구 및 개발도상국이다.⁴¹⁾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가 없는 상태에서도 북한의 대외무역과 대외자본거래에 있어서 일본과의 거래가 예상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항

39)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로서 무역거래와 자본거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무역과 자본거래의 상대국 통계를 CIF와 FOB가격으로 환산하여 추산한 수치로 대외경제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1990, 10月), p. 38.

40) 이종훈, 「北韓-日本の 관계개선과 경제협력 움직임」, 『季刊 北韓研究』(서울: 大陸研究所), p. 102.

41) 같은 글, p. 103.

후 정식수교가 맺어진다면 양국간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긴밀해질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신국제질서와 일본의 정치구도

1. 신국제질서와 미일의 국제적 위상

1989년 11월 제2차세계대전후 동서냉전을 상징했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45년 이후 지속되어왔던 냉전질서가 와해됨으로서 나타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을 들수 있다.

첫째로 정치군사적인 면에서의 변화로서 소련제국의 붕괴로 인한 군사력의 미국패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미소가 과거의 대립상태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전세계적 차원의 갈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긴장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국내문제의 비중이 증대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국이 민주화, 경제발전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민주화의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결과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서유럽에서는 민주화가 민족주의를 완화시켜 지역화 또는 지역주의로 나아가는데 반해 구소련과 동구에서는 민주화가 민족주의의 고양을 가져와 민족분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각국이 과거의 이데올로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발전을 중시하게 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군사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경제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제3세계 여러지역에서는 영토, 인권, 종교 등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새로운 분쟁이 나타남으로써 전세계적 차원의 대립관계는 해소된 반면 분쟁이 국지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42)

후 정식수교가 맺어진다면 양국간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긴밀해질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신국제질서와 일본의 정치구도

1. 신국제질서와 미일의 국제적 위상

1989년 11월 제2차세계대전후 동서냉전을 상징했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45년 이후 지속되어왔던 냉전질서가 와해됨으로서 나타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을 들수 있다.

첫째로 정치군사적인 면에서의 변화로서 소련제국의 붕괴로 인한 군사력의 미국패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미소가 과거의 대립상태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전세계적 차원의 갈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긴장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국내문제의 비중이 증대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국이 민주화, 경제발전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민주화의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결과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서유럽에서는 민주화가 민족주의를 완화시켜 지역화 또는 지역주의로 나아가는데 반해 구소련과 동구에서는 민주화가 민족주의의 고양을 가져와 민족분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각국이 과거의 이데올로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발전을 중시하게 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군사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경제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제3세계 여러지역에서는 영토, 인권, 종교 등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새로운 분쟁이 나타남으로써 전세계적 차원의 대립관계는 해소된 반면 분쟁이 국지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42)

두번째로 신국제질서에서 나타난 중요한 측면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이다. 이는 실제로 71년에 달러의 금태환증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닉슨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的高금리정책에 따른 달러강세의 흐름을 바꿔놓은 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후부터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일본의 경제적 부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유럽구주공동체의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의 진전,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권 구축의 움직임 등과 같이 BLOC형성에 의한 지역화의 움직임이 나타나 세계경제력의 다원화경향이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 도입 등으로 과거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양대경제권에서 완전한 단일세계경제권으로 세계경제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부상, 유럽구주공동체의 통합진전에 의한 세계경제력의 다원화, 이와 함께 BLOC형성에 의한 지역화의 움직임(EC, NAFTA 등), 사회주의권 붕괴에 의한 시장경제화의 세계적 진척 등이 세계경제질서 또는 경제내용상의 주요한 변화라 할수 있을 것이다.⁴³⁾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EC 등 세계주요국가들의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이 대두되었다.

먼저 일본과 EC의 경제적 역할에 중점을 둔 '세계적 다원론'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격감되고 경제력의 비중이 증대

42) 한승주, 「한국외교의 진로」, 정일영 편,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나남, 1993), pp. 505-508.

43) 세계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변했는가, 또 변했다면 그 원인과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견해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아직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suneo Akaha & Frank Langdon, "Japan and the Posthegemonic World," Tsuneo Akaha & Frank Langdon ed., *Japan in the Posthegemonic World*(Lynne Rienner Publishers, 1993)를 참조할 것.

되었다는 점과 소련은 이미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미국은 종전의 군사, 경제면에서의 지배적 위치에서 타지역 또는 국가들과 비슷한 위치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본 등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이 그 경제력에 상응하는 힘(세계문제에서의 결정권)을 공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두번째로는 미국의 '유일군사대국론'을 들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논자들은 소련의 경제적파탄으로 미국은 이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며⁴⁴⁾ 따라서 미국은 종전에 비하여 경쟁자 없는 패권국가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분담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타국측이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단독주의(Unilateralism)에 대한 재정부담요구를 얼마나 오래 참고 받아들일수 있느냐에 따라 미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두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나 그 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절충적 견해도 도달하게 된다. 즉 미국 주변의 약소국에 대하여는 군사력이 일정 정도 관찰될 것이나 경제력이 허용되지 않는 한 "세계경찰"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군사력에 의해 타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⁴⁵⁾ 군사력은 경제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것은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영국의 헤게모니, 戰後 시작된 미국의 헤게모니가 잘 드러내어주고 있으며 작년의 걸프전에서 보여준 연합국측의 전비부담이 극명한 예라 할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국제질서는 전환의 시기(Transitional Period)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점차 패권화(Hegemonization)보다는 다원화(Pluralization)로, 군사력에 의한 강제력보다는 외교관계에 의한 강대국간의 이해조정으로,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 보다

44) 이는 실제로 걸프전에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5) 한승주, 앞의 글, pp. 509-510.

는 지역적 분쟁의 증가와 자체(국가 또는 지역)해결 움직임 등과 같은 양상들이 더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대로 일본과 EC제국가들이 세계무대에서 발언권과 결정권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미, 일의 양두체제(Bigemony) 또는 이에 EC까지 가세한 삼두체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이후의 '신세계질서'는 이제까지 서방진영의 중심이었던 미국, EC, 일본의 삼극구조, 또는 이 삼극을 구성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의 7개주요국가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소위 G7주도체제)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밋트회의가 경제서밋트에서 정치서밋트에서의 경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주고 있어서 이러한 체제가 국제정치체제를 움직이는 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제력향상과 EC의 지역적 결속력강화가 이러한 체제의 성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요국이 완전히 동등한 발언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 가운데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미국일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 군사, 경제, 기술, 과학, 정보 등의 모든 면에서 고려한 종합적인 국력의 면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국가는 당분간 출현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G7주도체제는 안전보장의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완결적인 체제로 되기는 힘들다. 이는 걸프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을 축으로 한 7주요국가를 비롯한 각국이 결속하여 이라크의 침공에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나 최종적인 무력행사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에 모여 안보리결의에 기초하여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합의 의사결정은 미, 영, 프, 중, 소 5대국의 의사통일이 전제로 되어 있어 이들사이의 의사통일이 원활하게 진전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전보장분야에서는 국제연합에서 국제사회의 총의로서 안

전보장에 관계되는 제활동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여 (국제평화를) 실현시켜 간다는 의미에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기능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2. 신국제질서와 일본국내정치구도의 변화

신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국내의 총보수화 경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3년 7월의 선거후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출범함으로써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자민당의 선전, 사회당의 대패, 그리고 보수신당의 대약진으로 특징지어지는 93년 7월의 총선거는 변화를 추구하는 일본국민의 정치의식이 투영된 것이며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정치개혁'이라는 세계적 조류가 일본열도에도 밀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와 혁신'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보수와 신보수'라는 새로운 정치구도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었다. 따라서 야당에 의한 연립정권인 호소카와 정권의 등장은 냉전체제붕괴 이후 정치개혁이라는 세계적 조류가 일본열도에도 밀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일본정치의 구도가 과거 '보수 대 진보'라는 공식에서 '보수 대 신보수'라는 구도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⁶⁾

연립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50대의 중심인물들은⁴⁷⁾ 자민당의 파벌회장과 같은 원로정치인과는 국제감각을 달리하는 새로운 세대이며 기존의 정책노선과 성향, 이데올로기, 대외인식 등의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모색을 주창하고 있다.⁴⁸⁾ 실제로 호소카와 정권은 93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

46) 外交安保研究院, 『主要國際問題分析』(1993. 10. 20.), p. 2.

47) 참고로 당시 호소카와는 55세, 오자와는 50세, 하타는 57세, 그리고 새로이 자민당총재로 선출된 고노 요헤이는 56세였다.

48) 호소카와, 오자와, 하타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자민당정권에 의한 보수정치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외세, 특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의 국력을 기초로 지속성 개혁풍토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일련의 인적집단을 기리켜 일본정치에서는 '신보수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간 패전 이래 최대규모의 육-해-공 자위대 합동군사훈련을 이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커다란 국제적 관심을 샀다. 당시 방위청 당국에 따르면 훈련에는 육상자위대 15만명, 해상자위대 4만명, 항공자위대 4만 6천명 등 약 24만명의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통합훈련으로 미국의 항공모함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일본정부가 이 훈련에 대한 제3국의 참관요청을 일체 거부하고 駐日美空軍의 협조하에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훈련이 호소카와정권에 의한 연립정권이 출범되기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자민당정권시절부터 군사력강화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내각의 등장이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이례적 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은 일본정치의 '총체적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보통국가론'에 입각하여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의 확보와 영향력확대를 국내외적으로 가시화하려는 측면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⁹⁾ 즉 이러한 군사훈련을 통하여 호소카와 정권은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군사력보유를 양성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호소카와정권에 의한 이와 같은 대외행동의 배경에는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⁵⁰⁾

특히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생당을 창당, 연립정권구상의 산파역할을 맡았던 오자와의 경우 대외관계에서 적극적인 국제협조노선추구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49) 여기서 말하는 '보통국가론'이란 일본이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 제정된 평화헌법의 군비, 교전권 부인이라는 패전의 굴레를 완전히 청산하여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적 활동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방인철, 김현진 역, 『日本改造計劃(知識産業社, 1994)』, 특히, pp. 109-144를 참조하라.

50) 93년 9월8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호소카와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71%(반대12%)로서 다나카내각 발족시의 62%(72년 8월조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朝日新聞』, 1993. 9. 8.

경제력에 걸맞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주장함으로써 군국주의화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러한 것이 일본적 민족주의에 기초를 둔 대외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게 될 때에는 국제적 대립과 마찰의 증폭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오자와 구상'은 신당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비자민 연립정권을 수립한 다음 비자민 연립정당들을 합쳐 자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보수신당을 만들어 양대보수정당제도를 실현시킨후 안정된 신보수 정당체제하에서 일본정국을 이끌겠다는 구상이었다.⁵¹⁾

일본정치의 커다란 지각변동은 정경유착, 파벌정치 등에 식상한 일본국민들이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냉전적 상황이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발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정치이념이 전혀 다른 자민,사회당의 연립정권이 형성되어 있다. 사회당이 수상자리에 앉게 된 것은 47년만의 일로서 외형적으로는 진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사회당의 '탈진보화' 내지는 '자민당 정책으로의 경사'가 나타나고 있다. 수상취임 직후 자위대에 대하여 '違憲合法的'⁵²⁾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던 무라야마 수상은 이후 자위대가 합헌적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회당의 종전입장 즉 '자위대는 違憲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철회하였다. 즉 자민,사회당의 연립을 계기로 사회당의 보수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일본사회의 총보수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총보수화는 외형적 형태는 어쨌든 보수양당제의 내용을 이미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의 일본정국구도가 보수냐, 진보냐는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했다면 현재의 일본정국구도는 이미 '전쟁의 방기'를 규정한 헌법에 대하여 護憲이나, (교전권을 인정하는)改憲이나는, 즉 전체적으로 보수구도내의 차원에서 파악가능한 형태로 전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도는 소선거제도의 구역분할이 끝나는 내년초가 지나야 확실하게

51) 外交安保研究院, 앞의 글, pp.3-5.

52) 헌법상 위헌이지만 자위대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구도에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쪽이든 일본군사력의 증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³⁾

V. 신국제질서하 일본대외정책의 특징

일본이 신국제질서하에서 대외적인 영향력,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조건들은 크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주관적 요소란 그 국가의 의지와 능력, 구체적으로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와 경제력, 군사력 등이 될 것이고, 객관적 능력이란 일개국가가 지역패권국가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여타의 국가들이 이를 용인하고 따르는가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요소의 총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국가의 정치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정치질서상에서 대외적인 영향력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동북아시아에 축소시켜 본다면 일본지도자들이 이 지역에서 지역패권국가의 역할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은 이를 뒷받침할만큼 충분한가의 문제와 주변국들, 특히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일본의 대국화를 경계하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지역패권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그러면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그리고 과거사문제라는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지도자들의 의도와 의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53) 사실 이러한 일본의 총보수화경향은 2장에서 살펴본 미국이 실시한 戰後처리
의 불충분성에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점령초기에 실시되었던
전쟁책임자 또는 협력자에 대한 공직추방이 한국전을 계기로 대폭해제되어 戰
爭前이나 戰時中の 관료그룹들은 그대로 온존되어 戰後일본의 지배층을 구성
했던 것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구도에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쪽이든 일본군사력의 증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³⁾

V. 신국제질서하 일본대외정책의 특징

일본이 신국제질서하에서 대외적인 영향력,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조건들은 크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주관적 요소란 그 국가의 의지와 능력, 구체적으로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와 경제력, 군사력 등이 될 것이고, 객관적 능력이란 일개국가가 지역패권국가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여타의 국가들이 이를 용인하고 따르는가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요소의 총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국가의 정치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정치질서상에서 대외적인 영향력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동북아시아에 축소시켜 본다면 일본지도자들이 이 지역에서 지역패권국가의 역할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은 이를 뒷받침할만큼 충분한가의 문제와 주변국들, 특히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일본의 대국화를 경계하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지역패권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그러면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그리고 과거사문제라는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지도자들의 의도와 의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53) 사실 이러한 일본의 총보수화경향은 2장에서 살펴본 미국이 실시한 戰後처리의 불충분성에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점령초기에 실시되었던 전쟁책임자 또는 협력자에 대한 공식추방이 한국전을 계기로 대폭해제되어 戰爭前이나 戰時中の 관료그룹들은 그대로 온존되어 戰後일본의 지배층을 구성했던 것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왔던 것이다.

1.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주지하다시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위상은 전후 상당히 변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표-2>에서 보듯이 GNP와 수출액, 그리고 금과 외환준비고에 있어서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의 34.2%, 18.0%, 50.1%에서 1988년에는 24.8%, 11.9%, 6.3%로 감소했고, 반면 일본은 2.8%, 1.4%에서 각각 10.1%, 9.8%, 12.6%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정점은 1985년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미일역전, 미국의 최대채무국으로의 전락과 일본의 최대채권국으로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표-2>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일본의 비중변화추이

(단위: %)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85	1988
GNP	미국	34.2	29.7	26.5	25.4	23.4	24.8
	일본	2.8	4.3	7.3	8.8	9.9	10.1
수출액	미국	18.0	17.4	15.1	11.7	11.9	11.9
	일본	1.4	3.4	6.8	6.9	9.9	9.8
금, 외환 준비	미국	50.1	32.3	15.5	6.1	8.8	6.3
	일본	1.3	3.3	5.2	5.7	5.8	12.6

자료: H.Owen and Shultze, Setting National Priorities(The Brookings Institution, 1986).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89.

권원기, 『기술이전의 과정과 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1991), p. 71에서 재인용.

戰後일본의 기술발전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고찰가능하다. 첫번째의 단계는 50년대부터 70년대 초, 중반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일본기업들은 서구로부터의 신기술도입을 주요기술획득 원천으로 활용하여 이를 실제

제품개발과정에서 소하, 흡수, 개량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서구에서 먼저 개발된 기술을 들여와 제품, 공정 기술상의 작은 혁신(minor innovation)들을 달성함으로써 보다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우위를 달성해나간 것이다. 두번째의 단계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 일본은 수입기술의 흡수와 개량에 의한 가격과 품질에서의 경쟁우위확보라는 접근방식만으로는 더 이상의 기술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선진기술부문에서의 추격(catch-up)과 '창조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R&D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을 조직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기술능력제고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의 단계는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시기에 일본은 선발자의 입장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해나가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기술개발을 둘러싼 경쟁환경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기술보호주의 경향의 대두와 더불어 기초기술에의 무임승차에 대한 서구각국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쟁환경 속에서의 일본의 지위상승에 의해 이제 일본 스스로가 기술적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⁵⁴⁾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기변신을 도모해 온 일본의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또 다른 경쟁환경의 변화, 즉 선진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로 인해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1992년도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총액은 일본의 수출총액 중 32.9%,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은 30.2%를 점하여 1985년과 비교하면 수출금액은 4.2배, 수입금액은 2.8배가 되고 있다.⁵⁵⁾ 미국의 경우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남미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54) 황혜란, 「일본기술혁신체제의 변화」, 『동향과 전망』1993 봄, 여름 합본호(통권 19호)(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백산서당, 1993), pp. 71-72.

55) (社)政府資料等普及調査會 資料センター, 『円高と海外直接投資--アジア地域を中心に』, p. 2.

경우 80년대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아시아지역에서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는 일본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향후의 투자국으로서 유망한 나라에 대하여 일본수출입은행이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위와 7위인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면 타이,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국가가 10위까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⁵⁶⁾ 이 외에도 이미 일본은 아시아 지역 역내의 경제적 분업체계를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⁷⁾

이에 따라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 또한 과거의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9년만 해도 일본의 지역별 대외투자는 미국이 320억달러를 상회하고 유럽이 약150억달러, 아시아는 약 90억달러로 대미투자액이 대아시아투자의 약 4배에 달했다. 그러나 1994년도는 대아시아투자액이 약 130억달러, 대미투자액은 약 40억달러, 대유럽투자액은 약 60억달러로 대미투자가 대아시아투자의 1/3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아시아투자강화는 수출확대로 이어져 1991년 이후 일본의 기업들은 세계 어느 대륙보다도 아시아국들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작년 일본의 대아시아국들과의 무역흑자는 대미무역흑자를 능가한 것으로 집계됐다.⁵⁸⁾ 이런 일본의 동향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눈에 띄게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산업계가 아시아지역을 통해 경제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의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경제의 일본경제권 내로의 포섭과 NIES로부터 ASEAN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근접해가고 있고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는 NIES를 상품시장으로 만든다는 두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 NIES는 이제 임금수준이 높아졌으므로 비용대 효과의 측면에서 이미 매력을 상실했으며 자립적 기술추적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으

56) 같은 글, p. 33.

57) 이에 대해서는, 황현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초국적 기업」, 사회경제학회 편, 『사회경제평론』 5집(한울, 1992), pp. 140-154를 참조할 것.

58) 『每日經濟新聞』, 1994. 9. 14.

므로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생산기지를 NIES로부터 전통적으로 일본의 원료공급처였던 ASEAN으로 이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은 아시아지역을 자기세력권내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주도권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이와 같은 일본의 아시아전략에서 가장 국가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역이 동북아지역이다. 동북아지역의 경제권구상은 중국의 '환발해만경제권', 한국의 '황해경제권'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환일본해경제권'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⁰⁾ '환일본해 경제권'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중국의 동북지역, 북한,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일본해'에 인접한 국가 내지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⁶¹⁾

'환일본해 경제권구상'을 포함한 동북아경제권 창설을 주장하는 논리는

59) 이승협, 「일본의 패권주의경제정책과 한일경제관계의 문제점」, 신용하 편저,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김영사, 1994), p. 129.

60) 신국제질서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시아권에 대한 논의 즉 미국, 호주 등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각료회의의 상설화 및 환태평양협력체 구상', 말레이시아 등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등과 동북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중국의 '환발해만경제권', 한국의 '황해경제권', 일본의 '환일본해경제권', 그리고 이 외에도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묶는 '대중화경제권' 구상, UNDP를 중심으로 동북아 각국이 협의중인 '동북아경제권' 등에 대한 고찰과 이러한 구상들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한 경제협력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창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용하, 앞의 글, p. 14.

61) Shoichi Kobayashi, "Pan-Japan Sea Economic Cooperation: Japanese View," to b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umes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The Political Economy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The Sejong Institute, August 4-5, 1994. 협의의 차원에서 일본내에서 이를 추진하는 부류는 2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동해에 인접해 있는 기업가층이고 다른 한 부류는 홋카이도, 니이가타, 이시카와, 토야마 등 역시 동해에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정부들이다.

다음과 같다. ①각국의 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로 보완성이 크다. ②지리적으로 가깝다. ③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전아시아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④세계경제의 중심이 앞으로는 아시아지역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⁶²⁾ 물론 이 지역내의 국가들이 자국경제의 상호보완점, 즉 일본,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양질의 노동력 및 중국과 시베리아지역의 방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 나간다면 이 지역의 경제발전전망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통합의 상황이 유럽통합체와 같이 '형평성'과 '상호대등'한 조건들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되는 몽골에서 3만달러 수준인 일본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극단적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까지,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서로 동질성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일본의 과거침략에 대한 전후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에서 만일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일본의 일방적 주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옛 대동아공영권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만주및 시베리아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은밀히 기초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³⁾ 즉 일본은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을 토대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 패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진전시켜 왔다.⁶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은 아시아지역의 일본경제권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생산기지로 편입시키고, 2차적으로 한국, 중국 등의 동북아국가는 일본의 상품시장화한다는 것이다.⁶⁵⁾

62) 이승협, 「일본의 패권주의경제정책과 한일경제관계의 문제점」, 신용하 편저,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김영사, 1994), p. 135.

63) 김성훈, 김태홍, 심의섭, 『동북아경제권-21세기국가경영전략』(比峰文化社, 1992) p. 39.

64) L. Thurow, *Head to Head* (William Rorow Press, 1992), p. 103.

65) 신용하 편, 『일본의 패권주의와 한일관계』(김영사, 1994), p. 15.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일본정부의 원조가 동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원조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의도적으로 일본의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⁶⁶⁾

2.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정책

가. 일본방위력의 실상

일본의 방위력을 살펴보면 있어서 많은 논자들은 일본의 방위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위력을 증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즉 현대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기술력의 중요성에 따라 군수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순히 외형적 측면에서만 과거의 재래식 무기 또는 병력수에 의한 일국의 방위력 수준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한편으로는 70년대 이후 계속된 엔화의 가치상승과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확대에 의해 방위예산이 절대액수면에서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군사무기가 가진 성격상 민간부문에서의 뛰어난 일본기술력이 군사장비로 상당부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경제력에서의 우위성을 그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력을 살펴보면 있어서 방위비의 절대적인 액수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일본방위산업의 성격, 즉 일본의 첨단기술이 산업용에서 만이 아니라 군수용으로 사용가능한 범용기술이라는 점에 있으며 일본의 방위산업에 이러한 첨단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일본의 방위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곧 일국의 방위력을 살펴보면 있어서

66) 윤영관, 「일본경제의 국제화」, 최상용 편, 『일본, 일본학』 (오름, 1994), p. 284.

는 이와 같이 방위력의 절대적인 측면과 방위기술이라는 두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①일본의 방위비

93년도 방위연감에 따르면 일본의 91년도 방위예산은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64억 6400만 달러로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제6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방위비가 연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실제적으로 미, 소에 이어 세계 제3위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1989년 주요 서방국의 군사비를 NATO방식⁶⁷⁾으로 산출하여

67) 군사비에 대한 각국의 정의와 적용항목, 범위는 약간씩 다르며 용어 자체도 다양하다. '군사비'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용어로서는 군사지출, 국방비, 국방지출, 방위비 또는 방위지출 등이 있다. 이들 용어들이 갖는 공통적 개념은 '군사목적에 지출되는 경비'라는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속에는 무기의 구입, 개발, 유지, 관리비를 비롯해서 군인 봉급, 급식, 피복, 병영유지관리비,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출, 전력증강투자비, 주둔외국군 기지유지관리비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다.

한편 군인 유족에 대한 연금을 방위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연안경비대 관련비용도 방위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민간연구기관의 군사용과학기술개발비는 방위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지 등등 항목에 따라서는 나라마다 군사비 적용을 달리하는 지출들이 있다. 여기에서 ①광의의 군사비, ②협의의 군사비, ③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군사비, ④지방재정에서의 군사비 등 서로 다른 군사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舊군인의 연금이나 해상보안청경비는 방위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퇴직금은 포함시키고 있으나 해안경비대 예산 및 해외군사원조, 우주관계비용은 넓은 의미의 군사비 속에 넣지 않고 있다. NATO가 맹국들의 국방비 계산에서는 군퇴직금과 연안경비대(준군대)의 예산이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나라마다 각기 다른 국방비개념을 객관화시킨 기준으로 채택된 것이 'NATO정의'에 의한 NATO방식의 군사비계산방식이다. NATO각국은 가맹국의 군사비가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공평한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비규정을 통일화하고 있다. 이 NATO정의는 가맹국들만의 비밀로 되어있어 정확한 항목을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국제군사전문가들의 일반적 추정으로는 대략 ① 군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② 군사연구개발비, ③ 무상군사원조, ④ 準군대, 경찰대의 경비(연안경비대, 국경경비대, 헌병경찰 등), ⑤ 국방부 이외의 정부기관지출 가운데 군사목적으로 쓰여지는 것, ⑥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항목과 범위를 군사비로 규정하고 있다. NATO각국은 각국별 방위예산을 규정하는 외에 이같은 기준에 의한 NATO식 군사비도 산정하고 있다. *Military Balance*에서는 미국과 NATO각국의 군사비를 게재함에 있어 자국방식에 의한 군사비와 NATO방식에 의한 군사비를 각각 구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2,880억달러, 영국 350.7억달러, 독일 342억달러, 일본 357.2억 달러로 나타나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미국 다음가는 서방2위의 방위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주요국가들의 국방비(1991년도)

순위	국 가	국방비 (1985년 가격) (100만 달러)	1인당 국방비 (1985년 가격) (달러)	국방비의 GNP/GDP에 대한 비율(%)
1	미 국	227,055	1,001	5.1
2	(구)소 련	91,631	318	11.1
3	사우디 아라비아	35,438	2,386	33.8
4	영 국	22,420	346	4.2
5	프 랑 스	18,044	321	2.8
6	일 본	16,464	132	1.0
7	독 일	16,450	281	1.9
8	중 국	12,025	10	3.2
13	한 국	6,359	142	3.8
14	대 만	5,474	257	5.4
15	북 한	5,328	224	26.7

(주)

1. NATO제국의 국방비는 NATO정의에 따른 개념임.
 2. (구)소련의 국방비는 (구)소련이 공표한 데이터를 재평가한 추정치임.
 3. 독일의 경우는 구서독 만의 데이터임.
 4.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는 페르시아만전쟁경비를 어림잡아 포함한 것임.
 5. 국방비의 GNP/GDP에 대한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GDP수치를 사용했으며 이 수치가 없는 국가의 경우는 GNP수치를 사용.
- 자료: 『防衛年鑑1993』, P. 479.

일본의 경우 註67)에서 나타난 NATO방식 중 ③항의 군사원조는 방위비 속에 해당이 안된다. ④의 準군대경비항목에 현재의 해상보안청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서 믿고 있다. 군사비의 국제비교를 객관화하는 데는 주로 이 NATO방식에 의한 군사비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구중, 「GNP 1.5%, 세계3위의 일본군사비」, 『일본평론』 제1집 1990. 5(서울: 사회과학연구소), pp. 108-110, 中馬清福, 『軍事費を讀む』(岩波書店, 1986), P. 20, 『朝日新聞』, 1988. 10. 19. 를 참조하라.

⑤의 경우도 방위비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⑥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자위대 발족 이후의 퇴직자에 한해서 그 지출을 방위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일본군의 연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비는 NATO각국들이 포함시키는 항목들이 상당수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NATO국가들의 방위비보다 훨씬 적게 계산되어 있다.

아사히신문은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방위비를 정확히 산출해 국제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1988년의 방위비를 NATO방식으로 환산, 산출해 보았다. 아사히신문은 ③④⑤항목을 일단 제외하고 ⑥의 퇴직금 항목 가운데서 일본정부가 방위비로 인정하는 범위와 인정하지 않는 범위의 두가지로 구분해서 계산하였다. 즉 일본정부가 방위비로 인정하는 군인퇴직금을 포함해서 1988년의 방위비를 환산할 경우 당초 정부발표 방위비 296억달러보다 약 60억 달러가 많은 355억달러가 되며, 이는 일본 GNP의 1.2%가 된다는 것이다. 또 일본정부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군인연금 모두를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라는 입장에서 NATO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988년의 일본방위비는 444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일본 GNP의 1.5%가 된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주장이다. <표-4>는 NATO방식에 의한 서방주요국의 군사비이다.

<표-4> 서방주요국군사비(1988-1989)

		미 국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일 본
자 국 기 준	1988	2,886억\$	337.6억\$	307억\$	291.7억\$	288.5억\$
	1989	2,903억\$	345.6억\$	288.3억\$	285.7억\$	300.9억\$
N A T O 방 식	1988	2,860억\$	344.9억\$	359.5억\$	354억\$	GNP1.2%=355.6억\$ GNP1.5%=444.5억\$
	1989	2,880억\$	352.5억\$	350.7억\$	342억\$	GNP1.2%=357.2억\$ GNP1.5%=449.6억\$

* 1989년 일본엔화 대 달러 환율은 1\$=130.26엔으로 계산.

출처: 정구중, 「GNP1.5%, 세계3위의일본군사비」 『일본평론』 제1집(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90), P. 110.

이 <표-4>에서 보면 1988년의 일본방위비는 일본정부관계자들도 인정하는 GNP 1.2%로 환산할 경우 달러액으로는 355억달러로서 서구제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GNP 1.5%로 환산할 경우에는 444억달러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것이다.⁶⁸⁾ 여기에 해상보안청 경비 1,236억엔(1989년)을 더하면 일본의 실질방위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1만 2천명의 대원을 갖고 있고 512척의 각종 함정과 66기의 항공기를 가진 해상보안청은 그러한 강력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는 방위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1976년에 설정한 'GNP 1%이내'라고 하는 한계선도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즉 NATO기준의 계산으로 하면 일본의 방위비지출은 이미 1%를 넘어서서 거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⁷⁰⁾ 더군다나 71년-81년간의 각국의 방위비 신장율은 일본이 터어키에 이어 2번째로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⁷¹⁾

한편 일본의 1992년도 방위비지출은 169억 달러로서 독일 (192억달러), 프랑스 (218억달러), 영국 (207억달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역시 앞서의 계산방식대로 구군인연금이나 해안경비대 등의 경비가 제외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방위비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민총생산에 대하여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나 70년의 0.79%를 최저점으로 이후 계속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0년대 들어 조금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7>에서 보면 85년도 회계년도의 일본방위비의 명목상 증가율은 6.9%이나 이를 금액상으로 나타내면 3조 1,370억엔(131억 5천만 \$, 1\$=238.541엔)에 달하고 있다.

즉 일본의 방위예산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계산방법과는 별도로 고려에 넣어야 할 점은 바로 그 액수의 규모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68) 『朝日新聞』, 1988. 10. 19.

69) 정구종, 앞의 글, p. 111.

70) 실지로 R. Drifte도 일본의 방위비가 NATO산정방식으로는 거의 1.5%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Reinhard Drifte, *Arms Production in Japan* (Westview Press, 1986), p. 20.

71) 71-81년간의 각국의 방위비신장을 순위를 보면 터어키, 일본,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노르웨이의 순이다. 『朝日新聞』, 1988. 10. 19.

있다.

“일본의 군사비지출을 GNP비율로 표시하는 것은, 연간 경제성장율이 10%를 넘는 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타당성이 없다. (일본의) 연간 군사비지출액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액수에 있어서는) 아주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⁷²⁾

이러한 일본의 방위비가 반영되어 진척되어온 일본의 전후방위계획과 일본의 외형적 방위력을 살펴보면 <표-5>, <표-6>, <표-7>과 같다.

<표-5>.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요.

-
- * 국방의 기본방침 (1957. 5. 20.; 국방회의 및 각의결정)
 - * 1차방(1957. 6. 14.; 국방회의결정, 閣議了解)
1958-1960년도, 경비범위는 없음.
 - * 2차방(1961. 7. 18.; 국방회의 및 각의결정)
1962-1966년도 소요경비---연평균 195-215억엔정도 전후
 - * 3차방(1966. 11. 29. 「대강」, 1967. 3. 14. 주요항목, 주요경비; 국방회의 및 각의결정)
1967-1971년도 소요경비---2조 3,400억엔(+250억엔)
 - * 4차방(1972. 2. 8. 「대강」, 1972. 10. 9. 주요항목, 정세판단; 국방회의 및 각의결정)
1972-1976년도 소요경비---4조 6,300억엔 정도
 - * 「방위계획의 대강」 (1976. 10. 29; 국방회의 및 각의결정)
「당면의 방위력정비에 대하여」(1976. 11. 5; 국방회의 및 각의결정)
“방위력정비의 실시에 있어서는, 당면---GNP1%를 넘지않도록 한다.”
-53중업(1979. 7. 17.; 장관승인)
1980-1984년도.
-56중업(1981. 4. 28. 작성방침, 1982. 7. 23. 작성; 국방회의 보고, 승인)
1983-1987년도 소요경비---15.6조엔-16.4조엔.
 - *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5. 9. 18. 국방회의 및 각의결정)
1986-1991년도 소요경비(한도)---18조 4천억엔 정도.
 - * 「1992년도 이후의 방위계획의 기본적 사고방식에 대하여」
(1990. 12. 19.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결정)
 - *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0. 12. 20.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결정)
1991-1995년도 소요경비(한도)---22조 7,500억엔 정도.
-

자료: 大藏省主計局, 『財政制度審議會第一特別部會資料』(1992. 11. 19.), p. 6.

72) Jon Halliday and Gavan McCormack, *Japanese Imperialism Today*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3), p. 83.

〈표-6〉 일본의 방위력

구분	「방위계획의 대강」 1976완성시				중기계획완성시	1991완성시
육상자위대	자위관정수	18만명	18만명	18만명	18만명	
상위대	기간부대	평시배비부대	12개사단	12	12	12
			2개혼성단	1	2	2
		기동운용부대	1개기갑사단	1(기계획)	1	1
			1개특과단	1	1	1
			1개공정단	1	1	1
			1개교도단	1	1	1
			1개헬리콥터단	1	1	1
		저공역방공용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고사특과단	8	8	9
	해상자위대	기간부대	대잠수상함정부대 (기동운용)	4개호위대군	4	4
		대잠수상함정부대 (지방대)	10개대	9	10	10
		잠수함부대	6개대	5	6	6
		소해부대	2개소해대군	2	2	2
		육상대잠기부대	16개대	16	16	16
주요장비		대잠수상함정	약60척	61	62	62
		잠수함	16척	14	16	16
		작전용항공기	약220기	195	214	209
항공자위대	기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28개경계군	28	28	28
		요격전투기부대	10개비행대	10	10	10
		지원전투기부대	3개비행대	3	3	3
		항공정찰부대	1개비행대	1	1	1
		항공수송부대	3개비행대	3	3	3
		경계비행부대	1개비행대	0	1	1
		고공역방공용	6개고사군	5	6	6
	주요장비	지대공유도탄부대		(외 1군준비)		
	작전용항공기	약430기	399	415	424	

자료: 『防衛年鑑 1992』, p. 448.

〈표-7〉방위관계비의 추이

	년도	당초예산액(억엔)	신장율(%)	對GNPI(%)
	1955	1,349	--	1.78
	1956	1,429	5.9	1.73
	1957	1,435	0.4	1.46
1次防	1958	1,485	3.5	1.45
	1959	1,560	5.1	1.45
	1960	1,569	0.6	1.23
	1961	1,803	14.9	1.15
	1962	2,085	15.7	1.18
2次防	1963	2,412	15.7	1.18
	1964	2,751	14.0	1.14
	1965	3,014	9.6	1.07
	1966	3,407	13.0	1.10
3次防	1967	3,809	11.8	0.93
	1968	4,221	10.8	0.88
	1969	4,838	14.6	0.84
	1970	5,695	17.7	0.79
	1971	6,709	17.8	0.80
4次防	1972	8,002	19.3	0.88
	1973	9,355	16.9	0.85
	1974	10,930	16.8	0.83
	1975	13,273	21.4	0.84
	1976	15,124	13.9	0.90
防衛計劃의 大綱	1977	16,906	11.8	0.88
	1978	19,010	12.4	0.90
	1979	20,945	10.2	0.90
53中業	1980	22,302	6.5	0.90
	1981	24,000	7.6	0.91
56中業	1982	25,861	7.8	0.93
	1983	27,542	6.5	0.98
	1984	29,346	6.55	0.991
前中期防 (59中業)	1985	31,371	6.9	0.997
	1986	33,435	6.58	0.993
	1987	35,174	5.2	1.004
	1988	37,003	5.2	1.013
	1989	39,198	5.9	1.006
中期防 (91-95)	1990	41,593	6.1	0.997
	1991	43,860	5.45	0.954
	1992	45,518	3.8	0.941

출처:大藏省主計局,『財政制度審議會第一特別部會資料』(1992. 11. 19.), p. 1.

②일본의 방위기술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또 한가지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일본의 첨단기술로 뒷받침되고 있는 방위기술측면이다. 즉 현대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기술력의 중요성에 따라 군수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단순한 외형적 측면에서의 과거 재래식 무기 또는 병력수에 의한 일국의 방위력 수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술측면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군사 무기가 가진 성격상 민간부문에서의 뛰어난 일본기술력이 군사장비로 상당부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기술경제력에서의 우위성을 그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방위력을 살펴보면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 방위산업의 성격, 즉 일본의 첨단기술이 산업용에서 만이 아니라 군수용으로도 사용가능한 범용기술이라는 점에 있으며 일본의 방위산업에 이러한 첨단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일본의 방위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⁷³⁾ 실제로 올해 5월에 日美간에는 논의되었던 방위산업기술교류에 관한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에서는 미국측이 일본측의 발달된 기술인 액정표시기술과 광학전자시스템 등의 기술도입을 기대하여 추진된 것인 반면, 일본측에서는 美日안보체제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기술교류를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⁴⁾ 더군다나 재해감시, 지도작성용으로 구름이 낀 상황이나 밤에도 지상 2.5cm크기의 물체를 식별해낼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세계최고수준의 해상능력을 갖춘 지구관측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총개발비 8백억 엔 중 연구개발비명목의 7억엔은 95년도 예산에 이미 상정되어있다. ‘지상관측 기술위성’이라 불리는 이 위성은 일본의 자체기술로 개발될 예정이며 역시 일본이 자체개발한 H-2로켓에 의해 지상 700km궤도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학기술청측은 “지구관측위성인 만큼 방위청이 이용할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의 군사적 전용가능성도 충분히 상상가능한 것이다.⁷⁵⁾이 외에도 일본은 이미 85년부터 차기전투기 FSX

73)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일본의 三菱電機가 항공자위대의 차기지원전투기용으로 개발한 신형레이다장치를 미공군에 '93년 7월경에 공여하는 계약을 맺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이 독자 개발한 본격적인 군사용 기재를 미국에 공여하는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무기수출금지 3원칙에 의거하여 무거나 무기기술의 수출,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1993. 1. 26.

74) 『日本經濟新聞』, 1994. 5. 9.

의 독자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미국과 공동개발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차기전술수송기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후지중공업 등의 3사가 참가하여 독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⁶⁾

일본의 민간산업계가 가진 잠재력은 세계 100대무기거래 회사중 일본회사로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이시카와지마하리마 중공업, 미쓰비시 전기, 도시바가 각각 22위, 51위, 60위, 63위, 8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8>일본주요기업의 무기 판매고

순위(세계)	기업	총매출액(A) (백만달러)	무기판매고(B) (백만달러)	B/A (%)
22	三菱重工業	18,441	2,630	14
51	川崎重工業	6,914	1,050	15
60	石川島播磨 重工業	7,822	740	9
63	三菱電機	19,383	710	4
88	(株)東芝	35,056	420	1

資料: SIPRI Yearbook 1993, pp.470-472의 Table 10A를 재구성한 것.

위의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회사의 총매출액에서 무기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 15%, 9%, 4%, 1%에 불과한데도 이를 절대치로 환산하면 미쓰비시중공업 26억 3천만달러, 가와사키 중공업 10억 5천만달러,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7억 4천만달러, 미쓰비시전기 7억 천만달러, 도시바 4억 2천만달러로서 엄청난 액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5개회사가 세계총무기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에 약 3.1%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뒤를 이어 이태리와 비슷한 수준이다.⁷⁷⁾ 일본은 무기수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물론 비밀리에 이를 수출한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거의 일본자체내의 수요, 즉 자위대를 위한 수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75) 『朝日新聞』, 1994. 8. 21.

76) 『毎日新聞』, 1994. 8. 23.

77) 이에 대해서는, SIPRI Yearbook 1993, pp.428, Table 10.3을 참조할 것.

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방위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자민당정조회 의 다음과 같은 보고내용 중 “방위력 정비는 ‘질의 개선’을 중시하라”라는 항목 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방위력정비는 「防衛計劃大綱」(1976년 10월 각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 계획은 「독립국으로서 필요최소한의 기반적 방위력의 정비」를 목표로 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는 냉전후 사태에도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냉전후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21세기를 전망한 수정은 필요하다. 방위력의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위대는 25만명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주변제국가의 군사력과 대비하여 보면 인구비, 면적비, 방위비의 국민총생산(GNP)비 어느 것도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예비병력이 현저히 적어 타국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냉전종결이라고 하는 국제환경하에서 자위대를 수량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동태, 고용상황에서 보아도 현재수준 이상으로 증강하는 것도 곤란 할 것이다. 따라서 급후의 방위력정비 중에는 자위대의 양적확대보다도 질적개선을 중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위대의 근대화를 진전시키고 대원의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자위대를 「精強한 기술집단」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현재수준 정도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정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예비자위관제도의 강화와 有事法制의 정비 등 방위기반의 정비에 노력해야만 한다.”(78)(강조는 필자)

실제로 '94회계연도 예산안(73조엔 규모)에서는 4조 6,800억엔을 방위예산으로 책정하여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함으로써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비가 주로 신형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공중조기경보기(AWACS, 대당 가격 554억엔) 2대의 구입 등 질적인 측면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H-2로켓의 경우 관성유도장치(자신의 위치나 비행 자세를 파악해 스스로 목표물을 향해 궤도수정가능한 장치)를 자체개발함으로써 ICBM(대륙간탄도탄)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일본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냉전질서의 와해에 따라 미국과 (구)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가 방위비를 삭감시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79)

78) 自由民主黨政務調査會, 『提言「冷戦後 安全保障政策」』(1992. 12), p. 5.

79) 이에 대해서는 『防衛年鑑 1992』와 『防衛年鑑 1993』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1990년의 일본방위비는 163억달러였으나 1991년의 일본방위비는 165억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의 방위능력은 일본방위산업의 수준과 규모, 최첨단 전자산업 등을 고려 할 때 적어도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나. 적극적 방위정책으로의 변화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과거의 비무장중립과 불개입원칙에 근거한 수동적인 방위정책에서 '적극적 방위정책'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최대의 특징이 있다. 이는 먼저 탈냉전하의 신국제질서가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정책은 자국의 안전과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다. 상호의존관계의 증대 속에서 세계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결, 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제2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부터의 안전보장정책을 국민적 규모에서 근본부터 수정,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적, 국내적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⁰⁾

뒤이어 이 보고서는 “국제환경은 불투명하며 방위력의 중요성에 변화는 없다.”고 하면서 “자주적 방위노력을 계속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⁸¹⁾

다음으로 이러한 안전보장정책의 수정에 걸림돌이 되는 헌법의 개헌 또는 확대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금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데 즈음하여 출발점이 되는 것은 역시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이다. 이제까지 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일본은 어쨌든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평화에 이어진다」고 하는 소극적인 평화주의에 얽매었으며 나아가 이것이 「일본만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평화롭게 있으며 좋다」고 하는 일국평화주의적인 생각으로도 흘러가는 경향이 있

80) 自由民主黨政務調査會, 『提言「冷戦後 安全保障政策」』(1992. 12), pp. 1-2.

81) 같은 글, pp. 3-4.

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헌법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
장황하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 현재 일본에 대하여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도 가일층의 기여를 요구하는
국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으로서는 차제에 헌법에
서 말하는 평화주의의 의미를 더욱 깊이 고찰하여 세계의 평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생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지금이야말로 일본헌법의 평화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찰
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전체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것은 헌법전문에 있다. 여
기서는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고 하는 결의가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의 것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른 것
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관계에 서려고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
다」고 표명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세계의 평화질서유지와
세계경제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헌법제9조 1항에
서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이 헌법전문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자국
의 이익을 위해 세계의 평화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을 방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소극적 평화주의와 일국평화주의와는 전연
다른 적극적, 능동적인 평화주의정신이다.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의 제거라고 하는
인류의 항구적인 과제는 반드시 평화리에 실현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정의와 질서
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때때로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전제에
대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러한 행동에 참가하지 않
고 전제를 묵인하려는 것은 결코 일본에 명예로운 지위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본에 불명예를 지우는 것으로 자국의 것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헌법전문의 정신에도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의 본질로 돌아가 헌법전문에 나타난 입법정신
을 명심하여 세계의 평화질서유지와 세계경제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지향해야만 하는 것이다.”⁸²⁾

결국 헌법전문이 선언하는 평화주의가 국제협조하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세
계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의 재해석에 의하여 적극적인 방위정책의 결립들을 제거한 다
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모색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

82) 自由民主黨 國際社會における日本の役割に關する特別調査會, 『國際社會に
おける日本の役割-安全保障問題に關する提言-』(1993.2.3.), pp.9-11.

법 제9조하에서 방위력을 필요최소한으로 한다고 공언해왔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전수방위’ ‘해외파병의 금지’ ‘비핵삼원칙’ 등이었다. 사실 이러한 일본의 전후방위정책은 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일본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이 일본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의도적으로 이를 강조하여 안보를 미국에 맡긴 채 국가의 역량을 경제에만 결집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이 전후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안보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던 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미의회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1987년 5월 미국의 프리킥함이 이라크공군기의 미사일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내었을 때였다. 당시 일본의 ‘안보무임승차’ 비난은 매우 고조되어 이와중에서 나온 것이 87년 6월 미하원에서 가결되었던 법안으로 그 내용은 일본으로부터 ‘안전보장료’를 징수하자는 것이었다. 즉 이 법안은 일본이 서방동맹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매년도 방위비를 GNP의 3%로 높여야 한다 ㉡이것이 실행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액분을 ‘안전보장료’로서 미국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등의 내용으로 국무장관에게 일본정부와의 사이에 ‘안보료지불약속’을 체결하도록 교섭에 들어갈 것을 의무로 명기하고 있다.⁸³⁾ 이러한 대외압력에 대하여 일본은 별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냉전시대가 종결된 지금 헌법의 재해석과 함께 분쟁지역에 대한 자위대 파견가능성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은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가맹국이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서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헌법해석상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헌법해석이 일미방위상 협력관계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 현대의 안전보장은 일국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집단적인 안전보장이 세계의 대세이다. 냉전종결에 따라 걸프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분쟁에 대한 국제협력이 한층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 지역적 안전보장의 발전 등을

83) 軍事問題研究會, 『軍事民論』 55, 1989年 1月, p. 5.

상정하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명확한 자세를 취할 것이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지위향상에 따라 국제연합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해석 등을 포함한 제제도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냉전종결에 따라 국제연합이 국제안전보장상 수행할 역할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국제 평화협력법이 성립, 자위대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할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현재 PKO참가실적을 쌓아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강화에 협력할 것이 필요하다.

장래문제로서 국제연합헌장 제43조에 의한 「국제연합군」이 편성된다든지 걸프전 때 본 바와 같은 국제연합의 권위하에 있는 다국적군의 편성 또는 국제연합하에서의 분쟁방지 등 강제적 행동을 할 경우도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연합의 권위하에 있는 활동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협력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⁴⁾

이미 일본은 지난 걸프전 때 기뢰제거를 위하여 소해정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으며 92년 말에는 캄보디아에 6백명의 자위대를 파견한 적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계속 이어져 올해 9월에도 르완다에 자위대가 파견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1992년 6월 PKO(Peace Keeping Operations)협력법안이 통과될 때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이 PKO협력법이 “①임무는 수송, 통신, 의료, 선거감시 등 ‘후방’업무에 종사하는 일이고, 정전감시나 무장해제 등 ‘전방’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정전감시에만 국한시키고, ②파견된 자위대는 유엔의 지휘하에 두고, ③자위대 파견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화지향’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⁸⁵⁾ 그러나 이 법이 갖는 의의는 일본자위대의 행동반경이 종전의 ‘1천해리해역’에서 그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즉 이 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케 되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자위대에 대한 ‘교전규칙’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일본은 교전권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교전방식을 문민통제하는 교전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PKO참가 등을 계기로 타국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도입된 것이었다.⁸⁶⁾ 이는 실제로 자위대가 ‘싸울 수 있는 자위대’로 지향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캄보디아에 파견되었던 일본자위대의 한 간부가 유엔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

84) 自民黨政務調査會, 앞의 글, pp.6-9.

85) 길승홍, 「韓日關係의 再調整」, 『日本評論』, 1993. 제7집, 봄-여름호, pp.131-132.

86) 『朝日新聞』, 1994. 2. 7.

(UNTAC)사령부의 참모로 일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본자위대의 참가원칙은 '비군사부문'에 한정한다는 것이었으나 일본육상자위대간부가 보병부대 등의 군사부문사령부에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93년 7월의 총선을 앞두고는 9대정당 당수들이 TV토론회에 나와 해외파병을 한 목소리로 주장한 적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일본의 자위대는 이미 전력상으로도 헌법상, 그리고 실제 행동양태에서도 '專守防衛'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戰後처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일본은 이에 걸림돌이 되는 미약한 군사력을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외에 과거의 침략적인 인식으로 인한 타국의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목적은 과거의 침략적 역사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경계심을 해소시키지 않고는 아시아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自民黨 政務調査會의 보고서중 '방위정책의 전제로서 전후처리문제를 명확히 하라'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방위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주변제국가의 반응이다. 주변제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의 방위노력에 대하여 제2차세계대전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경계심을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제국가의 언론들에도 우리나라가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명백히 사죄하고 있지 않다는 논조도 볼 수 있다. 안전보장문제의 기본은 국가로서의 도의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감을 쟁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전보장정책에 있어서 전쟁책임과 전후처리문제의 의미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이러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주변제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갈 것이 필요하다.”⁸⁷⁾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극동군사재판소와 연합국전쟁범죄법정에서 재판이 실시되어 일본측 책임자의 처형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쟁중에 생긴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등으로 결착이 이루어졌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책임도 일중공동성명(1972년 9월 29일)에서 명백히 사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전쟁책임과 전후처리문제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난은 맞지 않다.”⁸⁸⁾

87) 自民黨政務調査會, 앞의 글, pp. 11-12.

일찍부터 일본은 자신들이 유일한 원폭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이웃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희석시키는 대신 자신들을 최대의 평화애호국민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일본의 문화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입안되어 타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70년대 상황에서는 '벼락부자'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스며있는가 하면, 80년대는 미국과의 군사안보, 동맹 강화 수단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 90년대에는 쇠퇴하는 미국의 공백을 메우며 급부상하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당당히 드러내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일본문화청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정책의 5대역할 중 하나로 '문화의 국제교류추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①諸외국문화와의 접촉,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발전'과 더불어 '②문화면에서의 국제적 공헌'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종래의 문화교류는 歐美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나라들과의 교류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중시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⁸⁹⁾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시아중시정책, 적극적 방위정책과 과거청산노력으로 일본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신국제질서의 중요한 세계지도국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하고서 향후 수십년내 세계지도국 후보로 될 가능성에 대한 뉴욕타임스, 가디언, 아사히, 슈피겔과 같은 미, 일, 영, 독 4개언론사 공동조사 설문조사에서 이는 나타나고 있다.⁹⁰⁾

4. 대외정책의 변화

88) 같은 글, p. 40.

89) 日本文化廳, 1991., 이지원, 「일본의 팽창적 문화정책과 한국내 일본문화유입의 문제점」, 신용하 편저,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 pp. 183에서 재인용

90) 『東亞日報』, 1994. 4. 2. 참고로 각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서유럽(53%), 일본(19%), 중국(13%).

영국---서유럽(32%), 중국(23%), 일본(19%).

일본---중국(38%), 일본(24%), 서유럽(12%).

미국---일본(28%), 서유럽(26%), 중국(25%)

적극적 방위정책과 문화정책을 토대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본대외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재해석에 의한 적극적 방위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제연합에서의 상임이사국진출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일본이 국제정치사회에서 주요한 정치단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일개국가가 대국의 지위에 오를 것인가 아닌가는 그 나라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체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선택에는 국제적 압력 또는 강제가 가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이유로 관계있는 대국은 국제사회전체의 체제에 관계있는 임무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다. 여기서 일본이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위정책과 핵보유가 불가피하다. 국제사회에서는 대국에 필요한 요소중 일부분이라도 구비하지 못하면 타국에 의존해야 하므로 그것을 갖춘 취약성을 노출하게 된다.

일본이 추구하는 방위정책의 전략목표는 자국의 시활적인 이해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는 것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변국들이 일본의 적극적 방위정책을 경계할 수는 있지만 저지할 국가는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300만의 군대와 많은 함정, 항공기를 보유하고있는 중국을 고려할 때, 많은 국내적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다른 여러 지역의 안전보장에 신경쓰면서 동시에 12억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중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묵인할 것이며 심지어는 일본의 핵무장까지도 묵인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면서 절대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고는 있지만 1995년에 갱신되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대하여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즉 핵강대국에 대한 차별성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의 비핵3원칙(no making, no possession, no introduction)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은연중에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만일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핵확산을 의미하며 또 하나의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1)

91)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18, No2(Fall 1993), pp.44-79., 佐佐木坦 譯, 「日本は核武装する」, 『諸君』 (1994, 4), pp.60-76.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국한해 볼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미일역전'이 출현할 가능성은 적지않다. 한 추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GNP가 6조달러 선으로 대등하게 되는 2000년의 시점에 이르면 일본은 GNP1%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이 아시아에 투입, 배치가능한 군사력(전체의 20% 정도로 추산)을 양적으로 능가하게 된다. 즉 이 지역의 군사비 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약 1.75배, 군인 1인당 군사비는 최소 1.2배, 배치병력면에서는 최대 1.5배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자위대는 핵병기 및 원양작전능력에 필수적인 항공모함을 가질수 없게 되어 있고, 현대전의 핵심인 '지위, 통신, 통제'도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같은 통제력을 계속적으로 확보, 유지하는 것이 대일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⁹²⁾

VI. 신국제질서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남북한과의 관계

1. 신국제질서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신국제질서하에서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선이 '한반도의 안정' 추구라는 점에 변화는 없다. 그러나 북한체제붕괴의 가능성과 북한핵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수정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나 한반도에서 불안정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기본정책의 수정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비무장, 무력불사용'을 기본으로 한 종래의 방위정책을 수정하여 한반도 긴급사태시 미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개입'쪽으로 방향선회를 한 점을 들 수 있다.⁹³⁾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통일된 한반

92) 정일준, 「일본의 아시아 패권주의정책과 군사대국화의 문제점」, 신용하 편저,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 p. 83.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국한해 볼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미일역전'이 출현할 가능성은 적지않다. 한 추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GNP가 6조달러 선으로 대등하게 되는 2000년의 시점에 이르면 일본은 GNP1%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이 아시아에 투입, 배치가능한 군사력(전체의 20% 정도로 추산)을 양적으로 능가하게 된다. 즉 이 지역의 군사비 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약 1.75배, 군인 1인당 군사비는 최소 1.2배, 배치병력면에서는 최대 1.5배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자위대는 핵병기 및 원양작전능력에 필수적인 항공모함을 가질수 없게 되어 있고, 현대전의 핵심인 '지위, 통신, 통제'도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같은 통제력을 계속적으로 확보, 유지하는 것이 대일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⁹²⁾

VI. 신국제질서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남북한과의 관계

1. 신국제질서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신국제질서하에서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선이 '한반도의 안정' 추구라는 점에 변화는 없다. 그러나 북한체제붕괴의 가능성과 북한핵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수정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나 한반도에서 불안정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기본정책의 수정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비무장, 무력불사용'을 기본으로 한 종래의 방위정책을 수정하여 한반도 긴급사태시 미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개입'쪽으로 방향선회를 한 점을 들 수 있다.⁹³⁾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통일된 한반

92) 정일준, 「일본의 아시아 패권주의정책과 군사대국화의 문제점」, 신용하 편저,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 p. 83.

도의 핵무장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직·간접도움으로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5년 내에 항상 5-10t의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이 플루토늄을 군사목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쉽게 미사일로 전화시킬 수있는 정교한 로켓으로 상업용 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미 실험에 성공한 H-2로켓은 미국의 최신 대륙간 미사일과 비견할 만한 것이다. 북한의 핵이 일본의 핵무장을 위한 구실이 된다면 중국의 군사력증강은 또한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위한 구실이 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든 않든간에 통일된 한국은 핵무장을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정상화를 위해 핵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헌법9조의 '전쟁포기'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최근 일본은 북한핵과 관련해 「有事時立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정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걸프전 때와 달리 일본이 인접국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요청될 경우 무력행사에 따른 해상봉쇄가 헌법상 제약으로 무리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즉 현재의 법률로는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급유가 능한 대상은 미일공동훈련중인 미군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상봉쇄, 함정수리, 기지사용 등에 나선 다국적군을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92년 6월에 이미 통과되었던 'PKO협력법안'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일본이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군사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와 중국의 군비증강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는 반면에 남북한과 중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저장을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등 동북아에서는 세계적인 차원의 긴장해소와는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신국제질서하의 한일관계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일관계에 과거와는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으나 한국의

문민정부수립 이후 조금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한일간에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은 무역역조문제와 일본의 과거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제문제인 무역역조문제에 있어서는 문민정부수립후 일단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한 문제해결의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다음으로 특기할 사항은 일본의 적극적인 방위정책 이후 양국간 군사협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4월 이병태 국방장관이 방일하여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 함정교환방문 등의 군사교류를 공식화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방위청발표로 한미일의 첫합동훈련이 나타났고 7월에는 한국군함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가게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군사면에서의 협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한일간에는 한미상호안보조약과 일미안전보장조약이라는 형태로 간접적인 연계는 갖고 있었으나 이것이 한일양국간의 직접적인 연계로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일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청산 또는 반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김영삼대통령이 올해 방일시에 언급했던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속박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발언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인 “과거의 진상규명”과 함께 적어도 우리측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것을 배상 문제의 차원으로는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한승주장관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일양국은---30여년에 걸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의존도가 다른 어느 인접국관계보다도 긴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던 과거의 양금으로 인하여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정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양국에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주변정세도 탈냉전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양국국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볼 수있는 예지와 혜안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이번 한일회담은 한일관계를 양자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과 아-태지역까지 시야에 넣은 지역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양국정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핵 문제의 조기해결에 공동대처하고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일-북한 수교교섭문제를 포함하여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제 한일양국은 탈냉전 이후의 험난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웃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상대방을 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양국정상회담은 매우 극명하게 양국국민에게 제시하였다. 한일 양국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호혜와 정의의 선린국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힘을 모아가야 한다.”⁹⁴⁾

3. 신국제질서하의 북일관계

주지하다시피 신국제질서하에 한반도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역시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이다.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은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북한측에서 제기되었다. 종래 북한측은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의 제기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한 것이었다. 단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의 제기는 결코 북한측이 ‘2개의 조선’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9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노동당,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의 3당공동선언에서는 ‘조선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⁹⁵⁾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교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89년 3월 30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타수상이 과거 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한반도 국민들에게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이었다.⁹⁶⁾ 같은 날 일본사회당의 대표단이 평양으로 출발, 북한에 이러한 정부 견해를 전달했다. 뒤이은 4월 3일, 조선노동당의 許鎡정치국위원은 일본사회당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일본정부의 관계개선노력에 주목한다고 발언했다.⁹⁷⁾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서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점은 일본으로부터의 ‘배상’ 등에 의한 자금유입이었다. 이는 91년 4월 북한의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가 訪北했던 日朝무역 및 동아시아무역연구회의 開發輸入促進先遣團에 대하여 ‘소련, 동구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경화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 이후는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와 경제, 무역관계를 진척시키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표명한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북한측은 일본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以前에라도 경제 및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다.⁹⁸⁾

94) 『韓國日報』, 1993. 11. 10.

95) 『朝日新聞』, 1990. 9. 29.

96) 『朝日新聞』, 1989. 3. 30.

97) 『日本經濟新聞』, 1990. 4. 4.

98) 日朝貿易會, 『朝鮮側の 開發輸入希望對象---對日經濟交流の 促進に 關する 意

이리하여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 자민당과 일본 사회당의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북한측에서 제기하여 이후 1991년 1월(평양), 3월(동경), 5월(북경), 8월(북경), 11월(북경), 1992년 1월(북경), 5월(북경), 11월(북경) 총8회의 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단절된 상태이다.

이 8회 동안의 회담에서 나타난 일본과 북한의 대립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북한의 핵문제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북한이 IAEA사찰을 받아들여 핵무기개발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의 진전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북한측의 입장은 핵사찰문제가 북일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

두번째가 외교관계설정의 문제, 즉 일본과 구대한제국간의 '을사오조약'에 대한 의견차이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이 조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라는데 반하여 북한은 이 조약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세번째는 과거침략행위에 대한 배상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한일조약과 같은 '청구권방식'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북한측은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느것이나 사실상 외교상의 레토릭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서로간의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본과 북한은 수교할 것이 틀림없다.

VII. 일본의 동북아전략이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과 대응전략

1. 신국제질서하의 동북아정세.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적극적 방위정책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한일간의 군사협력관계 또한 북한을 자극하여 이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시킬 여지가 많다.

우선 본논문의 앞부분에서 냉전후 세계질서에 있어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경제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따라서 미소간의 군축을 필두로 전세계

이리하여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 자민당과 일본 사회당의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북한측에서 제기하여 이후 1991년 1월(평양), 3월(동경), 5월(북경), 8월(북경), 11월(북경), 1992년 1월(북경), 5월(북경), 11월(북경) 총8회의 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단절된 상태이다.

이 8회 동안의 회담에서 나타난 일본과 북한의 대립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북한의 핵문제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북한이 IAEA사찰을 받아들여 핵무기개발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의 진전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북한측의 입장은 핵사찰문제가 북일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

두번째가 외교관계설정의 문제, 즉 일본과 구대한제국간의 '을사오조약'에 대한 의견차이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이 조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라는데 반하여 북한은 이 조약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세번째는 과거침략행위에 대한 배상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한일조약과 같은 '청구권방식'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북한측은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느것이나 사실상 외교상의 레토릭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서로간의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본과 북한은 수교할 것이 틀림없다.

VII. 일본의 동북아전략이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과 대응전략

1. 신국제질서하의 동북아정세.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적극적 방위정책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한일간의 군사협력관계 또한 북한을 자극하여 이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시킬 여지가 많다.

우선 본논문의 앞부분에서 냉전후 세계질서에 있어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경제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따라서 미소간의 군축을 필두로 전세계

가 군비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만은 <표-9>에서 보다시피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9>

국가	국방비(1990) (1985년 가격기준, 100만달러)	국방비(1991)
중국	5,693	12,025
일본	16,311	16,464
북한	5,010	5,328
한국	6,637	6,359
대만	5,304	5,474

資料: 『防衛年鑑 1992』, p. 469와 『防衛年鑑 1993』, p. 470에서 재구성.

특히 중국은 1992년초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27전투기 24대를 도입한데 이어 48대분의 추가도입과 함께 SU31 48대, T72탱크, 일류신 장거리 수송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걸프전을 통해 기술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며 이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구소련의 무기를 구입하여 군장비의 현대화를 이루려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프랑스에 핵발전기술협력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건조중인 최신형공격형 항공모함인 와르야그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최초로 보유하게 될 이 항공모함에 주목해야될 이유는 현재 무력충돌가능성이 가장높은 지역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南沙群島에서 중국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냉전종식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海南島를 기지로 하는 해군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태진전에 따라서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상황을 급격하게 뒤바꿔 놓을수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연합제국(ASEAN)뿐만 아니라 일본도 사태추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군비증강이 다른 무엇보다도 대만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만은 몇년 전부터 즐기치게 프랑스로부터 무기도입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의 이러한 군비증강은 대만이 군비를 증강하도록 자극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군비강화에 대하여 일본은 러시아가 중국에 무기판매를 계속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한편 미국에도 이러한 뜻을 계속 전달하여 미국이 이에 동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일본의 적극적 방위정책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오히려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의 대응전략

우리의 대응전략은 정치-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이념과 국가목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정치-안보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분쟁의 방지와 지역의 긴장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의 하나로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이다. 이는 실제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⁹⁾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이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또한 CSCE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 CSCA)를 구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⁰⁰⁾ 중국도 과거에는

99) '협력안보'의 개념은 그 특징상 적을 가상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집단안보나 집단자위동맹 등과 엄격히 구분되며 힘에 의존한 문제해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규덕,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民族統一研究院, 1993. 9), p. 3.

100) 自由民主黨政務調査會, 『提言「冷戦後の 安全保障政策」』(1992. 12), p. 10.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구상이 중국포위전략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으나 냉전종식 이후 지역분쟁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창설구상에 대해 점차 공감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분단문제 등 역내 주요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자간 안보협력구상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¹⁰¹⁾ 마지막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지역국들의 군비경쟁과 북한의 핵개발문제 등 동북아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한미동맹과 일미동맹이라는 二國間 안전보장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二國間 안전보장조약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다자간안보협력체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의 성격을 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지역적 안전보장협력의 틀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핵카드'로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열었다.

일본의 북한핵에 대한 입장은 다분히 원론적인 것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추수하는 입장에서 그치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에 맡기고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부문의 교류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북한핵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의 궤적이 보여주듯이 북한핵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핵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만 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는 생각이다. 즉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쟁으로 문제해결을 해서

101) 홍규덕, 앞의 글, p.5.

는 안되며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된다.’ ‘북한핵문제는 북미간, 또는 여기에 IAEA 까지 가세한 삼각체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간의 대화는 핵 문제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차원으로까지 파급되어서는 안된다.’ 는 등의 원칙적 입장의 선언만으로 충분하리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장한다면 이는 최상의 시나리오로서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당연히 재고되어질 수 밖에 없다. 즉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핵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대신 북의 체제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즉 북한정권의 위기감으로 나타난 것이 북한의 핵카드라면 북측으로서도 당연히 화해, 공존, 평화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의 한 방안으로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적 측면

우리의 목표가 ‘평화통일’에 의한 ‘한민족 공동의 번영’이라고 할 때 북한의 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사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최소목표로서 상정했던 체제유지가 오늘날에는 정치권력의 유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도 경제발전이 중요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경제제도의 구조조정과 합영법, 경제특구, 나진-선봉 등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북한경제는 3難, 3低, 3惡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한마디로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난, 외화난, 물품난의 3가지 어려움과 근로의욕, 국제경쟁력, 기술수준의 저하, 그리고 생활환경, 제품의 질, 기계설비의 낙후가 그것이다.¹⁰²⁾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의 산업문제에서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역시 중공업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의 결과 나타난 경공업과 농업,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이 취약성, 그리고 산업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이다.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김일성 이후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일간의 문제는 경제협력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 수교문제 또한

102) 이형구,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기업의 자세」(가톨릭실업인회 세미나발표문, 1994. 8. 31) pp. 5-6.

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90년 9월 당시 집권자 민당과 사회당이 합동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노동당과 국교의 조기수립을 피한다는 3당공동선언은 시기적으로 한소수교 直前이었으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기 2년 반 전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8차에 걸친 회담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는 향후 북일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금의 북한 핵문제가 전적으로 북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북일관계의 진전은 불을 보듯 뻔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미국에 의해 자신의 체제유지를 보장받는다면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취할 조치라는 것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겨냥할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인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자기 개혁개방할 경우 오히려 체제불안의 요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외경제개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리라 상상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경제체제의 개혁없이 국지적 개방만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이 있어야 하나 시장기구의 도입과 분권화를 확산할 경우 대두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의 위험이 이 개혁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가정할 때 한민족의 번영과 평화는 북한이 얼마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긴장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남한을 소외시킨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즉 북한의 대일경제관계의 확대는 곧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산업과 교역상의 분업체계, 사회간접자본의 연계문제, 시설과 기술상의 표준화 문제, 부존자원과 환경자원의 사용문제 등 많은 분야의 문제들이 남북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를 확대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 남한과의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에 장기적인 경제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남북한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GNP가 약 16:1, 1인당 GNP는 약 1:8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구매력 수준으로 비교를 하면 더욱 심각해 우리의 1/32 수준이며 대외거래 역시 작년 기준으로 북한은 남한의 1/6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우리의 1/31, 전체규모면에서는 1/60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경제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개발시키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매년 1천 2백 3십조를 10년간 투자하면 10년후 북한경제를 오늘의 우리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1천억달러씩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 GNP의 약30%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측에 매년 투자하던 액수가 공교롭게도 1천억 달러 정도였으며 독일의 경제규모가 우리의 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정도가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5배나 클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문제의 해결방법은 우리의 경쟁력을 빨리 키우는 방법과 남 북한경제가 상호이득을 통해 연계,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¹⁰³⁾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의 과제는 그다지 큰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만 도움을 주는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간에 의한 교역과 투자는 상호이득이 있을 때만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원조형식의 지원이어서는 안된다. 경제통합 또는 통일로 지향할 수 있는 북한의 개혁과 변화가 유도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경제협력에서 민간부문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다. 민간의 대북한교역 또는 투자는 철저히 상호이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정부가 민간의 대북한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또는 사회간접자본면에서 교역환경개선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금융, 조세 등의 면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 흔히 보여왔던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자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것이며 남한의 대북한투자기업들도 정부의 보상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¹⁰⁴⁾ 물론 핵무기개발문제 등이 현안으로 남아있지만 그

103) 이형구, 같은 글, pp. 6-7.

104) 이영선, 「과도기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의 방향」(대륙연구소 제58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 pp. 3-6.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통일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적 접근은 남한경제력의 확대이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다. 새로운 정치이념과 국가전략의 제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새로운 정치이념의 구축과 명확한 국가전략의 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금의 세계가 냉전체제하에서 구축되었던 정치이념과 정치적 가치, 정치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회주의는 붕괴했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지역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국한시켜 본다면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등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 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이념을 재편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우리의 국가전략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목표하에 우리나라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일관된 경제협력구상 또는 체계화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한일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한일간의 문제에서 그동안 쟁점사항이 되어왔던 것은 역시 과거사청산문제와 무역역조문제라 할 수 있다. 과거청산의 문제는 65년 한일관계정상화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일관계의 문제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비자민연립정권 대두후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사과의사의 표명이 있었으며 한국측도 신정권수립후 대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신축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즉 김영삼대통령이 올해 3월 24일 일본왕궁만찬에서 “더이상 과거가 미래를 속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으로서 이미 과거문제를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는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국가간 외교관계에서 이를 더 이상 문제삼는다는 것이 다른 분야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수준에서의 문제해결은 아직 미흡하다. 과거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 적어도 진상규명과

일본국회차원의 공식적 사과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국민차원에서의 바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해결책은 정부와 민간차원의 이중적 성격을 띤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즉 공식적인 정부차원에서는 과거문제를 덮어둘 수 있을 지라도 적어도 민간차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정부가 이를 막을 필요도, 저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역역조문제는 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를 경제 자체의 논리에 의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한국측 또한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논리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사회에서 관료들이 민간부문 특히 기업부문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관료들이 개입한다면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것이다. 이를 우리는 미일무역협상에서 자주 목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산반도체의 일본국내시장점유율 수치목표설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무역역조문제에 대해서도 경제논리에 의한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노력 또한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과거청산문제와 무역역조문제가 사실상 문제의 일면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한일관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과거청산, 전후보상문제 등이지만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양국간 국력차가 더욱 심화되고 일본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은연 중에 현실논리를 강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다. 즉 과거청산문제와 무역역조문제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측은 유감스럽게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국력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의 장기전략은 무엇인지, 대응태세는 어떻게 갖추어야 될 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대중국관계나 대러시아관계, 그리고 특히 대북한 관계에서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와 민간부문을 망라한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먼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수립으로부터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金圭倫, 『東北亞의 新經濟秩序』(民族統一研究院, 1993)
- 김성훈, 김태홍, 심의섭, 『동북아경제권-21세기국가경영전략』(比峰文化社, 1992)
- 김장권, 「일본의 對소, 對중관계」, 現代日本研究會, 『日本研究論叢』(1993)
- 김진기, 「日本防衛産業政策의 決定構造와 變化에 關한 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몽골편람』(1993)
- 신용하 편저,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김영사, 1994)
- 윤영관,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美關係」, 『일본평론』(사회과학연구소, 1993)제7집.
- 윤영관, 「일본경제의 국제화」, 최상용 편, 『일본, 일본학』(오름, 1994)
- 外交安保研究院, 『主要國際問題分析』(1993. 10. 20.)
- 伊豆見元, 「日本の 對韓半島政策」, 李甲允 外, 『現代日本の 政治』(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6)
- 이영선, 「과도기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의 방향」(大陸研究所 제58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
- 이형구,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기업의 자세」(가톨릭실업인회 세미나 발표문, 1994. 8. 31), pp. 5-6.
- 이종훈, 「北韓-日本の 關係개선과 經濟협력 움직임」, 『季刊 北韓研究』 1991년 봄호 (서울: 大陸研究所)
- 정구종, 「GNP 1.5%, 세계3위의 일본군사비」, 『일본평론』 제1집 1990. 5 (서울: 사회과학 연구소)
- 한승주, 「한국외교의 진로」, 정일영 편,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나남, 1993)
- 황혜란, 「일본기술혁신체제의 변화」, 『동향과 전망』 1993 봄, 여름 합본호 (통권제19호)(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백산서당, 1993)
- 홍규덕,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民族統一研究院, 1993. 9)
- 梶村秀樹, 金相泰 編, 『日中經濟交流の 現狀と 展望』(白桃書房, 1989)

- 海外經濟協力基金 編,『海外經濟協力便覽』(1987)
- 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 經濟と 貿易の 展望』(1990,10월)
- 小川 和男,菱木 勤治,『還日本海經濟圏とロシア極東開發』(日本貿易振興會,1994)
- 日中經濟協會,『日中經協ジャーナル』(1993年 11月號)
- 大久保 勳,今井 理之,『中國經濟 Q & A 100』(亞紀書房,1994)
- 中馬清福,『軍事費を讀む』(岩波書店,1986)
- 大藏省主計局,『財政制度審議會第一特別部會資料』(1992.11.19.)
- 石原愼太郎,盛田昭夫 共著,『'NO'と言える日本』(光文社,1989)
- 石原愼太郎,渡部昇一,小川和久 共著,『それでも 'NO'と言える日本』(光文社,1990)
- 石原愼太郎,江藤淳 共著,『斷固'NO'と言える日本』,황원근 옮김,『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世界日報社,1992)
- 『資料戰後二十年史』(東京:日本評論社,1966)
- 佐佐木隆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東京:岩波書店,1988)
- 秦郁彦,『官僚の研究』(講談社,1983)
- 齊藤 眞,永井陽之助,山本 滿 編,『戰後資料 日米關係』(日本評論社,1970)
- 中村隆英 著,『日本の 經濟統制』(日本經濟新聞社,1974)
- 自由民主黨政務調査會,『提言「冷戰後 安全保障政策」』(1992.12)
- 自由民主黨 國際社會における 日本の 役割に 關する 特別調査會,『國際社會における日本の 役割-安全保障問題に 關する 提言-』(1993.2.3.)
- 日朝貿易會,『朝鮮側の 開發輸入希望對象---對日經濟交流の 促進に 關する意向』(開發輸入促進先遣團 報告書)日朝貿易會(1991.6)
- (社)政府資料等普及調査會資料センター,『円高と海外直接投資--アジア地域を中心に』,
- NIRA政策研究(1994), Vol. 7 No. 1.
- 『軍事民論』 55. (1989年 1月)
- Bruce M. Russett,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85, Vol.39, No.2.
- C. Johnson, "Japan in Search of a 'Normal' Role," *Daedalus* 121.4(Fall 1992).
- Danny Unger, Paul Blackburn ed., *Japan's Emerging Global Role*(Boulder & London:

- Lynne Rienner Publisher, 1993).
- Hans H. Baerwald, *The Purge of Japanese Leaders under the Occup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 Haruhiro Fukui, "Postwar Politics, 1945-1973," in Peter Dus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6. (Cambridge, 1988)
- Jon Halliday, *A Political History of Japanese Capitalism* (New York: Pantheon House, 1975)
- Jon Halliday and Gavan McCormack, *Japanese Imperialism Today*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3)
- Karel van Wolferen,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People and Politics in a Stateless Nation* (London: Macmillan, 1989)
-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佐佐木坦 譯, 「日本は核武装する」, 『諸君』(1994, 4)
- Kuniko Inoguchi, *An Emerging Post-Hegemony system* (Tokyo: Chikuma shobo, 1987)
- L. Thurow, *Head to Head* (William Rorow Press, 1992)
- Leon Anderson, *Japanese Rage-Japanese Business & Its Assault on the West* (1992)., 鈴木主税 譯, 『拜復*石原慎太郎 殿』(東京: 飛鳥新社, 1993).
- Reinhard Drifte, *Arms Production in Japan : The Military Applications of Civilian Technology*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6)
- Richard Holbrooke, "Japan and the US: The Unequal Partnership,"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 Susan Strange,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4 (Autumn 1987).
- Shoichi Kobayashi, "Pan-Japan Sea Economic Cooperation: Japanese View," to b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umes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The Political Economy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Sejong Institute, August 4-5, 1994).

Takashi Inoguc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1989. 1.

Takashi Inoguchi, "The Legacy of Weather Cock Prime Minister," *Japan Quarterly* 1987, Vol.34, No. 4.

Tetsuya Kataoka & Ramon H. Myers, *Defending an Economic Superpower: Reassessing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9)

Tsuneo Akaha & Frank Langdon, "Japan and the Posthegemonic World," Tsuneo Akaha & Frank Langdon ed., *Japan in the Posthegemonic World*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SIPRI Yearbook 1993

『朝日新聞』

『防衛年鑑 1992』

『防衛年鑑 1993』

『讀賣新聞』

『毎日新聞』

『日本經濟新聞』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韓國日報』

統一韓國의 「이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

責任研究員：全宰鎬(西江大)

목 차

<요 약 문>	305
I. 서론	308
1. 문제설정	308
2. 기존연구의 검토	310
가. 역사적 접근	310
나. 이념적 접근	311
II. 민족과 민족주의의 이론적 접근	313
1. 개념의 문제	313
2.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경향	314
3.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317
가. 민족의식의 기원	317
나. 민족국가형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319
다.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321
4.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의 등장	324
가. 민족의식의 생성과정	324
나.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등장	325
III. 남북한의 민족주의	331
1. 해방이후의 민족주의	331
2. 한국(남한)의 민족주의	333
가. 공식 민족주의	335
나. 대항 민족주의	339
3. 북한 민족주의	341
가. 공식 민족주의의 등장	343
나. 공식 민족주의의 변화	347

IV.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350
1. 정치적 원리	351
2. 경제적 원리	354
3. 사회문화적 원리	356
V. 결론	357
※참고문헌	359

<요 약 문>

이 글은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를 중심으로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의 내용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최근의 국제, 국내적인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말 이래 국제질서의 재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큰 시련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탈냉전과 경제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는 우리민족의 능동적 역할 여하에 따라 통일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가 될 민족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원리를 준비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역사적 접근과 이념적 접근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이 두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즉 민족주의의 보편성과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종합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그러면 민족주의의 보편성과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먼저 민족주의의 보편성을 찾기 위해 필자는 2장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다시 이 장에서는 최근의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경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편협성을 지적하였고, 민족주의의 보편성을 찾기 위해 서구에서 민족주의의 등장과 제3세계로의 전파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족이란 전세계적으로 근대 이후 등장하였고, 그것은 프랑스혁명에서 비롯된 보편주의 - 자유, 평등, 박애 - 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근대 이후 한국민족주의의 역사를 제3세계의 민족주의와 대비함으로써 한국 역시 제3세계 민족주의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3장에서는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찾기 위해 해방이후와 남북한 민족주의의 역사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근대 이후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근대민족(국민)국가형성(nation-state formation)과 근대화(modernization)였고, 남북의 분단으로 전자는 다시 대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의 동등성을 담지하는 민주주의와 민족국가의 완성을 의미하는 통일,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다른 민족국가들 동등성을 확보하는 대외적 자주로 구분하고, 후자는 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외적으로는 자립경제라는 과제로 나누어 한국민족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분단극복과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민족내부의 힘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미소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당시의 냉전적 세계체제의 희생물이 되었고, 이를 거부하던 민족주의 세력은 세력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유래된 한국민족주의의 분열증적 성격이 가져온 최악의 결과였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쳐 남북에는 반세기 동안 상이한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강력한 국가에 의한 상호대립과 적대는 정서적인 하나의 민족(한민족)과 실질적인 두 민족(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모순된 현상을 가져왔다. 더우기 민족이 익보다 체제이익이 우선히 되는 상황에서 통일이나 민주주의, 대외적 자주, 자립경제와 같은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단지 근대화의 과제는 남한에서, 대외적 자주는 북한에서 어느정도 달성되었다.

체제대결논리의 우세로 민족주의의 약화 현상 속에서도 남북한에서는 민족주의가 등장했는데, 먼저 남한에서는 박정희정권시기에 경제발전이라는 민족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국가와 지배계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식(official) 민족주의'가 등장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통일과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 '대항(counter) 민족주의'가 등장하였다. 전자는 경제발전이라는 과제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자립경제라는 측면을 무시했다는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후자는 민주주의의 증진에 큰 기여를 했지만 80년대 말 이후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일부세력의 친북노선으로 그 세력을 잃게 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대외적 자주, 경제자립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60년대 초, 중반 주체사상의 형태로 공식민족주의가 등장했지만, 67년 이후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민족주의적 성격이 탈각되었고, 80년대 후반 이후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언술은 그것이 포괄하는 대상을 북한주민만으로 축소함으로써 통일을 거부하는 논리로 축소되었다. 더우기 북한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대내적 민족주의의 과제는 전혀 진전이 없음으로써 남북의 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근대 이후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였던 민족국가형성은 통일한국정부의 구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통합을 넘어선 진정한 통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질화된 두 민족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에서 정치적 원리는 민주주의(평등), 다원주의, 국제주의가 되어야 하며, 경제적 원리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 사회문화적 원리는 민족특수성의 고양이어야 한다.

결국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통일이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민족 특수성의 고양을 통해 대내적으로 완성되며, 여기에 대외적으로 국제주의가 첨가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 문제설정

최근의 국제적 변화는 한반도의 지축을 다시 한번 흔들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일어났던 정치적 변화들, 즉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그로 인한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은 세계체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한반도의 장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19세기 말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는 국제적 변화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한민족은 취약한 내부적 역량으로 인해 국제정치적 변화에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는 국제정치적 변화를 우리의 내부역량에 의해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최근의 변화가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즉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한반도의 분단을 규정하던 냉전질서의 와해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이것은 2차대전 이후 한반도의 구조를 지배했던 외적요인이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에 큰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해방후 한민족의 민족주의적 목표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았던 것이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던 국제체제였다. 그리고 40여년 동안 이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민족의 목표인 통일은 그 길을 열고 닫고 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한반도구조의 내적요소, 즉 한민족은 남북한 지배세력의 기득권 유지 놀음에 넘어가 그 역량을 모으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양극구조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한반도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이제까지 적대적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과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주변국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교차승인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현상고착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족내부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정부의 정책 및 국민의 의지가 통일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경제적 측면의 변화 역시 한반도의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사회주

의권의 붕괴는 북한경제에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사회주의권의 분업체계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었던 북한에게 동반자들의 탈락은 이미 1980년대 이후 하향곡선을 긋던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까지의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권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개방은 필연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개방이 북한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분명한 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자본·금융의 이동, 우르과이라운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무역체계의 수립, 초국적기업의 활동, 유럽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자본주의경제의 급격한 변동은 남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한 역시 더이상 국가에 의존하는 자본주의적 발전은 지속할 수 없을 것이며, 남한경제의 '국제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남북한 경제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통일의 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남한의 자본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노동력과 지리적 근접성은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남한자본에게 가장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자본의 끊임없는 확대재생산 욕구는 남북경제교류의 물꼬를 틀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최근 남한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 역시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권력을 장악한 민간정부는 과거처럼 국지적 냉전을 정권유지의 근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문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말한 국제적 변화와 함께 국내적 정통성은 통일에 대한 민간정부의 운신의 폭을 확대시켜 주었다.

결국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는 한반도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통일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이념)를 준비하려고 한다. 필자는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로서 적절한 것이 민족주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뛰어넘는 상위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통일이 가까이 다가온 현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이데올

로기로 기능할 민족주의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를 서술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체제간의 공통성을 추출함으로써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결합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족주의의 보편성은 근대 민족주의의 등장 이후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은 근대 민족 등장의 과정과 과거 및 현재 남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민족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III 장에서는 남북한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주의의 역사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IV 장에서 앞의 고찰들을 기초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원리를 추출하겠다.

2. 기존연구의 검토

가. 역사적 접근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역사적 접근과 이념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역사적 접근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연구들이며, 이념적 접근은 한국민족주의의 특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다루는 연구들이다. 전자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해방 이전에 대한 연구와 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의 연구, 그리고 그 이후 남북한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해방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개항이후의 시기를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점령시기를 민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연구들은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¹⁾ 그런데 이시기의 연구대상이 주로 사회 지배세력들의 활동이나 사건, 그리고 주요한 인물들을 다루었지만, 민족형성의 과정 및 민족주의의 전파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거의 없다.²⁾ 이것

1)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연구」(서울: 청계연구소, 1989);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89),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1);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서울: 서울대출판부, 1989); 이정식, 「한국민족주의 운동사」(서울: 미래사, 1982); 조동일,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89).

2) 한국민족주의의 기원을 고찰한 주목할만한 연구는 Kim Yong-Jick, "Formation of a Modern State and National Social Movement in Modern Korea: March First Movement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2); 김용직,

은 연구자들이 근대 이전에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가 존재했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필자는 이러한 당위론적 사고가 한국민족주의 연구의 지평을 가두어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루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해방 8년사’로 지칭되는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의 시기를 다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당시의 다양한 정치세력을 좌·우파 또는 국제주의적 세력 대 민족주의 세력의 구도로 설정하고, 이들의 정치적 활동을 다루고 있다.³⁾ 당시의 정세가 복잡한 만큼 당시의 연구들도 다양하다.

그러나 5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의 과잉지배에 의해 민족주의적 주장이 터부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아래서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⁴⁾

나. 이념적 접근

민족주의의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접근은 역사적 사실(fact)를 발굴하고 입증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별히 민족주의의 연구로서의 이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부분 1차자료들의 발굴과 정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의 제목에 붙어 있는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수식어나 접미어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족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하고 있다. 즉 40여년간 분단한국사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민족의 민족주의와 비교를 통해 그 한국적 특성을 밝혀내고, 그 특성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다.⁵⁾

“한국민족주의의 기원,” 「사회비평」 제11호(1994).

3) 이런 관점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 한길사에서 5권으로 나온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다.

4) 해방후 남한에서의 민족주의 연구의 개괄적 소개는 김학준,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1994)를 참조하십시오.

5)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종철, “민족주의의 개념과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논총」, 제2권, 1호(1993); 최장집, “한국민족주의의 이해,” 「탈냉전시대와 새로운 정치질서」, 동곡김하룡박사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서울: 나남, 1994).

북한에 대한 연구에서도 '민족주의'란 용어는 북한의 대외관계에서의 주체성이나 독자적인 자립경제를 지칭하는 수식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북한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북한정권과 사상의 성격변화를 고찰하고 있다.⁶⁾

한편 통일을 대비해 한국민족주의의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은 한국민족주의가 지녀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 따라서 이런 논문들은 대부분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평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런 논문들의 특징은 통일한국의 구도를 체제와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여, 후자를 상위개념으로 후자를 하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는 제3의 대안을 검토하여 대부분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연구들은 당위론적 관점에서 민족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자유, 평등, 질서, 발전을 보장하는 체제여야 한다⁷⁾거나 자유주의, 평등주의, 복지주의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이런 테제 형식의 당위론은 통일의 구체적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들이 통일이 가시거리에 보이지 않은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구체성을 결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사적 접근과 이념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한다. 즉 민족주의의 역사 속에 등장한 보편성과 한국의 역사속에서 나온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의 구성원리를 찾겠다.

6) 김연각,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분석,"(서울대 정치학과 박사논문, 1993); 서재진,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1993); 이종석,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1994).

7) 진덕규, "통일된 민족공동체상과 영역별 통일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I)」(21세기 위원회, 1991).

8) 김철수, "통일한국의 미래상: 정치분야,"; 변형운, "통일한국의 미래상: 경제분야,"; 김윤환, "통일한국의 미래상, 사회분야." 「통일정책」, 제5권, 제4호(1979).

족이나 국가의 이해보다는 개인의 이해나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념체제를 불문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1.1%,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장된다는 전제아래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8.9%였다.¹³⁾ 따라서 모든 한민족이 민족주의적인 당면과제인 통일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통일을 바라지만, 그 통일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모든 한민족에게 통일을 위해 헌신 또는 희생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더우기 한반도에서 분단국가는 그 형성 이후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 모태인 냉전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독립체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냉전적 세계질서의 와해, 세계질서의 다극화 및 국익 중심주의가 대두했음에 비해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체제대결적 분단국가가 더욱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시말해 국가로서 남북한 분단국가의 완성, 즉 민족분단의 고착화는 제국주의 세력의 의도 혹은 세계체제의 강요가 아니라 분단된 국가의 자기논리,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라는 내적인 발전논리에 기인한 것이다.¹⁴⁾

한민족의 정서적, 감정적 일체감, 당위적 통일관과는 달리 분단국가의 완성이라는 현실은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혼란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바라보아야 할 뿐 아니라, 남북한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야만 우리는 민족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지닐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역사 속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2. 기존의 연구경향

초기의 민족주의 이론가들- 한스 콘, 칼톤 헤이즈, 휴 시튼 왓슨 - 은 민족을 진화론

방후 남한의 우익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전선,” 김성보, “북한의 민족주의세력과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비평』, 제16호(봄, 1992).

13)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중보판(서울: 서강대출판부, 1986), 제36장, “한국인의 통일의식변화추세,” pp. 681-700.

14)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 주최 대토론회 발표문(1994), p. 14.

적으로 사고하였다. 인간의 집단생활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사회집단은 가족, 친족, 부족(tribe) 등으로 발전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은 그 최종형태, 즉 세계공동체나 아니면 그것의 전 단계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민족은 인간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토양에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를 만드는 집단으로 이해되었다.¹⁵⁾ 즉 민족의 원(原)재료는 이미 선재(先在)해 있었던 것이고, 민족주의는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을 깨닫기만 하면 등장하는 당연스런 의식상태였다. 물론 이들도 근대적인 발전 과정에서 민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이들과 민족이 고대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는 영속주의자들(pri-modialist) 사이에는 커다란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사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접근한다. 이 연구들은 근대화론의 연구로부터 그 지적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를 자본주의의 발전, 산업화, 도시화, 정치적 동원, 세속화, 대중교육, 과학의 발전과 같은 과정이 지칭하는 '근대화'(modernization)에 의해 출현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런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인 겔너(E. Gellner)는 민족주의를 산업화와 근대화와 관련해 등장한 이념이라고 본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잠식하여 그 안에서의 기능의 균형과 연결망들을 교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들을 고르지 못하게 때려 이들에게 각기 다른 정도의 차등적인 충격을 준다. 전자에 있어서 산업화와 근대화는 많은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뿌리뽑힌 사람으로 만든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 공백을 메꾸어줄 문화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 공백에 문화를 만들고 이것을 표준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민족주의를 고안해낸다.

다른 한편 산업화의 불균등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계층화 체계에서 뿌리뽑힌 인텔리겐차와 노동자들은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시정하려고 한다. 이들이 새로운 민족국가를 형성하려 할 때 민족주의는 이들에게 이념적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겔너는 '민족주의는 민족들이 자의식에 눈뜬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없는 곳에 민족을 발명해낸다'고 주장한다.¹⁶⁾

15) 최장집, *op. cit.*, pp. 77-78.

16) E.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c Blackwell, 1983).

베네딕트 앤더슨(B. Anderson)은 마르크스주의의 도식적인 경제적 해석을 비판하고 민족주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라는 그의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그는 민족주의 내지는 민족의식이 등장하고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에게서 민족은 '원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 정치공동체'일 뿐이며, 민족주의의 등장은 여러 요소들, 즉 자본주의, 기술(인쇄술), 인간언어의 다양성이 결합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은 자본가들과 서적의 대량출판을 결합시켰고, 이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식(민족주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상이한 계층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민족주의의 유형은 언어 집단을 중심으로 부르주아지가 주도한 대중(mass) 민족주의, 대중민족주의에 위협을 느낀 반동적인 지배계층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만든 공식적(official) 민족주의, 그리고 식민지 현지인 엘리트와 지배계층이 유럽의 두 유형을 결합시킨 식민지(colonial) 민족주의로 분류하고 있다.¹⁷⁾

일생동안 유럽의 19세기와 노동계급의 문제를 연구했던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홉스보움(E. Hobsbawm)은 민족의 근대성과 민족주의의 인위성에 특별히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는 1870년에서 1914년까지 유럽에서 등장한 민족적 전통의 폭발, 즉 국기, 행진, 기념비, 협회, 국가, 의복 등과 상징주의에 대한 강조가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계급투쟁을 희석시킬 의도로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명(invention)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위로부터의 현상으로만 본 겐너와 달리, 그것이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현상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¹⁸⁾ 또한 그는 19세기 이후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를 고찰하여 민족개념의 변천, 민족주의의 변천, 특히 다른 이념들과의 접합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였다.¹⁹⁾

이상의 학자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민족이 이전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아주 오래되고 잠재적이고 동면하는 힘의 각성이 아니라 근대의 산물이며, 민족주의 역시 사회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하나의 방법을 지칭하는 정치적 이념 및 신조라고 보는

17)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2nd ed. (London: Verso, 1991).

18) E. Hobsbawm & T.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19) E.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점이다. 20)

한편 영국의 사회학자 스미스(A. Smith)는 이데올로기와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가 근대적 현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족을 단순히 근대의 발명물 또는 구축물로 보는 견해에는 반대한다. 21) 그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공통의 역사적 문화와 생활양식을 지칭하는 종족(ethnie)에 기반하여 등장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연구에 있어서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종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 중 그 국가내에 핵심종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민족형성과 민족주의가 성공하였고, 이것이 없는 지역에서는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22)

3. 유럽 민족주의의 역사

유럽에서 민족국가는 프랑스혁명 이후 19세기의 산물이지만, 민족국가형성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중세를 마감시킨 지리상의 발견과 자본주의가 등장한 16세기 이후부터 유럽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민족국가의 근본인 민족의식의 등장 배경을 앤더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16세기 이후 민족국가등장에 토대를 제공해 준 경제(자본주의), 정치(절대왕정), 사회(부르주아의 등장과 시민혁명)적 변화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민족국가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다.

가. 민족의식의 기원

민족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민족국가형성의 전제조건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주로 관심을 기울일 뿐 민족의식에 대해서는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족의식은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즉 근대 이전 유럽에서는 민족의식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족이라는 개념조차도 최근과 다르게 사용되었다. 특히 민족의 개념은 19세기 이전에는 출신, 혈통, 종족, 사회집단, 그리고 이방인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19세기 중반 이후에야 비로서 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3)

20) 최장집, *op. cit.*, p. 79.

21) A.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Oxford: Basil Blackwell, 1986).

22) A. D. Smith,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John A. Hall ed., *State in History*(Oxford: Basil Blackwell, 1986).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족국가의 뿌리라고 지칭되는 레그눔(regnum), 곧 왕가 또는 왕국은 인종적 단위도, 문화적 단위도, 그리고 지리적 단위도 아니었으며, 국가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왕권 중심적인 것으로서 개인적 충성의 강조와 함께 공권력의 사취가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 이전 유럽에서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는 어떠한 동질적 유대도 갖고 있지 않았다.

① 문화적 근원

민족의식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이전까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던 세 가지 근본적인 문화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첫째, 특정경전언어(라틴어)는 진리의 뉘 수 없는 부분이므로 존재론적 진리와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는 개념, 둘째, 사회는 상위의 중심부- 다른 인간과 다르고 우주적(신적) 형태의 섭리에 의해 지배하는 군주-를 중심으로 그것의 밑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된다는 믿음, 셋째, 우주관과 역사가 구별되지 않고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시간의 개념이다.

그러나 지리상의 발견, 과학기술의 발전, 자본주의의 발달,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르네상스 등 15-18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이 개념들은 쇠퇴한다. 즉 신성한 종교공동체의 붕괴는 신성한 언어의 격하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르네상스는 지방어(vernacular language)의 대두를 가져와 민족어(national language)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왕조체제의 붕괴는 신성한 군주제의 합법성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시간 개념에서 혁명이 일어나, 중세적 시간개념- 사건을 동시에 현재, 과거, 미래에 위치시키며, 신적인 섭리를 통해 과거를 미래로 현시-은 사건을 시계와 달력에 의해 계산되는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homogeneous empty time)으로 변화한다. 민족의식은 바로 이러한 세 개념들이 쇠퇴한 시간과 장소에서 등장했다.²⁴⁾

② 민족의식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러한 문화적 개념의 변화와 동시에 출현한 또 다른 강력한 전환, 즉 '인쇄 자본주의'는 민족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쿠텐베르그의 발명 이후 자본주

23) Hobsbawm, *op. cit.*, chap. 1.

24) Anderson, *op. cit.*, chap. 2.

의가 대량생산한 첫 상품인 서적과 18세기에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을 통해 자치체(communal)의 행진을 정확히 기록한 '하룻동안의 베스트 셀러'인 신문은 모두(신성한 엘리트의 언어인) 라틴어의 지배를 붕괴시켰으며, 지방 행정어를 포함하여 지방어의 전파를 가속화시켰고, 새로운 대중 독자층을 창출함으로써 기대하지도 않게 신속히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다.

이런 발전들 뿐 아니라 앤더슨의 표현대로 '새로운 공동체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든 더욱 중요한 역할은 생산체계와 생산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자본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인쇄술), 그리고 인간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숙명성의 연속적이고 폭발적인 상호작용이었다'. 즉 민족의식의 기원은 특정 언어와 영토가 아니라 숙명성, 기술, 그리고 자본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였다.²⁵⁾

특히 인쇄물의 대량생산은 중세공동체와 왕조국가의 쇠퇴로 정체감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민족이라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즉 당시의 다양한 구어와 방언의 시대에 지방어 서적의 대량출판은 다양한 방언들을 소수의 표준어로 활자화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활자어 서적을 읽는 독자들은 다른 활자어를 읽는 사람과 구별되는 유대를 상상하고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신문기사처럼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소설의 수사에서, 새로운 가공의 리얼리즘은 매일의 대표적인 남녀 주인공을 둘러싼 상상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다. 심지어 우리가 결코 그들을 만나거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가공의 리얼리즘으로 인해 그들이 '같은 성원임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인쇄자본주의에 의해 창출된 독자대중은 일정한 '인쇄어'로 저자가 '구술한'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를 '상상'(imagine)할 수 있게 된다.²⁶⁾

나. 민족국가형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① 경제적 요인

15, 6세기의 '지리상의 발견'은 자급자족적이던 장원경제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지리상의 발견'은 중세의 분권화된 정치체제를 통합시켜 민족국가의 토대가 된 절대왕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식민지의 개척, 식민지 무역을 통한 상업자본의 거대한 축적과 도시의 발달, 기술혁신, 교통통신 수단

25) *Ibid.*, chap. 3.

26) A. D. Smith, "The Nation: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Millenium*, 20(3), 1991.

의 발전 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은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산관계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상품생산에로의 이행은 결과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생산방식의 지양과 사회적 분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적 한계, 봉건적 구속의 철폐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봉건적 생산양식에 대한 초기 부르주아계급의 투쟁은 아직 충분히 실력을 갖추지 못한 그들의 조건에 의해 야심적인 절대군주와 결합하게 된다. 당시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봉건적 분산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군주로 하여금 단일 경제시장의 형성을 위해 각종 봉건적 질곡의 분쇄를 요구하는 신흥 부르주아계급과 조화하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었다.²⁷⁾

② 정치적 요인

민족국가의 뿌리라고 간주되는 왕조의 군주는 봉건적 질서하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당시 유럽에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정치제도들- 연방, 카톨릭 신정연합, 비정치적인 상업공동체, 도시국가, 공국, 제후국 등 -에 비해 근대국가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그 조건은 우선, 중세 이후 군주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발전시켜온 전문화된 행정조직이다. 관료제, 국고와 재정의 운용, 법률가의 이용 등으로 군주들은 적대적인 정치, 사회세력들을 견제, 회유, 제압, 정복할 수 있었다. 둘째, 유럽의 주변환경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리상의 발전을 통해 열려진 해외영토로부터 국가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셋째,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이다. 당시 무역 및 상공업의 발달은 각종 신분적 자원을 해방시켰고, 이로 인해 조세원은 증대되었다. 또한 부르주아들의 정치세력화는 궁극적으로 과거의 특권계급에 대한 국왕의 우위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요인들 이외에도 민족국가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전쟁이다. 전쟁의 승리는 국가건설의 성패를 가늠하는 최대의 갈림길이었고, 전쟁의 준비는 조세, 징병, 및 징발 등의 자원추출 기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가건설을 위한 일련의 기본적인 과제들 - 영토의 확정, 중앙집권화, 국가조직의 형식적 자율성 확보, 통계 및 재무기구의 발달,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 -까지도 일거에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²⁸⁾

27) 박호성, "민족과 국가 - 그 화해와 갈등의 구조,"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서울: 역사비평사, 1994).

28) 전상인,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한 일고," 「통일연구논총」 제2집, 1

또한 전쟁의 결과는 이후 민족국가의 영역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당시의 국제체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체제이다. 특히 19세기 중반이후에는 당시의 주요 국가들의 결정에 의해 새로운 민족국가가 탄생했다.

③ 사회적 요인

자본주의의 태동으로 인해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계급은 절대군주와의 협력을 통해 단일 국내시장을 형성하였고, 군주의 보호아래 해외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 세계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과 진출을 보장하는 군사력의 제공자가 되었다. 따라서 16-7세기에 걸쳐 등장한 절대왕정은 부르주아의 가장 중요한 지원세력이 되었고, 이에 따라 부르주아는 절대왕정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윤을 향한 부르주아의 요구는 이에 걸맞는 정치권력의 확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따라서 절대왕정의 구태의연함은 더 이상 부르주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절대군주 및 전통 지배엘리트와 부르주아간의 충돌은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이었다.

특히 부르주아는 절대왕정에 대항하기 위해 하층계급들을 동원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따라서 혁명 이후 정치질서에서 자신들을 지원했던 하층계급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구질서가 완전히 깨어짐으로써 만인의 평등, 개인의 자유, 형제적 우애 등 민족의식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부르주아계급의 부상이 지체되었던 중.동부 유럽, 특히 부르주아의 혁명이 실패했던 독일지역은 부르주아 주도의 민족국가 형성이 늦었고, 왕가 및 토지에 기반한 계층이 주도하는 민족국가로의 변신이 시도되었다.

다.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① 민족주의의 등장

이러한 민족의식 발전과 민족국가의 등장에 따라 19세기 민족주의는 유럽을 지배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등장한 민족주의는 언어를 중심으로 등장한 대중(mass) 민족

주의, 대중민족주의에 대한 왕조의 대응인 공식적(official) 민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 유럽의 민족주의에서 민족활자어(national print-language)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오래되지 않은 현시적 모형들(프랑스혁명,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로부터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유럽인들의 발견과 정복은 언어에 대한 사고의 혁명을 일으켰고, 각 지역의 언어에 대한 폭발적인 연구를 낳았다. 더우기 당시의 사전편찬가와 언어계보학자, 문법가와 민속학자, 정치평론가와 작곡자들은 귀족, 지주계층, 성직자 등 구 통치계층 및 평민출신의 하급관리, 전문인, 그리고 상업 및 산업 자본가 등 상승하고 있었던 중간계층이라는 소비자 와 결합하여 민족의식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이미 일어난 민족주의적 사건들, 즉 프랑스혁명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운동은 그것에 관해 인쇄되자마자 '개념', '모형' 그리고 '청사진'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이 표절(piracy)될 수 있는 것처럼, 독립 민족국가의 모형도 표절되었고, 많은 독자적인 언어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쳤다.²⁹⁾

19세기 후반의 문헌학의 혁명, 사전편찬의 혁명, 그리고 유럽 내 대중민족주의의 발달로 인해 민족성과 무관한 많은 왕조국가들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곤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왕조국가의 지배계층은 생존을 위해 특정 민족문화와 민족의 대표자로 자신들을 포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지방활자어를 무의식적으로 국어로 선택하고, 왕조의 정통성을 민족의 정통성으로 변화시켰다. 앤더슨은 이렇게 지배계층에 의해 의식적으로 발명된 민족주의를 공식적 민족주의라 불렀다. 옛 왕조국가의 영토 안에서 혹은 새롭게 형성된 제국 안에서 민족국가의 얼굴을 하고 특정 문화유산을 전유한 지배계층들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제국인들을 민족국가의 신민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³⁰⁾

② 민족국가와 민족주의와의 상관관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쇄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민족의식의 발전, 시민혁명, 그리고 민족국가체제의 등장은 민족주의의 성립의 기틀이 되었다. 즉 중세의 구각을 털고 등장한 절대왕정은 민족국가는 아니었지만, 상비군제도, 행정체계,

29) Anderson, *op. cit.*, chap. 5.

30) *Ibid.*, chap. 6.

조세체계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원추출능력과 강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족국가형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민족의식과 절대왕조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군주제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저항은 민족국가를 탄생시켰다. 민족주의의 역시 그들이 군주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집단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대의체를 설정하기 위해, 즉 정치적 주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비로서 등장했다. 그리고 그 주도세력 가운데 하나인 부르주아가 ‘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다양하고 상반된 여러 사회, 경제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고무하는 과정에서 민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특히 프랑스혁명은 인권선언을 통해 인간의 평등함과 국민의 주권보유를 명기함으로써 민족과 민족주의의 등장에 토대가 되었다.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등장한 입헌군주제 헌법의 채택, 보통선거의 실시 및 공화제의 선포, 국기와 국가 및 혁명력의 제정, 봉건적 공납의 폐지, 미터법의 사용, 징병제에 의한 국민상비군의 편성, 카톨릭의 억제와 이성숭배 정책 등은 민족국가형성의 핵심요소였다. 즉 프랑스혁명이 민족을 단위로 한 독립적인 주권국가인 근대민족국가 수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³¹⁾

특히 민족국가는 민족주의나 민족의식의 세례를 받지 않은 대중들에게 이것을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프랑스혁명에 의해 체계적인 틀을 부여받은 민족국가가 16-7세기와 달리 영토내의 모든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직접 지배하고, 명백한 국경을 구획하였다. 즉 19세기 초 근대국가는 병영, 집배원, 경찰, 헌병, 교사, 철도청 직원, 정기적인 센서스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보편화, 일상화시킨다. 특히 철도와 전신으로 상징되는 19세기 수송과 통신의 혁명은 중앙권력과 가장 외진 초소간의 연결을 공고히 하고 일상화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의 선거권 확대는 지배계급과 국가에게 하층계급의 지지를 획득할 절실한 필요를 가져왔고, 전쟁과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이 늘어갔다. 이로 인해 중세까지 고립되어 지냈던,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신들의 위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대중들은 국가 또는 민족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모든 주민들을 민족국가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다. 특히 시민의 충성 및 일체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민족국가는 19세기 중반 등

31) 전상인, *op. cit.*, pp. 3-10.

장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운동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³²⁾ 따라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시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인 정책을 펼쳤다. 특히 1870년대 이후 전통의 발명- 국기, 국가, 기념물, 조상, 기념탑, 기념일 등 -을 통해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시키려는 노력을 집중하였다.³³⁾

4.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의 등장

가. 민족의식의 생성과정

유럽에서의 민족국가의 형성이 유럽내부의 역학관계, 특히 19세기 세력균형체제와 민족내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던데 비해, 제3세계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은 외부적 요인, 즉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제국주의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론 홉스보움이 말한 동북아 3국, 이란 및 터키 등 '역사적 민족'(historical nation)이라는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는 식민제국의 행정적 편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획된 경계가 이후 독립한 민족국가의 국경이 되었다. 더우기 식민국가체제는 독립한 국가에 그대로 전수되었고, 그 지역에서 소수 - 엘리트나 선진적인 민중-을 제외하고는 민족에 대한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생독립국에서 민족은 독립이후 국가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면 제3세계지역에서 어떻게 민족의식이 형성되었는가를 앤더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앤더슨은 20세기 제3세계의 민족주의를 유럽의 언어민족주의와 관주도 민족주의의 결합물로서 보고 있다. 신생국의 민족주의가 유럽의 언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모형을 닮았다면, 유럽의 언어민족주의에서는 열렬한 대중주의를, 공식적 민족주의에서는 민족동화정책의 성향을 취했다. 이러한 혼합은 국경이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들 위에 2개언어를 구사하는 지식계층이 불안정하게 위치하고 있는 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창조된 비정상적 산물이었다.

20세기 중반의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19세기 초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국가와 중요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각 민족국가의 영토와 이전 제국행정단위의 영토 사이에 유질동상(類質同相)이라는 점이다. 이 유사성은 모든 식민지 순례의

32) Hobsbawm, *op. cit.*, chap. 3.

33) Hobsbawm and Langer, *op. cit.*

지리와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18세기 크리올(creole)들의 순례의 외형이 모국 전체 정치의 중앙집권화 욕구때문만이 아니라 교통과 수송, 그리고 일반적 기술의 원시성에 의해 결정된 반면, 20세기에는 이 문제가 극복되었고, 그 자리에 이중의 얼굴을 한 동화정책이 들어섰다. 그러나 제국의 행정단위가 민족적 의미를 얻은 것은 20세기에 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반식민지 민족주의는 산업자본주의의 성과에 의해 가능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 제국주의에 대한 반응(reaction)에서 기원하였다. 자본주의와 연결된 국가는 관료체계에 필요한 하급관리를 배출하기 위해 '동화를 추진하는' 학교제도를 고안하였다. 중앙집권화되고 표준화된 학교제도는 식민지 내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식민지의 수도로 모이게 만드는 새로운 순례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교육상의 순례는 대개 행정영역에서 재현되었다. 수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식민제국의 행정관리가 되고 이들은 다시 식민영역 내의 다양한 지역으로 파견되어 순환하였다. 이렇게 특정의 교육과 행정을 위한 여정 사이의 결합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민족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위한 영토적 기반을 제공한다.

식민국가의 발달과 식민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제3세계 민족주의의 중요한 초기 대변자는 견고한 지방 부르주아 계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외로운 지식계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역사의 격동적이고 혼란된 경험에서 민족, 민족됨, 민족주의의 모형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다양한 결합에서 크리올, 지방어, 그리고 관주도 민족주의의 교훈들은 모방되고, 채택되고, 개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가 물리적, 지적 통신수단을 급속도로 변형시키자 지식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대중에게 뿐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읽을 줄 아는 대중에게도 상상의 공동체를 선전하는데 인쇄물 사용을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했다.³⁴⁾

이렇게 처음에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민족의식은 식민본국의 제국주의적 착취에 문제를 느낀 지식인들의 반외세투쟁을 통해 급속도로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이것은 대중들에게로의 민족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나.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등장

34) Anderson, *op. cit.*, chap. 7.

한국에서 근대민족주의가 언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18세기 실학을 근대민족주의의 맹아로, 19세기 말 외세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근대민족주의의 등장으로 본다.³⁵⁾ 그러면 여기서는 제3세계 민족주의이라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등장을 살펴보겠다.

① 민족주의의 형성

실학은 전통적인 조선의 화이사상(華夷思想)을 부정하고 조선의 독자성, 독립성, 중심성을 자각했다는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맹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³⁶⁾ 그러나 근대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의 보편주의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형성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내부의 자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면 한말 외세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 3가지 조류 - 위정척사론, 개화사상, 동학사상 - 는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위정척사론의 경우 이론의 여지가 많지만 근대적인 사상도 아니고 민족주의적이지도 않았다.³⁷⁾ 이에 비해 동학사상이나 개화사상은 상대적으로 근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동학사상의 경우 만인의 평등사상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근대성과 동시에 민족주의의 기본 맹아를 찾을 수 있다.

반면 개화사상의 경우 그것이 서구의 사상을 받아들인 만큼 근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화파는 개혁의 방식과 사상에 있어서 민족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개화파는 일본의 군사력에

35) 진덕규는 다음과 같이 민족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1. 근대민족의식의 형성기: 18세기 말의 실학운동.
2. 근대민족운동의 태동기: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식민지 침탈시기까지.
3. 근대민족운동의 표출기: 일본식민통치 초기에서 3.1운동까지.
4. 근대민족운동의 분화기: 3.1운동 이후 좌우대립과 신간회의 해체까지.
5. 민족운동의 침하기: 1930년대 이후 2차대전 종전까지.

“현대 한국정치 변동과 민족주의의 변용에 대한 연구서설,”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50집(1992), p. 143.

36)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주의의 기원,”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37) 위정척사론에 대해 한국에서는 ‘보수적 반동사상’ 또는 ‘민족주의 사상’으로 상반되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애국적 반침략사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도형, “척사론의 ‘애국’ 어떻게 보고 있나,” 『역사비평』, 제11호(겨울, 1990) 참조.

의존하여(갑신정변) 정권을 장악했지만, 3일만에 쫓겨나고 만다. 이것은 외세의존적 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므로써 사실상 민족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또한 일본의 침략을 일본의 지도로 근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함으로써 이미 당시부터 민족개량주의의 맹아를 간직하였다. 38)

그런데 전근대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들을 민족주의의 태동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 타자에 의해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독일의 민족주의가 프랑스의 침입에 의해 자신들의 독자성을 인식했듯이, 그리고 수많은 제3세계의 민족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자신들의 독자성을 깨달았듯이, 한국 역시 제국주의세력의 침투에 의해 근대민족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주·객관적 요소의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의 전세계적 보편성 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즉 위의 사상들이 민족주의의 시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제국주의의 침투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39)

1890년대 이후 이루어진 근대적인 개혁 역시 한국민족주의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동학사상에서 사상적으로, 개화파에서 구체적으로 추구된 신분제도의 폐지이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보편성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 - 대내적, 대외적 평등개념 - 중 하나로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을 담보하는 조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수백년간 지속되었던 계급사회의 차별의식을 한번에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법적, 형식적으로나마 계급적 차별을 없앴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적할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주권이라는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까지 발전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화파들은 서구적인 형식만 빌어왔을 뿐이지 그 보편성을 인식하는데는 한계를 지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개혁은 조선제국의 독자성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대외적 독자성을 선포한 것이고 국제체제내에서 독립국가로서의 평등성을 내보인 것이다. 이것은 특히나 조선 왕조 내내 소중화(小中華)사상에 젖어 지내던 유생계층에 대한 도전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발전의 중요한 기초였다.

한글의 공용어 채택 역시 민족주의의 등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동안 한자에 의해 언문으로 격하되었던 한글이 공식적으로 민족어로의 지위상승을 보장받

38) 김도형, "일제침략기 반민족 지배집단의 형성과 민족개량주의," 「역사비평」, 제6집(가을, 1989), pp. 33-52.

39)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서울: 청계연구소, 1989) 참조.

게 되었다. 유럽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표준어의 탄생은 민족구성원의 동질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민족주의라는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의 대응들은 반봉건근대화(反封建近代化)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었으며, 반제국주의적(反帝國主義的)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화한 1905년부터는 반제적 성격이 한국민족주의에서 더욱 중요한 특징이 된다. 식민지 민족주의의 보편적 특징이 저항적 민족주의이듯이, 조선의 식민지로의 전락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한반도의 주민들의 민족의식 고양의 계기가 되었다.

② 민족주의의 발전

1919년의 3.1운동은 한국민족주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 운동이 지니는 의의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3.1운동은 과거의 왕조체제에 대한 절대성을 붕괴시키고 독립이후의 정체에 대한 인식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국민주권의 사상을 구현한 공화제 사상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둘째, 그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운동적 경향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 운동의 과정에서 기존의 애국계몽운동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던 시민계급 중심의 운동과 의병활동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던 민중적 운동이 결합하였다.⁴⁰⁾

그러나 이 운동의 실패후 시민적 운동단체들이 파괴되거나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의 시민적 민족주의 운동은 자치운동과 같은 민족개량주의로 변질하게 된다. 또한 운동기간 중 활발히 참여했던 민중들은 소작쟁의와 같은 사회운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해외, 주로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운동은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국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1920년대 한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지닌 민족주의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1926년 6.10 만세투쟁을 계기로 여러 민족주의 세력이 모여 결성한 신간회는 민족적 목표를 위해 좌우세력이 결합했다는 의미에서 한국민족주의운동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신간회 결성 이후 한번도 좌우세력의 결합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일 뿐 아니라 대중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급들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신간회에 의한 민

40) 조동일,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89), pp. 12-14.

족주의운동의 통일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후 민족주의 우파는 민족주의 운동에서 탈락하거나 비타협 무저항주의로 변신한 반면, 좌파는 노동자나 소작농을 기초로 비합법운동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한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이후 일제통치의 강화로 인해 국내외 모두 민족주의운동은 약화되었다.⁴¹⁾

이상에서 고찰한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정은 스미스⁴²⁾가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험을 토대로 일반화하고 있는 다섯 과정과 상당히 잘 부합한다.⁴³⁾ 첫째 단계는 유럽의 저항에 대한 '일차적 저항'(primary resistance)으로, 외세와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옴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전통사회의 변화 및 해체에 대응하는 운동이 일어나며, 그 중심세력은 전통사회의 관료 및 지배계층이다. 한국에서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운동은 양반 지배계층이 주도한 최초의 민족주의운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갖는 초기 단계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천년지복적(millennial) 민중운동이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원망을 담는 것으로 이를 이루는 방법으로 구세주나 어떤 신성한 힘에 의존하려는 특징을 드러내는 운동인데, 동학이나 증산교의 후천개벽사상은 이에 대응하는 한국적 운동이었다.

셋째 단계는 새로운 토착계층의 배태와 '적응'(adoptation)의 시기이다. 새로운 상업 및 산업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그룹들이 형성되고 이들이 주도하는 지식인 중심운동인데, 이는 서구의 근대화를 닮으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화파들의 계몽운동이나 일제하에서 지식인들이 펼쳤던 운동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넷째 단계는 자치를 위한 민족주의적 선동의 단계인데, 자치 및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언술(discourse)이 호소력을 가지면서 위로부터 계몽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에서는 특별히 어떤 시점이라고 말할 것 없이 식민지가 된 순간부터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왕조체제가 아닌 근대국민국가를 추구했던 3.1운동 이후 20년대의 활동이 이에 대응할 것이다.

마지막은 민족주의가 대중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단계이다. 즉 노

41) 박현채, "분단시대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송건호·강만길 편, 「한국민족주의론 II」(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42) A. D. Smith, *State and Nation in the Third World*(Brighton: Wheatsheaf Books Ltd., 1983) pp. 37-58.

43) 최장집, *op. cit.*, pp. 91-92.

동자와 농민이 동원되는 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단계이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일제에 의해 근대화되고 사회변동을 겪은 1930년대 이후 민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는 시기와 부합한다.

결국 한국에서 근대 민족주의는 근대성을 지닌 외세에 의해 등장했으며, 외세의 침략을 통해 근대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까지 확산되었다는 측면에서 한 국민족주의는 독자적인 고유성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일반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III. 남북한의 민족주의

식민지 시기 한국의 민족주의는 제3세계 민족주의의 일반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면에서 한국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제3세계는 식민지의 경험을 통해 근대적인 민족의식이 형성되었고, 그 의식을 지닌 사람은 지식인과 선진적인 민중을 포함한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족의식의 전국민에로의 전파는 독립이후의 과제였다. 더우기 대부분의 제3세계 지역은 서로 다른 여러 종족(ethnie)들이 하나의 국가아래로 통합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종족이 여러 국가로 분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하나의 종족이 하나의 국가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반면, 한국은 민족의 주객관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3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민족주의가 발양하기 좋은 토양이었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민족주의는 대중들에게 쉽게 전파되었다.

둘째, 제3세계 모두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적 분열의 심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된 민족운동진영간의 대립과 분열은 일제의 강한 탄압으로 민족주의운동 자체가 잠복하게 되었지만, 해방이후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인해, 그리고 분단국가의 수립으로 인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한국민족주의의 특징으로 굳어졌다. 결국 해방이후, 그리고 분단국가의 수립과 지속이라는 한국의 민족주의의 전개는 이미 식민지시기 민족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민족주의의 전개는 이후 한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먼저 해방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해방이후의 민족주의

해방직후 한국민족주의의 당면과제는 주권독립국가의 건설이었다. 물론 국가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파마다 구상이 달랐지만, 한반도에 하나의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소의 점령으로부터 시작된 분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분단정부의 수립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1948년 남북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면 해방이후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해방직후부터 분단정부수립까지 남한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세력, 이승만

을 중심으로 모인 한민당세력, 그리고 북한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 등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이들간의 차별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첫째, 좌익은 사회주의자, 우익은 자본주의자를 의미한다. 둘째, 민족주의자는 해방과 분단의 규정력은 외세에 있으나 분단 극복과 민족자주독립국가건설의 과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좌우합작 또는 계급연합)에 달려있다고 보는 이들이며, 반면에 국제주의자는 해방과 분단의 규정력 뿐 아니라 분단극복과 민족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과제도 외세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이들을 지칭한다.⁴⁴⁾

이것을 당시의 정치세력들에 적용시켜 보면, 조선인민당과 국민당, 중도좌우의 정치세력들은 좌우합작 내지 계급연합을 중시했으므로 민족주의자였고, 진보적인 정치적 경제적 강령을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진보적이었다. 반면 이승만과 한민당은 우익국제주의자였고 보수적이었다. 김구계의 한독당은 우익이고 민족주의자이며, 조선공산당은 좌익국제주의자였다.

(표1) 해방직후의 정치세력 구분

	민족주의자	국제주의자
우익	김구의 한독당 조만식의 조선인민당	이승만, 한민당(반합작파)
좌익	조선인민당(여운형계)	조선공산당(박헌영계/북조선 분국)

이렇게 구분된 당시의 정치세력들을 해방정국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결과에 대입해 보면 당시 한국민족주의의 운명을 명확히 볼 수 있다. 모든 세력들은 해방직후에는 한국민족의 과제였던 독립국가의 건설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러나 미소간의 협력의 분위기가 점차 적대적으로 변함에 따라, 그리고 남북에서 미소의 정책이 상이하게 진

44) 이 구분법은 정영태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중석, “해방후 남한의 우익민족주의와 민족통일전선,” *op. cit.*, pp. 379-380.

행됨에 따라 민족국가건설을 둘러싸고 각 정파들 간의 이해관계는 서로 엇갈리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는 미소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지고, 북한에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면서, 남한에서는 좌파가 합법적인 정치공간에서 제거되고, 이승만과 한민당세력이 중심이 되어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반면 민족주의 세력은 분단정부의 수립에 반대하고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국가 수립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힘을 지닌 국제주의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다.

해방부터 분단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민족은 국제체제의 강한 규정력 아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당시 한반도에서 지닌 미소의 강력한 영향력을 볼 때, 민족내부의 역량으로 단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지라도, 한국내 각 세력들이 힘을 합쳤다면, 미소관계의 틈을 이용하여 단일한 민족국가를 수립할 수도 있었다. 미소가 적대적이었던 1947년과 달리 1946년에는 미소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민족은 이 공간을 이용하여 민족국가를 수립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⁴⁵⁾ 그러나 해방후 한민족은 다양한 세력으로 분열되었고, 결국에는 남북한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으며,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2. 한국(남한)의 민족주의

남북에서 분단정부의 수립으로 빚어진 하나의 민족, 두개의 국가라는 상황은 민족국가형성이라는 한국민족주의의 근대적 과제에 '통일'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부과하였다. 통일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국가수립 이전 두 사회의 결합을 통한 민족국가형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더우기 한민족이 두 국가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라는 민족주의의 또 다른 과제는 분단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국가가 설립되었고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양체제에서는 민족의 이해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우선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쌍방은 상대의 이데올로기를 적대시하였고 자기 이데올로기 이외의 모든 다른 가치는 배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체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마저도 억압하였다. 따라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에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기본적인 과제가 첨가되었다.

45) *Ibid.*, p. 382.

양극체제의 규정력에 의해 형성된 분단국가의 수립은 한국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성격을 변화시켰는데, 먼저 상해 임정계의 일부 인사들은 5.30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지배체제에 편입되었다. 둘째, 일부는 민족주의 사상과 단군과 같은 고대 사상을 연계시켜 종교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셋째, 소수는 분단체제에로의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체제를 통합할 수 있는 제3의 이념을 모색하였다.⁴⁶⁾

민족주의 세력은 특히 한국전쟁이후 한국정치에서 그 입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념적 갈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통일논의를 반대하는 주장은 모두 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공식적인 민족주의 이외의 논의는 존립하기 힘들었다. 그 결과 전쟁후 한국정치는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적 전통이나 유산과 완전히 단절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민족주의의 독점은 앤더슨의 '공식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⁴⁷⁾ 이것은 본래 대중민족주의에 위협을 느낀 왕조나 제국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대표자로 변신했던 유럽의 사례를 지칭하는 것인데, 필자는 한국전쟁 후 남한정부의 행태를 공식 민족주의의 한국적 형태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정부들은 외부(북한)의 침략을 강조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의 최대과제인 통일에 대한 논의를 독점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만이 민족주의자인 양 과시하였다. 또한 군부정권은 경제발전(근대화)을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만들어냈다. 즉 군부정권에 의한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는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인 경제발전에 성공함으로써 민족주의의 한 과제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을 민족주의자로 위장하였다. 따라서 분단이후 전개된 남한의 지배계급에 의해 진행된 민족주의를 우리는 '공식 민족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공정권들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민족주의적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반공정부들은 공산주의를 방어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제한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매개로 반정부적인 활동들이 등장했으며, 이것은 민족주의적 담론을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46) 진덕규, "현대 한국정치 변동과 민족주의의 변용에 대한 연구서설," *op. cit.*, pp. 18-19.

47) Anderson, *op. cit.*, chap. 6.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유보는 곧 반민족적인 행위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80년대 이전 시민사회로부터 등장한 민족주의는 제2공화국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그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민족주의의 과제인 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진 8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시민사회로부터 등장한 민족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닌 공식적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대항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민족주의를 '대항 민족주의'(counter nationalism)⁴⁸⁾로 정의하고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족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⁴⁹⁾

가. 공식적 민족주의

① 이승만 정권

이승만 시기의 공식적 민족주의는 '북진통일론'과 '원조경제에 의한 경제부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전쟁 후 이승만 정권은 통일보다 경제복구와 정치, 사회적 안정을 통한 체제의 공고화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무력통일론이 남한체제의 안정을 위해 매우 가치있는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승만 정권은 북한의 악마적 성격과 위협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그것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그의 국부(國父)로써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또 정치적으로 강력한 월남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정권은 북진통일이라는 구호를 자신의 통치를 위한 상징조작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완전히 배

48) 대항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적 반대세력이 국면을 주도적으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정치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운동주도세력이나 민중 일반에게 형성시키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 김동춘, "1960,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 『한국정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서울: 역사비평사, 1994), pp. 212-216.

49) 박종철은 전쟁후 한국의 민족주의를 흡스보움의 구분에 따라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로 구분하고 있다(박종철, *op. cit.*).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너무 단순한 이분법적 논의로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필자는 지배이데올로기로써 전통을 창조(invented tradition)하는 지배계급의 민족주의를 '공식 민족주의'로, 이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했던 민족주의를 '대항 민족주의'로 규정하겠다.

격하였다. 이에 따라 외적으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거부하였고, 내적으로는 진보당의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안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 당 자체를 불법화시켰다.⁵⁰⁾

한편, 한국민족주의의 또 하나의 과제인 근대화 역시 처음부터 민족자립경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전후 이승만 정부에게 경제의 복구와 발전은 매우 사활적인 과제였다. 특히 1955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대중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경제부흥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⁵¹⁾ 따라서 이승만정권은 경제부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정권은 이것을 미국의 경제원조와 국내 기업가의 경제활동에 의존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경제적 평등이라는 민족주의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특히 휴전협정 직후인 1953년 12월14일 체결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일명 우드협정)에 따라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이정권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독자성을 지닐수 없게 되었다.⁵²⁾

②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공식 민족주의'를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과 달리 정권 초기에는 '민족주체성'과 '민족자립'을 바탕으로 한 '민족적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이승만 정권의 대외의존적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내포적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⁵³⁾ 물론 박정권이 자신의 이념적 기반을 민족주의로 설정한 것은 정통성 없는 군부정권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쿠데타로 집권한 제3세계 군부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지만, 박정권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근대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박정권에 의해 추진되던 주권국가의 지향, 경제적 발전, 민족문화 조성, 민족구성원의 통합 등은 근대화와 민족주의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

50) 김학준, "남북한에 있어서 통일논리의 전개," 「한국 민족주의론I」, *op. cit.*, pp. 228-229.

51)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195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였다.

52) 정윤희, "경제학에서의 민족주의적 지향," 「한국 민족주의론I」, *op. cit.*, pp. 255-259.

53) 임현진, 송호근, "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op. cit.*, p. 188.

의 근대론자들이 주장하던 논의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근대화와 민족주의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겔너의 논의나 전통의 발명을 통한 위로부터의 민족통합을 주장한 홉스보움의 논의는 박정권 시기의 민족주의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⁵⁴⁾ 그러면 박정권 아래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인 통일에 대해 박정권은 이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다. 즉 북한 공산정부를 인정할 수 없고 그와 타협할 수 없다는 철저한 반공 노선에 서 있었다. 특히 박정권은 반공을 공식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표명하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해 공식적인 통일논의 이외의 다른 견해는 배제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유엔 감시하 토착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안을 지지하였다.

통일논의를 독점한 후 박정권이 내세운 '선건설, 후통일' 논리는 국내 경제건설로써 통일의 바탕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남한체제의 경제적 대북우위로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민족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남북분단의 암묵적 수락과 진정한 통일정책의 잠정적 연기를 전제하는 것이었다. 남북한의 개별적 경제발전은 남북한 경제구조의 보완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⁵⁵⁾

대내외적인 정세의 변화로 1972년 등장한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권아래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⁵⁶⁾ 이것은 분단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남북한에 싹트기 시작했던 '분리적 민족주의'(separate nationalism)에 대한 민족적 자각을 준 사건이었으며,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유효한 원칙을 표명했다.⁵⁷⁾ 그러나 이것 역시 박정권의 공식 민족주의를 예증하는 적절한 사례이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지도층 일부에 의해 '전격작전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민족구성원 대다수의 염원을 수렴하여 등장한 것이라기 보다는 남북정권의 최고책임자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통일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민족주의의 또 하나의 과제인 근대화에 대해 박정권은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54) II장 2절 '기존의 연구경향'을 참조하시오.

55) 김학준, *op. cit.*, pp. 238-239.

56) 이 선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3대원칙으로 그것은 자주적 원칙, 평화의 원칙,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다.

57) 김학준, *op. cit.*, pp. 244-245.

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박정권이 경제개발에 주력한 주요한 이유가 정통성의 보완 때문이었지만, 처음 박정권이 추진하려 했던 내포적 공업화전략은 제2공화국 시절부터 분출하기 시작하여 주로 진보적 정치세력에 의해 표출된 민족주의적 요구와 공통된 주장을 담고 있다. 내포적 공업화의 기본전제가 되는 냉전이데올로기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자세, 종전의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을 비판하고 대미자주의 자세를 강조한 점 그리고 국제분업체제 안의 비교우위보다 국민경제로서의 완결성을 촉구하려는 자세, 쿠데타 초기에 놓어춘고리체 정리령이나 통화개혁에서 보인 쿠데타 주도 세력의 일종의 민족주의적 성향 등은 군사정부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⁵⁸⁾

그러나 박정권이 초기에 주장했던 민족적 민족주의는 군부지도층 내부의 정책대립과 미국의 압력, 동원적 정당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부감 등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변질되었으며, 경제발전이 성공하면서, 그리고 유신체제 이후에는 형식적으로조차도 민족주의라는 구호는 사용되지 않았다.⁵⁹⁾ 이것은 박정권이 지닌 대내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후 박정권은 한일국교수립, 국군의 월남파병, 3선개헌 등의 정치,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권위주의체제로 전환하였다. 특히 유신체제는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까지도 억압함으로써 반민주적, 반민족적 성격을 보였다.

결국 박정권의 공식적 민족주의는 초기에만 잠시 자립경제를 강조하였을 뿐 한일 조약의 강행,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등 점차 실질적인 민족이익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자본과 기술뿐 아니라, 경제정책에서도 IMF를 통한 미국과 일본의 간섭에 의존하였고, 경제구조 자체도 수출지향 일변도로 대외종속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주의가 주장만 되었을 뿐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박정권이 주장한 경제적 민족주의는 경제성장을 위한 선전적이고 도구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체성'은 어구상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집권의 구실(쿠데타 이후와 1960년대 초반의 민족적 위기론)로, 다음에는 국민동원의 방편으로(1960년대 후반의 민족적 자각과 분발), 마지막으로 장기집권과 비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정당화로(1970년대의 한국적 민주주의론) 이용하고 있다. 결국 박정권은 집

58) 정운형, "개방체제로의 이행과 1960년대 경제개발의 성격," 「한국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 1985).

59) 박종철, *op. cit.*, pp. 56-57.

권의 정당화 및 영속화를 위해, 그리고 경제개발을 위한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1970년대 박정권은 민족을 안보와 연결시켜 강조하였지만, 여기서 민족은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반공주의와 접목된 반통일적인 적대의식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친일적이고 친미적 경향의 언명과 정책적 지향은, 그가 계속하여 주장하는 민족주의 그 자체가 실천의 목표라기보다는 통치와 지배의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⁶⁰⁾

③ 전두환 정권 이후의 민족주의

궁정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후기 박정희 정권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권과 달리 쿠데타로 인한 정통성의 부재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보완하기 보다는 박정권의 권위주의를 이어받아 강력한 물리력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나 1981년의 '남북한 최고 당국자의 서울, 평양 상호방문 제의'나 1982년 '남북 대표자 회의를 통한 통일헌법의 제정과 통일민주공화국의 수립안' 등 명목상의 통일논의를 통해 민족주의를 정권의 차원에서 이용하였다. 결국 80년대에 이르면 지배계급에 의한 공식적 민족주의는 대국민 설득력을 상실하고 만다.

나. 대항 민족주의

① 80년대 이전의 민족주의

대항 민족주의의 원류는 1955년 등장한 조봉암의 진보당이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의 공식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이정권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러나 4.19로 인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제2공화국에서 대항 민족주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대항 민족주의는 주로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자립경제'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전자의 논리는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을

60) 이우영, "박정희 민족주의의 반민족성," 『역사비평』, 제10호(가을, 1990), pp. 235-237.

비판하고, 외세를 배제한 남북한의 직접협상 또는 적당한 국제적 관리 아래서의 남북 총선거, 중립화된 한반도 등을 주장하였다.⁶¹⁾ 후자의 논리는 대부분 원조경제하에서 구조화된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비판하고 자립적 산업구축을 통한 경제자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면정권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이승만 정권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미국에 더욱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대항 민족주의의 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5.16 군부쿠데타에 의해 제거된 대항 민족주의는 박정희 정권의 반민족적인 사건들을 매개로 재등장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초기에 민족주의적 성격을 보여준 것과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민족적, 반민주적 성격을 노골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항 민족주의는 한일국교정상화, 3선개헌, 유신 등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비록 많은 대중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박정권의 노골적인 폭력을 통해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대항 민족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 일반 민중을 포괄하는 이념은 아니었다. 당시 대항민족주의는 종교인, 학생, 그리고 일부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당시 박정권의 공식적 민족주의나 장압적 권위주의 통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의 계급적 균열이 아직도 침체화되지 못한 상황적 한계에도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는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마저도 유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직이나 정당을 통한 계획적 대응보다는 집회나 시위 등 즉자적 실천을 통해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 민족주의는 유신통치 이후에는 박정권의 강력한 탄압으로 그 세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80년대 이전까지 대항 민족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민중세력의 동원에 실패함으로써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으며, 대항이데올로기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② 80년대 이후의 민족주의

80년대 이후의 대항 민족주의는 그 이전과 몇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80년대 이전의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면, 8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대외적 자주와 통일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경제적 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둘째, 80년대 이전의 민족주의 운동에서 주체

61) 김학준, *op. cit.*, pp. 229-237.

는 지식인과 학생이 중심이었던데 비해, 8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민중층으로 그 범위가 확산되었다. 셋째, 80년대 이전의 활동은 집회나 시위를 중심으로 하는 간헐적이고 즉자적이었던 데 비해, 80년대 이후는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장 투쟁, 그리고 파업과 같은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80년대에 대항 민족주의가 이러한 변화를 겪은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공식 민족주의 자체가 이미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으며, 더우기 80년에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전혀 정통성이 없이 물리력만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항 민족주의의 설득력은 높아졌다. 둘째, 80년에 일어난 광주민주화 항쟁은 당시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여겨졌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가져왔다. 미국에 의한 군부쿠데타의 승인을 보며 많은 지식인들은 대외적 자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셋째, 6,7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자본주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계급적 균열을 확대시켰으며, 숫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계급적 논리의 토양을 닦아 놓았다.

이러한 토양아래서 대항 민족주의는 점차 대항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고,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통해 민족주의의 가장 기초적 과제인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하였다. 통일의 과제를 둘러싸고 70년대 말부터 대항 민족주의내에 존재했던 '선민주 후통일'론과 '선통일 후민주화'론의 대립은 6공화국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어 대항 민족주의의 유효성을 약화시켰다. 80년대 후반 이후 민간정부의 등장 및 대항 민족주의 세력내에서 친북세력의 두각은 대항 민족주의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이 세력 내의 분열을 가져왔다.

3. 북한의 민족주의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체제의 기본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이 원리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이론은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민족주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써 배제의 대상이었다.⁶²⁾ 북한은 민족주의를 협소한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이라는 간판

62) 사회주의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자들은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민족주의가 그 주요 담당자인 부르주아의 이익에 봉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즉 민족주의는 토착 부르주아들에게 국내시장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의 해외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으로 가리우고 민족들간의 반목과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결국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희생시켜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파괴하는 반동적인 사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대립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에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된 이후부터 민족주의 세력은 존재할 근거가 없었다. 더 우기 사회주의의 정치원리상 북한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고수했기 때문에, 당내의 분파를 제외하고는 이질적인 사상을 지닌 정당이나 정파가 존재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정권의 수립 이후로 민족주의를 공식원리로 하는 세력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정권의 공식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 그리고 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존재한다.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이 소련의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김일성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항일무장투쟁경력에 대한 대중성 때문이었다.⁶³⁾ 이렇게 처음부터 대중들의 정서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등장하였던 북한정권은 이 전통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였고,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는 과정과 민족경제의 건설에 성공하면서 주체사상을 형성시켰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20세기 초반 제3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주의와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0년대 말까지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정향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주체사상이 당시 북한식 민족주의의 표현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북한에서는 중·소분쟁이 심화되고 북한·중국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창되었다.⁶⁴⁾ 또한 당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북한정권은 전통문화유산과 역사적 전통을 크게 활용하였다.⁶⁵⁾ 이런 사실에서 볼 때 당시까지 주

둘째, 제국주의의 형태를 띤 민족주의는 식민지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며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만 몰두하고 민족주의를 계급투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다. 물론 레닌은 식민지해방투쟁에서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범위를 진조적 민족주의로 한정하였다. 서재진, “북한의 민족주의 :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형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1993), p. 73.

63)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이종석 역(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64) 이종석,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여름, 1994), p.

91.

체사상은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주체사상을 '공식 민족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이 지배계급, 즉 공산당에 의해 전일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모두 '민족'이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의 변화를 공식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겠다.

가. 공식 민족주의의 등장

한국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된 북한에서 민족주의적 과제는 역시 민족국가의 건설과 근대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체제의 강한 규정력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민족국가의 건설은 가능하지 않았다. 즉 북한은 체제건설에서부터 소련에 의존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 중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근대화의 과제 역시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 설정이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민족국가의 건설은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정권 초기와 달리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점차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즉 북한은 소련, 중국과의 관계에서 종속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점차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심사상인 주체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몇가지 국제, 국내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자.

① 국제적인 요인

소련의 후르시초프에 의해 진행된 스탈린 격하운동은 북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후르시초프는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의 죄상을 폭로함으로써 사회주의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956년 6월 폴란드의 포즈난, 헝거리의 전국적인 반소, 반공산당 봉기가 일어났고 소련은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사건들을 제국주의의 사주와 반혁명분자들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이러

65) 역사적 인물의 경우 실학파 사상가들과 외적을 무찌른 역대 명장들, 그리고 의병장들이 주로 소개되었다. *Ibid.*

한 수정주의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의 김일성 우상숭배에 대한 소련의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이것들이 북한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외부사조의 차단과 사상무장의 강화를 모색하였다.⁶⁶⁾

또한 50년대 말부터 등장한 중소간의 분쟁은 북한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중소분쟁에 대해 초기에는 공개적으로 소련을 반대하고 중국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961년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여 각각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실리외교 중심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6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공개적으로 중국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소련공산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점차 경제원조나 개인숭배 비판 등을 통해 북한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하려는 소련에 대해 자주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독자적인 주체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⁶⁷⁾

그런데 소련공산당 최고지도자 후르시초프의 실각은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복원된 관계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관계정립이었다. 새로운 양국관계는 '소련이 북한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오면서 성립된 조선노동당의 주체노선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북한이 소련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상위자로서 북한 내정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⁶⁸⁾ 이것은 북한이 소련에 대해 어느정도 자주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소련 관계의 복원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중국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양국의 갈등은 소련공산당과 베트남전쟁 등에 대한 견해차로부터 시작되어 당시 중국에 불어닥친 문화혁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 양국이 서로 현지대사를 소환할 정도로까지 악화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문화혁명의 열기가 수그러들고 1970년 주은래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나 북한-중국관계의 복원도 북한-소련관계와 마찬가지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북한의 대외적 자주성과 주체확립을 확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⁶⁹⁾ 결국 60년대의 긴박한 대외정세를 통해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자주성을 획득하였고 내적으로는 주체사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66) 서재진, *op. cit.*, pp. 78-79.

67) 이종석,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2. pp. 145-155.

68) *Ibid.*, p. 151.

69) *Ibid.*, pp. 154-155.

② 국내적인 요인

국제적인 자주성의 획득은 민족주의적 과제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이 시기 동안 김일성 개인에게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든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과정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크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유격대 출신(갑산파), 소련계 한인들(소련파), 연안독립동맹계열 출신들(연안파), 그리고 국내공산주의 출신(국내파) 등의 정치세력들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말이 되면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세력들은 권력에서 탈락하게 된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함남 원산을 기반으로 했던 오기섭, 최용달, 정당헌 등 국내 공산주의세력이, 한국전쟁 기간에는 연안 출신의 김무정, 김한중과 소련계 한인인 김열, 그리고 항일유격대 출신인 김일, 최광, 임춘추 등이 전쟁실패에 책임을 지고 철칙 또는 출당되었다. 또한 소련계 한인의 대표주자인 허가이가 ‘관문주의’, ‘책벌주의’ 논쟁 끝에 권력의 중심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실패의 가장 큰 결과는 김일성의 가장 강력한 경쟁세력이었던 박헌영의 남로당세력의 몰락이었다. 전쟁전까지만 해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권을 사실상 나누어 가지고 있던 박헌영에 대한 숙청은 그 도덕성이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 통일성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⁷⁰⁾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을 둘러싸고 연안세력 및 소련계 한인들과 대립하였으며, 1956년에는 연안계와 소련계 일부가 연합한 반김일성운동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8월 종파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으로 윤공흙, 서취, 이용규, 김강 등은 중국으로 망명하고 최창익과 박창욱은 출당되었지만 이들은 중국과 소련의 개입에 의해 다시 복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촉발된 ‘반종파 투쟁’에 의해 이들은 다시 제거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김일성 비판세력은 거의 완전히 소멸되었고, 김일성은 단일지도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김일성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일지라도 당내 활력이 될 수 있는 건전한 의미의 다원주의적 요소까지도 완전히 소멸시켜 정치과정의 역동성의 탈각과 경직화를 낳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⁷¹⁾

70) *Ibid.*, p. 228.

③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관계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로 북한에서는 결국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북한은 반사대주의, 반교조주의의 고창과 함께 주체확립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의 혁명투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경험 속에서 등장했는데, 50년대 교조주의에 대한 반대의 성격에서 60년대 자주성 선언체제로, 70년대에는 보편적 이론으로 변화하였다.⁷¹⁾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60년대의 주체사상은 공동체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자력갱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67년 이전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북한혁명에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치위에 제시된 '북한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북한지도부의 노력과 자력갱생적 삶의 추구,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사실상 주체사상은 물리력의 부재와 열악한 조건을 혁명적 열의에 의해 해결하려 했던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고, 해방이후에도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통해 경제건설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즉 이러한 건설과정에서 김일성과 그의 동료들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식이 자신들에게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을 주장하였다. 더우기 60년대 중국 및 소련의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남한혁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당의 혁명사상'을 천명해야만 하였다.

이렇듯 초기 주체사상의 대두발전은 북한체제라는 공동체의 대외적 자주성의 고양과 북한식 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조선혁명에의 창조적 적용'을 위한 기치로서, 그리고 국가의 자주성 실현과 자력갱생의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⁷²⁾

71) *Ibid.*, p. 246.

72) 이러한 구분은 이종석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Ibid.*

73) 이종석,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op. cit.*, pp. 88-91.

나. 공식 민족주의의 변화

① 민족주의적 성격의 약화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인 1960년대 중반의 주체사상은 1967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주체사상은 1967년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을 위한 도구로 변화되었다. 즉 1967년 경 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면화,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그리고 이를 위한 당내숙청 등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체사상은 '우리당의 혁명사상'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환하였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조선현실에서의 창조적 적용'을 넘어서 김일성주의로 나아간 '보편적 사상이론'으로 굴절격상 되었다.⁷⁴⁾

이로 인해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정향은 크게 탈각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은 당 선전, 문화, 교육 담당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함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족문화정책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기존의 사상문화담당 간부들을 '반당혁명분자들'로 지칭하면서 기존의 민족문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는 그 동안 유물론적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 실학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대신 주체사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쟁영웅들을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러한 민족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변화는 북한 문화정책의 민족주의적 정향을 크게 반감시켰다.

75)

② 민족주의의 변용

60년대 후반 이후 민족주의적 성격이 탈각되었던 북한에서 80년대 중반이후 새로운 민족주의적 논의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1986년 7월 김정일이 처음 제시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다.⁷⁶⁾ 북한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자주의식의 높은 표현'으로, 한마디로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74) *Ibid.*, pp. 91-92.

75) *Ibid.*, pp. 92-93.

76) 1980년대 북한에서는 민족개념이 이전과 달리 변화하였다. 전통적인 스탈린의 민족개념의 핵심적인 요소인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민족개념에서 삭제하고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Ibid.*, pp. 73-74.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라고 규정된다. 특히 우리민족이 제일이라는 공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공지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우리식의 사회주의는 '우리인민이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어 나가자는 것이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다.⁷⁷⁾

그러면 80년대 중반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북한에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소련의 변화와 동구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중국의 시장사회주의로의 변화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조류가 북한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였고,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이것의 근거로 삼았다. 즉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정교화해 북한이 소련, 동구, 중국과는 찢줄과 언어가 다른 민족임을 주장하여 그들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고자하는 이론적 노력이다.⁷⁸⁾

그런데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민족제일의 근거는 바로 김일성의 지도아래 이루어진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우리식사회주의제도 건설'이다. 여기서 우리민족의 위대성은 바로 '우리수령, 우리 당의 위대성'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민족주의의 보편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시말해 여기서 이야기 하는 조선민족은 북한민족만을 포괄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한의 민족은 민족제일의 근거가 되는 위와 같은 전통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민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군릉의 발견과 같은 평양중심주의적 사고를 반추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은 단군의 중심지를 평양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출발부터 평양이 중심이었고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 고려를 거쳐 북한에 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을 암암리에 암시하고 있다.

결국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북한에서 나온 이전의 논의들과 달리 민족분리주의적 사고를 그 체계 속에 내제하고 있다. 북한이 여기서 사용하는 민족개념은 결코 남한민족을 북한의 민족문제의 대상으로 의도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이란 기본적으로 주체형의 사회주의민족이므로 우리민족의 반쪽인 북한인민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후반이후 북한에서 등장한 공식 민족주의로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이라는 분단국가내의 한쪽 공동체의 대내적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강해도 전한반도적 관점에서

77) *Ibid.*, p. 80.

78) 서재진, *op. cit.*, p. 89.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응집력으로서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상당히 회박하다고 할 수 있다.⁷⁹⁾

79) 이종석,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op. cit.*, pp. 88-89.

IV.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이상에서 보았듯이 해방이후 반세기 동안 남한과 북한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민족 및 국가가 형성되었다. 남북한 모두 '공식 민족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고, 이를 통해 이질적인 사회, 국가체제를 형성시켰다. 단지 남한에서 존재했던 '대항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를 증진시켰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켰다는 측면에서 한국민족주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남북에서 독립적으로 국가 및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한국민족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에 살든 북한에 살든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당연시 하지만, 분단이 만든 깊은 골은 이런 사고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반세기 동안의 독립적인 역사는 하나의 민족위에 두 개의 국가를 고착화시켰을 뿐 아니라 분단국가에 독립적인 생명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⁸⁰⁾라는 지적처럼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을 만들었다.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민족은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남북의 통일을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반세기 동안의 이질적인 사회화와 국가체제 형성과정 보다도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려는 자연스러운 내적 소리, 또는 감정의 울림, 그리고 나아가 고자 하는 어떤 내적 경향성이 한민족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감정의 유발이 한민족으로 하여금 통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아가서는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한민족이 고려 이래 계속 하나의 정치공동체였다라는 역사성에서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근대 이후 근대화 실패한 채 외세에 의해 지배당했다는 집단적 실패와 좌절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거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성공적인 통일 - 민족통합 - 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된 한국민족주의의 분열증적 성격은 한민족의 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⁸²⁾ 이데올로기

80) Gellner, *op. cit.*, p. 1.; Hobsbawm, *op. cit.*, p.9.

81) 이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이상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민족 1국가라는 월슨-레닌의 원칙은 강대국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었지 약소민족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의 민족이 몇 개의 국가로 분산되거나, 하나의 국가 내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것이 더 일반적인 예이다. *Ibid.* p. 137.

적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식민지 시기의 민족분열은 해방이후 국제체제와 맞물려 분단국가를 형성시켰고, 분단국가의 공식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체제의 이익을 반영했다. 즉 분단국가의 수립은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한국민족주의의 좌절이었으며, 그 이후의 역사는 체제대결의 역사이자 민족대결의 역사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계급에 의해 공식 민족주의가 등장했으며, 이것이 낳은 결과는 상대방을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더우기 최근의 이질화를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의 민족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민족주의의 객관적 요소인 언어, 문화, 경제생활, 정치적 경험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접근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통일은 하나의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해야만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대안을 찾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로써 민족주의가 지녀야 할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원리들을 제시하겠다.

1. 정치적 원리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의 보편성을 기초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족주의의 근원인 프랑스혁명으로 돌아가 보자. 프랑스혁명은 계급적 불평등을 폐지하고 피지배계급에까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형제적 우애는 보편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민족주의의 보편성 역시 이에 기인하였다. 특히 형제적 우애는 신분제의 벽을 넘어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공동체, 즉 민족의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었으며, 혁명으로 인해 모든 민족구성원은 법적, 형식적 평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원리들은 역사가 흐르고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했지만 그 본질적인 의의나 내용은 계속 보편성을 담지하고

82) 최장집은 한국민족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를 그것의 분열증적 성격이라고 한다. 최장집, *op. cit.*, pp. 91-99.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역시 이러한 보편성을 담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관계, 즉 경쟁을 통한 무한한 부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경제의 원리로 삼고, 이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기초로 그 담지자인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과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남북한에서 처음부터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었다기 보다 유사(類似)자유민주주의가 존재했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에는 법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정통성 있는 정부가 등장한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순수한 자유경쟁자본주의는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제가 운용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원리가 결합된 자본주의체제이다.

이에 비해 최근까지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사회주의적 원리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적 여파 및 경제상황의 악화는 북한에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나 투자촉진법, 합영법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기존 사회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나 중국식 시장사회주의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말해 이제까지의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좋던 싫던 참여할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일인독재 및 세습체제를 구축하였고, 이것을 '우리식 사회주의'로 합리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떤 내용을 지녀야 하는가? 물론 상이한 양 체제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같이 양쪽 체제가 모두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정치원리라도 그 명칭만 동일할 뿐이지 내용은 상호 배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 체제의 공통요소를 단순히 추출하는 것은 기계적인 사고이다. 결국 우리는 민족주의가 지닌 보편성으로부터 통일한국 민족주의의 내용을 유추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먼저 통일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원리는 민주주의이다.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가치이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는 통일한국이 될 때만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인 민족형성은 완성될 수 있다.

민족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평등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평등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통일한국을 만드는 원칙이다.⁸³⁾ 더우기 이 평등의 원칙은 정치적 원리 뿐 아니라 경제적 원리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까지 남한이나 북한 모두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가 지배계급에 의해 제약당했다. 그러나 남한이 80년대 이후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던 반면, 북한은 아직도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민족주의에 반드시 민주주의적 원리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둘째, 민족주의의 또 다른 원리인 자유 역시 한국민족주의의 정치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가 시민사회에 얼마나 개입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 즉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치하는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적 다원주의는 민족주의 실현에 중요한 관건이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다원주의는 개인과 집단들이 정치적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직과 권력획득을 위한 기회가 개방되어 있는 정치체제를 보장한다. 정당 및 정치집단은 정치적 다원주의하에서 경쟁을 매개로 민족공동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역사를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킬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역사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만든다.⁸⁴⁾

정치적 다원주의는 한국의 경우에도 아직 철저히 구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북한은 민주집중제에 입각한 획일적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다원주의를 자본주의적 정치방식으로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체제 경쟁이 사라진다면 다양한 세력들의 견해를 배척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포괄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원리로 기능할 것이다.

83) 김철수, "통일 한국의 미래상 : 정치분야," 「통일정책」, 제5권, 제4호(1979), pp. 3-15.

84) 황병덕, "조국통일의 이념,"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1993, 가을), p. 119.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는 통일한국의 민족통합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될 것이다. 기존의 의회 민주주의적 대의제도는 국민들의 의사를 만족스럽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시민조직, 대중운동조직, 지방자치조직 등 의회민주주의적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장(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약자로 존재하는 노동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족주의의 마지막 구호인 박애(형제적 우애)는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민족국가의 대등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냉전체제 아래서 사실상 민족국가들간의 평등이란 허울좋은 수사어구였고 강대국과 약소국 및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지배와 대립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국가들간의 관계를 밀접하고 대등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은 예는 국가들간의 등가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통일한국은 세계체제에서 한민족의 자립과 번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은 세계체제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과거의 배타적이고 저항적 성격 또는 미래에 존재할 지도 모르는 팽창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제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포용력있고 포괄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족주의의 성격변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변화를 위한 조건 - 민족 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원리들이 달성되는 상황 - 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한국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띌 수 있다. 결국 국제주의는 통일한국 민족주의의 또 다른 정치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⁸⁵⁾

2. 경제적 원리

현재 남북한은 정치체제 뿐 아니라 경제체제에서도 완전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양 체제의 공통성으로부터 민족주의의 경제적 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단 하나 남북한 모두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이라는 공통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상적인 공통성일 뿐이지 경제개입의 목표와 지향성은 달랐다. 따라서 통일한국 민족주의를

85) 박종철, *op. cit.*, p. 70.

구성하는 경제적 원리 역시 민족주의의 보편성으로부터 추출해야 한다.

민족주의의 자유와 평등은 정치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무제한적 경쟁을 통해 사회적 균열과 계급대립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물질적 재화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추구했다. 반면 계급적 격차를 극복하려던 사회주의 체제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신흥관료 계급) 및 이들간의 갈등과 생산력 발전의 한계로 인해 자체 소멸하였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에 있어서 경제적 원리는 민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기초로 사회주의적 평등의 원리를 보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물질적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지수준 향상의 필요조건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이며, 충분조건은 사회적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의 확립이다. 경제성장이 없다면 사회구성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은 절대적으로 향상될 수 없으며, 형평성이 배제된 분배구조는 전체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신 특정계층의 이익에 봉사할 것이다.

그러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는 통일한국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많은 서구의 국가들은 소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통해 구성원들의 복지를 달성했다. 여기서 국가는 자본축적의 측면에서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타협을 도출해 냈다.⁸⁶⁾ 이러한 서구의 국가 중재하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라는 경험은 통일한국의 경제정책을 구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를 준다.

남북한은 각각 다른 사회원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개념이나 태도에서 완전히 이질적이다. 남한은 복지보다 성장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복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상호 이질적인 두 체제의 통합에서 양자의 조화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이다. 비록 남이나 북 모두 국가의 개입이 가져온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나 다원주의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지 국가의 개입 그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개입 그 자체는 필연이다.

86) 황병덕, *op. cit.*, pp. 120-121.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의 조정역할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자본과 노동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은 단시일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⁸⁷⁾ 게다가 통일한국에서 국가는 그 구성원 전체를 빈곤, 실업, 부자유 등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은 바로 경제성장, 완전고용의 실현, 경제적 평등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⁸⁸⁾ 이러한 과정이 완성될 때만 이질적인 남북한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리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에서 사회문화적 측면은 정치, 경제적 측면과 달리 민족주의의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구성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측면은 다른 측면들과 달리 남북간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다. 물론 반세기동안 언어나 관습 등에서 이질성이 심화되었지만, 혈연과 공통의 기억을 기초로 한 민족의식은 민족통합의 가장 강력한 접착제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데 이러한 공통의 기억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전통의 부활 및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등을 주도해야 하며, 이것을 기존의 행정, 교육제도 및 다양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한국민족주의의 사회문화적 원리는 '민족특수성'의 고양이다.

87) 황병덕은 사회성원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 기능하는 '사회중심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Ibid.*, pp. 120-121.

88) 변형윤, "통일한국의 미래상 : 경제분야," 「통일정책」, 제5권, 제4호(1979), pp. 20-21.

V.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두 체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양 체제의 공통요소를 추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보편성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민족주의의 세계적인 보편성을 살펴보았다.

근대 민족주의가 처음 등장한 유럽의 경험과 제3세계에로의 민족주의의 전파에 있어서 국가는 강력한 역할을 했고, 이것은 통일한국에서 민족주의적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가역할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또한 제3세계 민족주의와 한국민족주의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민족주의는 제3세계 민족주의의 저항적 성격 및 서구 민족주의의 제국주의 성격을 지양하고 국제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3장에서는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찾기 위해 해방이후와 남북한 민족주의의 역사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근대 이후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근대민족(국민)국가형성(nation-state formation)과 근대화(modernization)였고, 남북의 분단으로 전자는 다시 대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의 동등성을 담지하는 민주주의와 민족국가의 완성을 의미하는 통일,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다른 민족국가들과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대외적 자주로 구분하고, 후자는 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외적으로는 자립경제라는 과제로 나누어 한국민족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분단극복과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민족내부의 힘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미소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당시의 냉전적 세계체제의 희생물이 되었고, 이를 거부하던 민족주의 세력은 세력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유래된 한국민족주의의 분열증적 성격이 가져온 최악의 결과였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쳐 남북에는 반세기 동안 상이한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이에 기인한 강력한 국가들간의 상호대립과 적대는 정서적인 하나의 민족(한민족)과 실질적인 두 민족(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모순된 현상을 가져왔다. 더 우기 민족이익보다 체제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통일이나 민주주의, 대외적 자주, 자립경제와 같은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단지 근대화의 과제는 남한에서, 대외적 자주라는 과제는 북한에서 어느정도 달성되었다.

체제대결논리의 우세로 민족주의의 약화 현상 속에서도 남북한에서는 민족주의가 등장했는데, 먼저 남한에서는 박정희정권시기에 경제발전이라는 민족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국가와 지배계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식 (official) 민족주의'가 등장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통일과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 '대항(counter) 민족주의'가 등장하였다. 전자는 경제발전이라는 과제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자립경제라는 측면을 무시했다는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후자는 민주주의의 증진에 큰 기여를 했지만 80년대 말 이후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일부세력의 친북노선으로 그 세력을 잃게 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대외적 자주, 경제자립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60년대 초, 중반 주체사상의 형태로 공식민족주의가 등장했지만, 67년 이후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민족주의적 성격이 탈각되었고, 80년대 후반 이후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언술은 그것이 포괄하는 대상을 북한주민만으로 축소함으로써 통일을 거부하는 논리로 축소되었다. 더우기 북한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대내적 민족주의의 과제는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남북통합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근거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근대 이후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였던 민족국가형성은 통일한국정부의 구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통합을 넘어선 진정한 통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질화된 두 민족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에서 정치적 원리는 민주주의(평등), 다원주의, 국제주의가 되어야 하며, 경제적 원리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 사회문화적 원리는 민족특수성의 고양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통일이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민족 특수성의 고양을 통해 대내적으로 완성되며, 여기에 대외적으로 국제주의가 첨가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한국민족주의 관련

- 김대환, 「한국인의 민족의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김동성, “한국민족주의와 정치발전연구의 상관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4권, 제1호, 봄, 1988.
 “통일한국의 체제 및 이념 모형과 국민정치의식 정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제1호, 1994.
-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 주최 대토론회 발표문, 1994.
- 김세균, “통일과정의 정당성과 남북한의 체제개혁,”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논문집」, 1993.
- 김영국, “한말 민족운동의 계보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1969.
-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연구」, 서울: 청계연구소, 1989.
 “조국통일의 미래상: 체제관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와 전쟁을 넘어서」, 구영록 교수 화갑기념논총, 1994.
- 김용욱,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1981.
- 김용직,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 「사회비평」, 제11호, 1994.
- 김우태, “한국민족주의 연구,” 부산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1984.
- 김학준, 「한국민족주의의 통일논리」, 서울: 집문당, 1983.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 1994.
- 김호성,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문우사, 1989.
- 노태구, 「한국민족주의의 정치사상」, 서울: 새발, 1981.
- 노태돈, “한국민족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역사문제연구소 발표문, 1992.
- 문승욱, 김홍명,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자주사상 연구, 1945-1948,” 「한국정치학회보」, 제15집, 1981.
- 박건영, “통일한국에서의 국가와 외국자본,”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논문집」, 1993.
- 박실, “제3공화국 한미갈등의 내막,” 「정경문화」, 11월, 1983.

- 박종철, "민족주의의 개념과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논총」, 제2권, 1호, 1993.
- 박헌채 외,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서울: 한길사, 1986.
- 박형준, "국제화와 전지구주의의 논리," 「창작과 비평」, 22권, 3호, 1994.
-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9.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민족의식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1990.
- 송건호 외역, 「한국민족주의론」 I, II, I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1983, 1985.
-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민족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한국민족주의의 기원,"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7.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 육태환, "한국 근대민족주의 발생의 역사적 배경 및 전개과정," 「통일문제논총」, 제2권 1호, 1993.
- 이상우, "박정희 후보와 '사상논쟁'," 「정경문화」, 10월; 1983.
- 이영호, "한국근대 민족문제의 성격," 「역사와 현실」 2, 1989.
- 이영희, 강만길 편, 「한국의 민족주의운동과 민중」, 서울: 두레, 1987.
- 이용희 외, 「한국의 민족주의」, 1967.
- 이용희, 「한국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1977.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서울: 민음사, 1983.
- 이정식, 「한국민족주의 운동사」 서울: 미래사, 1982.
- 이홍구, "한국민족주의 연구를 위한 기초적 사고," 「최문환박사추념논문집」, 1977.
- 이홍구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서울: 박영사, 1984.
- 임지현, "한국사학계의 '민족'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제26호, 가을, 1994.
- 장을병 외, 「우리시대 민족운동의 과제」, 서울: 한길사, 1986.
- 정성배,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체제,"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논문집」, 1993.
- 정영훈, "근대한국민족주의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17권, 2호, 1994.
- 조동일,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진덕규 외, 「한국의 민족주의」, 서울: 현대사상사, 1976.
-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상에서 분단체제 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

구원 논총», 제49집, 2호, 1991.

“현대 한국정치 변동과 민족주의의 변용에 대한 연구서설,”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50집, 1992.

“한국민족주의의 미래구도,”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논총», 제2권 1호, 1993.

편, 「한국의 민족주의», 서울: 현대사상사, 1976.

자가이 G. D., 「한국부르조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서울: 인간사, 1990.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78.

“한국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한국정치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창간호, 1987.

최장집, “한국민족주의의 이해,” 「탈냉전시대와 새로운 정치질서», 동곡김하통박사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의식의 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 서울: 평민사, 1990.

한영우, 「한국의 문화전통», 서울: 을유문화사, 1989.

황병덕,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 1993.

황영주,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 「월간 세대», 11월, 1964.

한홍수, 「근대한국 민족주의의 연구», 서울: 연세대출판부, 1977.

M. 로빈슨,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역, 서울: 나남, 1990.

2. 북한 민족주의 관련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국토통일원, 「문예작품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국토통일원, 1989.

김연각,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근로자», 1991. 9.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자,” 「근로자», 1991. 10.

김일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궁지와 자부심은 조선민

- 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핵, "「철학연구」, 1991. 2.
- 대동편집부, 「민족과 철학」, 서울: 대동, 1989.
-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 서재진,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관계," 「통일연구논총」, 제2호 1권, 1993.
- 우정,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비정합성과 사회변동," 「북학학보」, 제16집, 1992.
-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북한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8.
- 「북한의 주체사상」, 서울: 국토통일연수원, 1989.
- 이동욱, "북한의 전체주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종석,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 1994. 여름.
- 임채완, "북한의 민족주의이론과 그 변화추이," 「정신문화연구」, 제17권 제2호, 1994.
- 조선로동당, 「김일성선집」 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75.
- 「김일성저작선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87.
- 「김일성저작집」 1-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87.
- 진덕규, 『북한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1.
-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이론," 「남조선문제」, 1986. 2.
- 최재현, "북한사회이념 속의 전통적 요소: 김일성저작집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14집, 1988.
- 통일원, 「주체사상관계자료집」, 서울: 통일원, 1976.
- 「조선노동당 연구자료집: 1945-1978」, 서울: 통일원, 1978.
-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1-3권」, 서울: 휘문, 1985.
-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4」, 서울: 휘문, 1988.

3. 해외 단행본

Alter Peter. Nationalism, London: Edward Arnold, 1990.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형숙 역, 나남)
- Armstrong John. Nations Before Nationalism,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 Bauer O. Die Nationalitätenfrage und die Sozial-demokratie, 2nd ed'n. Vienna: Brand, 1924.
- Berlin I. Vico and Herder, London: The Hogarth Press, 1966.
- Blaut James M. The national question: decolonizing the theory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Jersey: Zes Press, 1987.
- Breuilly J. Nationalism and the State,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82.
- Cahm Eric & Fisera V. C. Socialism and Nationalism, 3 v. London: Spokesman, 1978-1980.
- Carr E. H. Nationalism & After, New York: Macmillan, 1945. (민족주의와 그 이후, 진덕규 역, 학문과 사상사, 1978)
- Chadwick H. Munro. The Nationalities of Europe & The Growth of National Ideologie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45.
- Chatterjee P. Nationalist Thought and the Colonial World, 1986.
- Coakley J. The Social Origins of Nationalist Movements: The Contemporary West European Experience, London: Sage, 1992.
- Cohler A. Rousseau and nationalism, New York & London: Basic Books, Inc., 1957.
- Cole J. W. & Wolf E. R. The Hidden Frontier: Ecology and Ethnicity in an Alpine Valley, New York and London, 1974.
- Conner Walker. The National Question in Marxist-Leninist Theory & Strateg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4.
- Cowie, H. R.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the modern world, West Melbourne: Nelson Australia, 1979.
- Cummins I. Marx, Engels and National Movements, London: Croom Helm Ltd, 1980.
- Dahrendorf Ralph. Reflexions on the Revolution in Europe, London: Chatto & Windus, 1990.
- Davis H. B. Nationalism and Soc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7. Towards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 전용현 역, 박영사)

- Deutsch K. W. Nationalism &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63.
- Deutsch K. W. & Foltz W. eds. Nation-Building, New York: Atherton, 1963.
- Deutsch K. W. & Merritt R. L.. Nationalism and National Development: an Interdisciplinary Bibliography,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Dofny J. & Akiwowo A. National and Ethnic Movement, London: Sage, 1980.
- Doob Leonard W. Patriotism and Nationalism, New Haven & London: Yale Univ. Press, 1964.
- Dow Maynard Weston. Nation building in Southeast Asia, Boulder: Pruett Press, 1966.
- Earle Eduard Mead ed. Nationalism & Internationalism, New York: Octagon Books, 1974.
- Keddy J. and Schreuder D., ed. The Rise of Colonial Nationalism, Sydney: Allen and Unwin, 1988.
- Emerson Rupert. From Empire To Nation, Boston: Beacon Press, 1960.
- Esman M. J. ed. Ethnic conflict in Western world,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7.
- Fallers Lloud A. The Social Anthropology of the Nation-State,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4.
- Fishman J. ed. Language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John Wiley, 1968.
- Language and Nationalism, Rowley, Mass.: Newbury House, 1972.
- Geertz C. 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New York: Free Press, 1963.
- Gellner Ernest.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64.
-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c Blackwell, 1983(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역, 예하, 1988)
- Giddens Anthony. Nation-State and Violence,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1991.
- Glazer N. and Moynihan D. eds. Ethnicity: Theory and Experien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5.
- Greengeld Liah.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 Univ. Press, 1992.
- Hayes Carlton J. H. Essays on Nationalism, New York: Russell & Russell, 1926.
-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New York, Russell & Russell, 1931. (근대민족주의 발달사, 정운용 역, 서울고시학회, 1960)
- Hobsbaum E. J.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 Hobsbaum E. J & Ranger Terence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 Horowitz D.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 Hroch Miroslav. Social Priconditions of Naitonal Revival in Europe, 1985.
- Hutchinson J. The Dynamics of Cultural Nationalism, London: Allen & Urwin, 1987.
- Isaacs Harold. Idols of the Tribe: Group Identity & Political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89.
- Kamenetsky Ihor ed. Nationalism and Human rights: processes,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73.
- Kamenka Eugene. Nationalism, the nature and evolution of an idea, London: Edvard Arnold, 1976. (민족주의, 청하, 1986)
- Kautsky John H.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 John Wiley, 1962.
- Communism and the Politics of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1968.
- Kaye Harvey J. ed. History, Classes and Nation-States, New York: Basil Blackwell Ltd, 1988.
- Kedourie, E. Nationalism, London: Hutchinson, 1960.
- ed, Nationalism in Asia and Africa, London: Weindenfeld & Nicholson, 1970.
- Kellas James G.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London: Macmillan, 1991.
- Kemilainen A. Nationalism: Problems Concerning the Word, Concept and Classification, Yuaskyla: Kustantajat Publishers, 1964.
- Kierna, V. G. History, classes, and nation-states: selected writings of V.G.

- Kiernan, New York: Blackwell, 1988.
- Kohn Hans.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Princeton: van Norstrand, 1955. (민족주의, 차기벽 역, 삼성문화문고)
- Prophets and Peoples: Studies in Nineteenth-Century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1957. (19세기 유럽 민족주의, 나종일 역, 탐구당, 1981)
- The Age of Nationalism: The First Era of Global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2. (민족주의 시대, 진덕규 역, 박영사, 1974)
-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1967.
- Kosing Aklfred. Nat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erlin: Dietz Verlag, 1976. (사적유물론적 민족이론, 김영수 역, 아침, 1989)
- Lukacs John.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end of the modern age, New York: Ticknor and Fields, 1993.
- Mayo P. The roots of identity: three national movements in contemporary European politics, London: Allen Lane, 1974.
- Michael Mann ed. The Rise and Decline of the Nation Stat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 Minogue K. Nationalism, London: Batsford, 1967.
- Miroslav Hroch. Social Preconditons of National Revival in Europe, Cambridge, 1985.
- Nairn Tom. The Break-up of Britain, London, New Left Books, 1977.
- Norbu Dawa. Culture and the politics of Third World nationalism, Routledge, 1992.
- O'Brien Conor Cruise. God Land: Reflections on Religion & Nationalism,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8.
- Pipes R. "Reflections of the nationality problems in the Soviet Union", in Glazer & Moynihan. 1975.
- Pulparampil J, K. Models of Nation Building a Critical Appraisal, New Delhi: N.V. Publications, 1975.
- Ramet Pedro.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Durham & London: Duke Univ. Press. 1989.
- Roy E. H. Mellor. Nation, state and territory, London: Routledge, 1989.

-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 Said A. A. & Simmons. Ethnicit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6.
- Sathyamurthy T. A. Nationalism in the Contemporary World: Political & Sociological Perspectives, London: Frances Pinter, 1983.
- Seers Dudley.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3.
- Seton-Watson Hugh. Nations & States,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Nation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 Shaffer Boyd C. Nationalism: Myth and Reality, London: Victor Collanz, 1955.
- Faces of Nationalism, New York: Brace, Jovanovich, 1972.
- Shaheen S. The communist theory of self-determination, The Hague: van Hoeve, 1956.
- Shils E.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states, New York: Humanities Press, 1964. (신생국의 정치발전, 차남희 역, 학문과 사상사, 1980)
- ed. Ethnic separatism and world politics, Lanham, MD: Univ. Press of America, 1984.
- Silvert K. ed. Expectant peoples: nationalism and development, New York: Random House, 1963.
- Smith Anthony D. Nationalist Movement, London: Macmillan, 1976.
-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Martin Robertson, 1979.
- The Ethnic Revival in the Mordern World, Cambridge: Univ. Press, 1981.
- Theories of Nationalism, 2nd edn, London: Duckworth, 1983.
- State and Nation in the Third World, Brington: Weatsheaf Books, 1983. (제3세계의 국가와 민족, 삼영사, 1986)
-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in John A. Hall, ed., States in History,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National Identity, Harmondsworth: Penguin, 1991.
- Snyder Louis L. The Meaning of Nationalism, Mew Brunswick: Rutgers Univ. Press,

1954.
 ed. *The Dynamics of Nationalism: Readings in Its Meaning and Development*,
 Princeton, N.J.: D. Van Nostrand, 1964.
The New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68.
Varieties of Nationalism: A Comparative Study, 1976.
Global Mini-Nationalisms: Autonomy or Independence, London: Greenwood Press,
 1982.
Micro-Nationalism. A History of the Par-Movement, London: Greenwood Press,
 1984.
- Stalin J. V.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42.
- Tilly C.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5.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 Oxford: Basil Blackwell, 1991.
- Tiryakian Edward A. & Rogowski Ronald eds. *New Nationalisms of the Developed
 West, Toward Explanation*, Winchester Mass.: Allen & Urwin, 1985.
- Tivey Leonard. *The Nation-State: the formation of modern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1981.
- Trevor-Roper. *Jewish and Other Nationalisms*,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2.
- Uri Ra'anán ed. *State and nation in multi-ethnic societies: the breakup of
 multinational states*, New York: Manchester Univ. Press, 1991.
- Van den Berghe P. *The Ethnic Phenomenon*, New York: Elsevier. 1979.
- Vogler, Carolyn M. *The Nation State: The Neglected Dimension of Class*,
 Brockfield: Gower, 1985.
- Ward Barbara. *Nationalism & Ideolog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6.
- Yong-Jick Kim. *Formation of a Modern State and National Social Movement in
 Modern Korea: March First Movement(1919)-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A Dissertation for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hapel Hill,
 1992.

4. 해외 잡지

Anderson Benedict, "The New World Disorder," NLB, 193.

Back, Les & Solomos, John, "Doing research, writing politics" the dilemmas of political intervention in research on racism", *Economy and Society* 22, 2('93:5)

Birch Anthony H., Minorit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ories of political integration, *World Politics*, 30. April, 1978.

Blay S.K. Nyamekeh and Tsamenyi B. Martin, "Self-determination for west Papua Revisited,"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V, 1-2, 1988.

Brzezinski Zbigniew, "Post-Communist Nationalism," *Foreign Affairs*, Vol.89, 1990

Chong-do Ha and Jeffrey Nartin, "Toward a Synthesis of Conflict and Integration Theories of Nationalism", *World Politics*, vol. 27(Apr., 1975)

Conner Walker, "Nation-Building or nation-destroying?," *World Politics* 24, 1972.
"A Nation is a nation, is a state, is an ethnic group, is a...," *Ethnic and Radical Studies* I:377-400. 1978.

"Nationalism and political illegitimacy(the various levels of political loyalties)"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8, Fall 1981.

"When is a n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3(1) 1990.

"Beyond reason: the nature of the sthnonational bond," *Ethnic and Racial Studies* 16(3) 1993.

Dikotter Frank, "Group definition and the idea of 'race' in modern China(1793-1949)," *Ethnic and Racial Studies* 13(3) 1990.

Doder, Dusko, "Yugoslavia: new war, old hatreds", *Foreign Policy* 91('93. Spring)
Elshtain Jean Bethke, "Sovereignty, Identity, Sacrifice," *Millenium*, 20(3). 1991.

Esman Milton J., "Ethnic Plu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VII, 1-2, 1990

Ganguly, Sumit, "Ethno-religious conflict in South Asia," *Survival* 35, 2('93. Spring)

Gellner Ernest, "Islam and Marxism: Some Comparisions", *International Affairs*,

Vol. 67, no. 1(Jan., 1991)

"Nationalism and Politics in Eastern Europe," *NLB*, 189, 9-10 1991.

"Nationalism reconsidered and E. H. Car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8(1992)

Gligorow, Vladimir, "Balkanization: the theory of constitution failur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6, 3('92. Autumn)

Gonda Imre, "Class and Nation,"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II, 2, 1985.

Greenfeld, Liah, "Transcending the nation's worth," *Daedalus*, 122. 3, Summer 1993.

Hall, John A., "Nationalism: classified and explained," *Daedalus*, 122. 3, Summer 1993.

Hass Ernst B., "Nationlism: An Instrumental Social Construction," *Millenium*, 22(3), 1993.

Hassner, Pierre, "Beyond nationlaism and internationalism" ehnitcity and world order," *Survival* 35, 2('93. Spring)

Hechter Michael, "Nationalism as group solidar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10(4) 1987.

Hobsbawm E. J., "Some Reflections on 'The Break-up of Britain'," *New Left Review*, 105, Sep.-Oct., 1977.

Hoffmann, Stanley, "Thoughts on the French nation today," *Daedalus*, 122. 3, Summer 1993.

Kaldor, Mary, "Yugoslavia and the new nationalism", *New Left Review* 197('93. 1-2)

Kampelman, Max M, "Secession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 urgent need to harmonize principle with pragmatism". *Washington Quarterly* 16, 3('93. Spring)

MacDonald Donald S., "Nationalism in Korea,"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VII, 1-2, 1990

MacLaughlin Jim, "Nationalism as an Autonomous social force: A critique of recent scholarship on ethnonationalism,"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 nationalism XIV, 1, 1987.
- McDonogh Gary W., "Other people's nations: Towards an interactive model of nationalist movements,"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IV, 2, 1987.
- Mann, Michael, "Nation-states in Europe and other continents: diversifying, developing, not dying," *Daedalus*, 122. 3, Summer 1993.
- Ma Shu Yun, Ethnonationalism, ethnic nationalism, and mini-nationalism: a comparison of Connor, Smith and Snyder, *Ethnic and Racial Studies* 13(4) 1990.
- Miles Robert, "Marxism versus the sociology of 'race rel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7(2) 1984.
- Nevers, Feneede, "Democratization and ethnic conflict," *Survival* 35, 2('93. Spring)
- papastergiadis Nikos, "Reading DissemiNation," *Millenium*, 20(3), 1991.
- Ryang Sonia, "Historian-judges of Korean 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13(4) 1990.
- Regis Debray,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New Left Review*, 105, September-October, 1977.
- Riggs Fred W., "What is ethnic? What is national? Let's turn the tables,"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III, 1, 1986.
- Shafer Boyd C., Debated problem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I, 1, 1984.
- Smith Anthony D., "Nationalism: a trend report and annotated bibliography", *Current Sociology* 21(3), 1973. Mouton, The Hague.
-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States in History*, J.A. Hall ed.,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The myth of the 'Modern Nation' and the myths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1(1) 1988
- "The origins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2(3) 1989.
- "The Nation: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Millenium*, 20(3) 1991.
- "Chosen peoples: why ethnic groups surv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15(3)

1992.

- Stone J. ed., "Internal coloni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2(3) 1979.
- Schwartz, Benjamin I., "Culture, modernity, and nationalism-further reflections," *Daedalus*, 122. 3, Summer 1993.
- Symmons-Symonolewicz Konstantin, "The Concept of Nationhood: Toward a Theoretical Clarification,"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II, 2, 1985.
- Tajfel Henri, "The Social Psychology of Minorities," Report No. 38.
- Tilly, Charles, "N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problem for all of us," *Daedalus*, 122. 3, Summer 1993.
- Verdery, Katherine, "Ethnicity as Culture: Some Soviet-American Contrasts",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V, 1-2, 1988.
- "Wither 'nation' and 'nationalism'?", *Daedalus*, 122. 3, Summer 1993.
- Walker R. B. J., "State Sovereignty and the Articulation of Political Space/Time," *Millenium*, 20(3), 1991.
- White Philip L., "What is a Nationality?,"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XII, 1, 1985.
- Wolf Kenneth H., "Hans Kohn's Liberal Nationalism: The Historian as Prophe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Vol. 37(Oct. - Dec., 1976)
- Zubaida Sami, Nations: old and new Comments on Anthony D. Smith's 'The myth of the "Modern Nation" and the myths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2(3) 1989.

統一以後의 教育課程에 關한 모델 研究

-市民教育 關聯教科를 中心으로-

研究責任者：金 周 晟 (韓國教員大)

목 차

<요 약 문>	377
I. 서론	37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9
2. 연구방법 및 내용	381
II. 남북한 시민교육의 비교	383
1. 교육목표의 비교	383
2. 교육내용의 비교	388
3. 교육방법의 비교	403
4. 남북한 시민교육의 이질성 및 장단점	425
III. 독일의 교육통합과정과 시사점	428
1. 독일 교육통합정책의 성격	428
2. 통독 이전의 정치교육	429
3. 독일의 교육통합 과정 및 현황	430
4. 독일 교육통합이 주는 시사점	431
IV. 통일한국의 시민교육과정 모델	434
1. 시민교육 이념과 목표 설정 :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관의 모색	434
2. 시민교육의 내용 선정(Scope)과 배열(Sequence)	442
3. 교육방법의 다양화	445
4. 교육평가의 개선	448
V. 요약 및 결론	453
※참고문헌	455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 시민교육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

<요 약 문>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된 교육과정 모델을 구안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학교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교과의 통합교육과정을 구안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학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도덕과에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교과는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 중에서도 남북분단 이후 이제까지 이질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시민양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 2장에서는 현재 남북한에서 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그 비교 차원을 목표, 내용, 방법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시민교육의 이질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통일한국의 시민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요소들을 추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제 3장에서는 남북통일의 선행모델이 될 수 있는 독일의 교육통합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독일 교육통합정책의 성격을 규명해보고, 통독 이전의 동·서독의 정치교육(시민교육)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동서독의 상반된 정치교육이 통독 이후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남북통일 이후의 교육과정통합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통일한국의 시민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있어서 선행연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통일한국의 시민교육과정 모델을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21세기의 포스트모던을 대비하고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관을 모색하므로써, 이를 시민교육의 이념과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민교육의 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내용구성의 기준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언급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평가의 기준과 관점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남북통일 이후의 교육통합에 있어서 학문적·이론적 차원에서의 자료제공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 이후에 교육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통일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형성·시민형성·국민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전문가와 교육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북한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 동안 각 영역에 걸쳐 남북은 점점 이질화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당위적인 명제이다.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노력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이다.

남북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교육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영향 아래 놓일 수 밖에 없는 가변적이고 종속변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 교육문제가 통일의 과정, 혹은 통일된 이후의 정치형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적 성격을 갖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사업이다. 정치, 경제, 사회체제는 교육받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이 여타 부문의 종속변수라기 보다는 독립변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인 교육제도나 교육행정 등은 종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나,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여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남, 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질화된 영역을 동질화시킬 수 있는 역할은 교육이 담당할 수 있다. 교육이 차지하는 이러한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통일을 위한 노력 중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분야가 교육분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남북의 교육통합에 관한 논의는 이제까지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했다.²⁾ 그나마 추진된 연구도 대부분 통일과정에서의 교육통합 전략이나, 통일이후의 교

1) 이러한 견해는 김동규, "남북통일 이후의 학교교육 이념 및 제도에 관한 모델 연구", 통일원,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6)』 (1992), pp. 350-351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교육의 이념이나 교육제도, 교육행정 등의 측면만을 고려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제까지 남북의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정책자문회의,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1990), ②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1991), ③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1992), ④ 문용린, "민족동질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략 - 교육내용적 측면", 『교육학연구』 제28권 제3호, pp. 43-50., ⑤ 정석홍,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

육이념, 교육정책(행정), 교육제도(학제) 등 외형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교과목표, 교과내용의 구성이나 조직·배열, 교수-학습 방법론, 교수-학습 평가 등의 교육과정(Curriculum)의 측면 혹은 교과교육적 측면에서 추진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질적인 교육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때, 외형적인 영역은 큰 장애없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은 학문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일의 교육통합 과정에서 시시받고 있는 점이다. 오히려 교육내용의 구성·배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통합은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즉흥적·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정책적 판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그에 앞서 반드시 학문적 논의와 검토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혹은 교과교육의 통합모델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현상황으로 볼 때, 이에 관한 연구추진은 교육통합 작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통일 이후의 교육과정 모델을 구안, 제시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과에 걸친 전체적인 교육과정 모델을 구안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방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 학습자 요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정책가, 교육전문가, 각계의 학자, 현장 교사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통일 이후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인간형성·시민형성·국민형성이라고 보아, 이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인 사회과, 도덕과(국민윤리과)에 국한하겠다.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교과 중 남북의 이질성이 가장 큰 교과는

- 교육제도적 측면”, 『교육학연구』 제28권 제3호, PP. 53-59., ⑥ 김동규, “남북통일 이후의 학교교육 이념 및 제도에 관한 모델 연구”, 통일원,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6)』 (1992), PP. 343-386., ⑦ 이계학, “민족 공동체 형성과 교육의 이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1991), PP. 169-181., ⑧ 문용린, “통일후의 교육체제 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1991), PP. 197-208. 이상의 연구 중 대부분은 교육이념, 교육정책 및 제도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추상적·개괄적·이념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대안의 제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밖에 남북의 교육통합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통일이후의 교육통합에 많은 시사를 주는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교육개발원,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1993), 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민족통일에 대비하는 북한 사회과 교육의 연구』 (1993).

사회과, 도덕과를 포함하는 시민교육 관련 교과라고 볼 수 있다. 여타의 교과(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 교과 등)들은 시민교육 교과보다는 비교적 학문(혹은 교과)적 성격상 교과 목표 및 내용에 있어서 남북간에 이질화의 정도가 미약하다. 이 말은 통일이후에 이들 교과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합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회·도덕과는 남북통일 이후의 인간교육, 시민교육, 국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해 내야 하는 교과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현재, 사회과라는 교과가 없는 실정이다. 1988년에 개정된 북한의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인민학교에서는 사회과적 교과는 없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 등의 교과가 나타났다. 고등중학교의 편제에 의하면, <역사>, <지리> 등 사회과적 교과가 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역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 등의 교과를 가르치게 되어 있다. 이전의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교과를 가르쳤었다.³⁾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며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다. 교육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으며 다원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은 이질화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되고 이질화된 남북의 시민교육을 통일후에는 어떻게 통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남북통일 이후의 시민교육이, 남북간의 상반되고 이질화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서 조화를 이루며,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에 관해 그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남북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입안가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주로 문헌분석 방법이 적용되며,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첫

3)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1991), pp. 63-65.

번째 단계는 현재 남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과 독일의 교육통합 과정과 현황을 검토하는 일이다. 두번째 단계는 통일이후의 학교교육에서 실제로 다루게 될 교육과정 모델을 구안하는 것이다. 앞 단계의 연구는 비교교육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뒷 단계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남한의 교육 모습은 관찰·면접·조사·사례연구·실험 등의 경험실증적 방법을 동원하여 파악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교육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공식 문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겠다. 문헌 중에서도 남북한에서 고시된 교육과정 및 편제, 교과서, 교육관련서적, 잡지, 신문기사, 교육관련 연구물 등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비교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특징, 이질성 및 동질성, 장단점의 비교·분석은 통일이후의 교육과정 모델 구안에 있어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 독일의 교육통합의 배경과 현황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므로써, 남북통일 이후의 교육과정 모델 구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물론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중앙집중식,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각 주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나 교육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나 동서독의 상이했던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이 서독 쪽의 모습으로 재편되는 과정은 남북한의 상황에 어떤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동독은 맑스-레닌 주의 및 사회주의를,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교육이었다. 이것은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통일된 교육과정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선행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기초자료와 문헌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통일 이후의 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모델을 구성할 것이다. 물론 이 교육과정에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일국가에서 요구되는 시민교육의 목표, 내용구성 및 배열, 지도방법, 학습평가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검토될 것이다.

II. 남북한 시민교육의 비교

1. 교육목표의 비교

가. 북한의 교육목표

북한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어린이 보육 교양법」,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각종 연설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헌에 제시된 교육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주의 헌법 :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제3장 39조).
- (2) 어린이 보육 교양법 :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제6조) ...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 교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제29조).
- (3) 사회주의교육학에 관한 테제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북한의 교육목적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 지녀야 하는 품성으로서의 지·덕·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知〉 공산주의적 인간은 자연과 사회에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전면적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 세계관 수립의 조건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입각한 과학지식은 순수이론을 위한 이론, 지식을 위한 지식을 배격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써먹을 수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

〈德〉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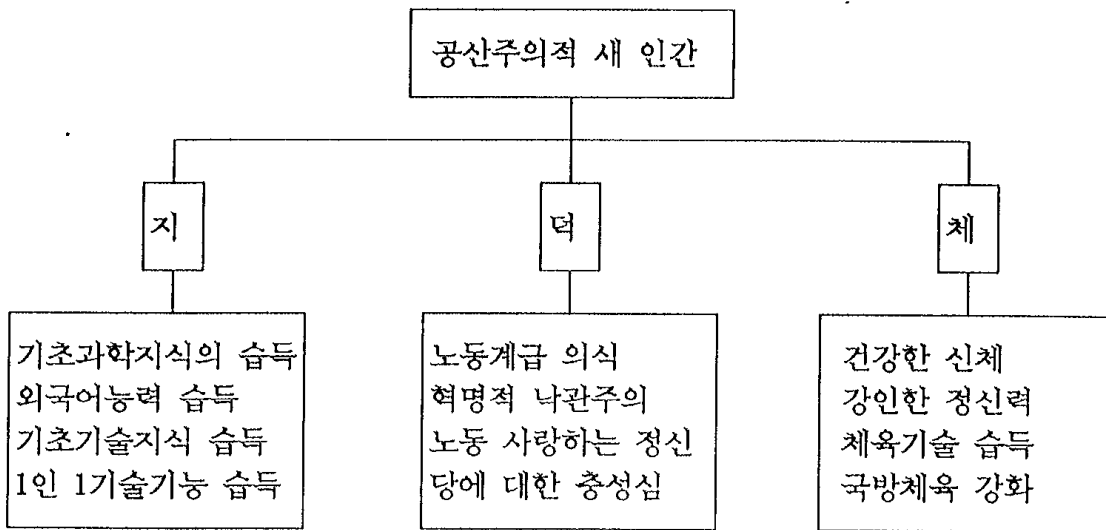
4)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교육』 (1984) ;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 ;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84)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를 갖출 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과정이 되어야 한다.

<體> 건강한 체력은 인간의 지식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 담보이다. 건강한 체력을 갖지 않고서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체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 과정으로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교육목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북한의 교육목적



나. 남한의 교육목표

남한의 교육목적은 「교육법」과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법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교육과정 :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 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 다)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관리를 강화한다.⁵⁾

그리고 시민교육과 직접 관련되고 있는 교과인 도덕·사회과의 교과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이를 실천하게 하여 자율적인 도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 나) 도덕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을 신장시킨다.
- 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활태도로 자율적인 도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⁶⁾

<사회>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길러, 개인과 사회, 국가 및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가지게 한다.

- 가) 사회현상에 관한 기본개념과 원리를 구체적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나)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의 기능적 요소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게 한다.
- 다) 고장, 지역, 나라, 세계의 생활 모습을 자연환경 및 역사와 문화, 민주적 공동생활 등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고, 여러 기관과 단체, 주민들이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 라) 지도, 연표, 도표 등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생활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기르게 한다.
- 마) 일상생활을 통하여 민주적인 생활을 습관화하고, 고장과 국토 및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민족통일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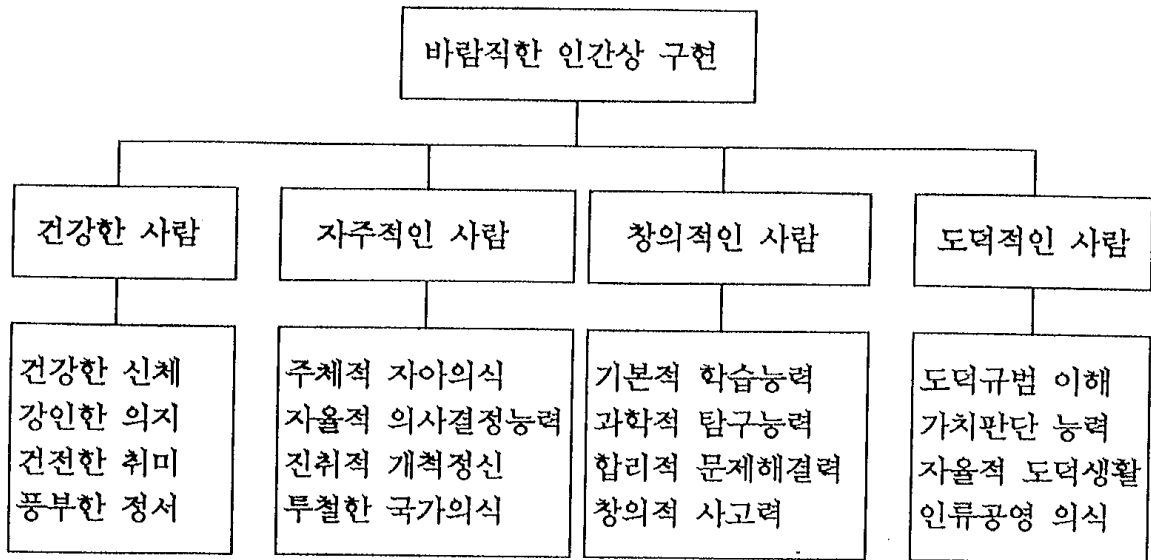
5) 교육부 고시 제 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2.9.30), p.1.

6) 상계서, p.38.

7) 상계서, p.98.

이와 같은 내용을 체계화 하면 <그림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2> 남한의 교육목적



다. 남북한의 교육목표 비교

교육의 목적은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 사회의 세계관, 사회관 및 인간관은 그 사회의 교육관과 기르려고 하는 인간의 제 특성을 결정하므로, 결정된 교육목적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술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구현된 형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교육목적을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창조하여 북한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형 육성에 둔 반면, 남한의 교육목적은 남한이 지향하는 현재 및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간형의 육성에 있다. 남북한의 교육목적에서 추구하는 덕목을 살펴보면 북한은 지·덕·체를, 남한은 건강·자주·창의·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표면적으로만 비교하면 남북한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에서 추구하는 덕목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 즉 북한에서의 교육목적은 주체사상에서 그 이념을 찾고 있는 반면, 남한의 그것은 홍익인간 및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교육 목적을 정리하면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교육이념	홍익인간	공산주의적 새인간
교육목적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한편, 남북한의 교육목적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 블룸(Bloom)은 인간특성을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네(Gagne)는 지적 기능, 운동 기능, 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간특성을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남북한의 교육 목적을 비교하기로 한다.

지적 영역의 경우, 북한은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기존의 과학기술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기능을 습득케 하는 수동적이며 실용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 능력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시하여 북한에 비해 능동적·적극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의적 영역의 경우, 북한의 교육은 집단지향적인 가치관을 개인의 인격완성에 우선하기 때문에, 당과 집단 혹은 계급의 가치관이 곧 개인의 가치관이 되는 집단 우선의 인간관을 배양할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말로 표현되는 집단적·획일적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의 교육목적은 개인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개인지향적인 가치관을 중시한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남북한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북한의 체육은 국방체육을 강조한다는 사실과 체육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나, 남한은 체육활동을 개인의 건강·취미 생활과 정서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교육목적의 선정과 진술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의 교육목적은 구체적이고 현재의 실용성을 중시하며 실현가능성이 높게 진술하고 있으

며, 남한은 그에 비해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술이 많고 실현가능성 보다는 당위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2. 교육내용의 비교

가. 북한의 교육내용

북한에서의 교육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중심으로 언급해 보기로 하자.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각 주제별로 의도하는 목표와 내용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내용 구성

주 제	목 표	내 용
1)주체사상	· 자주적 혁명노선의 확립	· 혁명의 자주성과 이를 위한 당정책
2)혁명전통 교양	· 김일성과 당에의 충성심 함양	· 김일성과 당의 항일혁명투쟁
3)공산주의도덕교양	· 공산주의도덕으로 무장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화	· 혁명위업의 정당성 ·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 · 노동계급의 혁명의식
4)집단주의 교양	·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심 함양	· 집단주의 원칙
5)노동애호정신	· 노동을 사랑하고 전체를 위한 공동노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 집단생산과 노동의 중요성
6)사회주의적 애국주의	· 사회주의 조국의 용성과 발전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정신자세	· 노동계급의 정권,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애착심
7)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해 공동으로 싸우는 정신자세 확립	· 세계 공산화를 위한 여러 나라의 혁명투쟁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
8)사회주의적 준법사상	· 공산주의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준수	· 공산주의적 법질서 ·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습관의 배격

자료 : 박용헌,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통일원, 『통일논총』 제3권제1호(1983), p. 40.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내용 요약임).

정치사상교육에서 주체사상을 가장 먼저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용

은 그들이 추진하는 혁명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자주적 혁명노선이 김일성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결국 김일성에 추종하는 것이 바로 주체적인 혁명을 추진하는 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혁명전통교양에서도 조작된 김일성의 항일 투쟁 경력을 부각시키고 그의 위대성을 날조하여 그에 추종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민족사 전체를 그들 혁명의 취지에 맞게 변조하여 계급투쟁과 폭동으로 얼룩진 것으로 꾸며 우리의 민족사를 계승하는 주체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밖의 모든 주제에 깔려 있는 요지를 지적하면, 김일성과 그 일당에 충직하게 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노동하며 생산하고 그들이 적으로 내세우는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투쟁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북한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은 역시 언어생활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체 단원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언어의 정치적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언어에 대한 단원은 더욱 적어진다. 참고로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 일체의 정치적 용어가 한마디도 없이 순전히 국어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단원은, 인민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체 161개 단원 중 20개 단원에 불과하다.⁸⁾ 다음으로 역시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내용이 많았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단원을 모두 합하면 전체 단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외의 단원에서도 그들 부자의 이름이나 교시가 수없이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책의 거의 전체가 김일성 부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공산혁명의 전위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강조하는 단원이 21개, 소위 「혁명의 원수」를 미워하는 적대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지주 및 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도록 만든 단원이 8개, 그리고 남한의 비참한 생활상이나 사회문제를 과장·왜곡시킨 단원도 5개에 이른다. 이제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의미를 분석해 보자.

8) 허숙, “북한의 취학전 및 초등교육”, 고대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pp. 126-127.

<김일성 이상화와 충성심 고취>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김일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단원은 39개에 이른다. 물론 그 단원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대략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첫번째 유형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우애가 깊고, 애국심이 강한 남다른 소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원이다. 두번째는 김일성이 어린 학생들이나 부하들의 아주 사소한 일일까지 자상한 배려를 해주는데 대하여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낀다는 내용, 세번째 유형은 김일성이 항일 유격활동에서 뛰어난 지략과 영웅적인 업적으로 승리로 이끌었다는 내용, 그리고 네번째 유형은 김일성을 흠모하고 그를 만나보는 영광에 감격하며 목숨바쳐 그를 지키고 따르겠다는 유형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⁹⁾

교과서 내용에 의하면,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친구들을 가르치고, 타이르며 이끌어주는 총명함과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이 소학교에 다닐 때의 성적표를 소개한 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룡호는 슬며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글짓기 학습장을 펼쳤습니다. 똑바로 줄을 잡아서 글씨를 곱게 써나간 학습장은 정말 깨끗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제목이나 다 최우등의 점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인민학교 3학년 국어, 4. 동무를 도우시여, p.13).

여섯살 난 김일성은 뒷산 바위터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가 하면(1학년 : 4. 꼬마학교), 소학교 다닐 때에는 자기글을 베껴 쓴 아래반 아이를 준엄하게 꾸짖고 제힘으로 글을 짓도록 도와 준 결과 그 아이는 제힘으로 글을 지어 최우등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3학년 : 4. 동무를 도우시여). 언제나 예의 바르고 효성심이 지극하며 모든 일을 선도하고 이끄는 김일성의 지도력은 타도난 자질인 것처럼 곳곳에 묘사되어 있으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나라 일을 계획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동강의 맑은 물을 예까지 끌어올 수는 없을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다음 크시면 나라에 물길을 내어 이 땅에서 영영 가뭄을 없애버리리라 다짐하시었습

9) 상계서, pp.127-128.

니다(2학년 : 47. 밀밭에 물주신 이야기, p.145).

김일성을 주제로 한 단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갖는 것은 그의 배려와 은덕을 기리고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글 속에서 김일성의 성품은 언제나 자상하고 온정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많은 글들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지극히 일상적이며 사소한 일을 소재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인민과 어린이를 돌봄에 있어서는 자상하지만, 「원썩」들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몸을 돌보지 않고 용맹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 어린이들로 하여금 감복하고 충성심이 우러나오도록 의도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정한 전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①김일성의 자상한 배려나 위대한 업적에, ②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③목숨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이는 결국 김일성을 주제로 한 모든 글들이 그 궁극의 목적을 김일성에 대한 복종과 충성심을 유도하는데에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에 대한 흠모와 충성심을 나타낸 표현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아버지원수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리라 다시 한번 굳게 마음다졌다(3학년 : 24. 모포에 깃든 사랑, p.80).

아버지원수님의 팔소매에 살며시 얼굴을 대보는 선희는 백날이고 천날이고 이렇게 서있고만 싶었습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도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 선희네가 부러운 듯 끝없이 사랑거렸습니다(4학년 : 15. 아름다운 길, p.49).

<김정일 찬양과 세습의 정당화>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품에 대한 칭송과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강조되면서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인품이나 업적의 찬양에 있어서는 김일성의 경우와 다소간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김정일의 경우 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효성심을 강조하는 단원이 많으며, 혁명활동이 없는 김정일로서는 업적찬양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효행담은 다소 과장되고 억지같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김일성이 낮잠자는데 매미가 울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밑을 뛰어다녔다던가(1학년 : 19. 매미가 울면), 귀엽게 기르던 새를 잡아 그 깃털로 폭신한 꽃베개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기도 하고(3학년 : 20. 꽃베개), 또는 깊이 생각하며 걷는 아버지가 에들아 걸으실까봐 이른 아침부터 애써 가꾸던 나무가지를 자른다는 내용(4학년 : 29. 꽃

길) 따위이다. 다음은 그의 인품과 총명함을 강조한 문장의 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선생님을 우러르는 경위대원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1학년 : 19. 매미가 울면, p. 58).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거침없는 말씀에 구리종을 세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환한 웃음을 지우시고 몹시 기뻐하시었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나게 총명하신 지도자 선생님을 끝없이 우러러 보았습니다(2학년 : 36. 구리종, p. 111).

김정일의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은덕도 김일성과는 조금 다른 점이 엿보인다. 즉 김일성의 경우는 일상적이고도 사소한 상황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상함을 강조했는데 비해서, 김정일의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 베풀어 주는 물질적인 시혜를 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뱃길이 막혀 개학날이 되어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섬마을 선생님을 위해 비행기를 보내 준다면(2학년 : 32. 등대섬의 개학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열차를 보내주기도 하고(3학년 : 17. 통학열차를 맞는 날), 아이들의 등교길에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놓아주는 일(3학년 : 39. 사라의 다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와 시혜는 역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대를 이어 받들어 모시자고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모방하는 놀이를 통하여 그도 혁명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의 권력세습이 정당한 것임을 은연중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정당화시키고 그에의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찬바람 맞을세라 감싸주시는
지도자 선생님의 따사로운 사랑
우리 모두 그 품안에 잠들면
꽃나비 춤추는 동산으로 날아가지
(1학년 : 25. 꽃이불, p. 75).

꽃 꽃 목란꽃
흰눈보다 하얀꽃
원수님 우러러
곱게곱게 피웠지

... 중략 ...

원수님 우러르는

조선의 꽃 목란꽃

대를 이어 오래오래

아름답게 피울래요

(2학년 : 9. 목란꽃, pp. 25-26).

<계급투쟁과 적대감정 고취>

북한 교육내용의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들이 소위 「혁명의 원수」라고 부르는 제국주의, 지주, 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는 점이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적대집단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지주계급이며, 그들에 대한 증오교육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적대집단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처참하리만치 잔혹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왜 미워해야 되는지의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증오하도록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주놈은 순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아 가고 오빠를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언니를 멀리로 팔아치우려고 하였습니다. 또 지주놈은 녀편네의 병을 고친다고 혼자남은 눈먼 순희마저 깊은 산 속에 내버렸습니다. 이처럼 지주놈은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승냥이입니다(4학년 : 28. 순희를 생각하며, p. 84)

적대집단에 대하여 복수할 때에는 잔인한 살상 용어가 사용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까부수다’, ‘꺼꾸러뜨리다’, ‘쳐죽이다’, ‘때려부시다’, ‘찢어죽이다’, ‘불벼락을 퍼붓다’, ‘가슴팍에 복수의 날창을 박고 또 박다’ 등이다. 북한은 이러한 증오교육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아동단원이란 이름아래 목숨을 건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선동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남한도 증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남한은 “혈벗고 굶주리며 지주들이 판을 치고 있고,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아동들에게는 결국 민족의 이질감만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남조선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썩어빠진 세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품 속에서 월사금이란 말조차 모르며 마음껏 공부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깊이 느꼈습니다(1학년 : 27. 공부하고 싶어요, p. 81).

소위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주의교육'에서 이러한 중요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인류공통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한의 실상에 대한 왜곡과 적개심의 고취는 남북한의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합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식과 공산주의 사상교육>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조형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교육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교과서의 내용은 대체로 북한은 착취가 없는 살기좋은 것이라는 것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국에 대한 예찬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찬양하므로써 그 우월성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경일이를 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뼈를 떼여 달라고 수술실로 달려온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 누나들, 수북이 쌓이고 쌓이던 값비싼 보약들과 맛있는 음식들, 학교나 다름없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 글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과 분단 동무들! 그 어느 하나도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입니까! 어머니의 가슴에는 끝없는 감격이 북받쳐올랐습니다(3학년 : 30. 퇴원하는 날, pp. 99-100).

북한이 사회주의의 성취를 위하여 아동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덕목은 집단주의와 노동애호 정신인 것으로 교과서에 나타나 있다. 집단주의 교양은 두 가지 모습으로 강조되는데, 하나는 소년단 활동을 통한 조직생활을 잘해서 충직한 주체의 혁명가로 자라나자는 선동이요, 다른 하나는 동물을 의인화 한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적인 행동을 죄악시하고 항상 여럿이 힘을 합쳐 일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정신의 교양을 통하여 모아진 힘들은 노동의 현장으로 유도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 인민군과 혁명군을 찬양하는 글을 통하여 개인을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 기꺼이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결국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의 논리는 철저히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북한의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의 원리, 즉 교육내용의 선정(scope)과 조

직(sequence) 및 교수원리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¹⁰⁾

첫째, 북한의 교과내용은 교과 그 자체의 교육과 더불어 정치사상교육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의 양적 비중으로는 교과의 지식이 우선되고 있으나, 실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교과의 지식교육과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이 결코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것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사상교육을 위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표방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도, 교과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각종 재료에 정치사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다량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과의 내용은 그 선정기준을 유용성면에서 볼 때는 다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실제생활을 연계시킨 점에서 유용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유용성이 개인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유용성이 아니고, 오직 사회주의 체제의 충직한 인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용성이었다는 점이다. 학습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소불 때, 내용의 선정은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배려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과내용의 전체적인 지적수준 또는 학습난이도는 남한의 같은 학년에서 다루어지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내용 선정의 또 다른 기준인 타당성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내용은 대체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 교과에서 이제까지 발전되어 온 다양한 범주의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지극히 협소한 범주에서 비교적 제한된 내용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은 그 사회의 가치실현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교과서는 매우 철저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겠다. 즉 그들이 신봉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교과서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원리로 삼아 교육내용을 선정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교과서는 내용조직에 있어서, 계속성의 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특히 정치사상교육의 영역은 더욱 그렇다. 즉 학생들을 세뇌시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그들을 고착시키고, 대남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므로써 계속성의 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 교과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간에도 잘 이어져 나가도록 조직하

10) 이성호, "북한의 중등교육", 고대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pp. 198-201.

로써, 연계성의 원리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속성이나 연계성의 원리가 그 교과 지식의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네째, 교육내용을 조직함에 있어서, 특히 그 순차를 결정함에 있어 연역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학생들에게 결론 또는 정답부터 먼저 주입시킨 다음, 학생들이 그 원리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증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지력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학교 이하의 연령층은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 사고에 더 익숙하고 학습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교과서가 굳이 연역적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김일성의 교시에 대한 그들의 맹종적 추종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 사회에서 정답과 결론은 오로지 김일성으로부터 나온다. 김일성의 교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김일성의 교시를 순차에 있어 맨 나중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김일성 이상화에 어긋나는 일로 판단하므로써, 김일성의 교시는 대부분 서두에 위치하며,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연역적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조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한은 교육과정 내용조직에 있어서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모순 반박법을 기본원리로 담고 있음도 특색이다. 우선은 남한의 사회, 남한의 인민들과 그것에 위대한 남한의 우방인 미제에 대한 비판을 먼저 제기한다. 그것은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것으로 몰아 세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북한의 사회는 낙원이고,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의 은덕 아래 잘 살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리하여 김일성에 대하여 더없이 충성해야 한다는 지극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남한에 관한 것은 지극히 상스럽고 저속한 용어들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 관한 것은 지극히 부드럽고 우아한 용어들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이나 그의 교시에 대한 내용들은 고딕체를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김일성 이상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남한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비난 일색이고, 많은 사실들을 왜곡하여 남한보다는 자기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교과서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교수방법과 합치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즉, 「공정적 모범」을 통한 교수-학습을 위하여 수많은 성공적인 모범 사례들을 교과내용의 예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깨우쳐 주기위한 교육」이나 「문답식 학습방법」을 통한 철저한 세뇌교육의 방법들에 부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습문제나 과제들은 앞

에서 습득한 내용들에 대하여 토론과 논쟁, 구두문답, 반복연습 등을 통하여 재확인 하고 주입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구조화된 문제나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남한의 교육내용

남한의 교육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민학교 「도덕」,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가 바로 이들 교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 9월 30일에 고시된 제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6 호)에 의하면 「도덕」과의 내용체계는 <표3>과 같다.

<표3> 국민학교 도덕과 내용체계

영역\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개인 생활	· 동식물 보호 · 좋은 일 실천하기 · 정직한 태도 · 물건 아껴쓰기	· 건강한 생활 ·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 약속 지키기 · 시간 아껴쓰기	· 인간생명의 귀중 함 · 창의적인 태도 · 부지런한 생활 · 생활계획과 반성	· 앞 날에 대한 설계 · 최선을 다하기 ·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 신념과 실천
가정·이웃·학교 생활	· 가족끼리 존중하기 · 학교생활의 반성 · 우정과 신의 · 고마움에 감사하기	· 친족 간의 예절 · 학교에 대한 긍지 · 용서하는 마음 · 다른 사람의 처지 이해하기	· 전통예절에서 본받을 점 · 이웃 간의 존중 · 친절과 양보 ·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기	· 예절의 정신과 형식 · 고장 발전에 협력하기 · 사랑과 자비 · 사랑과 공경
사회 생활	· 공중도덕 지키기 · 봉사하기 · 여러 사람을 위하기 · 사람 차별 없기 ·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 다른 사람의 이익 존중 · 경쟁과 협동 · 환경 보호 · 정의감과 용기 · 회의시의 태도	· 법을 지키는 태도 · 시민 사회에서의 협동 · 경제 생활의 윤리 ·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 합리적인 문제 해결	· 법의 정신 이해 · 공동체 의식과 참여 · 사익과 공익 간의 조화 · 정의로운 사회 건설 · 공정한 절차와 결과 존중

국가·민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 · 조상의 뜻 이어 받기 · 분단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 외국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발전에 협력하기 · 민족 문화 유산 아끼기 ·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 세계평화에 공헌한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개인 · 해외 동포들의 조국애 · 평화통일의 방법 · 국제 문화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나라 · 민족의 긍지와 사명 · 통일을 위한 노력 ·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
----------	--	--	---	--

자료 : 교육부, 『제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2), pp. 39-40.

그리고, 국민학교 「사회」과의 내용 체계는 <표4>와 같다.

<표4> 국민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

영역\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인간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의 생활 환경 · 여러 고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 자연환경에의 적응 및 그 이용, 보호 · 그림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자연환경의 특징과 그 이용 · 주요 산업 · 도시와 교통망 · 다른 지역과의 관계 · 우리 나라 각 지역의 생활 환경 · 여러 지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 지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의 주요 산업과 생활의 향상 · 자원의 분포와 산업 · 지형, 기후와 주민 생활 · 인구·도시·환경 문제 · 국토와 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본과 세계 지도 ·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의 특색 ·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의 문화재 · 고장 생활의 변화 · 고장의 문화적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내력 · 지역에 따른 문화의 특징 · 가정 및 사회 생활의 변화 · 취미·여가 생활의 변화 · 연표와 역사지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가치와 보호 · 조상들의 예술·종교·교육·학문 활동의 특색 · 새로운 문화의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과 국가의 형성, 발전 · 각 분야에서 활약한 조상들 · 근대화를 위한 노력 · 민주국가의 발전 · 문명의 시작과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큰 사건들
공동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시설의 이용 · 생산과 유통의 모습 · 여러 기관, 단체가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도의 의회 활동과 자치 생활 · 여러 기관의 역할 · 가정 생활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의 산업의 변화와 전망 · 직업과 산업과의 관계 · 생산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과 정치 · 우리 나라 민주 정치의 특색 ·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

	·생활 향상을 위한 요구와 협력	요성 ·가정의 살림살이 ·지역 간의 상호 의존	·금융기관의 구실 ·여러 가지 의사 결정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법의 제정과 준	·통일과 민족의 앞날
--	-------------------	---------------------------------	--	-------------

자료 : 교육부, 『제 6차 국민학교 교유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2), pp. 99-100.

이와 같이 남한의 교육내용은 북한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 교양, 혁명전통교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세계사 등에 관련된 사회과학적 지식들과 탐구기능, 의사결정능력에 필요한 내용들과 함께 합리적인 가치, 태도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두가 바람직한 내용들로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남북 관계, 북한에 대한 내용 및 통일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서 그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현재의 통일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반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일·안보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방향지워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아직까지 합의되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시민교육 관련 과목들의 교과서 내용들을 토대로 통일교육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면, ① 체제 유지·옹호 및 안보 교육으로서, ② 민족의식 교양·고취 교육으로서, ③ 국내외적 평화 유지 교육으로서 통일 교육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¹¹⁾

①의 입장 하에서의 통일 교육은 현재의 상태를 “이념적 혼란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 해소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이념을 분명히 정립하고 또 학생들에게 분명히 파악케 한다”든가, “공산주의 세력을 비판할 수 있는 확실한 관점”을 지니게 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이러한 입장에 속한다.

11) 정호범, “통일 지향의 시민양성을 위한 한국 사회과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 연구회, 『사회과교육 연구』 창간호 (1994. 1), pp31-32.

②의 관점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민족 성원 전체의 욕구 충족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예컨대, “통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 문제 이전의 것으로 민족사적 이념 체계, 다시 말해서 민족 성원 전체의 자주적, 보편적 욕구 충족을 가능케 하는 이념 체계”의 정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③과 같은 생각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 물질적·정신적 빈곤의 극복, 구조적 폭력의 제거 등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 간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상호 공존·호혜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한국의 시민교육 관련 과목들(도덕·사회·역사·지리 등의) 속에서 시대마다 강조점만을 달리할 뿐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형태의 통일교육은 재고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이 앞에서 밝혀졌다.

①의 입장은 개인적인 흥미와는 동떨어진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 즉 체제 우위의 논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학습자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부재하는 통일교육은 자칫 정책 홍보용 통일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또, 이미 진·위, 선·악이 결정되어버린 가치의 교화·주입·설득 등에만 힘쓰려 하다보니, 주체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육성은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②의 견해는 통일의 문제를 지구사회 전체적인 차원보다는 민족 사회 내부의 것으로만 보아, 결국 민족의 단합과 외세의 배척을 강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수주의·체제옹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통일교육은 남북이 협력·공존해야 한다는 슬로건과는 달리, 강자의 논리에 서서 북한에 대한 시혜자의 입장을 보임으로 해서, 결국 동질성보다는 차별성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민족주의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③의 견해는 민족·국가 간 호혜성이라든가, 물질적·정신적 빈곤의 탈피 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계주의와 박애주의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 1990년대 이후의 탈냉전 분위기에 따라

동·서의 대립 상태가 무너지고,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결국 통일교육의 방향은 이와 같은 “평화 교육”(peace education)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평화주의적 요소들이 국수주의적·국가주의적 요소들과 상호 배타적으로 공존함으로써 호혜성과 상호 의존·협력 정신에 입각한 평화주의의 이념이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남북한 교육내용의 비교

체제와 이념이 다른 상황아래서 남북한의 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앞에서 분석된 북한 인민학교의 「국어」교과서는 남한의 「국어」와는 그 성격과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북한의 국어과는 오히려 남한의 도덕과나 사회과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교과내용을 분석하면서 남한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¹²⁾ 그것은 첫째로,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나 전통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국어나 사회, 도덕과에서 공히 민족의 문화 유산이나 슬기로운 조상을 소재로 다루는 단원들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모든 역사가 김일성의 혁명활동에서부터 시작되는 느낌이다. 김일성 이전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의 영웅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북한의 교과내용 분석에서 나타나는 두번째 차이점은 개인과 전체의 대비적 논리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의 구성원리에서 보듯이 나로부터 출발하여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로 내용이 확대되어 간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남한에서는 어린이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항부터 학습이 시작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가정생활이나 국제우호를 주제로 한 단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교육이 소위 전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수주의적인 충성만을 강조하는 결

12) 허숙, 전계서, pp.140-141.

과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차이점은 민족지향과 개인지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남한의 교과서에도 통일교육이란 이름으로 일부 반공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은 민족 문화, 민속명절, 조상의 업적, 외국에 사는 동포, 함께 살아야 할 민족등을 다루고 있으며, 현존하는 특정인을 주제로 하는 단원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교과서는 철두철미 김일성 부자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마치 모든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나오고, 모든 일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내세우는 소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마치 모든 개인 하나 하나는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국가라는 전체는 오직 김일성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 교육 방법 비교

가. 북한의 교육 방법

교육방법이란 주어진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건형성의 과정이며, 교사·학습자·교육내용의 세 요소 사이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호작용을 원만히 이끌어 내기 위한 포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교육방법의 의미는 이와 다르다.

“위대한 교육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관된 주체의 교육방법이며 사회주의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테제가 밝힌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인재를 키우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며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힘있는 무기이다.”¹³⁾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실현하는 문제를 교육대상들의 사상과 심리, 인식발전의 합법칙성과 합치시키고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과정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의 방법론에 의거하지 않고는 옳은 교육방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체의 방법론 만이 사회주의 본성에 맞게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모든 요인들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길을 제시하여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교육방법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원만히 키워주는 교육방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¹⁴⁾ 이하에서는 북한의 사회인식교육 방법으로서의 교수원칙과 교수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3) 홍승은, “위대한 교육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육성의 완성된 방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해설론문집』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p. 70.

14) 상계서, pp. 72-73.

① 교수원칙

교수원칙이란 수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를 말한다. 교수원칙은 장기적인 교수실천 경험을 총화한 것으로서 교수과정의 객관적 법칙을 반영한다. 교수원칙은 교수의 전반 과정에 관통되어야 하며 교수과정의 여러 방면을 지도하여야 한다. 교사는 교수원칙을 정확히 파악 적용하여야만 효과적으로 교수임무를 완수하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교사가 교수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¹⁶⁾

1) 과학성과 사상성의 원칙

교수의 과학성이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식과 기능은 정확하고 객관적 법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교수방법과 조직은 학생들의 인식특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수의 사상성이란 지식전수에 결부하여 학생들에게 변증법적 유물론 교양과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교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이러한 과학성과 사상성이 통일되어 있으며, 교수의 과학성은 사상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¹⁷⁾

교사는 아동의 연령적 특성과 발전 정도에 적합한 수준에서 과학이 달성한 중요한 이론들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설하고 실험을 통하여 현대적 과학기술의 수준을 이해시켜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과 견해를 형성시키는 일은 그들에게 사회생활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사회생활에 자의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튼튼한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2) 자각성과 적극성의 원칙

자각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학습에 자기의 모든 정력을 기울이는 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분석하고 이 사실의 본질에 파고 들어가며 사실에 존재하는 내면적 관련을 해명하며 습득한 지식을 실천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학습에 대한 자각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교재의 심오한 이해와 자유로운 발표력, 학습에 대한 창조적 성격,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는 기능 등을 포괄해야 하며, 교수의 모든 측면들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관철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명확한

15) 최장선 편, 『유아교육학』 (연변: 연변교육출판사, 1986), pp. 175-176.

16) 교육도서출판사 편, 『교육학』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0).

17) 최장선 편, 전게서, p. 176.

교수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의 발전을 추진시키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는 질문법, 비교법, 실천법, 실물관찰법 등과 같은 계발식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지어주어 자기의 지능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기능을 얻게 하며, 지능활동방식을 배우게 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열성적이고 참을성 있는 교수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교사와 학생 쌍방의 적극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¹⁸⁾

3) 직관성의 원칙

직관성 원칙이란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줄 때 반드시 학생들이 직접 감각 지각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직관성 원칙으로 교수를 한다면 교수를 생동화 발하게 할 수 있고 지식과 기능을 배우려는 아동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아동들의 인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학교에서 사용하는 직관물에는 자연 직관물(동식물, 각종 수집품), 입체 직관물(각종 모형, 박제품), 상형 직관물(사진, 회화, 환 등, 영화), 상징 직관물(지리지도, 역사지도), 도형 직관물(각종 도표, 도식) 등이 있다. 이러한 직관물은 '시청각 자료'를 일컫는 것이다. 직관 교수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표상에서 상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직관물은 교수과정에서 각이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이론과 실천 연결의 원칙

지식은 실천적 성격을 띤 각이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 극히 성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에서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교육을 실천과 결합시켜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산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성과적으로 키워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론교육이 인류가 이룩한 인식과 실천활동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 한 이론과 지식으로 습득시키는 교육형태라면, 실천교육은 그것을 현실생활과 실천활동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일정한 기술을 습득시키는 교육형태이다. 그런데 쓸모있는 산 지식을 체득시키는 문제는 이론교육 하나만으로는 풀 수 없으며 실천교육을 결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식과정에서 실천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실천은 현실인식의 출발점이다. 이론은 실천에서 나오며 축적된 실천경험을 일반

18) 상계서, p.178.

19) 상계서, pp.178-179.

화 한 것이다. 이론은 실천의 요구에 따라 발전하며, 실천은 도달된 이론적 성과를 적용하면서 보다 높은 요구를 끊임없이 내세운다. 이론의 정당성은 실천에 적용되어 생활력을 나타낼 때 입증되기 때문에, 실천이 진리의 기준이며 척도라는 것이다.²⁰⁾

5) 체계성과 순차성의 원칙

체계성이란 내용의 명확한 논리적 배열을 의미하며, 순차성이란 활동의 명확한 순서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과학의 기본을 엄밀한 논리적 순서로써 가르치며 학생들의 학습을 순서 정연하게 지도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 기능 및 숙련의 체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미 습득한 지식을 튼튼히 다진 후에 이에 근거하여 새 지식의 습득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그 활동에 방향을 지어주며, 학생들을 교재의 자립적 분석 체계화 및 일반화에서 익숙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는 교수요강의 체계적 작성과 복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원칙은 내용배열(sequence)의 방법인 '논리적 배열'과 '심리적 배열' 중 전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회과에서 내용구성의 논리적 배열이란, 학문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교과중심 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구성방법으로서, 사회과학의 개념, 법칙을 체계적·계층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다.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생활이 영위되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 그 도구로서 사회과학의 지식과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1960년대 행동과학의 발달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기초한 과학적 사회인식을 통한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즉 신사회과(new social studies)의 출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신사회과에서의 내용배열은 '지식의 구조'에 따라 사실--> 개념 --> 일반화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이 순서에 따라 학습해 간다. 사실들 속에서 개념을 찾고, 그 개념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일반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교수-학습의 과정이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의 개념, 법칙을 찾아내는 과정·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이것이 곧 탐구학습, 발견학습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체계성, 순차성의 원칙'은 이러한 논리적 체계성 보다는 계속성,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 홍승은, 전계서, pp. 81-82.

6) 공고성의 원칙

공고성의 원칙이란 배운 지식과 기능을 공고히 습득하고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심화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지식과 기능의 공고화는 새 지식을 순조롭게 학습하는 기초이며 지식과 기능을 운용하는 선결조건이고, 학생들의 기억력과 사유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²¹⁾

이 원칙의 첫째 조건은, 교사의 명확한 교재설명과 학생의 주의집중이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실시하며 교재를 자립적으로 기억하는 것, 연습과 실습을 하며 학습한 것을 필기하고 도표화 하는 것 등 지식의 공고화는 교수의 각이한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식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복습이 갖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7) 해득성의 원칙

해득성의 원칙은 교수내용과 방법을 학생들의 연령적 특성과 역량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긴장한 태도로써 지식, 기능 및 숙련의 체계를 소유하게 하도록 교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교수에서 쉬운 것-->어려운 것, 아는 것-->알지 못하는 것, 간단한 것-->복잡한 것, 가까운 것-->먼 것으로 점차적으로 넓히고 깊게 해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원칙은 앞에서 살펴 본 '체계성과 순차성의 원칙'과는 다르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르는 '심리적 배열'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내용구성의 심리적 배열이란 학습자의 성장발달의 특징, 즉 심리적·정신적 경험의 민감성, 흥미와 필요, 학습의 곤란도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배열방법에는 전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험영역 확대원리인 '동심원적 확대법' 또는 '지역확대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교통·통신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8) 개별 지도의 원칙

개별 지도의 원칙은 전체 학생의 열성적 학습을 통한 조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매개 학

21) 최장선 편, 전게서, p.181.

생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지도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교사가 개별 지도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요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주의의 발전, 수업시간 중의 태도와 행동의 적극성
- 학과에 대한 열성정도 및 학습흥미와 태도
- 직관물과 말에 대한 지각의 속도와 정확성
- 교재의 이해와 사고의 특성
- 지식의 질과 일반적 발전 수준, 발표능력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교수원칙은 서로 연관된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동일한 교수과정에서 관철된다. 교원은 전부의 교수원칙을 잘 적용하여 교수과정을 지도함으로써 훌륭한 교수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교수방법

교육의 목표가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사회주의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교육의 이념이 주체사상에 있고 교육의 목표가 전인민의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혁명화에 있으므로 교육방법도 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은 그 목적에 맞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효과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테제」에서는 학교의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수방법인 '깨우쳐주는 방법'을 위시해서,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노동의 결합', '조직생활·사회정치활동 강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교전 교육·학교 교육·성인교육의 결합' 등의 방법과 규칙이 제시되고 있다. 이 5개의 영역에 걸친 교육방법 중 교실수업에 적용되는 교수방법인 '깨우쳐주는 교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학교교육의 기본형태인 교수의 기본방법이 바로 '깨우쳐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계발식' 교육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한 방향으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사회주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며, 그 특징은 학생들이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 교수과정은 가르치는 교사의 활동과정과 배우는 학생의 활동과정의 통일로 이루어 지는데, 이 때 학생을 중심에 놓는다.²⁾

교사는 학생들 자신이 배우는 주인이 되도록 그들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적극 계발시키며, 학생들은 배우는 주인으로서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깨우쳐주는 교수의 심리특성은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학습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로서의 자각성과 적극성이며, 다른 하나는 객관세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능동적인 사유활동이다. 자각성이란 학습목적이 궁극적으로 혁명과 투쟁에 직결된다는 원칙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고, 적극성이란 두번째의 능동성과 함께 학생이 이러한 궁극목표를 수행하려는 의욕을 갖는다는 뜻이다.²²⁾

깨우쳐주는 교수는 교수의 과업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을 옹계 고려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법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³⁾ 첫째,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으로 깨우쳐주는 교수의 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식적 흥미를 적극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 둘째, 교수내용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생동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재는 현실자료를 정확하게 반영시켜야 한다. 셋째, 학습활동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감정의 체험과 밀접히 결부시켜 주어야 한다. 기쁨,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상태에서는 학습에서 적극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 성과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주의를 잘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흥미의 개인적 특성을 옹계 살려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깨우쳐주는 교수활동은 1)이야기·담화의 방법, 2)문답식 방법, 3)직관교육·실물교육, 4)해설과 설복, 5)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자.

1) 이야기·담화의 방법

이야기, 담화의 형식은 생동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계발시킴으로써 사물현상들 간의 연관관계와 개념, 법칙, 원리 등 일반화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분석적으로 설득시키는 방법이다.²⁴⁾ 이 방법은 모두 언어로 진행되는 교수방법이다. 즉

22) 홍승은, 전게서, p. 74.

23)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문맥사, 1990), p. 324.

24) 사회주의교육학연구소,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의 심리적 특성』 (평양:교육과학연구원, 1983), pp. 54-61.

25) 홍승은, 전게서, p. 76.

언어로 교재를 서술·해석·설명하며,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법이다. 서술을 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게 생동하고 형상적인 언어로 감정이 풍부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간결하고 중점이 두드러지게 말하여야 한다. 답화방법을 적용할 때 교사는 목적, 요구와 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예컨대 먼저 무엇을 말하고 후에 무엇을 말하며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문제는 열은 데로 부터 깊은 데로, 구체적인 데로 부터 추상적인 데로 이르는 순서로 조직 배열하여 학생들의 사유를 점점 깊어지게 이끌어 정확한 결론을 얻게 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답화 가운데서 사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정확한가를 요해한 다음 지도할 수 있다. 답화를 끝낼 때는 답화의 중심을 간단히 총화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²⁶⁾

이 방법은 수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강의·토의법에 해당한다. 강의법은 특별한 준비나 조건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대상에게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이 부진할 경우에는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학생들이 수동적인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많고, 전체 학습자를 획일적으로 대하게 된다. 더욱이 수업이 교사 중심의 폐쇄적인 과정, 즉 '달려진 수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강의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교사중심, 암기중심, 지식과 가치의 주입, 능력 차의 무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시민육성이라는 사회과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하겠다.

토의법은 교사의 인도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단사고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나 결론을 도출케 하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토의법은 학생들의 지적기능이나 의사소통기능 등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토론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또 집단토의 과정에서 집단감정이나 집단의식을 갖게 되고, 심층적인 태도나 행동성향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살리려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운 상황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와 교사의 수용력이 필요하다. 토의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며, 다수결에 의해서 집단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인 기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26) 최장선 편, 전계서, p.186.

27) 김희목 외, 『사회과 수업방법 개선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p.61.

28) 상계서, pp.64-65.

2) 문답식 방법

문답식 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영도하신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조되어 실생활에서 그 우월성이 증명된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이며, 학생들에게 혁명사상과 산지식을 성과적으로 체득시킬 수 있게 하는 힘있는 학습방법이라는 것이다.²⁹⁾ 학생들 사이에서의 문답은 그들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서로 배운 지식을 검열하고 공고히 하며 그에 토대하여 보다 심화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답식 방법의 우월성은 문답식 학습경연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³⁰⁾ 문답식 방법의 우월성은 첫째로,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함으로써, 하나를 배워도 똑똑하게 배워 혁명적 양식으로 체득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똑똑히 찾아내게 되며 현실적이면서도 생동한 표상을 가지고 학습내용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집단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옹계 밝혀내고 전반적인 학습내용을 설득력있게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참가자들로 하여금 학습의 의의를 똑똑히 깨닫게 하며, 학습을 더 잘 하겠다는 새로운 욕망을 가다듬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학생 상호 간의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혁명적 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도록 한다는 데 있다. 문답식 학습방법은 누구나 지명되면 무조건 대답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습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은 결국 학습을 게을리 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게 하며, 온 집단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게 하는 것이다.

네째로,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대중을 혁명사업 수행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문답식 학습에서는 내용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놓고 토론을 하므로 학습을 혁명사업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답식 방법에 대한 정당화는 단순한 주입식 방법보다는 문답을 통하여 자기의 결함을 찾아내고 공동사고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29) 홍승은, 전계서, p. 77.

30) 금성청년출판사 편, 『주체의 학습론』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pp. 132-134.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장들 자체 간에 모순성이 내재하고 있다. 가령, 이 방법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적극 추동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집단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혁명적 기풍을 세운다는 것이다. 즉 압력과 통제를 가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미 기대하는 답을 지닌 채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이나 깨달음을 증시하는 문답식 방법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답식 방법은 모순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방법 자체는 인간이 사용하여 온 교수방법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방법이 제대로 활용될 경우에는 인간의 사고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령 '수렴적 질문'이나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집단적 통제를 강화하여 혁명적 기풍을 세우려면, 이미 배웠거나 기억된 대답을 요구하는 '인지적 기억질문'이나 미리 결론이 내려진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평가적 질문'이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직관교육, 실물교육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물현상과 과학적 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 사고를 계발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의 위력은 그것이 현실인식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데 있다.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생생한 직관을 통한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 논리적 인식으로 발전한다. 특히 논리적 사유능력이 덜 발전한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 생동한 직관은 그들의 인식과정을 촉진하며, 교수내용을 보다 쉽게, 빨리, 공고하게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교육은 '직관성의 원칙'이라는 교수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찰방법'과 '연시·시범'의 방법이 있고, 독창적인 영도방법으로 구현된 '방식상학'이 있다.

관찰방법이란 학생들이 목적있게 객관사물을 감각 지각하도록 계획있게 지도하는 교수방법을 말한다. 관찰은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직접적 경험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다. 학생들의 관찰과정을 지도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하기 전에 준비(관찰대상을 선택하는 것, 관찰조건을 마련하는 것, 관찰계획을 세우

31) 홍승은, 전게서, p.77.

는 것 등)를 목적있고 계획있게 잘 하여야 한다. 둘째, 관찰을 시작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찰목적(을 제기하여 관찰하는 데 흥미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이 순서에 따라 관찰하게 하여야 한다. 관찰결과를 분석, 비교, 종합하여 결론을 얻을 줄 알게 하며, 사물에 대한 인식을 말로 서술할 줄 알게 하여야 한다. 넷째, 관찰을 마칠 때 관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총화하여 관찰에서 얻은 지식을 가일층 공고히 하고 조리있게 하여야 한다.³²⁾

연시·시범·범례의 방법은 모두 직관적이고 형상적인 교수방법이다. 연시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실물, 교편물을 내보이거나 실험을 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시범이란 교사가 자기의 표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시와 시범은 교수과정에서 늘 해설과 결합하여 설명하면서 하여야 한다.³³⁾

방식상학은 좋은 본보기가 창조된 단위에 나가서 사업경험이나 방법을 직접 보고 배우는 학습방법이다. 방식상학은 말로써가 아니라 생동한 산 현실을 통하여 참신한 경험과 방법을 배운다는데 그 우월성이 있다.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직관교육, 실물교육이 노는 커다란 역할이 해명되면서 한 단위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 하는 독창적인 영도방법이 구현되어 방식상학이 널리 조직되었다고 한다.³⁴⁾

4) 해설과 설복

공산주의 사상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확고한 신념으로 될 수 있다. 사상교양은 강압적 방법이나 들이먹이는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과 설복은 공산주의 사상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이라고 한다.

“해설과 설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설득시켜 그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교양방법이다. …… 해설과 설복은 매개 학생들의 구체적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꾸준히 참을성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매개 학생들의 사상의식수준은 다르다. 그것은 그들의 사상의식형성 경로에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요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³⁵⁾

32) 최장선 편, 전계서, pp.184-185.

33) 상계서, p.187.

34) 금성청년출판사 편, 전계서, p.142.

35) 홍승은, 전계서, pp.78-79.

이 방법은 교사가 교수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학생들을 수궁케 하는 것이다. 해설과 설복의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이 방법이 인간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비강압적이고 사리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내용을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판단하며 인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사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주체 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활동에서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데서 이 방법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또한 착취사회에서의 강제적 방법, 주입식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한다.

해설과 설복의 방법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그 논리에 있어서 내제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자주성 존중'과 '해설과 설복을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들 수 있다. 학습자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학습자의 주관적 사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까지 끈기있게 설득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주입식 교화방법으로서 자주성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적 자질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앵글(S.H. Engle)은 통합(unified)형, 교화(indoctrination)형, 의사결정 과정(decision-making process)형으로 나누고 있다.³⁶⁾ 여기서 교화형은 특정한 규범,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학습자에게 설교하고 주입하려는 교수형태이다. 이는 규범, 가치, 이데올로기 중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곧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에서 '해설과 설복의 방법'을 택한 것은, 사회주의혁명에 필요한 덕목은 분석할 필요도 없고 비판적으로 음미할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주입하여 교화된 국민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화형 교수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의심할 여지없는 절대적인 규범, 가치, 이데올로기가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교화형 교수법은 이런 사실을 간과해 버릴 위험이 크다. 예컨대 '충성'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같은 견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36) S.H. Engle, "Objectives of the Social Studies", in Massialas & Smith eds., *New Challenges in the Social Studies*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1965), pp. 8-15.

된 충성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교화형 교수에서는 이런 절차적, 방법적 가치의 다양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절차적, 방법적 가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스스로의 신념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은 어렵게 된다. 교화형 교수의 다른 문제점은 비민주적인 교수방법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수업과정과 교사의 절대적인 권위에 바탕한 설교가 그것이다. 북한에서는 실제로 선동적인 정치선전과 유사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해설과 설복의 정당성은 그들이 말하는 '착취사회'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착취사회에서의 사상과 이론은 비과학성과 허위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비롯해서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수방법은, 문제해결학습·발견학습·탐구학습 등으로 학생들의 자주적인 사고능력과 창의력, 비판능력 등의 인식능력을 길러주는 것들이다.

5)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상교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의적인 면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긍정적 모범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추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창조되는 모범은 그들을 감화시키는 훌륭한 소재가 되는 것이다.

「테제」에서도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 준다. 따라서 긍정적 모범은 사람들 속에서 부정을 이겨내고 새 것, 진보적인 것을 조장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긍정적 감화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교양상태가 좋지 못하고 뒤떨어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교양상태가 나쁘고 뒤떨어진 학생일지언정 그에게도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로 그들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이 방법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나라의 민족적 특성에 맞기 때문이며, 셋째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것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며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텔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것, 부정적인 것을 옹호하고, 새 것, 긍정적인 것을 억압 말살하는 사회 물질적 조건이 없고 근로 대중이 언제나 새 것, 긍정적인 것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창조된 긍정적 모범이 곧 대중의 공명을 받으며 온 사회에 빨리 일반화된다는 것이다.³⁷⁾ 우리 조상들은 침략자와 착취자를 반대하는 정의로운 투쟁에서 용감하였으며 권력이나 재물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귀중히 여겼으며, 늙은이를 존경하고 부모 처자를 사랑하며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서로 돕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미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모범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새 것에 대한 민감성과 탐구심, 훌륭하고 비범한 일에 대한 동경과 해보려는 지향, 모범에 대한 커다란 감동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모범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올리버(D.W.Oliver)의 사회과 교수방법 유형 중 '위대한 국민상 형성을 위한 접근법(The Image of Greatness Approach)'과 유사한 점이 많다.³⁸⁾ 이 접근법에서는 객관성이나 진실성보다는 감동적 효과를 우선시키며 개개인의 인간형성이라는 교육본래의 목적보다 체제유용성을 앞세워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을 골라 학습자를 흥분과 감동에 휩싸이게 하고 그 감정이 애국심, 충성심으로 승화되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민족을 위해 싸우는 모습,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육적인 살인·방화와 같은 장면도 재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얻은 감동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북한의 교육 방법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육이론 또는 논리가 2중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

37)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원, 1975), p.179

38) 올리버는 사회과 교수방법을 교육의 목표에 따라 6 가지로 유형화 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지혜로운 인간형성을 위한 접근법(the wisdom approach), ②사회과학적 접근법(the social science discipline approach), ③조화된 인격형성을 위한 접근법(the harmonist approach), ④위대한 국민상 형성을 위한 접근법(the image of greatness approach), ⑤법리적 접근법(the jurisprudential approach), ⑥시민적 행동 접근법(the civic action approach). 자세한 것은 D.W.Oliver, "Categories of Social Science Instruction", in Gross Mcphie & Frankel eds., *Teaching the Social Studies* (New York : International Textbook Co., 1970), pp.100-130참조.

는 2중 구조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반대논리가 함께 주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선 사회인식 논리와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교수방법과의 괴리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사고 과정에는 과학적 설명과정이나 문제해결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방법은 대부분이 전형적인 주입식 교화 방법이거나 교사중심의 획일적 강의식 방법이었다. 또한 교수원칙과 교수방법의 불일치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교수원칙에는 -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 과학성, 자각성, 직관성, 체계성, 순차성, 해득성, 개별지도의 원칙 등 우리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이론에 부합되는 면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원칙이나 원리들은 바람직한 사회인식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론적 입장과 일치하는 것들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이러한 교수원칙은 교수과정에서 반드시 적용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수방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론의 2중 구조는 또한 개별적인 주장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과학성과 사상성을 하나의 교수과정에서 통일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그들은 어설픈 논리로 양자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괴리나 불일치의 해소를, 교육활동에서 찾기보다는 교육이론의 정립에서 찾으려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교수방법은 내용주의, 덕목주의에 터하고 있다. 김일성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덕목이나 원리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치로 확정지어 놓고, 이를 주입·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조주의'를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자, 합리적 판단자로서의 시민육성 보다는 정해진 가치나 지식의 소비자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주의, 덕목주의는 결국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로 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교수방법은 전체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교육목적에 입각한 교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교수를 통해서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이런 교수방법이 그들이 내세우는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혁명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인식능력의 배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시민)형성이라는 시민교육 본래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교수방법을 통한 국민형성은, 단기적으로는 체제유지에 순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세계와는 달리 폐쇄적이고 통제된 북한사회에 어떤 계기로 인해 사회질서가 일부 흔들릴 경우, 전체가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 남한의 교육 방법

현재 남한의 교육계에 소개되고 있는 학습이론과 학습방법은 보편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굳이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의 교육방법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참고하고자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① 학습 이론

학습이론이란 어떤 문제사태에 있어서, 새로운 행동이나 적응능력을 습득, 변용시키는 것은 어떤 심리적 기제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지식체계이다. 지금까지 학습이론은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남한에서 거론되는 일반적인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³⁹⁾

첫째, S-R 이론으로 학습을 자극(Stimulus)과 반응(Response)으로 설명하려는 행동주의 이론인데, Pavlov의 조건반사설, Thorndike의 시행착오설, Skinner의 작동적 조건화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이론에서는 학습을 어떤 종류의 연쇄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행동의 습득이나 변화라고 보고 있으며, 조건의 형성이나 단순한 반응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는, 학습을 환경에 대한 중추신경 내의 기억 흔적의 변용이라고 보는 인지이론이다. 이같은 이론은 K.Lewin, J.Piaget, J.S.Brunner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학습의 결과는 인지구조의 습득으로 설명하며 사실에 관심을 두는 학습이론이다.

셋째는, 절충이론으로 S-R 이론과 인지이론이 대등한 논쟁을 거듭하고 그들 대로의 편견에 대하여 J.Dewey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심리학자들이 두 이론의 절충적 입장을 취한 학습이론이다. 즉 S-R 이론은 요소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인지이론은 인간의 사고와 문제해결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에 관한 학습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학습을 경험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

39) 김상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론』 (서울:학문사, 1983), p. 186.

로 본 것이다.

② 교육 방법

현재 남한의 시민교육에서 주로 소개되어 왔던 교수-학습 이론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해결학습

문제해결학습이란 어린이가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법 혹은 그 결과를 경험이라고 할 때, 문제해결학습은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간단히 풀 수 없는 문제사태에 있어서의 해결적 경험을 의도적으로 교육의 장에 도입하여 학습방법으로서 조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학습은 학문상의 지식이나 기능의 교수를 전제로 하여,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킬려고 하는 학습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문제해결학습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⁴⁰⁾

- * 일체의 학습원리를 학습하는 아동의 경험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새 의문, 새 문제, 곤란에서 출발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한다.
- * 듀이의 반성적 사고과정을 학습과정에 이용한 것이다.
- *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이용하는 학습방법이다.

2) 발견학습

발견학습은 본래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수업이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발견학습은 과학의 기본 개념이나 일반원리를,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학습시킴으로써, 어린이의 것으로 습득시키려는 수업방식이다. 발견학습은 객관적 조직으로서의 과학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지식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학문의 계통, 체계를 중시하는 학습이라는 측면을 갖는다. 동시에 어린이의 주체적 사고 활동·과정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적 학습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부르너에 따르면, 발견학습이 도달하려는 능력이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40) 사회과교육연구회 편, 『새사회과교육』 (형설출판사, 1976), p. 114.

지적(문제개발) 능력이나 태도의 육성, ② 외발적 동기 부여로부터 내발적 동기 부여로의 이행, ③ 발견방법의 학습, ④ 기억보존의 원조 등이다.⁴¹⁾

그리고 발견학습의 교수-학습 과정은, ① 학습과제의 파악 --> ② 가설 설정 --> ③ 가설의 정교화 --> ④ 가설의 확인 --> ⑤ 가설의 발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3) 탐구학습

탐구학습 이론은 매우 다양하여 간단히 이 학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J.Schwab의 생물학적 과학탐구(Biological Science Inquiry), J.R.Suchman의 탐구훈련(Inquiry Training), D.Oliver의 법리적 탐구(Juris-prudential Inquiry), B.G.Massialas 등의 사회탐구(Social Inquiry) 등이 그 강조점을 달리 하면서, 탐구학습의 이론으로서 전개되어 온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 과학의 연구성과를 낳은 과정이나 방법을 탐구시키므로써, 탐구라는 행동력의 육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학습방법으로, 과학의 기본 개념이나 일반원리의 습득을 중시하는 발견학습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지만, 방법론적 과정으로서의 탐구의 관점에서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치분석 이론

가치분석 이론은 논리적 사고과정을 강조하고, 이것을 학습자들의 가치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도구이다. 또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치를 개념화 시키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사용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6 단계로 이루어진다.⁴²⁾ 첫째, 가치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 하는 것이다. 이는 가치 이슈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주의하게끔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실들을 수집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가치판단과 관련된 광범한 사실들을 수집해야 하며, 이때 평가적 주장과 사실적 주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집된 사실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지증거의 발견과 주장된 사실들의 근원을 찾게 함으로써, 제기된 사실적 주장들을 평가하게 하는

41) J.S.Bruner, "The Act of Discover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1 (1961), pp. 21-32.

42) 상계서, pp. 53-90.

것이다. 가치결정과 관련된 사실주장은 특수한 사실, 일반적 사실, 조건적 사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사실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사실들의 관련성을 결정할 수 있다 : 1)그 준거는 가치결정에서의 판단과 같은 관점에서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가? 2)그 준거는 그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3)그가 그 준거를 믿는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가? 만일 평가자가, 그 준거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면, 특정한 사실의 관련성은 무시되는 것이다. 다섯째, 잠정적인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네 단계의 결론적 단계이다. 만약 평가자가 앞의 네 과제를 잘 해냈다면, 그는 잠정적인 가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잠정적 가치판단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원리를 검증하는 것이다. 평가자가 자신이 내린 가치판단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그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다. 평가자가 가치원리의 수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검증기법으로는 1)새로운 사례검사, 2)포섭검사, 3)역할교환검사, 4)보편적 결과검사 등이 있다.

가치분석 이론에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가치판단을 내릴 때,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치판단은, 사실적 근거(그 판단을 지지하는 사실)와 규범적 근거(가치원리)가 제시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을 '평가적 추론'이라고 한다. 평가적 추론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대전제 : 잘 써지는 연필들은 모두 좋다 (가치원리)

소전제 : 이 연필은 잘 써진다 (사실)

결 론 : 따라서 이 연필은 좋다 (가치판단)

이렇게 사실과 가치원리가 하나의 쌍이 되어 가치판단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가치원리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치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일 사실적 진술이 참이 아니거나, 사실이 가치판단과 관련성이 없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내린 판단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가치판단의 합리성을 높이려면, 가치판단과 관련성이 있고, 참인 사실적 진술들을 되도록 많이 수집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치원리를 판단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치판단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원리를 판단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가치판

단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상으로 보아서 가치분석 이론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논리적 추론과 같은 사고 기능을 습득케 하고, 하나의 가치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절차를 경험하게 하는 수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5) 가치명료화 이론

가치명료화 이론은, 한 개인의 행위 기준으로서의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다룬다. 이는 일상생활에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치화 과정을 통한 행위에로의 연결을 고려하는 것이다. 가치명료화 이론은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사회의 제반 가치관련 문제의 인식과 이를 근거로 한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한다는 측면, 개인이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측면, 내면화된 가치를 생활 중에서 실천하고 반복한다는 측면과 관련된다. 이 점에서 가치명료화 이론은 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가치명료화는, 개인의 행위양식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 사고와 정서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치명료화 이론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혼동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명료하게 해줌으로써 스스로 합리적인 가치 또는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 이론은, 특정 가치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거나 현실적 타당성 여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이 특정의 가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규명하여 그 형성과정을 돕고자 하는 교육적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개인들이 갖는 가치관이란, 생활장면에서 진행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는,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 각자가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그 실제적 의미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가면서 행동의 선택과 삶의 방향설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달리 하는 개인마다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개인이 갖는 가치도 수정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의 내용 여하를 따론하고,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의 형성과정을 여기서는 '가치화'(valuing)라고 부른다. 가치나 행동은 가치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가치화의 과정은 세 단계 일곱 절차로 설정하고 있다.⁴³⁾

43) L. E. Raths, et al., *Values and Teaching* (Columbus, Ohio : Charles E. Merrill

- < 선택 > (1) 자유로운 선택
 (2) 여러 대안으로부터의 선택
 (3) 각 대안의 결과를 심사숙고한 후의 선택
- < 평가 > (4) 선택의 존중 : 선택을 만족해 하면서 소중히 여김
 (5) 선택의 확인 : 남들에게 그 선택을 확인할 수 있음
- < 행위 > (6) 선택에 따라 행동
 (7) 행동의 반복

가치명료화 이론에서 보는 가치란,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인의 심리적 성향으로서, 행동의 지침에 비교적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치 다원화 현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가치명료화 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서 큰 장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이 가치화의 과정을 통한 자신의 변화와 능력의 향상에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모든 가치를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치들의 객관적인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 남북한의 교육방법 비교

인간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인간의 행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대립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은 서로 다른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학습방법을 연구 채택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그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의 교육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학습이론을 근거하여 학습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학습이론은 인간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충분히 고려한 보편성을 지닌 학습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인간의 학습활동에 대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같이 학습이론을 레닌의 인식론적인 정의에서 끌어 내고 있다.⁴⁴⁾ 이러한 학습이론은 듀이의 경험론과 비슷하지만, '실천을 통한 학습'과 '인간의식의 재구조'라는 공산주의적 교육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학습이론이 지닌 약점은 인간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충분히 설명

Publishing Co., 1978), pp. 26-29.

44) 강명제, "남북한 초등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51.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인지 과정과 구조에만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방법은 학습과제의 성질과 학습자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의 교육방법은, 그 선택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이질적이며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현재 남한의 학교교육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에 대한 학습방법으로 탐구학습, 발견학습, 문제해결학습 및 가치탐구학습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방법들은 각각 학습대상이나 학습과정에 대한 당조가 다를 뿐이며, 서로 유사한 학습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학습방법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반성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반면에 북한은 학습방법에 대해서도 주체적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른바 '주체적 학습방법'으로 김일성이 항일 혁명투쟁을 통해서 터득했다는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과 인간은 실천을 통해서만 관찰된 지식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 교육철학에서 도출된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학습방법' 등이 강조되고 있다.

남한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습방법들은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탐구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심리적 이론에 근거한 순수한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강요되고 있는 소위 '주체적 학습방법'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고 학생들을 획일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김일성 개인의 경험론적 학습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학습의 효과를 굳게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노동까지 이용되는 등 많은 교육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순수한 교육방법이라고 어려울 것이다.

한편 남북한은 전통적 교수방법인 주입식 교수법을 지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교수법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전통적 교수법인 주입식 교수법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발견된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새로운 교수법의 적용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먼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교수법에 있어서의 문화적 전통이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는데 대한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 교수법인 주입식 교수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이 보다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45) 변영호, "남북한 초·중등 교육과정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82.

교사들이 수용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새로운 교수법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에서도 발견된다. 교수법은 교육평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떤 평가도구나 평가방법을 사용하느냐가 교수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주로 문제은행식의 구술평가를 통해 교육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은 사고력과 복잡한 원리를 평가하기 보다는 단편적 사실을 암기한 것을 정답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깨우쳐 주는 교수법이 교실 현장에서 배척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남한의 경우 교육평가에서 지나치게 공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4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와 단편적 사실을 묻는 단답형 문제를 평가도구로 삼으므로써 과학적 교수법을 도입할 필요성을 교실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입식 교수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논술식·주관식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남북한 시민교육의 이질성 및 장단점

남북한의 교육에 있어서 영역별 이질성을 김동규는 <표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5> 남북한 교육의 영역별 이질성

영역	남한	북한
(1) 교육이념 및 목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주의 · 개인적 자유주의 · 출세의 수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수주의 · 집단적 평등주의 · 혁명적 도구화
(2) 교육내용 및 평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 주의 · 사실 주의 · 다원 주의 · 응용과학 중시 · 개별 평가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 주의 · 허구 주의 · 일원 주의 · 기초 과학 중시 · 집단 평가 주의
(3) 교수방법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이론 중심 · 사랑의 원리 · 이론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속 이론 중심 · 중오의 원리 · 실천 중시

자료 : 김동규, “남북통일 이후의 학교교육이념 및 제도에 관한 모델 연구”, 통일원,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6)』 (1992), pp. 352-356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요약.

그는 또한 위의 표에 나타나는 남북한 교육에 있어서의 이질성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 추출될 수 있는 장단점을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남북한 교육의 장단점 비교

구분 \ 영역	남 한		북 한	
	긍 정 (장 점)	부 정 (단 점)	긍 정 (장 점)	부 정 (단 점)
이 념 과 목 표	·국제주의 (홍익인 간) ·다양한 가치관 ·자유와 개성 ·창의성	·주지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 ·지나친 경쟁주의 ·출세의 수단화	·건전한 도덕성 ·높은 준법성 ·협동심	·국수주의 (주체인 간) ·유일적 절대주의 ·집단주의 ·물개성적 도구주의 ·지나친 평등주의
내 용 및 평 가	·사실주의적 내용 과 서술 ·다원적 가치관의 수용	·지나친 주지주의적 내용 ·입시위주 교육내용 ·지나친 응용과학적 내용 ·지나친 상호경쟁	·기초과학적 내용 ·이론과 실천의 결 합적 내용	·이데올로기 일변도 교육내용 ·허구적 사실의 일 반화 ·획일적 가치관 ·상호감시적 평가
교 수 방 법	·사랑의 원리 ·다양한 교수법 ·개성교육 중시	·서구이론 편중 ·흑백론적 사고 ·파행적 교과교육 ·주입식 교육	·토속이론 개발 ·긍정적 감화 교양 법 ·방식상학의 효율	·중오의 원리 ·물개성적 지도 ·흑백론적 사고 ·공개비판제 ·주입식 교육

자료 : 김동규, 위의 논문, p. 358.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표층적·단선적인 비교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심층적·내면적 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그 본질적 의미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해 볼 수 있다.

가령, 이념 및 목표 영역에서 북한의 장점으로 들고있는 ‘건전한 도덕성’,

‘높은 준법성’, ‘협동심’ 등은 사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동기나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타의에 의해 혹은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런 것을 어기고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탄압이나 제지에 의해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이념 및 목표 영역에서 북한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강제에 의해서 지켜지는 준법성이나 협동성은 강제라는 조건이 해제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런 현상들은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장점으로 예시한 것과 남한의 장점으로 예시한 것들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종합하거나 통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남한의 장점을 더욱 새로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면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을 여기에 적용·적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북한의 단점으로 제시된 사항 중에도, 통일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Ⅲ. 독일의 교육통합 과정과 시사점

독일 교육통합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통합, 교육통합 등의 개념과 교육통합의 한계 등에 관한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정리하여 연구관점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같은 연구시각은 본 연구에서 역사적 접근과 함께 자료분석의 접근시각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독일의 '교육통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교육통합은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이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되면서 구 동독지역의 교육체제의 구조가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독일 교육통합은 통일 전 동·서독 양 측의 교육부문 사이에 형성되었던 관계와 그 관계의 변화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통일 이전에 형성되었던 여러 형태의 연계와 합의, 협정을 통하여 형성된 동·서독 사이의 특수한 관계는 교육통합의 수준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독일 교육통합은 통일을 위하여 시도된 제도 개혁과 학교 학습에서의 모든 정책과 노력,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넷째, 교육통합은 동·서독의 교육관련 법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연방 법률이 개정되어 구 동독 지역에 적용되고 구 동독 지역의 법률이 폐지되거나 한 시적으로 폐지되는 양상은 그 자체가 교육통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⁶⁾

1. 독일 교육통합정책의 성격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 정부는 동·서독 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교류내용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이 아닌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청소년 교류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해왔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민주 정치·경제 체제와 국제현실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함양하였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심리적 동화정책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교육통합의 모습을 보면, 서독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구 동독에 있었던 교육제도들은 어떤 것은 완전히 폐지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잠정적으로 존속되고 있기도 하다. 서독의 교육제도를

46) 한국교육개발원,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1993), pp. 9-11.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장기 분단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 이전에 이미 동독 주민들은 서독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독의 교육제도가 동독 지역에 적용되는 과정은 일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독 주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교육통합의 어려움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남아 있는 구 동독 지역의 주민의식 혼란, 교육시설 낙후, 맑스-레닌 주의에 치우쳤던 교육 내용으로 인한 교육의 편향성과 질 문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의식, 연구개발체제의 낙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⁴⁷⁾

2. 통독 이전의 정치교육

독일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실시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등의 폭넓은 인문사회과학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의사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교육은 과거와 같은 주입식의 반복을 통한 습관이나 적용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객관적 사실인식의 기초 위에서 정치나 사회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정치교육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가치관과 세계관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특수한 인간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보장해 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독의 중요한 정치교육은 분단의 현실 인식과 통일에 대한 역사성을 토론하고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한반도와 같은 동족간의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립되는 사상과 주장을 펴면서 적대하는 두 블럭에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가능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 동방정책(Ostpolitik)이었다. 그들은 분단이란 엄청난 현실의 인식을 위하여 동독과 서독의 형성에 관하여 논하고, 특히 양국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내독관계'(Innere Deutsche Beziehung)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1970년대나 1980년의 여러 정치교육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은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현대사와 분단 후의 동·서독 및 그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및 추이라고 할 수 있다.

47) 상계서, p. 18.

한편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동·서독 두 나라의 공동성과 동일성을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성과 동일성을 계속 유지·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⁴⁸⁾

이상과 같은 통독 전의 서독 정치교육의 포괄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①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의 이해, ②역사상이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적대자인 나치와 같은 극우파나 공산주의의 극좌파에의 경계, ③독일연방공화국의 합법성과 현실인식, ④서독과 관계있는 주변 및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해, ⑤유럽 공동체 및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과 문제의 이해, ⑥현재와 미래에 관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과 설계 등이라 하겠다.⁴⁹⁾

한편 동독의 정치교육은 모든 교육과 훈련과정의 중심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계급관을 전달하고 전체를 위한 사고, 전체를 위한 행위의 본질을 규정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교육과 조국관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관을 주지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자 하였다.⁵⁰⁾

여기서 동·서독의 정치교육의 차이점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독의 정치교육은 동독을 비방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다. 동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상호 비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독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동독의 정치교육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추구하였던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이라는 극단적인 정치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통독 이후 동독의 청소년들이 급격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독일의 교육통합 과정 및 현황

독일 교육통합 정책 전개방식은 주요 시점과 단계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⁵¹⁾ 주요 시점은 70년대 초반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1990년의 통일조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을 기준으로 분단 이후부터 기본조약 체결까지의 단계, 기본조약 체결

48) 권오정 외,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1987), pp. 219-222.

49) 상계서, pp. 226-227.

50) 정용길, “통일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통신』 (1990), p. 50.

51) 한국교육개발원,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집 분석연구』 (1993), pp. 345-346.

후부터 통일조약 체결까지의 단계, 그리고 통일조약 체결 후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추진한 정책들을 정리해 보면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교육통합 정책이 교육체제의 단일화 뿐만 아니라, 양측의 국민의식의 재형성을 포함한 구조,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활동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독일 교육통합정책의 가장 선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은 동독에 대한 연구 분위기의 조성 and 활성화, 자료보급활동이다. 이같은 정책은 이미 60년대에 동방지역 담당지부라는 법정기구로서의 자료센터를 설치하고 정치교육체제를 확대, 정비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 교육통합 정책의 전개에서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현 독일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도를 형성한 정치교육이다. 정치교육은 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실시되었으며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독 정부는 정치교육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독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장기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그같은 교육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성인교육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이같은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정책은 동독 및 관련국들과 명문조약, 협정을 계속적으로 체결하여 정세 변화에도 이들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같은 조약, 협정 속에 교육, 과학, 학술에 관한 사항도 타결되어 온 것이다. 동·서독 관계는 40여 년간 축적되어 온 양측의 조약, 협정, 합의서 등에 압축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양측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양측 관계에 관한 한 이를 규제하는 법질서는 거의 이같은 조약과 협정 속에 담겨 있다. 조약, 협정은 대부분 양측 의회의 비준을 받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되었다.

통일 후에는 교육체제 내의 각 부문별로 질서정연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질서정연하다는 표현의 의미는 각 현안과제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세밀히 검토되고 각 과제를 분담할 기관과 단체들이 결정되며 통합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의 결정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내리며 무엇보다도 특정 부문과 특정 과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무리하게 개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현안과제는 대부분이 통일 후에도 연방 - 주 사이, 서독 대표와 동독 대표 사이, 그리고 의회에서의 협정과 입법 문제로 귀결되어 점진적인 타결과정을 거쳐 질서를 정립하고 있다.

4. 독일 교육통합이 주는 시사점

독일의 교육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피기 전에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유사점

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동서독과 남북한은 공히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강대국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되었고,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 하에서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지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상호 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나, 동서독은 오랜 동안 인적·물적 교류의 증진으로 민족동질성을 유지하였다. 둘째, 동서독 간에는 체제경쟁에서 서독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나, 남북한 간에는 체제경쟁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흡수통일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셋째, 페레스트로이카의 동구 확산과 이에 따른 동독 국민의 무혈혁명이 동독 정부를 붕괴시키고 통일독일을 급진전시켰는데, 북한에서는 밀으로부터의 혁명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서독은 동독 내의 베를린이란 교류의 접점이 있었는데, 남북한 간에는 그런 교류의 접점이 없다. 다섯째, 동독은 처음부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독에 비해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은 호네커 정부 이후부터 통독을 포기하고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은 무력면에서의 우세를 가지고 아직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점이 있으나, 그러한 분단이 평화적 극복 사례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체제경쟁에서의 승리 등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시사점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독일 교육통합 정책의 '전개방식'은 우리의 교육통합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치, 즉 북한과 공산권 국가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비판적인 안목과 넓은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점진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하나 하나 현안 사항에 대한 상호 합의를 문서로 합의하여 북한과 기타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러한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누적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가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물론 남북한 사이에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개선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남북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남북한 간의 이념적 차이와 6·25 전쟁과 관련된 깊은 심리적 장벽 때문이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중요가 없었던 독일의 경우 국내정치에서 이념적·지정학적 장애가 제거되자마자 통일을 위한 희망찬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으로써 잠정협정에 도달하여 건설적이고 타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구 동독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식구조는 40여 년간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정치로부터의 도피, 정치문제의 탈정치화, 민주주의의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 맑스-레닌 사상의 잔류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같은 문제는 정치교육의 방법을 조정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잘 정리된 교육체제의 목표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동독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속에 소멸된 이념과 아직도 잔류되어 있는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조사보고는 통일 후에 중점 노력해야 할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분단 후 40여 년간 서독에서 실시해 온 정치교육은 현 세대의 독일 국민들의 사회의식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교육은 그 내용과 교과체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정치, 환경 등 인간의 삶에 관련된 거의 모든 상황과 문제에 걸친 의식구조 형성에 기여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관한 이해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서독 국민들이 통일에 즈음하여 보여 준 태도와 자세는 이같은 정치교육의 성과일 것이다. 이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과 교육해야 할 사항들을 통합적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⁵²⁾

52) 한국교육개발원,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1993), pp. 341-342.

Ⅳ. 통일한국의 시민교육과정 모델

어떤 교육에 있어서나 그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서로 유리되면 곤란하다. 이들 네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을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것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도 내용구성이나 수업방법, 그리고 평가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하면, 그 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바람직하고 타당한 내용이라 해도 그것을 다루는 수업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구성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남북통일 이후의 시민교육과정의 모델을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영역으로 나누어 모색해 보겠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즉 남북통일 이후의 시민교육 과정을 구안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남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장점을 단순히 종합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초월하여 전혀 새로운 제 3의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모습을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현대의 교육사조와 포스트모던을 준비하고 추구해야 하는 입장의 갈림길을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시민교육은 21세기를 담당할 새로운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들이닥칠 포스트모던에 대한 명확한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런 모습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서 마지막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의 시민교육 모델을 구성하려 한다.

1. 시민교육 이념과 목표 설정 :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관의 모색

교육은 본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교육은 삶과 함께 있어 왔고, 삶다운 삶을 위해 있어 왔으며, 삶다운 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삶다운 교육에서 멀어지면 떨어진 만큼 그 교육은 본질에서 벗어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제 2장) 살펴본대로 남한에서는 그간 홍익인간의 이념하에 구체적으로는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 건강한 인간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내세워 왔으며, 이데올로기상으로는 반공의 행위규범을 강조해왔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덕목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내세우며, 구체적인 학교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로 설정했다. 이들은 결국 노동의식과 김일성 유일사상을 고취시켰고, 남한을 미구구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한 주민을 하루 속히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이, 남북이 각기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교육목표가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지, 어느 일방의 것으로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인간상이나 교육이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시민교육은 학교교육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교육을 넓은 의미로 이해할 때는 학교교육 이외의 가정교육·청소년 교육·성인교육 등의 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파악할 때는 학교교육, 그 중에서도 시민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도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민교육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겠다. 그런데 도덕과는 원래 포괄적 의미의 사회과(Social Studies)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을 좁은 의미로 파악할 때는 "시민교육 = 사회과교육"으로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이하에서는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겠다.

시민교육이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이라는 개념은, 이를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시민교육의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 그것이 추구하는 인간상(인간관)과 사회상(사회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교육의 유형에 따른 인간관이나 사회관은 그것의 목표(관)에 의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⁵³⁾

53) 사회과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라 어떤 인간관이 형성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시민형성 교육으로서의 사회과교육의 목적을 밝힌 안희천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의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다 : 첫번째는 '이지적 인간관'으로, 이는 1960년대 지식탐구 혁명을 통한 신사회과에 바탕을 둔 주지주의적 인간관이다. 두번째는 '도덕적 인간관'으로, 이는 1970년대 초에 등장한 것으로 가치탐구 혁명을 통한 정의적 영역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다. 세번째는 '조화적 인간관'으로, 이는 현대의 사회과교육적 인간관으로 복잡한 사회를 배경으로 전인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 안희천, "사회과 교육에서의 인간관", 『사회과교육』 제20호 (1987), pp.115-123.

기존의 시민교육에서 표방하고 있는 목표관이나 인간관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념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시민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민’이나 ‘합리적 결정’이라는 개념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이 사회상(사회관)과 관련지어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즉 현행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목표를 살펴보면, 사회과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바람직한 국민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상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⁵⁴⁾

각 시민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며, 사회는 각 시민들의 묶음 속에서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시민상(인간관)과 사회상(사회관)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교육이 추구하려는 인간상은, 그것이 추구하려는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가령, 1인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북한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과 개인의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려는 자유주의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합리적’(또는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한계가 주어지는 것은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과 상응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롤즈(J. Rawls)의 개념들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교육에서 말하는 ‘합리성’의 개념에 롤즈의 ‘합리성’ 개념을 보완적으로

54) 현행 국민학교 사회과의 교과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목표> “사회생활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얻어 실생활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여 사회·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른다.” <영역목표> (1)정치영역 : “정치생활의 기초개념 및 민주적 사회생활의 특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시민 자세를 갖는다.” (2)경제영역 : “경제생활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시민 자세를 갖는다.” (3)사회문화영역 : “인간 공동생활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한다.” (4)지리영역 :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 자연활용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를 사랑한다.” (5)역사영역 : “우리 민족의 발전과정과 문화적 특질을 이해하고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갖는다.” 이상의 사회과 교육목표를 살펴 보면,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혹은 사회관)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개인의 모습(혹은 인간관)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관점보다는 ‘국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나 시민의 개념 및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롤즈가 구상하는 사회관과 인간관을 시민교육의 목표 차원에 도입하므로써 다원적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시민교육의 방향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현대사회는 삶의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다원적 사회이다. 롤즈는 다원적 자유주의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사회는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며 다양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 성립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롤즈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밝힌 대표적인 학자이며 그의 이론은 현재 세계적으로 폭 넓은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 기초해서 시민교육이 추구할 인간관과 사회관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롤즈가 바라보는 사회관은 한마디로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인간관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 말할 수 있다. 그의 사회관은 시민들의 협동을 전제하고 있으며, 인간관은 도덕적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상으로서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상했다.⁵⁵⁾ 그의 협동개념은 그 이면에 경쟁의 개념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 한정된 자원과 기본적 가치들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쟁과 투쟁이 있게 마련이다. 홉스는 이런 상황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상태에서 벗어나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는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롤즈의 꿈이었다. 롤즈가 ‘공정한’ 협동을 통한 ‘안정된’ 사회를 꿈꾸었다는 것은, 역으로 볼때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경쟁과 투쟁이 현실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쟁과 협동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도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협동과 경쟁은 인간생활의 두 가지 기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롤즈가 구상했던 사회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특징이 도출

55)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 ① J.Rawls, "A Well-Ordered Society", *The Cambridge Review* (Feb, 1975), pp.94-99 ; ② J.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15-22, pp.35-39. (이하에서는 PL로 약칭함).

될 수 있다.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관’이 “서구 입헌민주주의 사회의 공공적 정치문화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직관념”, 또는 “시민들 모두가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친숙한 과념이나 원칙이 이상화·단순화된 것으로 성격짓고 있다.”⁵⁶⁾ 롤즈가 상정하고 있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하의 계약 당사자는 ‘도덕적’ 인간으로 개념화될 수 있고, 이러한 도덕적 인간은 곧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이상적 시민상이 된다. 원초적 입장의 도덕적 인간이 선택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이며, 이러한 공공의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이다. 롤즈에 의하면 원초적 입장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형식적 특징을 구체화하도록 짜여져 있다. 원초적 입장의 선택상황과 질서정연한 사회의 형식적 특징은 동일한 것이며, 이는 도덕적 인격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화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롤즈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특징을 그 속에 사는 구성원의 특징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특징이 바로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이다.

여기서 롤즈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자유·평등의 개념규정은 구성원 개체의 실제적 특징이 아닌 구성원들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나타낸 개념이고, 도덕적 인격체의 개념규정이 곧 구성원 개인에 대한 실제적 규정이 되는 것이다. 롤즈에 있어서 도덕적 인격체는 두 가지 도덕능력(two moral power)을 갖는 존재로 설명된다. 두 가지 도덕능력은 정의감(sense of justice)의 능력과 가치관(conception of the good)의 능력이다. 정의감의 능력은 정의의 원칙을 이해, 적용하며 그로부터 행동하려는 능력으로 풀이되고, 가치관의 능력은 각자의 가치관을 형성, 수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한편 롤즈는 원초적 입장 속의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롤즈는 합리성을 단순히 목표에 대한 수단적 합리성의 범주를 뛰어 넘는 분별력 있는 행위능력으로 규정한다. 롤즈는 『사회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계약 당사자의 합리성을 기본적으로는 ‘각자 자기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존재’ 혹은 ‘적은 것 보다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려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롤즈는 합리성을 공리주의자들 처럼 효용극대화를 지향하는

56) ①J.Rawls, "Justice as Fairness :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and Affairs*, Vol.14, No.3 (1985), p.234 ; ② PL, pp. 29-35.

57) J.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14, p.143. 이하에서는 TJ로 약칭함.

성향 혹은 자기이익의 극대추구 성향으로 보지는 않는다. 롤즈가 당사자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리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더 나아가 이런 개체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자. 즉 그들은 1)자기 자신의 이익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기가 추구하는 몇몇 목적들이 타인의 것과 상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2)타인의 일정한 성취수준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기의 성취수준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3)다른 규율체계보다 이러한 규율체계를 채택하므로써 발생가능한 결과를 추측할 수 있고, 4)일단 결정한 행동과정을 고수할 수 있으며, 5)목적의 당장의 이익이 초래하는 유혹과 유인을 거부할 수 있고, 6)자신의 조건과 타인의 조건 사이의 차이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지각이 어떤 한계 안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는 커다란 불만족의 원천은 아닌 그런 합리성을 갖는다.⁵⁸⁾

이렇게 볼 때, 롤즈가 말하는 합리성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당사자들의 존재와 행동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과 행동을 상호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사리분별력 즉 도덕적 합리성(moral rationality)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합리성은 타산적 합리성과 도덕적 분별력이 적절히 결합을 이루고 있는 개념장치이다. 즉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최대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지만, 이러한 자기이익의 추구가 전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온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이익의 추구가 타인과의 협동적인 공동노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기이익은 협동적 공동노력의 산물로서 이루어지는 호혜적 이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가 말하는 합리성의 개념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극대화에 대한 자기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롤즈의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리 시민교육의 목표체계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이다. 롤즈의 논리에 입각할 때, 인간관과

58) J.Rawls, "Justice as Reciprocity", S.Goroviz ed., *Utilitarianism : John Stuart Mill : with Critical Essay* (New York : The Bobbs-Merrill, Inc., 1971), pp. 242-268. 윤홍근, "현대 계약주의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 롤즈의 정의이론과 뷰캐넌의 헌법선택이론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1993), pp. 355-56에서 재인용.

사회관은 동전의 양 측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고 이 원칙에 의해 규제되고 실행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대한 개념규정이 롤즈의 인간관으로 설정되는 것이며, 그들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사회가 그의 사회관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선택한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그 원칙을 지키며 그에 따라 규제를 받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관에는 반드시 인간관의 개념과 함께 사회관의 개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을 '민주국가'라는 용어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현행 국민학교 사회과의 교과목표를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 개념은 오직 '민주국가'라는 개념 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상과 인간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시민교육에서 표방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민주 '국가'이고, 바람직한 인간상은 훌륭한 '국민'으로 대표된다. '국가 - 국민'의 관계는 주로 '지배 - 복종'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민' 육성에서 시민교육의 역할을 찾았던 것이다. 다원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 육성이라는 개념으로 시민교육의 목표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 시민'의 관계로 시민교육의 목표관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그 사회상과 인간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규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적인 시민육성에는 '지식'과 더불어 '기능' 및 '가치'의 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국민주권과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대화와 갈등 해결이 가장 중요한 비판적인 민주 기능이 될 것이다. 즉 시민교육은 지식체계의 습득보다는 한 사회 내의 모든 성원들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사회의 개선을 위하여 모종의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학생들이 그들 사회의 특징(지식)을 알아야 함은 물론이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질에 관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더불어 그같은 삶을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기능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민교육에서 목표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민주적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해 본다. 자유민주주의적 사회를 창조하고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든

다면, '사회적 기능'과 '비판적 사고기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능에 속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기능 >

(1) 개인적 기능

- 개인적 소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신념, 감정, 소신을 나눌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 인간간의 상호 관계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2) 집단 상호작용 기능

- 한 집단의 상호 지원적인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규칙의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남을 지도하고 또 남의 지도에 따를 수 있는 능력
- 목적 설정 과정에 조력할 수 있는 능력
- 어떤 계획을 위임·수립·결정·실행할 수 있는 능력

(3) 사회·정치적 참여기능

- 문제들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닐 수 있는 능력
- 사회적 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능력
- 개별적 또는 집단으로 행동(혹은 계획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
-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 기능>

- 입증 가능한 사실들과 가치가 함의된 주장을 구별하는 능력
- 자료 출처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능력
- 한 문장의 사실적 정확성을 결정하는 능력
- 주장이나 추론에서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 편견을 확인하는 능력
- 진술되지 않은 가정을 알아내는 능력
- 불분명한 주장이나 언명을 확인하는 능력
- 일련의 추론과정을 보고 논리적인 불일치나 오류를 인식하는 능력
- 검증된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구별하는 능력
- 한 주장의 강도를 결정하는 능력
- 갈등이나 분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상과 같은 기능들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능 중의 하나의 예

시에 불과하다. 아 물론 민주적 시민 육성에는 이러한 기능과 지식, 그리고 가치나 태도의 영역이 그 목표 차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상호의존적인 세계 속의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공의 선을 위해 지적이고 사려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방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2. 시민교육의 내용선정(Scope) 배열(Sequence)

사회과학 지식의 습득과 사회현상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민교육은, 이를 위하여 어떠한 내용영역 범위(Scope)를 어떻게 조직·배열(Sequence)하여 가르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인한 학습자들의 경험확대와 국제화 시대로의 진입은 21세기를 대비한 시민교육의 새로운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포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즉 필수 주제, 필수 관점, 필수 내용 특성, 그리고 필수 방법적 특성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시민교육에서의 필수 주제 영역은 교육 과정 경험이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학교 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들 주제들에 관해 점점 정교하고 상이한 맥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나선형식으로 조직하자는 것이 교육내용 조직의 원리이다. 많은 교육 문헌들을 보면,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몇몇 자주 제언되는 주제가 있기는 해도 과연 어떤 주제가 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핵심적 통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주제들의 예를 보면, 지역사회, 시민적 자질, 참여, 인과성, 복잡성, 계속성과 변화, 협동과 갈등, 권력, 환경, 정의, 공공선, 덕, 자유 및 평등, 공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 폭과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문학, 사회, 과학 및 기타 교과들이 묶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과정상에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관점의 차원이다. 많은 현상들은 개인의 관점, 집단 혹은 국가적 관점, 그리고 다문화적, 지구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이같은 다양한 관점들을 구체적 맥락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의 관점 및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를 살아갈 시민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즉 자신들의 세계를 개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이고 지구촌적인 실제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박하고 반성적인 시민적 참여는 개인적, 다문화적, 그리고 지구촌적 감각과 이해의 종합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세번째 요소는 필수 내용 특성이다. 이는 지식, 과정 및 역사, 사회과학, 그리고 다른 여러 학문 분야로부터 나온 구조를 통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요소에서는 학습자가 여러 분야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더불어 선별적인 주제역 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시민교육의 내용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시민교육 내용은 문화 및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학습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인류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또 보아 왔는지에 대한 학습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공간과 장소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개인적 정체감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개인, 집단,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같은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념, 가치, 신념, 태도 및 선택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를 위해 어떻게 사회가 조직되어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배체제를 창조하고 세련화해 가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과학, 공학, 그리고 사회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 지구촌 사회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인 필수 방법적 특성은 지식의 차원, 태도 및 가치의 차원, 사회적 기능의 차원, 그리고 학교 및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준비 및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다. 더불어 넓이와 깊이, 내용과 과정 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 시민교육 영역 자체간의 통합 및 다른 영역과의 통합의 추구; 지속되는 문제와 인류 딜레마에 관해 배우고 또 그 해결에 도전해 보는 기회 제공;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과정, 사회적·시민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 가치갈등·가치분석 등의 차원에 관련된 문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부여;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창의적·독립적·학자적인 탐구자세를 격려할 수 있도록 탐구 및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적극적 학습의 강조; 수업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을 평가함에 있어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방법의 사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자료를 학생 및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시민교육의 요소와 내용을 어떻게 조직·구성할 것인가? 일반적인 내용구성의 방법에는 논리적 구성과 심리적 구성의 방법이 있다. 논리적 방법은 교과나 학문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배열을 한다. 이는 교과중심 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구성방법이다.

심리적 방법은 심리적인 제특성을 토대로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성장발달의 특징, 심리적·정신적인 경험의 민감성, 흥미와 필요 또는 관심, 학습의 곤란도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활동에는 논리적인 발전의 순서가 있으며 또 논리적인 교과나 교재에도 그 학습의 특유한 심리적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습자의 발달순서와 교재의 논리적 발전을 조화적으로 취하는 절충적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의 근간인 지식영역에서 개념을 선정할 때는 보편성을 지닌 개념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현재 남북한의 시민교육 관련 내용은 협소하고 왜곡된 영역에서 개념들을 추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더 다양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는 교재의 논리적 발전과 학습자의 심리적 발달단계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 남북한의 교육내용은 논리적 구성에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또한 심리적 구성도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더욱 심한 형편이다.

셋째, 사회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구성의 한계점을 생각해 볼 때, 저학년일수록 사회기능이나 경험 중심의 내용구성을,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문(사회과학)중심의 내용구성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어린이들의 의식발달과 경험확대에 비추어 볼 때, 동심원적 확대법은 약간의 수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 남한의 어린이들 간에 차이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보·통신은 남한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으며,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구촌 사회라고 하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진입에 따라 시민교육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사회 속에서 통일한국의 위상 및 역할을 찾아내어 그에 걸맞는 시민덕목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덕목으로는 공정한 경쟁정신과 협동정신 및 리더십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⁵⁹⁾

끝으로, 통일한국의 시민교육의 성격이나 역할과 관련하여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좀더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과학 전수와 시민적 자질 양성 사이의 문제, 세계인 양성과 국민·민족인 양성 사이의 문제, 개인의 개방성과 국가의 정체성 사이의 문제, 그리고 인간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효율성 중심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양 측면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방법의 다양화

앞에서(제2장) 남북한의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교육방법은 대체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부적절한 방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한의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서구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주입식 혹은 강의식 일변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민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수방법으로 탐구학습, 발견학습, 문제해결학습, 가치명료화이론, 가치분석이론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수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형태나 기법을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59)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 김주성,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시대의 한국 민주시민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 교육』 제27호 (1994. 8), pp. 37-46.

따라서, 여기서는 통일한국의 민주적 시민교육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교육방법의 조건을 밝혀두기로 하겠다. 특히 방법의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공교육의 입장에서, 즉 보편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교육을 염두에 두고 방법의 조건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민주적 시민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기본조건으로 ①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인식의 통일, ②지식성장의 성과와 과정의 학습 보장, ③열린 수업과정의 확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방법의 기본 '조건'을 밝혀두는 것은 곧 시민교육의 실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된다.

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인식의 통일

역사적으로 교육방법의 계보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첫째, 모든 방법이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시민의 형성은 이성의 활동에 의한 지적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계보의 교육 방법론들은 지적 성장의 원동력인 이성(인식방법) 그 자체의 발달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법의 학습이 강조되어 온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성-방법의 발달은 주관적 인식능력의 성숙을 의미하며, 이는 자기 중심적(폐쇄적·독단적)인 차원에서 사회적(개방적·교호적) 차원으로의 이행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이러한 두 지표를 통일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시민교육 방법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지식의 성장은, 단편적이고 사실 기술적이며 그 진위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화·일반화·구조화된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⁶¹⁾ 개념적·구조적 지식은 그 자체 안에서 또 여러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갓초르크(L. Gottschalk)는 ①제한된 일반화, ②경향성 제시로서의 일반화, ③비교에 의한 유형적 일반화, ④법칙적 일반화의 순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실관계에 관한 지식은 보다 엄밀하고 틀림이 적은 보편화·일반화로의 성장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호약의 감정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가치나 신념은 반드시 고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없지만, 높은 수

60) 권오정, "민주주의 교육방법에 대한 기초적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교육』 (서울:한샘교육개발연구소, 1990), p. 139.

61) M. L. Tanck, "Teaching Concepts, Generalization, and Constructs", D. M. Fraser ed., *Social Studies Curriculum Development* (NCSS, 1969), p. 101.

준의 이념이나 규범은 사실관계의 파악 위에서 성립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객관적 지식의 성장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린이는 다만 그 성과를 학습할 뿐이다. 따라서 객관적 지식의 성장 그 자체가 인간형성, 민주시민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객관적 지식의 학습과정에서 주관적 지식의 획득 방법, 인식능력의 발달이 기대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형성, 시민형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관적 인식능력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만큼 폐쇄적·독단적 차원에서 사회적·역사적으로 열려 있고 상호주관적·교호적으로 널리 수용·포섭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달한다고 하겠다. 이 발달이 보다 높은 차원의 객관적 지식 획득을 가능케 하고 그것은 또 새로운 주관적 인식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순환 속에서 인간형성, 민주시민 형성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근대 이후의 교육방법에서 추구해 왔던 주체와 객체, 방법과 내용의 통일·조화의 논리이기도 하다.

나. 지식성장의 성과와 과정의 학습 보장

이것은 위의 첫번째 조건을 보완하는 성격이며, 이를 직접 수업 차원에서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 지식 성장의 성과와 과정을 학습하므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객관적 지식 성장의 성과와 과정을 학습하므로써, ①환경·문화제어력을 공유할 수 있고, ②집단인식·의식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③유효성 높은 예측,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며, ④인식체계의 재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

객관적 지식의 학습이 갖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의의는, 이것이 주관적 인식체계를 재구성하게 한다는 데 있다. 객관적 지식은 검증 혹은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고, 수많은 논쟁에 견디어 온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수정·보완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객관적 지식의 성과와 과정을 학습하므로써 새로운 사회현상이나 세계를 사회적 절차에 따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과 방법을 피상적 논쟁의장에서 수호 혹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관적 인식체계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자기 교육력의 발달을 뜻하며, 이것이 곧 민주시민적 인간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열린 수업과정의 확보

객관적 지식의 습득은 궁극적으로 주관적 인식능력 나아가 인간의 발달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식 그 자체를 목적시켰을 때, 지식의 성장과정 따위는 문제되지 않고, 결론으로 서의 지식을 '주입-암기'하는 방법이 채택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들은 지식 또는 가치를 반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 노예적 인간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열린 수업과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하겠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론이 이미 내려진 지식이 주어지는 안된다. 예컨대, 현행 교과서와 같이(특히 북한의 교과서)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무엇을 어떤 범위 안에서 학습해야 할 것인가, 학습 결과 습득해야 할 지식의 결론은 무엇인가가 확정되어 있을 때, 교수-학습 과정은 닫혀질 수밖에 없다. 교실 안에서 지식 혹은 가치의 진위나 정당성이 비판적으로 음미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열린 수업과정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⁶²⁾

결론적으로 민주적 시민육성을 위한 교육방법은, 주관적 인식능력의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열린 수업과정 속에서, 객관적 지식 성장의 성과와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비추어 현재 남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방법을 반성해 볼 때, 기존의 덕목이나 원리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치로 확정지어 놓고, 이를 주입·세뇌·교화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비판적 사고자로서의 시민형성보다는 가치나 지식의 소비자 배양이라고 보아야겠고, 방법의 경시 내지 반방법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평가방법의 개선

평가의 기능은 계획된 학습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부터, 교육체제의 효율성을 파악해 보고 다시 피드백(feedback)을 거쳐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기능이 교육개선에 역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62) 열린 수업과정과 닫힌 수업과정(수업과정의 개폐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정호범, "사회과 교수이론상의 지식과 가치 문제 - '설명'과 '이해'의 관점에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pp. 82-90.

하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도의 사고력이나 기능 등의 문제는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특성에 있어서의 애매모호성이 가져오는 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에 있다.

시민교육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은 정보처리기능, 비판적 사고기능, 탐구기능, 문제해결기능, 적용력, 분석력, 평가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으로 불리워지는 광의의 문제해결적 기능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객관식 4지 선다형의 평가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기능 등을 단순한 지식습득의 유무로 측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선다형의 객관식 평가는 많은 영역을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추측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고도의 사고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논술형의 주관식 평가는 고도의 기술과 비판적 사고를 측정해 내기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특수 사실 차원에서부터 개념 이해, 선택·조직 능력, 사실의 적용능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황을 포함한 종합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관식 평가는 학교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점시의 신뢰도와 객관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평가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평가의 세부적 준거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평가도구가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평가준거와 그 준거에 따른 기준을 제시해 보겠다. 우선,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평가 준거로 ①전제된 이해, ②과학적 접근, ③비판적 사고, ④종합적 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제된 이해'는 문제해결에 선행되어야 할 지식과 개념 중심으로, '과학적 접근'은 분석적 사고를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는 평가적 태도면에서, '종합적 사고'는 구성력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이룬 것이며, 이들 준거에 따른 세분화된 평가의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① 전제된 이해
 - 사실·개념의 적절한 선택과 배열
 - 방법적 지식의 획득
 - 일반화 도출
- ② 과학적 접근
 - 문제확인(명료화)
 - 정보습득의 원천(기준설정)
 - 관계 분석

③ 비판적 사고

- 추론의 타당성
- 적절한 적용
- 새로운 의문 제기

④ 종합적 사고

- 인과관계 도출
- 증거에 의한 종합적 평가

이러한 평가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요 평가관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제된 이해의 평가관점

1) 사실·개념의 적절한 선택과 배열

-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사실과 개념이 선택되었는가
- 필요한 사실과 개념의 배열이 논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용어·개념에 대한 해석·번역은 적절한가

2) 방법적 지식의 획득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 지식이 습득되어 있는가
-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 목표에 최적합한 방법인가

3) 일반화 도출

- 진술되지 않은 가설들을 유추해 내는 능력이 있는가
- 사실-개념이 비약없이 연관지어진 일반화인가
- 사실, 개념, 일반화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가

② 과학적 접근의 평가관점

1) 문제확인(명료화)

- 제시된 문제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자신의 용어로 재진술하고 있는가
- 진술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 문제의 성격과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 문제의 진술이 종합적으로 파악된 것인가
-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고 짜임새 있게 조직하고 있는가

2) 정보습득의 원천(기준설정)

- 사용한 논거의 배경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가
-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는가
- 문제해결에 사용한 원리, 개념, 방법 등에 대하여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가
- 주어진 자료를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는가

3) 관계 분석

- 개념, 원리, 일반화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가
- 개념 상호간의 관계가 어떤 유형인지를 말하고 있는가
- 부분과 전체, 목적과 방법, 원인과 결과 등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가
- 분석기준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③ 비판적 사고의 평가관점

1) 추론의 타당성

- 지나친 비약은 없는가
- 자신의 논리전개에 대한 일관성과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가
- 객관성과 중립성을 띤 기준이 적용된 추론인가
- 자료의 적절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판단하고 있는가

2) 적절한 적용력

- 분류 능력과 유형화 능력에 따른 적용과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분석기준을 적절히 사용한 적용인가
- 요소들을 새롭게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 확실하지 않은 사태에 대하여 원인, 결과, 영향 등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가
- 목표에 따른 선택·적용 능력이 있는가

3) 새로운 의문제기

-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정당화하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비판적 관점을 지닐 수 있는가
- 도출된 결론을 새로운 상황으로 연결시킬 능력과 태도가 되어 있는가

④ 종합적 사고의 평가관점

1) 인과관계 도출

- 전체구성과 전후관계가 논의의 일관성, 논리 및 조직의 일관성을 지니고 명확히

도출되었는가

- 전후관계, 인과관계에 따른 배열의 양이 적절히 분포되었는가

2) 준거에 의한 종합적 평가

- 자료의 내적 준거(정확성, 정밀성)를 충분히 반영한 평가인가
- 평가시 사용한 가치나 견해, 관점 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가
- 증거나 타당한 논리에 의하여 가설을 확인하고 종합하였는가

이러한 평가관점에 따라 사고력 및 기능평가 문항을 제작할 경우에 유의할 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시되는 문제상황은 교과서나 수업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문제상황으로 제시해야 한다.
- 평가될 내용이나 지식의 수준은 원리나 일반화로 한다.
- 실생활과 관련되거나 실용가능성 있는 문제로 파악한다.
- 목표에 적합하게, 의도된 평가내용의 준거가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문제를 재정의해보는 자유가 허용되도록 출제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평가의 준거 및 기준, 평가관점, 그리고 평가문항 제작시의 유의할 사항 등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시민교육의 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들은 단지 사고력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시민교육의 평가에는 그 밖에도 인지적 영역,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영역, 가치·태도 영역,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영역 등이 고루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의 평가에 있어서도 위에서 제시한 실례를 바탕으로 새롭고 개선된 평가도구의 개발·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북통일 이후의 교육과정 통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 중에서도 남북분단 이후 이제까지 이질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시민양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주로 사회과,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과정의 모델을 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 2장에서는 현재 남북한에서 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그 비교 차원을 목표, 내용, 방법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시민교육의 이질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시민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요소들을 추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제 3장에서는 남북통일의 선행모델이 될 수 있는 독일의 교육통합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독일 교육통합정책의 성격을 규명해보고, 통독 이전의 동·서독의 정치교육(시민교육)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동서독의 상반된 정치교육이 통독 이후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남북통일 이후의 교육과정통합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통일한국의 시민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있어서 선행연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통일한국의 시민교육과정 모델을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21세기의 포스트모던을 대비하고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관을 모색하므로써, 이를 시민교육의 이념과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민교육의 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내용구성의 기준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언급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평가의 기준과 관점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남북통일 이후의 교육통합에 있어서 학문적·이론적 차원에서의 자료제공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 이후에 교육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통일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형성·시민형성·국민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전문가와 교육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북한 자료 >

- 과학·백과사전출판사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해설론문집』, 평양:1978.
- 교육도서출판사편, 『교육학 - 사범대학용』, 평양:1969.
- _____, 『사회주의 교육학』, 평양:1975.
- _____, 『인민학교 교과서』, 평양:1985.
- 금성청년출판사편, 『주체의 학습론』, 평양:1982.
- 김일성, “청소년 사업과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4.
- 사로청출판사편, 『공산주의와 지덕체』, 평양:1988.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편(평양:1985), 『철학사전』, 서울:도서출판 힘:1988.
- 사회과학출판사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평양:1975.
- _____, 『인간개조이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6), 평양:1985.
- 사회주의교육학연구소편,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의 심리적 특성』, 평양:1983.
-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평양:1977.
- 최장선 편, 『유아교육학』, 연변교육출판사, 1986.
- 최청의, 『학생들의 사고능력 발달의 특성』,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87.
- 홍승은, “위대한 교육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육성의 완성된 방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해설론문집』,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남한 자료 >

1. 단행본

- 강우철편, 『분단국의 역사교과서 비교』, 교학사, 1992.
- _____, 『달라져야 할 사회과교육』, 교학사, 1992.
- 고대 평화연구소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 교육부,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권오정 외, 『민주시민교육론』, 탐구당, 1987.
- _____, 『국제화시대의 인간형성』, 배영사, 1985.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 김상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론』, 서울: 학문사, 1983.
- 김종서외, 『교수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 김형찬편,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 배찬복, 『남북한 정치사회화』, 법문사, 1989.
- 북한연구소편, 『북한교육론』, 1978.
- 사회과교육연구회 편, 『새사회과교육』, 형설출판사, 1976.
- 정세구, 『가치·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198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이념정립을 위한 연구』, 1985.
- 한면희, 『사회과교육의 과정탐색』, 배영사, 1990.

2. 통일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 김동규, “남북통일이후의 학교교육 이념 및 제도에 관한 모델연구”, 통일원,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6)』, 1992.
- 김희목외, 「사회과 수업방법 개선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5.
- 박용현,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통일원, 『통일논총』 제3권 제1호(1983).
-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2권4호 1990.
- 통일원, 「북한의 교육실태와 특징」, 1986.
- _____, 「북한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내용분석」, 1987.

- _____, 「북한의 학교교육과정분석」, 1987.
- _____,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1990.
- _____, 「북한교과서분석」, 1992.
- _____,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1992.
- _____, 「통독 2주년 보고서」, 1992.
- 한국교육개발원편,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 1991.
- _____,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1991.
- _____,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 1992.
- _____,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교육」, 1990.
- _____,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1993.

3. 기타 연구자료

- 강명제, “남북한 초등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권오정, “민주주의 교육방법에 대한 기초적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한샘교육개발연구소, 1990.
- 김동규, “남북분단 이후 교육의 역사적 고찰”, 『교육학연구』 제28권 3호, 1990.
- _____, “북한교육의 기본원리와 이질화 현상”, 『북한연구』, 1991년 여름호.
- 김주성, “자유주의의 세계사적 근대성 완결과 철학적 위기”, 『사회비평』 제8호, 1992.
- _____, “다원주의사회의 가치론적 세계관”, 한국철학회편, 『사회발전과 철학의 과제』, 대구:이문출판사, 1993.
- _____, “21세기를 향한 국제화시대의 한국 민주시민교육”, 『사회과교육』 제27호, 1994.
- 김창희,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문용린, “통일후의 교육체제 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1991.
- _____, “민족 동질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략 - 교육내용적 측면” 『교육학 연구』 제28권 제3호.

- 박문갑, “북한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변영호, “남북한 초·중등 교육과정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배찬복, “북한의 청소년 교육과 정치사회화”,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1991년 여름호.
- 윤계일, “북한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안희천, “사회과교육에서의 인간관”, 『사회과교육』 제20호, 1987.
- 윤홍근, “현대 계약주의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계학, “민족공동체 형성과 교육의 이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1991.
- 이성호, “북한의 중등교육”, 고대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 이태건, “마르크스의 사회인식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찬희, “북한의 역사교육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정석홍, “민족 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 - 교육제도적 측면”, 『교육학 연구』 제28권 제3호.
- 정용길,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통신』, 1990.
- 정호범, “통일지향의 시민양성을 위한 한국 사회과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 연구』 창간호(1994.1).
- _____, “사회과 교수이론상의 지식과 가치 문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조점환, “북한의 학제와 교육내용”,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1991년 여름호.
- 허숙, “북한의 취학전 교육 및 초등교육”, 고대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 외국 문헌 >

- Banks, James 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1877.
- Barr, Robert D. et al., *Defining the Social Studies*, NCSS, 1971.

- Bruner, J.S., *The Process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_____, "The Act of Discovery", *Harverd Educational Review* 31, 1961.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and Press, 1916.
- Engle, S.H., "Objectives of the Social Studies", in Massialas & Smith eds., *New Challenges in the Social Studies*,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1965.
- Hersh, R.H. et al., *Models of Moral Education*, New York: Longman Inc., 1980.
- Oliver, D.W., "Categories of Social Science Instruction", in Gross Mophie & Frankel eds., *Teaching the Social Studies*, New York: International Textbook Co., 1970.
- Raths, L.E., et al., *Values and Teaching*, Columbus, Ohio :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1978.
- Rawls, J., "A Well-Ordered Society", *The Cambridge Review*, Feb, 1975.
- _____,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Justice as Fairness :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and Affairs*, Vol.14, No.3, 1985.
- _____,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Tanck, M.L., "Teaching Concepts, Generalization, and Construcs", in D.M. Fraser ed., *Social Studies Curriculum Develement*, NCSS, 1969.

< 기타 자료 >

- 극동문제연구소편, 『원전 공산주의 대계』, 1986.
- 동아일보사편, 『원자료로 본 북한』,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1945 - 1982년, 1983.
- _____, 『북한총람』 1983 - 1985년, 1986.
- 기타 교육부 발행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도덕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북한 발행 「교과서」 등의 자료.

統一韓國 教育制度의 標準模型 研究

研究責任者：崔 榮 杓 (韓國教育開發院)

목 차

<요 약 문>	465
I. 서론	46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69
2. 연구문제와 내용	471
3. 연구방법	473
II. 남북교육제도의 비교분석	474
1. 학제	475
2. 의무교육제도	477
3. 직업기술교육제도	481
4. 특수교육제도	484
5. 고등교육제도	489
III. 교육제도 표준모형에의 접근	494
1. 교육제도 표준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상황분석	494
2. 교육제도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 분석	499
3. 교육제도 표준모형 접근의 틀	501
IV.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표준모형안 탐색	506
1. 표준모형 설정의 전제와 방향	506
2. 교육제도 표준모형안	507
V. 결론	527
※참고문헌	530

<요 약 문>

이 연구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할 새로운 표준교육제도의 모형을 구안·제시하고 지원조치도 함께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표준형 교육제도의 접근의 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표준형 교육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 이전에 수행할 주요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표준형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조치가 필요한가 등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라 먼저 남북한 교육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분석한 바탕 위에서 표준형 교육제도 마련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유사성보다 상이성이 많다고 분석되어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남북교육제도에 있어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데, 특히 북한이 교육의 개념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서 표준형 교육제도로의 접근의 틀을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교육통합의 특성, 남북교육의 이질성, 그리고 남북통일정책의 분석에 바탕하여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될 새로운 교육제도로의 접근의 틀을 설정하였는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개편·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공존형으로 존재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통합선도부문을 대상으로 삼아 부분연합을 시도하고, 통일국가단계에 이르러 표준형으로 통합하는 일련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의 틀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될 주요 표준형 교육제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표준형 교육제도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수립되도록 하며, 민족주의·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점진적, 기능적 접근을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
- 학제는 유·5·3·4·4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초·중등 총 12년의 범위 안에

서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중등교육제도는 적성에 따른 진로확립에 중점을 두고
 - 진급제도를 탄력화하고, 졸업기준을 표준화하며
 - 고등교육기관을 특성있게 다양화하도록 함
- 의무교육은 12년간을 목표로 하되, 초반기에는 8년간 실시하여 남북지역간 교육여건을 균형화한 후 연장하도록 한다.
- 12년 의무교육은 농어촌, 벽지지역 직업계 학교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직업기술교육은 후기중등단계부터 분화시키며, 기술적성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 요구에 따라 전기중등단계에서도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직업계 학교 진학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 직업계 고등교육 기관 이수후 일정 현장경력을 지니고 우수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때는 상급 한 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특수재능교육은 일반학교를 통한 속진제와 심화제 방식, 특수목적학교를 통한 교육방식의 세 체계로 제공한다.
- 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에 선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
- 장애아특수교육은 4세부터 조기교육체제를 갖추고 1차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기술교육 위주로 제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 복지차원에서 의무교육기간과 설립비를 불문하고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도록 함
- 고등교육은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계대학으로 종별화하며, 전문학위제도를 신설하도록 한다.
- 권역별로 소수의 종합대학과 특성화된 단과대학으로 육성하며,
 - 북한지역에는 인문·사회계 대학을 대폭 신설하고
 - 연구기관에 단설 전문대학원을 두도록 하며
 - 학생은 자유경쟁에 의한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쿼터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함

- 표준형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통일단계별로 마련하여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교육제도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 화해·협력기에는 교육·학술부문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상호간에 상대측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 남북연합기에는 남북교육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하여 과학·기술교육부문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표준형 제도의 적용을 적극 실험하고
 - 통일국가시기에는 통일교육법을 마련하고 표준형 교육제도를 수립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제반 지원을 적극 제공하도록 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형식적인 통일은 정치적 통일로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의 화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모형을 사전에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오늘의 남북한 교육제도가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 매우 이질화되어 있어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특성을 지닌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제도의 모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 교육의 개념에 있어 북한은 남한과는 다르게 본질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어 근로인민대중만을 위한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교육의 수행체제에 있어서도 남한은 학교교육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학교제도 이외에 취학전 교육과 성인교육제도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 총체적 교육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은 교육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정치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정치우선론에 기반한 당·정 일치체제에 바탕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당의 영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육의 개념, 구조 및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질성이 매우 심화되어 있어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형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현재의 남북한 교육제도와는 모습을 달리한 제 3의 형태로 구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에 따라 남북협상에 의해 새로운 교육제도를 구상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어느 한 쪽의 교육제도로 흡수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한 교육제도가 각각 장단점을 지

니고 있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민족 인재를 길러내는데는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73.1%가 실질적으로 남한형이나 남북교육제도가 공존하면서 연계시키는 형태보다는 제3의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¹⁾ 이러한 여러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서둘러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할 새로운 교육제도의 모형(잠정적으로 표준형이라 함)을 연구·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에 대비한 교육제도의 표준모형 구안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은 등 여러 한계점이 많아 지금까지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교육개발원(1993년)과 교육행정학연구회(1992년) 등에서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통일에 대비한 교육제도의 표준모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근거나 지원조치 등도 타당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많다. 그리고 남북한 교육제도의 이질성 및 그 배경을 파악하여 어떤 제도부터 우선하여 통합할 것이며, 통일 이전과 이후에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성있게 제시하지 못한 감이 있다.

한편, 정부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북한 당국과 교육제도의 통합에 대해 논의할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둘러 협상용 표준모형을 수립하는 것이 요청된다. 남북대화가 현재 일시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미 조인되었으며, 핵문제도 해결되어 조만간에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준비를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과 교육부문 협상시 우리가 제시할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할 표준형 교육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교육제도의 모형을 구안·제시하는데 중점을 둬고 아울러 이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치도 함께 통일단계별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최영표 외,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연구보고 RR 93-8, 한국교육개발원, 168~169쪽.

2. 연구문제와 내용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될 교육제도 표준모형으로의 접근의 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한국의 교육제도 표준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어 통일단계별로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며, 통일 후의 표준모형은 개략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선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한국 사회의 교육제도 표준모형은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 이전에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통일 후 교육제도의 표준모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방안을 탐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전에 미리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통일 한국의 교육제도 표준모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을 구성하여 어떻게 지원하도록 할 것인가

통일 후 교육제도 표준모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조직과 지원조치들을 연구·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남북한 교육제도의 철학적 배경과 특성 고찰

○ 남북한 교육제도의 철학적 배경과 특성 고찰

- 철학적 배경
- 교육의 특성

-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분석
 - 분석대상 : 학제, 의무교육, 직업기술교육, 특수교육, 고등교육
- 통일한국 표준모형 탐색에의 시사점 도출
 - 유사점과 상이점 분석
 - 표준모형 탐색에의 시사점 도출

나. 표준모형 설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교육제도의 지향 이념
- 교육제도의 바람직한 형태
- 표준모형 마련에의 절차
- 학제의 개편 방향
- 의무교육 연한의 개편 방향
- 직업기술교육 개편 방향
- 고등교육 개편 방향
- 영재교육의 개편 방향

다. 통일한국 표준모형의 접근의 틀 설정

- 교육제도 통합의 개념 고찰
- 표준모형 설정의 상황과 방법 분석
 - 표준모형 설정시의 접근상황 분석
 - 표준모형 설정의 방법 분석
- 표준모형의 접근의 틀 설정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거하여 설정

라. 교육제도 표준모형 방안 탐색

- 표준모형 탐색의 전제와 방향 설정
 - 기본전제
 - 기본방향
- 표준모형 방안 탐색
 - 통일후 교육부문별 표준모형

- 통일이전 교육부문별 정책과제
- 통일단계별 지원조치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통일한국의 교육제도 표준모형을 구안하는데 관련되는 기초자료와 정책자료를 광범하게 수집·분석하였다. 남북한 통일정책 자료, 교육통합의 개념과 방법에 관한 자료, 북한교육제도 및 실상과 관련된 문헌, 법령집, 연감, 교재, 논문 등과 남북교육제도 통합 관련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나. 귀순자와의 간담회 개최

북한의 교육수행체제와 실제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표준모형안의 실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근 귀순한 북한인사를 대상으로 7인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귀순인사는 나이, 학력수준, 출신배경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므로써 자료수집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다. 전문가 면담조사 실시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할 표준모형은 어떤 교육이념하에 마련되고 어떠한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주요 교육제도 부문의 모습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학계와 교육계 전문인사 8인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협의회 개최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될 교육제도 표준모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II. 남북교육제도의 비교 분석

남북한 교육제도는 조직상으로 볼 때 체계를 달리하는 면이 있다. 남한은 교육제도를 정규 학교교육체계 위주로 구조화하여 왔으며 점차 취학전교육, 사회교육체계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취학전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사회교육도 함께 중시하는 총체적 교육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도 구별되는 특성이다. 이는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데서 연유한 점도 많지만 북한이 우리의 전통적인 향학열을 수용하면서 인간개조를 통해 공산주의 혁명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길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조기교육의 원리를 수용하여 취학전교육을 매우 강화하여 일찍부터 보편화시켜 왔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사회주의 교육방침에 따라 성인교육체계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의 특성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총체적 교육구조 형성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강령인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도 「사회주의 교육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도 또한 총체적 교육구조 형성의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있어서도 체제의 다름으로 하여 상이점이 많다. 남한은 교육법 제1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전인교육, 민주주의,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적성 계발, 창의성, 개척정신, 통일외지, 개성 중시 등의 구체적인 덕목도 제시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인격완성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2년 발표한 헌법 제4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하여 집단주의에 바탕한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소위 주체

사상에 기반한 인간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으로 볼 때,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정치를 우선하여 교육을 수단화하는 특성이 강한데 비해, 남한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목적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 이념에 따라 집단주의를 우선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와 국수주의적 주체사상에 기반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교육이 기본구조와 이념·목표가 사회체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통일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제도도 통일의 이념·체제와 관련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통일후 교육제도는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민족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념과 목표의 정립도 요구된다. 또한 교육이 교육답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는 교육의 본질 구현을 우선하여 구조화하는 것도 요청된다. 수단적 교육관을 지양하고 목적적 교육관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제도의 주요 부문인 학제, 의무교육제도, 직업기술교육제도, 특수교육제도, 그리고 고등교육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남북한 제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고 표준교육모형 구안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제

남북한의 학교제도는 분단 이후 사회이념과 체제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발전하여 왔다. 이들 서로 다른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단계별 교육연한을 보면, 남한은 초등 6년, 중등 6년, 고등교육 단계가 4년인데, 북한은 각각 4년, 6년, 4년으로 구조화하고 있어 초등학교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2년이 짧다. 이것이 학교제도상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등 교육단계에서 남북한은 동시에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남한은 전기 3년, 후기 3년으로 구분하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 4년, 후기 2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전기와 후기의 구분으로 인하여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세째, 진로 분화의 시기를 보면 남한은 중등후기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북한은 중등후기까지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한의 학교제도는 고등교육단계에서 학술계열과 직업교육계열이 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고등중학교 고등반 과정에는 남한과 같은 직업교육 계통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과정에는 전문기술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초기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기술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은 고등중학교 졸업이후 단계에서 즉, 전문학교, 기업소내의 공장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직업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며 기초기술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은 일반교육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째, 북한에서는 학교제도 안에서 특수목적에 위한 학교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분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남한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보다는 늦게 분화되고 있다. 북한의 학교제도 가운데 특수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과 영재교육기관은 일반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영재에 대한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층교육과 예능교육은 초등교육단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남한은 특수층을 위한 교육기관은 어느 교육단계에서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영재교육은 대체적으로 중등교육단계부터 설치되어 있다. 중등전기단계에서도 체육과 국악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 분야는 중등후기 단계에 설치되어 있다.

<표준모형 구상에의 시사>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통일한국 교육제도 표준모형을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간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의 조정·통합은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편보다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제의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학교제도에 관한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육으로서의 중등교육 단계를 18세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취업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제의 기본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18세 연령이 직업선택이나 진로 및 전문과정을 선택하는데 적절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현재 16세에 마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른 연령에서 보통교육을 종료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한은 18세에 마치고 때문에 적절한 연령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 진로교육의 분화시기는 후기중등단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인을 양성하려면 후기중등단계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실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능인력을 양성·확보하려는 정책은 오늘날 산업계가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대학진학 준비과정에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도 산업발달의 수준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네째, 남북한의 학교제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서 학교제도상에서 학생이동이 보다 융통성있게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상호간의 연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가, 또한 학교단계간 학생이동시에 서로간의 수업연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의무교육제도

먼저 의무교육의 개념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북한은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있어서, 그리고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균등배치, 취학과 이의 보장 의무,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 초과자에 대한 교육 시책 강구 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과 조건 등에서는 약간의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취학 의무에 대해서는 남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이 강제 교육(compulsory education)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적령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부과하며 아동의 부모에게 취학시킴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의무 교육 대상자들을 빠짐없이 교육시킨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보다는 훨씬 조직적이어서 빠짐없이 교육시킨다는 내용만으로도 취학 의무나 취학 강제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요건 구비 측면을 보면, 남북 모두가 관련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이 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취학할 학교를 균등하게 배치하여 취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취학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육시킨다는 점은 남북 모두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상성의 개념에서는 차이가 있다. 남한은 재능 있는 학생으로서 학비가 곤란한 자를 위해서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조건의 구비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러한 규정은 없지만 학용품까지도 제공하고 통학이나 기숙생활을 위한 생활 비용까지도 제공하여야 함으로써 무상성의 개념을 생활 비용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북한 의무교육의 변천 과정을 볼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첫째, 의무교육 단계와 연한으로 볼 때 북한이 매우 급진적이었다. 남한은 해방 후 40여 년간에 9년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인 데 비해 북한은 4차례에 걸쳐 의무교육을 연장하여 중등학교교육 단계 뿐만 아니라 학교전 교육 단계까지 넓혀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1) 최영표, '남북한 의무교육 비교 연구', 「도산학술논총」 제2집, 도산아카데미연구원, 1992.

이로 볼 때 남한은 의무교육이 매우 완만하게 발전하여 왔으나 북한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무교육 대상에 있어서 북한의 포괄 범위가 넓다. 남한은 6세아동부터 15세아동까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유아 단계인 5세부터 노동하는 나이인 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포괄 범위가 훨씬 넓다.

세째, 의무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남한은 보통교육에 국한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체제의 요구에 따라 기초기술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하는 사회주의 교육의 방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무교육 변천상의 차이는 남북 사회 배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은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하여 왔다. 이 때문에 집단보다는 개인을, 교육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하여 왔다. 이에 국가는 의무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최소한의 조건만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높은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국가가 의무교육을 연장하지 않아도 개인 부담으로도 충분히 높은 교육 수준을 성취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북한은 집단 우위의 사회로서 무산자 계급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 체제이다. 교육제도도 이러한 체제에 영향받아 무산자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직·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여기에 사상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조기 실현의 방침이 의무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의 의무교육의 실상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많은 차이를 보여 준다. 먼저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정치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화된 교과를 채택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중학교까지 모두 김일성 교과와 김정일 교과를 동시에 정식 교과로 개설하여 정치교육을 우선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에 의한 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학문 지향의 교과별로만 개설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고급반 과정에서도 계열과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서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선택 과정이라는 것도 한두 과목에만 허용하여 경직된 편제이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최근에 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외국어 교과를 설치·제공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교과 비중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국어와 산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등단계에서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의무교육의 관리·지원 체제에서도 남북한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 사회 자체가 당이 우선하는 체제인지라 의무교육 행정에도 있어서도 당이 주요 정책을 결정·감독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고 관리·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남한에서는 집권당이 교육 사업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 행정기관으로 합의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어 독임제를 취하고 있는 남한과는 다르다. 의무교육 여건, 즉 교원 양성·시설 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은 산하에 관련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남북한 모두 대상별로 조직을 설치하여 의무교육 대상 학교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중앙에 의무 교육 설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교육기자재총국을 사업 부서로 설치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표준모형 구상에의 시사〉

남북한 의무교육제도를 비교 분석해 볼 때 남북한 모두 통일에 대비하여 의무교육제도의 개편에 주는 시사점은 대단히 크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에서 의무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으로서 모든 아동에게 국가가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통일전 단계에서 남북한은 의무교육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충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 여건을 보다 양호하게 구비하고 학생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의무교육의 연한 면에서 북한보다 짧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차적으로 연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국가적인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듯이 국민학교 교육을

완전무상화하고, 1997년까지는 중학교 단계까지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1998년부터는 고등학교 단계도 도서·벽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의무교육 기간이 11년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이라 할 수 있지만 교육재정이 빈약하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보다 양호하게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은 기초교육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기능을 습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특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개인의 주관적 편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의무교육 내용 가운데 정치사상관련 교과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교육 이념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대체되도록 점차 개편해야 한다. 남한의 교육 내용에서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폐지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3. 직업기술교육제도

남북한의 직업기술교육은 유사점도 있지만 체제의 다름으로 인해 상이점이 많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직업기술교육의 전문화 시기별로 볼 때 16-7세경에 시작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제상으로 보면 직업기술교육의 분화시기가 남한은 후기중등단계인데 대해 북한은 고등교육단계이어서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초·중등 학제가 10년으로 우리보다 2년이 짧아서 나이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 남한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16세부터 시작되는데 대해 북한의 전문학교는 17세부터 시작되고 있어 통일후 학제를 개편한다고 할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상이점은 훨씬 많다. 주요한 상이점들을 들면 :

첫째, 직업기술교육의 내용에 있어 남한은 진로교육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기초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기술까지 취급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직업기초교육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따른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과 관련지어 교육하고 있으며 주로 지식 위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등중학교 단계에서 기초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실습을 시키고 있으며 이것도 생산기술과 연계시키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선반, 통신, 전자기계 등의 기술기능을 익혀 취업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기술교육기관의 존재 형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2-3년제 전문대학 그리고 개방형의 산업대학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전문학교와 산업체 부설기관 형태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설립되어 있다. 남한의 전문대학과 북한의 전문학교는 전일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공·농·어장대학은 야간제, 정시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방법에 있어 남한의 산업대학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또한 학교시설, 교수진, 교육내용 등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어 정규 교육기관화하고 있는 산업대학보다 훨씬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설치 규모로 볼 때도 북한은 사회주의 전통방식에 입각하여 탐사공과대학, 도자기공과대학, 석탄공과대학 등과 같이 실제 전문 부문별로 설치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가 많다.

셋째, 산학협동의 차이가 크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론과 실제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연계방침에 따라 직업기술교육기관은 산학협동에 바탕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고등 직업기술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장대학 등은 별도의 학교 없이 산업체 시설을 강의실로 사용하고, 교수진도 상당수를 현장 기술진으로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산업체 현장과 직접 연계하여 조직하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산학협동의 기반 위에서 현직연수의 형태로 직업기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은 아직까지도 전임교수가 이론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어 현장과 괴리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산학협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사회체제의 다름으로 인해 직업기술교육 영도·지원체제에 있어 차이가 많다. 남한은 교육부문이 행정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직업기술교육도 교

육부가 관장하는 체계이며, 교육방침에 따라 국·공·사립의 형태로 구분지어 영도하고 지원하고 있다. 90%가 넘는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국가 교육비의 투자한계로 인하여 사학법인이 설립·운영하고 있어 학생 수업료와 사학법인이 교육비를 염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어 주요 직업기술교육정책은 당이 결정하고 정무원의 교육위원회가 집행하는 형태이다. 또한 국가계획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국가 계획에 따라 모집하고 졸업후 배정도 국가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학법인은 두고 있지 않다. 공장대학이 교육비를 염출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설립한 산업체가 지원하고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며, 기타 모금 등에 의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준모형 구상에의 시사〉

위와 같이 남북한 직업기술교육제도가 유사점도 있지만 상이점이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서 향후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표준모형을 구상하는데 있어 다음의 여러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보통교육단계에서 진로교육과 연계된 일반적인 직업기초교육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업교육제도를 수립하게 될 때 직업기초교육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진로교육의 범위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직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를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지역산업기술의 발전구조 및 상황과 밀접히 연계된 직업기술교육체제가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기술교육은 직업기술인력을 양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교육제도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산업발전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를 획일화시키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양성있게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청된다. 예컨대 북한지역에 통일후 기능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능인력 양성기관을 남한보다는 훨씬 많이 세워야 할 것이며 과도기적으로 여러 형태를 병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기능인력은 18세경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성장나이로 볼 때 18세 정도 되어 직업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나이에 직업을 갖게 되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직업기술교육제도를 수립할 때 너무 조기에 기능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네째, 산학협동이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직업기술교육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기술교육은 산학협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편향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는 양질의 기술인력을 길러낼 수 없다. 북한은 일찍부터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산학협동의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남북이 새로운 직업기술교육제도를 구안할 때 이러한 좋은 점을 감안하여 직업기술교육제도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4. 특수교육제도

가) 특수목적교육제도 - 특수재능교육위주

특수목적교육제도는 영재교육과 특수층 자녀교육을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다. 특히 특수층 자녀 교육은 북한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교육기관이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교육제도에서 남북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층 자녀교육의 실시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수층 자녀교육을 제외하면 영재교육은 남한과 북한이 최근들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선 특수목적교육제도에서 남북한간의 유사점은 영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재교육은 남북한에서 1970년대 들어서 동시에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남한에서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계열의 영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선진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영재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남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이 1966년 설립되면

서 대학원 과정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인 과학원은 1970년에 설립되었다. 북한에서는 1967년에 과학원 부설인 평양이과대학이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남한은 1983년에 과학고등학교가, 북한은 1984년에 제 1고등중학교가 설립되었다.

남북한간의 공통점은 과학영재 뿐만 아니라 예·체능계와 외국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공통적으로 음악, 미술, 체육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예능교육 분야에서 남북한간의 상이점은 영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은 인민학교 단계부터 시작하는 조기교육의 방법을 채택하는데 비해서 남한은 대체적으로 중등후기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다. 체육분야에서는 남한이 중등전기 단계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학단계에서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상이점이라 할수 있다.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에서 남한은 자유방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북한은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한의 영재교육 가운데 과학분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체능 분야와 외국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분야의 영재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특수층 자녀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학교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특수층 학교는 결정적으로 출신성분에 기초하여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상 차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수층학교 뿐만 아니라 과학분야의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영재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시 출신성분과 조직활동을 고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영재교육은 선발시부터 출신성분과 정치사상성을 고려함으로써 일정한 부분에서는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은 특수층을 위한 학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영재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시 학생의 능력과 적성 이외에 출신배경과 같은 요인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한의 영재교육은 자유방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

생의 능력과 적성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능력과 적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환경이 빈곤하여 그것을 조기에 발굴·개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준모형 구상에의 시사〉

이상의 남한과 북한의 특수목적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표준모형 구상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육활동이며, 앞으로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육 사업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공통적으로 영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은 특수분야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간교육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개인의 재능을 개인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북한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개인의 재능을 수단시하는 방침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측면을 동시에 중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재발굴의 시기는 대체적으로 예·체능계는 보다 조기에, 과학 및 외국어계는 중등단계가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예·체능계의 영재교육을 국민학교 단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학 및 외국어계는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예·체능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조기에 발굴·육성하도록 할 것이며, 과학 및 외국어계는 후기 중등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특수목적교육제도 가운데 특수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층 교육기관은 차별적인 교육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는 특수층 학교와 같은 종류의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학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에 관한 남북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영재의 선발, 훈련, 평가 등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협의하고 상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체능분야, 과학분야의 영재 교육은 남북한간의 상이점을 막론하고 상호간에 공통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접근의 가능성이 많은 부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장애아 특수교육제도

남북한의 장애아 특수교육은 인권과 생활권 보장의 차원에서 목적도 비슷하며 교육내용도 기본적으로 같다. 교육목적면에서는 장애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통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반지식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같다.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의 조직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다.

첫째, 장애아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 남한은 5세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과정(18세)까지 개설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보다 늦은 9세부터 시작하여 18세까지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볼 때 남한보다 4년 늦게 시작하여 같이 끝나고 있어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종별의 분화상황도 차이가 있다. 남한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언어장애와 학습장애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형식적으로 시각, 청각, 언어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장애아 교육의 전문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상교육의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장애아 교육의 시작시기가 다르고 의무교육기간이 다른 점 그리고 장애아 교육에 대한 사회의 의지 등에 따라 남한이 북한보다 무상교육기간이 더 긴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은 중학교까지의 9년간 의무교육 이외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화로 약 13년간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9세부터 18세까지 10년간만 개설하여 교육시키고 있어 무상교육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네째, 장애아의 학교에서의 취급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

된다. 북한 자료 수집의 한계로 확실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전문화된 학교에서의 장애아 교육을 시키는 이외 소위 특수학급을 별도로 두어 경도 장애아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보고는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정부의 보건정책의 혜택과 사회의 도덕적 생활의 건전성으로 장애아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귀순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장애자는 평양시에서 축출하여 벽지로 보내고 있다고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모형 구상에의 시사〉

장애아 특수교육은 정치성이 희박한 부문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우선하여 제도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표준모형 구상에 있어 선도부문으로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들면 :

첫째, 조기부터 통합 선도 부문으로 선정하여 교류·협력을 시도하고 통합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안하여 적용·실험하는 것이 요청된다. 장애아 특수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표적인 이 부문 교육기관인 평안남도 성천 소재 특수학교와 상대되는 남한의 국립 특수학교를 선정하여 남북연합 단계 이전부터 교류를 시도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서는 공동으로 표준형 통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의 적용을 시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의 학습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무교육시기보다 조기에 선발하고 오랜 기간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남북한의 장애아 교육시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명분이 뚜렷하므로 의무교육시기보다 일찍부터 선별하여 무상으로 교육하고, 사회에 나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기까지 연장하여 자율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요청된다. 장애아의 장애정도가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분화시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도장애아, 중도장애아, 중증장애아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이들의 장애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수용하여 교육하는 기관이나 교육내용, 방식도 다를 필요가 있다. 장애아 교육은 사회생활에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격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도장애아는 통합교육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고등교육제도

남북한의 고등교육제도를 비교해 보면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서로간의 상이점이 많은 편이나, 동시에 유사성도 가지고 있다.

먼저 고등교육 부문에서 남한과 북한은 교육기회의 확대 정책을 추구하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남한은 1980년 이후 고등교육의 정원 확대에 따라 교육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북한도 '온 인민의 인텔리화'라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대학수 변화 경향을 보면 남한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이 확대된 배경에는 우선 국가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계속적으로 각 급학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특히 고등교육은 1970년대말과 1980년 이후 급격한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4년제 정규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학교수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북한도 1980년대에 들어서 '국가 건설의 각 분야에서 필요한 민족 간부를 대량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인텔리 대군',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대학수가 1.6배 증가하였으며 1984년 한 해 동안 24개의 대학이 개교하였다. 이것은 남북한이 공히 고등교육의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 욕구가 남한과 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학부모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과 같이 북한에서도 대학입시 경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열하다고 한다.

고등교육의 성격과 기능에서 남북한은 엘리트 양성의 측면과 대중교육기관

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남한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질적인 수준이 다양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다. 엘리트 양성 교육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않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엘리트 양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부분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과 질적인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전문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은 남한에 비해서 성격과 기능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엘리트 양성 대학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아 질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정치·행정 분야에서 지도급 인물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선호의 대상이 되어 입시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반면에 북한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각종 공업대학, 공장대학 등을 통하여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직장근로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중적 성인고등교육기관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남북한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남한은 4년제 정규대학이 많은데 비해, 북한은 공장대학, 전문학교 같은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성격을 띤 고등교육기관이 많다. 북한 정규대학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성인교육 형태의 공장대학 등을 포함하여 280개²⁾에 이른다 고 한다. 이 가운데 공장대학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4년제 정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은 110여교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전문학교가 6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남한은 1992년 현재 대학(교)이 총 132개교, 대학단계의 각종학교를 포함하여 151개교이다. 또한 전문학교는 126개 학교이다.³⁾ 북한의 대학은 계열 또는 학

2) 통일원, 「'92북한개요」, 북한의 대학수는 자료와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90년 273개교(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1991)에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매년 대학수가 3~4개교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280개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3)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2. 통일원자료(남북한 사회문화지표)에서는 남한의 대학을 대학원수까지 합하여 405개로 집계하고 있어 수정하였음.

과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또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의 형태가 많다. 반면에 남한의 대학은 종합대학 형태의 규모가 큰 학교가 많으며, 성인교육기관은 적은 편이다.

남한의 고등교육기관은 정규대학 중심으로 학문탐구와 이론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성인교육 중심으로 생산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실제적으로 유용한 직업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의 4년제 정규대학은 교육내용의 구성으로 볼 때 학문과 이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인문·사회계나 자연·공학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문대학은 산업 현장과 비교적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직업기술의 습득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들어 남한에서는 대학단계에서의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문대학의 산업체 인력 위탁교육이나 기업체내의 사내 기술대학과 같은 형태를 활성화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생산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기술을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정규대학에까지도 군제대자와 직장근무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규대학 이외에 산업계 대학에는 대부분 직장근무자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선발구조에서 남북한은 입시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들 가운데 남한은 거의 대부분이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이지만 북한은 당해년도 졸업자가 아닌 제대군인, 직장근무자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졸업한 후 현장 경력을 가진 근로자에게 대학 지원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학생 정원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지역별 할당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절차에서 남한은 대학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거의 자동적으로 졸업하여 수월한 편이지만 북한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까다로운 편이다.

졸업후의 취업과 진로 결정에 있어서 남한은 완전히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는데 비해 북한은 국가와 당이 결정한다. 남한에서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개인적인 지원 절차를 거치고 각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자율적인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와 당이 졸업자의 능력과 성향을 심사하여 직장을 배치하기 때문에 졸업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표준모형 구상에의 시사〉

첫째, 고등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남한과 북한의 고등교육체계는 다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남한은 성인 근로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대학, 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산업계 대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을 확대하여 행정·전문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대학 교육내용 가운데 정치사상 관련 분야와 조직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깊이있게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의 선발방식에서 남한은 직장근무자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에서의 지역별 안배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전형제도는 직장근무자에게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지역별 안배 원칙은 고등교육기회를 획득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방출신 학생이나 빈곤가정 출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학생 선발시 학습능력에 따라 학생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발기준에서 출신성분, 조직생활 등의 요인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우수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 조직활동 등의 내용을 폐지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고등교육에서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의 이수과정과 졸업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문분야에서의 심오한 학문을 탐구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생산기술을 보급·확산시키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남한은 고등교육이 실제 산업현

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대학 입학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학문연구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각종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를 학문연구와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교육제도 표준모형에의 접근

1. 교육제도 표준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상황분석

통일한국 사회의 교육제도 표준모형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한 교육제도를 표준형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로써 통합이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교육학 사전의 해석에 의하면,¹⁾ 통합(integration)이라는 개념은 부분이나 요소들의 조합이나 합침에 의해 전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상호 이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게 분리된 요소들이 보다 완전한 조화로운 전체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즉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규범화된 표준이 되는 일관된 체제를 가진 조화된 사회·문화 집단체로 모아지거나 상호적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각 부분인 상호 구별되는 실체들이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전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 통일과정으로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동태적인 특성을 다분히 띠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통합은 상호 구분되는 실체들이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전체로 또는 표준화된 일관 체제의 특성을 지닌 사회·문화 집합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통일의 개념이 정태적인 의미가 강한데 대해, 통합은 동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²⁾

남한과 북한의 상호 이질적인 교육제도가 기능상, 구조상으로 전혀 연계됨이 없이 분리되어 조직·운영되는 것을 떠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연계되거나 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표준화된 특성을 지닌 교육 체제를 지향하여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족공

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2) 최영표, 한만길, 홍영란,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1993, 16~17쪽

등체라고 하는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남북한의 교육목적, 제도, 수행체제, 교육내용의 구성 등에 있어서 한 민족으로서 공통성을 지닌 조직체”를 의미한다.

교육제도를 통합하는데 있어서의 이론적 배경과 상황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현행 남북한 교육제도의 실상은 어떠하며 현행 체제하에서 통합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로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다. 교육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교육 수행체제와 내용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³⁾

먼저 교육의 개념에 있어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조건에서 모든 계급에게 복무하는 초계급적인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을 반동적 교육으로 매도하고 있다. 계급사관에 입각한 해석으로서 근로인민 대중만을 위한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를 양성하는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시각을 처음부터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도 북한은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수단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남한은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벗어나 철저한 정치 우선론에 입각하고 있다.

교육의 수행체제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교육구조에 있어서는 북한이 목적지향적인 특성이 훨씬 강하다. 빠르면 생후 20일부터 탁아소 생활을 하게 하는 등 학교생활, 성인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교육체제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3) 최영표, ‘남북 교육공동체를 수립하자’, 교육개발 85호(1993.8), 38~40쪽

또한 당·정일치의 성격이 강하여 교육에 있어 당의 영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에 의해 이끌려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치사상교육을 전문교육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집단주의를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도록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지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부르조아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교육의 개념에서부터 달리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 수행체제에 있어 매우 이질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질화되어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나갈 것이며 바람직한 모습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민족동질성 회복 이론, 국제통합이론 그리고 남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방식 등을 근거로 하여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⁴⁾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용론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남북한간에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부문부터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그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게 됨으로써 동질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두 체제 사이의 교육·문화 공동체 형성은 정치적 통합처럼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는 문화의 지체현상으로 말미암아 체계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교육·문화 체계간의 동질성이 증대되는 과정은 장기적·단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질성 증대과정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교류·협력 등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법·제도적 정비 등 점차 높은 단계로 이행하여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남북한 교육문제의 공동 인식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통합의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의사를 결정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질성을 증대하여 나가는 방법,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상호 이익에 기

4) 최영표, 위의 주, 39~40쪽

반하여 절충가능성을 모색하고 점차 동질화를 추구하여 나가는 방법, 그리고 구조 측면에서는 하위 단위 요소간의 공동체 형성 노력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위구조의 공동체 형성 단계로 이행하여 나가는 접근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표면상으로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어 협상에 의한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비관하는 자가 많다.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금년 8월 15일에 제시한 남한의 통일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공동체 통일방안」)인데 통일과정을 보면 화해협력, 남북연합,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존의 3단계 통일방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⁵⁾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통일 철학으로 삼고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신뢰를 회복한 후 공존공영을 도모하여 상호협력체제를 정착시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통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기능적 접근과 단계적 교류보다는 정치적 일괄 타결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다.

이는 동 방안이 선결조건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과 연방정부 실현 후에야 가능한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통합의 실제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의 단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내세우고 있는 선결조건은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들이다. 즉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 모든 개인과 단체의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남한 정부의 용공정권으로서의 대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통일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은 국가 통일 이후에야 가능한 논의들에 속하는 것으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북한의 통일방안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5)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 1994

이러한 남북한 당국이 제시한 통일방식의 접근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1988년 9월 북한정권 창건 40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은 전례없이 「공존의 원칙」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1980년에 발표한 연방제통일방안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1991년 1월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 주장을 잠정적 또는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선회시킨 것이다.⁶⁾ 여기서 김일성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제기하면서 이는 후대들에게 미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을 70년대 이전으로 선회, 과도적 중간 통일형태로 낮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통일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놓고 있으나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연방국가의 창립이라는 1단계만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3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우리의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수립의 통일 완성 형태를 「제도적 통일」로 보고, 이것을 후대로 미루고자 함으로써 연방국가 창립을 과도적 통일형태로 끌어 내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북한도 연방제 통일 이전에 「화해와 협력」단계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방안 구도를 현실화시켜 보면, ① 화해·협력 단계 ② 연방제 단계 ③ 제도적 통일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구도는 유사성을 갖게 되었으며 남북협상에 따라 2단계부터 통일문제를 구체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교육제도도 바로 이러한 구도에 근거하여 수립될 수 있다고 본다.⁷⁾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표준모형으로의 통합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북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

6) 김일성은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7) 정석홍, 「통일 한국 교육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Ⅳ, 「통일 한국의 교육제도」, 1993, 6~7쪽

안이 제시한 3단계를 준수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2. 교육제도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 분석

교육제도 표준모형의 주요 부문을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과 8)와 연구자가 별도로 8인을 선정하여 면담조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 통일한국의 교육제도 모형

통일한국에 적용할 새 교육제도는 남한형이나 남북한 현행 교육제도를 공존시키면서 연계시키는 방식보다는 제3의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73.1%가 반응하고 있어 남북한의 현행 교육제도는 새로운 통일 시대에는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표준모형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 교육제도의 장점을 취사선택하는 절충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새 시대의 이념에 맞게 그리고 대동적으로 민족인재를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교육제도가 어떤 이념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념에 바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남한의 홍익인간의 이념을 지지한 자들이 많았다. 귀순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 의견이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만을 고집하지 말고 남북한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과감히 채택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새로운 교육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재조직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여 급진적인 통합방식은 문제가

8) 최영표 외, 통일대비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3-8(1993), 168~179쪽, 이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관련교사 6명, 교육전문직 9명, 교수와 연구원 9명, 통일정책 관계자 6명, 그리고 귀순학생 2명 등 총 32명을 면담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였다.

많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0 학제의 개편

새로운 학교제도의 모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등교육 연한을 4년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지만 초·중등학교 교육연한에 대해서는 11년제, 12년제, 10년제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는데 11년제와 12년제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였다. 11년제로는 5·3·3제가 1/3로 제일 반응도 많았으며 소수이지만 5·6제, 6·5제도 제안하였다. 12년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6·3·3제의 선호도가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3·4제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중등교육단계를 지금과 같이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수가 제안하였다.

0 의무교육연한

의무교육 연한은 교육의 발전을 감안하여 초·중등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1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특히 교육전문직 인사들이 적극 제안하였다. 이는 북한이 현재 11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고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등학교 진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의견이었지만 응답자의 약 1/7은 실현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9년을 제안하였으며, 이외 북한과 같은 11년, 그리고 유치원 1년과 전기중등단계까지의 10년을 제안한 자들도 있었다.

0 직업기술교육의 전문화 시기

직업기술교육의 전문화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약 4/5가 현행과 같이 고등학교 단계부터라는 반응을 보여 다수 의견이었다. 이외 과거와 같이 중학교 단계부터 조기화하는 것이 적성 분화에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북한과 같이 고등학교까지는 보통교육에 치중하고 고등교육단계부터 전문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두 소수 의견이었다.

0 영재교육의 개편

영재선발 시기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금보다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보편적인 평등주의의 교육만으로 일관되어서는 안되며 영재들은 보다 조기부터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재 교육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의 약 1/3이 철저하게 능력과 관련 지어 전문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전문성을 계발시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본연의 자세를 지켜 교양교육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자가 약 30%에 달하고 있다. 전인 교육의 차원을 우선하여 전문교육 내용보다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약 18%에 달하여 갈등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0 고등교육의 개편

통일한국 사회의 고등교육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엘리트 양성이라는 성격 중시의 반응과 대중교육 성격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반응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 귀순학생, 연구자들이 전자를 더 강조하는 반응이 많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과 통일정책 관계자들은 대중교육의 성격을 강조하여 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한편 고등교육의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점하고 있어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데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양교육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대학 교육이 대중화되었으므로 교육내용도 개편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 1/4이 반응하였다.

3. 교육제도 표준모형의 접근의 틀

앞서 논의한 남북교육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 교육통합의 원리와 합리적인 절차, 남북통일의 방향과 절차 그리고 통일한국 사회의 교육의 모습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에 관한 논의에 바탕하여 볼 때 표준형 교육제도의 접근의 틀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교육통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형으로 개편하여 나가는 원칙을 어떻게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거하여 통일단계별 남북사회상황을 전망할 때 어떠한 통합형태를 거쳐 표준형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인가.

셋째, 표준형으로 이행하여 나가는 과정 즉 통일단계별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남북의 이질적인 교육제도를 표준형으로 개편하여 나가는 원칙은 교육통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첫째, 표준형 교육제도의 개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한다. 인간의 가치관이나 의식은 비교적 영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일시적인 제도의 개편이나 변환을 통해서 바꾸어지기 어려운 속성을 띠고 있다. 통일 이전 20여년 전부터 상호 교류와 이해를 쌓아왔던 독일도 막상 통일을 이룩한 후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통한 통일방식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갈등과 후유증을 주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교육의 통합 모형은 점진적, 단계적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를 이룩하여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남북한 교육체제의 현격한 이질성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 비정치적, 교육본질적인 교육부문을 통합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남북한 교육체제는 남한과 북한이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에 영향받아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1차적으로는 비정치적이며 교육본질적인 부문을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뢰감도 쌓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과학·기술교육과 특수교육 부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육의 구조와 내용의 많은 면에서 이념,

9) 최영표, '남북한 교육공동체를 수립하자', 『교육개발』, 통권 85호(1993.8), 41~42쪽

체제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기능주의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치적 접근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한 통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남북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고 유학생 교류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표준교육제도도 연구 시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표준형 교육제도로의 개편은 민족동질성 회복의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동질성 회복의 단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단계, 협력체제 확립을 통한 동질성 증대 단계, 그리고 재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단계의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동질성 회복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어야만 성취되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동질성 회복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교육의 통합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교류·협력을 거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통일단계로 접속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거하여 남북한 사회의 통합 진전 상황을 전망할 때 교육제도는 어떠한 통합형태를 거쳐 표준형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이며, 이 때 각각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 사회 상황을 전망하여 세 단계별로 나누어 각각 지향하는 목표와 모습 그리고 해결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상호간에 깊이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교육제도를 상호 이해하는 한편으로 비정치적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 때의 남북교육제도의 모습은 공존형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현행 이념과 체제에 따른 교육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부분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통합의 과제로는 상호간에 남북한 교육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존립의 배경을 깊이있게 파악하여 통합의 우선순위와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문화 교류·협력 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정치적 부문을 대상으로 한 교육전문가들을 교류하는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장차 교류·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본

다. 이를 통해 상호간에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기반을 형성하여 나가도록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이므로 교육부문에 서는 다방면적으로 교류·협력을 중점 추진하며 잠정적인 남북한 표준교육제도를 연구·합의하고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부문을 위주로 이를 적용·실험하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한 교육이 상징적으로나마 연합되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비정치적 부문을 위주로 한 유학생을 교류하는 정책이 수행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 교육제도의 다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학력 인정 조치, 편입학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때의 남북교육제도의 모습은 **남북교육 부분연합형**이라고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현행 교육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화해·협력 단계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유학생도 교류하고 장차 교육제도 통합방안도 논의하여 합의하는 노력을 띠게 된다. 이 때 수행되어야 할 통합의 과제로는 교육·문화 교류·협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남북교육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교육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교육전문가를 공동으로 파견하여 통합과제별로 연구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표준교육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서는 직업기술교육부와 고등교육부 그리고 비정치적인 부문을 우선하여 표준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실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요청된다.

통일국가 단계는 경제·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이어서 정치공동체까지 형성하는 단계로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걸림돌이 해결되는 시기이다. 이 통일국가 건설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민족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수월성을 신장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교육제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표준교육제도형**으로서 남북연합 단계부터 연구한 표준교육제도를 검토·보완하여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이 시기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표준교육제도를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함과 아울러 시행에 따르는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경비를 다각적으로 확보하여 제공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거시적 교육구조 개편, 학제 개편에 따르는 경과조치 마련, 각 부문별 교육제도 개편에 따르는 지원체제 정비·보완, 통일교육법의 제정·시행, 북한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의 산적된 과제가 쌓여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논의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교육제도 표준모형에의 접근의 틀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남북 사회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이 공존하면서 적대와 불신 완화 분야별로 교류·협력의 추진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공존공영, 「남북공동체헌장」이 규율 교류·협력의 촉진과 제도적인 평화보장 신뢰를 다지면서 민족동질성 점진 회복 도모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 이룩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상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통일 실현 「통일헌법」확정하고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 이질적인 이념·체제 불식하고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공동체적인 삶 이룩
남북 교육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이념과 체제에 근거하여 교육체제 각각 유지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남북교육공존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남북교육체제가 유지·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일부 부문에서 연합 운영 시도 남북교육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논의도 공식화될 것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남북교육부분연합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협상에 의해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합의된 표준교육제도로 전환 남북지역 차별없이 표준화된 교육제도하에서 교육을 받게 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표준교육형</div>
해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연구 수행 개별적으로 남북교육 통합안 연구 교육제도의 상호이해차원에서 비공식적, 공식적 교류·협력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교육정상회담 추진 남북교육공동체헌장의 채택 교육·학술 교류·협력의 중점 추진 교육부문별 연합 운영 추진 표준교육제도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적용·실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교육법의 제정 교육의 이념 재정립 표준교육제도의 제정·시행 표준교육제도로 개편하는데 따른 경과조치 시행 남북교육 균형발전 추구

자료: 최영표, '남북교육 공동체를 수립하자', 「교육개발」 85호(1993.8), 43쪽 자료를 재조직함

IV.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표준모형안 탐색

1. 표준모형 설정의 전제와 방향

가) 기본전제

첫째, 통일한국에 적용될 교육제도의 표준모형은 우리의 평화통일의 의지에 바탕하여 남북 당국자간 협상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표준형으로 통합하도록 하며, 통합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통일이전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남북상호간에 관심이 많으며 상호 이익이 된다고 보는 부문을 대상으로 삼아 우선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이의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 이어서 통일국가 시기 초반 1년여에 걸쳐 통일교육법을 제정하고 학제개편에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이 과업이 끝나는 대로 남북교육제도를 표준형으로 통합하여 완전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나) 기본방향

첫째, 표준형 교육제도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한다.

우리 통일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족·민주·복지공동체를 건설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개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복지가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형 교육제도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표준형 교육제도는 남북한 교육의 장점을 취합하면서도 대동적인 차원에서 통일한국 사회를 발전적으로 재창조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로 수립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구체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성과 능력의 최대한 발휘를 도모하며,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립되도록 한다. 또한 남북교육여건의 격차를감안하여 남북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북한지역 교육을 우선하여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세째, 표준형 교육제도는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개편하여 통합되도록 하며 남북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획일화시키지 않고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앞서의 교육제도의 표준모형에의 접근 방침에 따라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교육공존형으로 존재하면서 주로 통일국가에서 적용될 표준형 교육제도 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남북연합단계에 이르러서는 남북교육이 공존하면서 서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양 체제의 기능적 통합을 제고시키기 위한 표준형을 구안하며, 선도부문 예컨대 과학·기술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적용·실험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이어서 통일국가 초반에는 표준형 제정과 아울러 이의 적용을 준비하고 곧이어 표준형을 전국 각지에 적용시켜 나가도록 한다. 단 이의 적용에 있어서는 표준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의 실정이 다름을 감안하여 다양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제도 표준모형안

가) 학제의 개편

학제는 통일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므로 신중하게 합의하여 되도록 빨리 개편·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특성과 현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연계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데 교육 기회를 최대한 균등히 보장하면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도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1) 기본학제의 개편

기본학제는 유·5·3·4·4제를 원칙으로 하여 개편하면서 초·중등 총 12년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5년제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제공하며, 3년제 전기 중등학교는 전기중등보통교육을 제공하고, 4년제 후기 중등학교는 후기중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4년제 대학은 학술과 직업 계열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한다.

교육자치의 실시에 대비하여 초·중등 총 12년의 범위 안에서 표준형 이외에 교육단계별로 수업연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예컨대 6·3·3제나 5·5·2제 등도 허용한다. 다만 이때는 표준형과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조치가 별도로 마련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 병설형, 중등통합형 등도 들 수 있도록 한다.

— 중등교육제도는 적성에 따른 진로확립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우리 민족은 교육에 대한 열성은 높으나 인문승상의 풍조가 남아 있고 직업 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등단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확립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하도록 한다. 전기 중등단계는 진로 탐색기로 운영하고, 후기 중등 전반 2년은 진로 탐색 심화기로, 후반 2년은 진로 준비기로 설정·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후기 중등교육기관은 종합형 (comprehensive type)을 원칙으로 하여 설치하도록 하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와 예·체능계 등 특수목적형도 허용하도록 한다.

—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 그리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인 진급제도를 두며, 졸업기준도 표준화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라 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속진제나 유급제를 두도록 한다. 다만 유급제는 학생의 정서를 감안하여 원할 때만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졸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타지역 학교진학시 학력 인정에 대비하도록 한다.

— 학교명칭은 개칭하도록 하며, 계급적이고 개인 우상화적인 명칭은 폐지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교육단계별 학교명칭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대동적 차원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하도록 한다. 분단 이전에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의 개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계급 투쟁의 관점과 김일성가의 우상화 차원에서 명명한 학교는 민족의 화합 차원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게 개명하도록 한다.

—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의 분화 발전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화하도록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성의 요구가 높고 사회도 계속 분화발전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예컨대 학문 중심 대학,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직업 기술 중심대학,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개방형 대학 등으로 분화시킨다.

2) 특별학제의 개편

특별학제는 원칙적으로 5·3·4·4제를 표준형으로 하여 개편하되, 총 16년의 범위 안에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업연한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재능계 학교는 특수전문계와 특수목적계로 구분하며, 전자는 주로 예능계 전문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어 학교단계를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단계부터 조기에 분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특수목적계 학교는 주로 과학·어학·체육 등을 대상으로 중등단계부터 분화하도록 한다.

장애아 특수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전문대학 과정까지 설치하며 학교단계를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 후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후기중등교육 단계부터 각종학교를 설치하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북연합 단계의 과제 〉

남북한 학제의 개편 통합안을 연구·협의하고 5·3·4·4제로의 개편을 위한 경과조치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통일이전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가는 시기이므로 남북한 교육 당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제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학년도 개시 시기를 국제 추세에 따라 9월로 하도록 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기간을 12년으로 조정하는데 따른 경과조치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경과조치로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을 들면, 남한은 해당 학년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북한은 초중등기간이 총 10년으로 2년 짧은 점을 감안하여 2년을 연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후유증이 제일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민학교 3학년과 고등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우수한 자는 월반시키고, 보통수준 학생은 정상학년으로 진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여 초·중등 연한을 12년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

학제의 개편 통합은 학교교육 전반을 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수업연한 조정, 각 교육단계의 교육목표 재정립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체계를 전면 재조정하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상되는 주요한 문제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 :

첫째, 총 수업연한 및 각 교육단계별 연한의 재정립에 따라 학생을 재배치하게 됨으로써 학력의 연계성 단절, 학교시설의 과부족 그리고 교사의 과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남한지역은 현재의 학제와 표준형을 비교해 볼 때 초등단계가 1년 줄고 후기중등단계가 대신 1년 늘어나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지만, 북한 지역은 총 수업연한이 2년 짧아 수업연한을 연장하는데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통합의 효과를 보게 되고 동질성도 확보하게 되겠지만, 학력의 연계성, 시설 및 교사 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개편

하는 경우, 예컨대 정상학년으로의 진급시에는 앞서 제기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지만, 어차피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상급학교에 일정기간 학년간 공백이 생기게 되며, 인재 양성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가 요청하는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상 문제 발생의 소지는 많지만, 사회의 인력 수요와 동질성 확보의 측면을 중시하여 조기개편론을 취한 관계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학력간 단절문제는 별도의 보충교재를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충하는 기회를 주어 단절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교과과부족 문제는 교육단계간 수요를 조사하여 재배치하도록 하며, 재배치한 교사에게는 현직연수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수업연한이 연장됨으로 하여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통해 확보하도록 한다. 시설의 부족 문제는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초등단계는 2부제 수업을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중등단계는 과도기간 중 주변 시설을 임차하거나 이도 어려울 경우에는 학급 정원을 증가시켜 수업하도록 한다.

둘째, 후기중등교육단계를 4년으로 연장하고 진로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따른 교사확보, 시설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중등교육기관은 지역 실정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 예 체능계와 과학계 등 특수목적계도 허용하지만, 진로교육 강화 및 기회균등 차원에서 종합형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종합형은 현재의 병설식 종합학교가 아니고, 여러 과정을 설치하고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개방적인 시설과 단일계열 학교보다 많은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으로 교사 및 시설 확보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게 되어 보다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재정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범대학에서의 복수전공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 확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고등학교 건물은 개방형으로 건축하거나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지역의 혁명학원과 같은 특수층 학교의 개편문제가 대두되게 될 것이다. 특정계층이나 세력을 위한 학교는 통일한국 사회의 이념으로 볼 때 존속될 수 없다. 이들 학교도 보편적인 학교로 개편하고 이 학교 학생들도 일

반학교로 전학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무교육제도의 개편과 여건 개선

통일한국 사회에서의 의무교육은 보편적인 국민기초교육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년을 목표로 하되, 초반기에는 전기중등단계까지만 설정하여 남북 지역간의 교육여건을 균등히 구축한 후에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1) 의무교육은 초반기 8년, 장기적으로 12년으로 조정

의무교육 연한은 12년간(6~17세)으로 후기 중등교육단계 중반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통일후 초반기에는 8년간 초급중학 단계까지만 실시하여 내실을 다진 후 연장하도록 한다.

의무교육연한은 북한이 현재 11년간으로 하고 있어 이보다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 사회의 교육비 부담, 특히 통일 후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며 이도 주민의 기본생활에 우선하여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통일 후 초반기에는 전기중등단계까지 8년간만 실시하고 우선하여 남북교육의 균형발전에 투입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후에 12년 의무교육으로 연장하도록 하는데 이 때는 농·어촌, 벽지지역 직업계 학교부터 시작하고, 점차 종합계, 예·체능계로 확대하고 맨 나중에 일반계 과정·학교로 확대하도록 한다.

2) 북한 지역 의무교육 여건 개선

북한지역 의무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중점 추진하도록 한다.

북한지역 의무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후 초반기부터 북한지역에도 남한지역과 같이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고, 낙후되어 있는 농어

촌, 벽지의 교육시설과 설비를 우선하여 확충·개선하도록 하며, 급식도 실비로 제공하는 등 우선투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남북연합 단계의 과제 >

남북연합단계에 남북 의무교육 당국의 협상을 통해 남북한간 의무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의무교육단계 학교중에 초등학교와 전기 중등교육단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교육시설, 설비 등에 관한 기본여건을 비교·분석하여 실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들 분석자료에 바탕하여 개선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여건개선에 노력하도록 하는데, 이 때 남한 당국은 북한이 민족동체 형성을 위한 학술·교육부문의 협력사업을 수행한다는 조건부로 기금 지원 또는 시설·설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의무교육을 표준형으로 개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북측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 :

첫째, 의무교육 단계를 1차 전기중등단계까지로 한정하는데 따라 북한지역 학생은 후기중등단계의 교육비를 부담하는데 따른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 단계를 후기중등교육단계까지 연장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남한 의무교육과의 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막대하여 이를 5년 내에 성취한 후 곧바로 연장하겠다는 것을 주지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기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후기중등단계 학생 중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에게는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지역 의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소요가 많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본다. 적립된 통일비용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낙후된 북한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북한지역 학교와 결연을 맺어 지원하거나 자매학교들이 교류하면서 적극 돕는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다) 직업기술교육제도의 개편·통합

통일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직업기술인력을 충실히 양성하고 학생의 직업적 성도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남북 지역의 서로 다른 산업발전 추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 후기중등단계부터 분화하고 지속적 신장체제 구축

후기 중등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분화하며, 고등교육단계까지 연계하여 기술적성이 지속적으로 신장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업적성의 조기개발을 위해 후기 중등단계에 직업고급중학을 두며 전반 2년은 직업기초교육을, 후반 2년은 전문화된 내용 위주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직업적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3년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은 반드시 현장에서 실습하는 가칭 「3+1」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술적성의 지속적인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술계 대학과정 출신중 일정 현장경력자로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는 상급 한 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전문대학 졸업후 4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로서 우수한 학위 논문을 제출 통과하거나, 기사자격을 획득하였을 때 대학 학위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또한 기술계, 응용과학계 대학 졸업후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지닌 자로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수준에 달하는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였을 때는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직업교육과정 조기 제공 허용 및 진학기회 무상 제공

개인 요구에 따라 전기 중등단계에서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업계 후기중등학교 과정의 야간제에 진학하여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교육 8년을 마치고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학교, 또는 실업계학교 부설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적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계 후기 중등학교 야간제 과정에 우선하여 진학시키고 무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통일 이전 단계의 과제 >

◦ 화해·협력 단계

남북한의 직업기술교육체제와 산학협동 방식을 상호 연구하고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남북 직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연구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기능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체제를 상호 연구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도록 하며, 향후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사회가 소요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술인력별로 산학협동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연합단계에서 남북이 상호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남북연합 단계

공·농·상·수산·해운계를 대상으로 하여 모범적으로 산학협동을 하는 남한의 전문대학과 북한의 전문학교가 결연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하며 표준프로그램의 적용을 시도하도록 한다.

남한의 직업기술교육 단위와 북한의 기술교육총국이 주관하고 적극 후원하여 계열별 직업계 전문학교가 결연을 추진하고, 산학협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연계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상호간에 프로그램을 교환한 후, 표준프로그램의 적용을 시도하도록 한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

직업기술교육체제를 최우선하여 개편 통합하는데 있어 남북한의 환경이 다르고 기존 학제가 달라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된다. 주요 문제 및 그에 대한 대책을 들면 :

첫째, 북한지역에도 후기중등단계부터 전문화된 직업기술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따른 교사와 시설 확보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이다. 북한은 중등후기단계부터 전문화된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후기중등단계부터 도입하는데 따른 교사와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초교육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량이 부족하다. 중등 후 단계의 수준이 낮은 각종 기술교육기관을 후기중등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부족한 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교사 퇴직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확보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단기에 해결되기는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산학협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남한지역 학교나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여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의 다름으로 인한 사회수요의 불일치로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표준화하는데 따른 문제 발생의 소지도 크다. 북한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남한지역과 산업인력의 수요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획일적으로 표준화한다면 사회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체계는 표준화하되 교육내용의 수준, 교육방식 등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라) 특수교육제도의 개편·통합

1) 특수재능 교육 부문

특수재능교육은 자원을 바탕으로 한 개방사회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반학교와 특수목적학교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특수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조치한다.

가) 특수재능교육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특수재능교육은 일반학교를 통한 속진제와 심화제 프로그램 방식, 그리고 특수목적학교를 통한 교육방식의 세 체계를 통해 제공한다.

일반학교에서의 속진제는 일반재능아, 과학, 어학, 예·체능 등의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하여 월반제(Grade Skipping), 과목별 월반(Subject Skipping), 그리고 이수연한 단축(Telescoping)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심화제 프로그램은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하여 여름캠프, 겨울캠프 또는 토요일, 일요일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특수목적학교를 통한 방식은 특수전문계 학교와 특수목적계 학교로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하는데, 특수전문계 학교는 예능분야를 중심으로 연령 제한없이 초·중·고 단계부터 조기에 분화하고, 특수목적계열 학교중에 예·체능계는 중학교 단계부터 과학·어학계와 국제계는 고등학교 단계부터 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일 이전 단계의 과제]

○ 화해·협력단계

남북한의 특수재능교육 실태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공동으로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남북한의 특수재능교육 관련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교류·협력이 가능한 부문을 선정하도록 하며, 이 중에서 체제 유지와 관련성이

작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 예컨대, 기초과학 교수프로그램, 체육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교환하여 적용 가능성을 상호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개최하는 전람회, 과학·체육·어학 관련 경연대회에도 참가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 남북연합 단계

남북한 특수목적계 학교들이 과학, 예능, 체육 등 계열별로 결연하고 협력을 추진하며, 표준형 프로그램을 제작·적용하도록 한다.

남북한 특수목적계 학교 중에서 같은 계열의 특수목적 학교들이 결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상호간에 프로그램을 교환하여 이해를 쌓은 후 표준형 프로그램을 제작·적용하도록 한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

특수재능교육은 일반교육과는 달리 교사배치, 학습체계, 시설배치 그리고 진학방식 등에 있어 특성있게 조치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올리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통일 후 특수재능교육제도의 개편 통합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들면 :

첫째, 남북한 특수재능교육체제의 다름으로 인해 표준형 하나로 획일화한다는 것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북한의 외국어계 학교는 전기 중등교육단계부터 시작되며, 예능계 학교도 음악, 무용, 조형예술 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남한과 다른 점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표준형으로 통합하면서도 지역의 실정과 주민요구를 보아 융통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 선발 및 진학에 있어 특수재능 계발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특수재능교육도 활성화될 수 없다. 남한은 학생선발이나 진학에 있어 지나치게 객관성에 집착하여 특수재능을 계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입시위주 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시대회 입상자나 학교 성적 우수자를 무시협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허

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류 중심, 간판중심 특성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통일 후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무시협 특별전형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아 특수교육 부문

장애아 특수교육은 통일 한국 사회가 복지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교육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자율적인 생활능력을 함양하여 건전한 성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가) 장애아 특수교육은 장애정도에 따라 전문화

장애아 특수교육은 장애정도에 따라 경도 장애아는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mainstreaming)으로, 중도 이상 장애아는 특수학급 및 특수전문학교가 담당하도록 한다.

장애종별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언어장애와 학습 장애로 구분하여 전문화한다. 그리고 장애정도가 낮은 경도장애아는 사회생활의 적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교육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중도 이상에게는 특수학교(급)을 통한 교육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나) 조기교육체계 수립 및 직업교육 중점 제공

장애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4세부터 조기교육체제를 갖추며 1차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2차 전문대학 과정까지 연장하되, 직업기술을 연마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단계별로는 유치원 과정(4~5세), 소학교 과정(6~11세), 초급중학 과정(12~14세), 고급중학 과정(15~18세), 전문대학 과정(19~20세)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하는데 1차 고급중학까지 실시하여 내실을 다진 후 전문대학 과정

을 설치하도록 한다. 교육내용은 사회적응이 쉽도록 직업기술교육을 위주로 제공하도록 한다.

다) 무상교육 제공

장애아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의무교육, 국·공·사립과 관련없이 고등학교과정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의무교육기간 및 설립별과 관계없이 이들 모두에게 고등학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민족의 대동화합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북한 진출기업이 북한지역에 사립특수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 통일 이전 단계의 과제 >

◦ 화해·협력 단계

남북한 장애아 특수교육 실태를 비교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남북 장애아 특수교육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교육실태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예컨대 시설의 무상 공여, 시각·청각·언어 부문 우수 프로그램의 공여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 남북연합 단계

남북한 장애아 특수학교가 장애종별 또는 학교별로 결연하고 교류를 추진하며 표준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실험하도록 한다.

장애종별로 비슷한 여건을 지닌 특수학교가 결연하고 교사교류, 학생 교류, 장애아 체육대회 개최, 기능대회 개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추진하며, 상호간에 이해가 축적된 후 표준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용하도록 한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

장애아 특수교육은 장애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며 교사배치, 교육내용, 시설 등에 있어 전문성을 요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개편 통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주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들면 :

첫째, 북한 지역에 조기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장애종별을 확대하는데 따른 일부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것이며 소요재정 확보도 주요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로 취급되는데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있다. 실시 이전에 장애아 특수교육의 취지와 방법 그리고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화된 교사 배치, 시설구비, 교육내용 정비에 따른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은 9세부터 시작하고 장애종별도 적어 본격적인 장애아 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 교원과 시설도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내용 정비에 따른 자료구비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료는 공동으로 개발 사용하는 한편 부족되는 설비 등은 남한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일부나마 확보하도록 한다. 부족되는 교원은 남한 지역의 기양성된 특수교사를 지원 배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설 구비에 있어서는 통일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고등 교육제도의 개편·통합

통일한국 사회의 고등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충실히 길러낼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특성화되도록 재편한다. 그리고 남북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적인 바탕위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1) 양성목적에 따라 전문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2~4년제 전문대학, 4~6년제 일반대학, 2~4년제 산업계 대학으로 종별화하며, 전문학위제도를 신설하도록 한다.

고등교육은 기초과학계, 직업계, 산업계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는데, 전문대학은 중견 직업인 양성, 일반대학은 학술 인력과 고급 직업인력 양성, 산업계 대학은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분화로 인한 다양한 능력의 인력 양성 요청과 고급 직업기술인재의 양성을 위해 일반 학위와 구별되는 전문학위제를 두도록 한다.

2) 고등교육의 특성화 및 북한지역 인문·사회계 대학 증설

권역별로 소수의 종합대학과 특성화된 단과대학으로 구분·육성하며, 북한지역에는 인문·사회계 단과대학을 대폭 신설하도록 한다.

남북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적정 배치하도록 하며, 북한지역의 경쟁성이 없는 소규모 대학은 폐쇄하는 대신에 인문사회계 단과대학을 대폭 신설하도록 한다.

3)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 및 학부제 전환

사회 추세를 감안하여 단설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며,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방식은 학부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북한이 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을 충실히 길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학부없는 단설 전문대학원의 설치를 허용하여 고급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공학과별로 세분하여 이수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학부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4) 능력 중심 선발 및 쿼터제 도입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자유 경쟁에 의한 능력 중심의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 균형발전과 교류를 위해 지역별 쿼터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학생선발은 자유경쟁에 따라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되 단순 총점에 의한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전인교육 차원에서 지필검사 외에 특별활동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각 영역별로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중에서 대학이 선발하도록 하는 종합 사정제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 자율로 학생을 모집하되 남한 지역의 대학은 일정 수의 북한지역 학생을, 북한지역 대학은 일정 수의 남한 지역 학생을 추천과 시험을 통해 받아 들이도록 한다.

[통일 이전 단계의 과제]

○ 화해·협력 단계

비정치적 부문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참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고고학, 기초과학 부문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설정하고 남북한 학자 동수가 참여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 유적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감에 따라 휴전선 지역내의 생태계 연구, 남북한 지역의 생태 연구, 전자부문 기술의 개발 연구 등의 사업을 선정하여 직접 국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북연합 단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남북한 학자가 합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협력사업에 자문도 제공하도록 한다.

기초과학 부문과 인문사회부문에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남북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초과학계, 직업계, 산업계 대학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남북한간 기술교류·협력활동 및 자문활동을 추진하도록 한다.

교환교수제도를 도입하고 학생의 상호 방문 및 유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감안하여 탈이념, 비정치 부문을 위주로 하여 교환교수제를 적극 도입하고, 동계열 대학끼리 결연하고 상호방문 및 유학도 추진하도록 한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의 고등교육체제가 매우 달라 통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파생되리라 예견된다. 주요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하면 :

첫째, 주체사상화되어 있는 북한 지역이 새로운 인문사회교육체계를 수립하는데 대해 많은 갈등을 느낄 것이다. 북한의 인문사회계 고등교육은 대체로 김일성대학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공산주의 유물사관 그리고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폐쇄적이고 교조사회적인 기초를 견지하고 있다. 조만간 개방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이질적인 개방사회의 인문사회 전문교육을 수용하는데 갈등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통일교육 내용을 기초로 한 적응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인문사회교육 교육체계 수립에 있어서는 북한 지역인사가 주관하고 남한의 전문인사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단 신속히 인문사회교육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의 수용정도에 따라 지원은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선발의 공개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의 경쟁성 미흡으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역의 유명 정규대학들은 직통생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추천제때문에 특수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권위적인 선발을 하여왔다. 이러한 환경으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지역교육의 질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지역은 학습참고서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제고 그리고 수험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으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며 입시에서의 탈락,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로 바뀐데 따른 진로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긴장

되고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서 제시한 지역별 쿼터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으로 후기중등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재, 북한지역 대학에 교수충원과 시설, 설비 확보의 문제가 급선무로 떠오르고 병행하여 재정확보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고등교육체제의 개편, 확충으로 인해 교육계열 및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수 충원 및 시설, 설비구비의 문제가 당면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질 개선, 남한 대학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확보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들 문제의 대책으로는 먼저 남한 지역의 유휴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설비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여 나가도록 한다. 남한지역 대학, 기업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이외에 통일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 원칙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요 재정 확보는 통일기금의 사용 방식 이외에도 자율 모금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바) 표준형 교육제도 수립 위한 지원조치

표준형 교육제도 수립을 위한 지원조치를 통일단계별로 마련하여 남북이 합리적으로 새로운 교육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교육제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발전도 유인·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 화해·협력기 : 학술·교육 부문의 교류·협력 추진

1단계 화해·협력기에는 남북한 양측이 교육·학술부문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돕고, 새로운 교육제도 수립에 관한 개별연구를 수행하여 장차 통합에 대비하도록 한다.

남북교육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교류·협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이를 보장하는 협정, 예컨대 「남북 교육·학술 교류·협력협정」 등을 체결·지원

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제도 통합의 과제 및 방안과 학력 인정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 교육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상호 교육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며, 중앙교육행정기관에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여, 남북 교육통합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2) 남북연합기 : 선도부문 중심으로 표준형 구안·적용 시도

2단계 남북연합기에는 가칭「남북공동체헌장」에 따라 남북 대표가 모여 교육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이의 적용을 적극 시도하도록 한다.

교육부에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육제도 통합을 주관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며, 별도로 남북간에는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교육제도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남북 정부 당국자, 사회와 당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하부에 「교육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형 교육제도의 모형을 연구·제안하도록 한다. 그리고 심의를 통한 안은 남북 양측에 전달하여 교육개혁의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과학기술부문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표준형 제도의 적용을 시도하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실험·적용에 임할 때는 적립된 통일 기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3) 통일국가 시기 : 표준교육제도 제정 및 적용

3단계 통일국가 시기에는 「통일조약」의 발효에 따라 통일의회에서 가칭 「통일교육법」을 제정하고 표준형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제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표준형 교육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경과조치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제반 지원을 한다. 또한 가칭 「북한지역 교육 우선투자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북한교육 여건을 중점적으로 우선하여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V. 결론

평화통일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역할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통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양성사업인 교육제도의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화합하여 다시 한 민족으로 더불어 살아나가기 위해 오늘의 이질화된 남북의 교육제도는 마땅히 표준형을 근간으로 한 교육제도로 개편·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형 교육제도의 개편·통합은 평화통일의 정책에 바탕하여 점진적, 기능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공존형으로 존재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다지고, 남북연합단계에 들어서서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남북 상호관심이 많고 이익이 되는 과학·기술부문의 교육제도를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표준형 교육제도를 구안하고 이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통일국가단계에서는 표준형 교육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이를 전국에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표준형 교육제도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해 민족주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는 남북교육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취합하면서 새 시대에 요구되는 민족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조직되도록 한다. 계급혁명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북한식 교육제도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며, 입시위주 교육에 찌들은 남한교육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 교육제도는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는 바탕 위에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신장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화합을 위해 남북교육이 균형발전되도록 하는 원칙도 지켜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할 표준형 교육제도는 중등교육단계를 진로교육체제로 조직하는 방향에서 구조화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전기중등단계는 진로탐색기로 운영하여 자신의 적성 소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후기중등단계는 4년제로 연장하여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충분히 준비하는 시기로 설

정하도록 한다. 맹목적인 인문승상의 풍조와 대학진학의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에서이다. 이런 차원에서 직업기술교육은 후기중등단계부터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계열 출신자들이 자신의 기술적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학진학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기회도 우월하게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위제도도 현행 학술학위 이외에 현장성이 강한 전문학위제도 별도로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은 교육권을 보장하면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등 단계 12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일사회 초반기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곧바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통일 초반기에는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남북교육여건도 최대한 해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초반기에는 전기중등단계까지 8년간만 실시하고 교육비 부담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연장·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북한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가능성과 불만 등을 감안하여 과도기적으로 남북지역을 차별화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특수교육제도도 경비소요가 많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재양성과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함께 발전시키도록 한다. 특수재능아에 대해서는 속진제와 심화제, 그리고 특수목적학교를 통한 방식의 세 체계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보다 조기에 선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애아 특수교육은 4세부터 후기중등단계까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모두에게 무상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의 정착여부를 판단한 후, 전문대학단계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고등교육제도는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특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이 단계 교육이 대중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는 인문·사회계 대학을 대폭 신설하여 편향된 주체사상을 불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건전사회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 단설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학부제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총점에 의해 사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벗어나 전인적 인격을 함양한 바탕위에서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사정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교육 균형 발전

을 돕기 위해 쿼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표준형 교육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조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이 상호 상대의 교육제도를 이해하고 신뢰성을 다져가는데 중점을 두어 다방면으로 교류·협력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며,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교육문화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육정상회담도 개최하고, 향후 통일한국 사회에 적용할 표준형 교육제도도 남북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조성하도록 한다. 통일국가단계에서는 통일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표준교육제도의 적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이들 방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표준형 교육제도를 이름하였지만 꼭 하나의 제도만으로 획일화시킬 의도는 없다. 오랫동안의 분단으로 남북의 사회배경도 다른 점이 많고 지역 실정도 달라서 무리하게 하나의 제도만으로 개편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를 기본형으로 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춰 융통성있게 조정·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방제 시기를 과도적으로 두게 된다면 더욱 더 융통성을 많이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고대 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편, 「백과전서(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교육정책자문회의,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1990
-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방안」, 1994
- 김동규, '남북통일 이후의 학교교육 이념 및 제도에 관한 모델연구', 「'92북한 통일연구논문집(6)」, 통일원, 1992
- _____,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1990
- _____, '남북한 학교교육의 실태 비교와 통일에 대비한 학교교육 모델 연구', 「도산학술 논총」, 제 2집, 도산아카데미연구원, 1992
-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84
- 김태완,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제언', 「새교육」, 1990년 2월호
-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 김한조, '남북한 사회적 이질성 극복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1991
- 김형직 사범대학, 「사회주의 교육학」, 평양: 김형직사대 출판소, 1988
- 김형찬, 「북한의 교육발달사」, 서울: 한백사, 1988
- _____,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사, 1990
- _____, 편, 「북한의 교육」, 서울: 한백사, 1990
-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4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도산학술논총」, 제 2집, 1992
- 도홍렬, '남북한 문화체제의 비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이념 정립을 위한 연구」, 연구논총 85-12, 1985

-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문용린, 「통일후의 교육체제 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보고논총, 1991
- _____, 「민족동질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략: 교육내용 측면」, 「교육학연구」 28권 3호, 한국교육학회, 1990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1992. 12
- _____, 「북한의 권력 엘리트 연구」, 1992. 12
- _____,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12
- 박재윤, 「교육과 통일문제 연구 방향의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제 4권 제 5호, 1992
- _____,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1992
- _____,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1992
- 박한식,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배경」, 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방안 연구」, 1990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94
- 서울시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 분석 - 교과서 내용 분석-」, 1991
- 신세호 외, 「독일의 교육통합과 파생 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3
- 윤덕희, 김규운, 「한민족공동체 구체화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1
- _____, 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계학, 「민족공동체 형성과 교육이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보고논총, 1991
- 이규환, 서성우, 신군자, 「북한의 고등교육체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 이상우 편, 「통일 한국의 모색」, 서울: 박영사, 1989

- 이수복, '북한학교교육의 개혁', 「아시아 지역의 학교교육개혁」 세미나 보고서, 한국비교교육학회, 1993, 195~200쪽
- 이영덕,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연구」, 28권 3호, 한국교육학회, 1990
- 이은죽, 「북한 사회 연구 - 사회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전이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반적 의무교육에 관한 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4
- 정세현, '통일한국의 체제와 이념적 지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보고논총, 1991
- 정석홍,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 교육제도적 측면', 「교육학연구」 제 28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1990
- _____,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IV, 「통일한국의 교육제도」, 1993
- 정영수, '통일 후의 독일교육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제 4권 제5호, 1992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년판
-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서울: 희성출판사, 1989
-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최영표, 남북한 의무교육의 비교 연구, 「도산학술논총」 제 2집, 1992
- _____, '북한 현대교육사의 재조명', 「한국교육사학」, 제 12집, 1990
- _____, 외,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8
- _____, 편, 「공산권 교육의 과거·현재·미래」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8
- _____,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새로운 모델', 「통일한국의 교육제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IV, 1993

- _____, '북한의 교육', 「93~94 한국교육연감」, 교원총연합회, 515~519쪽
- _____, '남북한 교육공동체를 수립하자', 「교육개발」, 통권 85호, 1993. 8
- _____, 외,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1993
-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북한실태편, 1993
- 통일원, 「남북한 비교총서」, 1988
- _____,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1991
- _____, 「북한개요 '94」, 1994
- _____,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서울: 웃고문화사, 1991
- _____,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 1994
- 한국교육신문사, 「한국교육연감」, 1993
- 한배호 외, 「통일을 위한 민족 화합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4-18
- 한완상,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원, 1993
- 한종하 외,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 황정규 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 金 岩, '朝鮮高等教育', 中國東北師範大學 朝鮮教育研究室 내부자료
- 商承義, 王三洋, '朝鮮教育發展及主要經驗', 「外國教育研究」 제6기(1993), 36~40쪽
- 孫啓林, '朝鮮教育', 「現代外國語教育」, 大連: 海運學院出版社, 1988
- _____, '朝鮮普通學校管理體系', 「外國教育研究」 제3기(1984)
- _____, '朝鮮改革高等教育結構', 「外國教育研究」, 1988.3

Freeman Butts *The Civic Mission in Educational Reform: Perspectives for the Public and the Profession*,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ornia, 1989

Karlheinz Dürr 'East Germany Education: A System in Transition', *Phi Delta Kappan*, January, 1992

Micheal Hass eds., *Korean Reunification: Alternative Pathways*, N.Y.: Praeger, 1989

Walter S. Jones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88

Hans Helmuth Knütter (Hrsg.), *Politische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1984

Roy C. Macridis eds.,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 Eighth Edition*, N.J.: Prentice-Hall International Editions, 1992

Wolfgang Mickel Dietrich Zitzlaff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88

Richtlinien für den Politikunterricht: Eine Schriftenreihe des Kultusministers, Nordrhein-Westfalen, 1987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Wirtschafts- und Sozialuni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vom 18.5. 1990

Werner Weidenfeld and Josef Janning, 'European Integration after the Cold War-Perspectives of a New Order',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February, 1992

執筆者 紹介(掲載順)

1. 宋 銀 姬 : 경희대 정외과 강사
 - 숙명여대 정치학사,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 경희대 정치학 박사
 - 단국대, 동덕여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아, 태 공동체 구상과 중국”등 다수

2. 李 來 榮 :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 고려대 정치학사, 동대학원 정치학(석)박사
 - 멕시코 국립대 촉탁연구원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탈냉전시대의 신국제경제질서와 한반도”등 다수

3. 裴 廷 鎬 : 연세대 정외과 강사
 - 연세대 정치학사, 동경대 정치학(수)박사
 - 국민대, 숙명여대, 고려대 국제대학원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방향”등 다수

4. 金 珍 基 : 대륙연구소 선임연구원
 - 고려대 정치학사, 동대학원 정치학(석)박사
 - 고려대 통계연구소 연구원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일본 방위산업정책의 결정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등

5. 全 宰 鎬 : 서강대 정외과 강사
 - 서강대 정치학사, 동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수료
 - 조선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학위논문 “마르크스의 리카도 노동가치론 비판 연구”등

6. 金 周 晟 : 한국교원대 조교수
 - 외국어대 문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방송통신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자유주의의 세계사적 근대성 완결과 철학적 위기”등

7. 崔 榮 杓 :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 광주교대, 전남대 교육학 석사, 대만 국립정치대 교육학 박사
 - 한양대, 단국대, 서울교대등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등 다수

'94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第V卷)

인 쇄 : 1994. 12. 1.

발 행 : 1994. 12. 5.

발행처 :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